

2006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 요구자료(Ⅲ)

2006. 10

금융감독위원회
금 융 감 독 원

목 차

(Ⅱ 권)

고 진 화 의원	1
김 애 실 의원	187
김 양 수 의원	349
김 영 주 의원	371
김 정 훈 의원	495
김 혁 규 의원	759
김 현 미 의원	779
박 계 동 의원	805

(Ⅲ 권)

서 해 석 의원	1
신 학 용 의원	45
안 택 수 의원	107
유 선 호 의원	203
이 계 경 의원	337
이 승 희 의원	531
이 원 영 의원	557
이 재 오 의원	571
이 중 구 의원	657
진 수 희 의원	723
차 명 진 의원	855
천 정 배 의원	869

요 구 자 료 목 차(Ⅲ)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서해석 의원	1. 해외 금융감독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후 업무협조 내역 관련 추가 자료	3
	2. 비상상황(자연재해 등) 발생시 수립된 금융지원대책(보도자료 포함) 및 각 항목별 실적, 당시 피해액	4
	3. 상호협정에 의한 공동인수 보험 계약 현황	32
	4. 2003년 이후 연도별, 금융기관별 신용카드 및 카드로론 발급 현황 : 2006년은 월별	38
	5. 2003년 이후 연도별, 유형별 사금융 피해접수 현황 및 금감원 적발·조치현황, 2006년 8월 현재 시도별 등록현황	39
	6. 보험관련 - 방카슈랑스 관련 민원현황	43
	7. 외국운용사가 운영하는 해외 펀드상품 판매실적, 펀드가입규모, 국내법인의 해외투자펀드 설정액 및 투자액, 평가액(설정액+수익) 등 추이	44
신학용 의원	1. 각 은행별 BIS비율(2003~2006.7)	47
	2. 2001~2006년 8월까지 각 연도별 채권발행 증가 및 감소현황	49
	3. 회계법인별 증선위에서 지정한 외부감사대상 회사현황	52
	4. 임원 문책경고 및 직원 문책요구에 대한 조치권자 현황	55
	5. 2006년 중 카드사 수수료와 관련하여 분쟁 있었던 내용	56
	6. 금감원 보험상품 심사기준	57
	7. 금감원과 대부업체와의 업무공조 내용	61
	8.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관련 - '04~'06년 상반기까지 월별 상담 유형별 건수, 처리 내역, 해결율 - '04~'06년 각 분기당 각 업체별 피해상담건수 - '04~'06년 각 분기별 상담자 유형(대출금액, 이율, 피해금액, 연령, 성별, 직업 등)	62
	9. 사금융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68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안택수 의원	1. 상장자문위의 생보사 상장과 관련 03년, 06년 공청회 개최보고서 2건	109
	2. 금융기관(국책은행, 시중은행, 보험, 증권사, 투신사 등)의 대표자 명, 본사주소, 전화번호 등 상세내역표(외국금융사 포함)	146
	3. '00년 이후 금융기관 전산위기대응과 관련 - 혼란 현황	160
	4. 2000~2006년 6월말 현재 연도별 외환 불법거래 적발 현황	163
	5. '04-'06. 8월 현재 투자자문업 및 자산운용사 등록관련 - 신청회사 수, 승인회사 수, 반려회사 수 현황	164
	6. 2003~2006년 6월말 현재 펀드(자산운용업) 허가 현황	165
	7. 2000~2006년 6월말 현재 펀드(자산운용업) 사고 현황	165
	8. 2000~2006년 6월말 현재 상장기업(코스닥 포함)의 주가 등 주식불공정거래 조작 건수 등 연도별 현황	166
	9. 자본잠식법인의 2006년중 CB, BW 발행현황	167
	10. 중소기업과 개인의 금융대출상황과 관련 - '06년 7월말 현재 중소기업 및 개인(신용담보 포함) 대출 총액	168
	11. '03~'06년 6월말 현재 연도별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 현황	168
	12. 금융상 불법 탈법거래와 관련해 연도별 사건별 조사 내용 및 건수/조치결과	171
	13. 외국펀드 또는 금융사가 국내금융사를 인수할 때의 관련법규	173
	14. 자산운용사 최근 3년간 수익성 분석 현황	193
	15. 최근 5년간 자산운용사 인·허가 현황	193
	16. 최근 5년간 자산운용사 폐업 현황	193
	17. 자산운용사 허가기준, 폐업기준 및 그 법적 근거	193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유선희 의원	1. 생명보험회사 상장추진관련	205
	1) '06. 7월 상장방안 공청회시 상장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에 대비한 감독당국의 대책 추진현황 및 관련자료 일체	
	2) 생보사 상장관련 규정 및 지침	
	2. 가계대출 현황 및 대책관련	246
	3. 금융분쟁조정 현황(최근 3년간)	249
	4. 단위 신탁의 최근 현황	250
	5. 신탁중앙회 현황	251
	6. 신탁중앙회 경영정상화 관련 경과	252
	7. 경영정상화 추진대책	253
	8. 서민금융기관 수표발행 추진에 대비한 인가 및 감독대책	255
	9. 최근 3년간 사금융피해 현황 및 대책	256
이계경 의원	10. 국내금융업의 동남아 진출관련 현황 및 감독당국의 대책	259
	11. 금감원의 업무추진 관련 검사·제재관련 규정·지침	260
	1. 선진국 주택금융 감독·규제 체계 연구	339
	2. 생보사 상장관련	367
	- 생보사 상장관련 논의과정에 대한 일지	
	3. 최근 3년간 민원접수내역(금융기관별) 및 처리기준에 따른 처리내역	368
	4. 민원접수내역 중 민원 해당회사에 이첩하여 처리한 내역	369
	5. 민원을 민원해당회사로 이첩하여 처리하는 사유 및 그 관련 근거	370
	6.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 민원만족도 조사내역 일체	372
	7. 최근 3년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74
	8.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분쟁접수 관련	375
	1) 위원회 회부전 처리건수(직접처리, 이첩 등 세부로 분류)	
	2) 위원회 회부건수(인용, 기각, 각하 등 세부건수로 분류)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이계경 의원	3) 조정결정건수(수락, 불수락 건수로 분류)	
	4) 민원인과 피민원인간의 분쟁접수 후 소송제기 등의 이유로 분쟁조정을 그만 둔 건수	
	9. 은행임원의 자격요건 보완 및 집행간부의 책임성제고 등 임원관련 제도정비 내역	377
	10. 2003년 이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기준	379
	11. 국민은행의 CD 위조사고 발단에서부터 조사경과, 결과 및 이후 내부통제 개선 추진 내역	380
	12. HSBC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 경위, 점검경과, 결과	383
	13. 보험회사 리스크기준 자기자본규제제도(RBC) 도입 추진 경위 및 경과, 31개 보험사 대상 평가결과	384
	14.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 내역	386
	15. 최근 3년간 각 금융기관별 등 주민등록자료 이용현황	392
	16. 펀드운용과 관련 최근일 기준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펀드의 신탁보수현황 - 판매, 운용, 수탁, 사무로 구분해서 제시	395
	17. 상호저축은행 5,000만원 이하 예금계좌 현황	466
	18. VK 처럼 유상증자 후 부도난 기업현황	471
	19. 생보사 상장관련 1999년 금감원 상장기준안	473
이승희 의원	1. 현재 금융권(은행, 증권)의 수수료 현황	533
	2.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시 필요한 절차	536
	3. 개인신용정보 유통·활용 체계	540
	4.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금융정부의 종류 및 세부내역	540
이원영 의원	1. 금융기관별 휴면예금, 휴면보험료 현황, 시효기간별 발생 및 소멸액(연도별)	559
	2. 금융기관별 부채증명서 발급수수료 현황	568
이재오 의원	1. 생보사 상장과 관련하여	573
	1) '06년 이후,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의사록 일체	
	2) '06년 7월 개최된 생보사 상장관련 공청회 자료사본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이재오 의원	3) '06년 이후, 현재까지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안전 목록 일체	
	4) 내부유보분, 배당적정성, 상장 전제조건 등에 대한 금감위의 입장	
	2. 적기시정조치 관련	611
	- 금융권역별 적기시정조치 상세 기준 및 최근 변동 내역	
	3. 최근 5년간 금융업권별 신용대출 금리 증감현황	613
	-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할부금융사	
	4. 2006년 7월말 현재 기준, 각 은행별 여신과 관련하여 참여정부 출범이후 은행별 전체여신, 가계여신, 중소기업여신	617
	5. 참여정부 출범 이후(2003~) 상호저축은행의 고정이하 여신 중 가계대출·중소기업대출 등 대출 종류별 연도별 증감현황	620
	- 연도별 규모·증감율, 전체여신대비 비율 기재	
	- 공적자금 투입 저축은행과 비투입 저축은행권으로 권역 구분	
	6. 참여정부 출범 이후, 상호저축은행의 부동산대출과 관련하여	621
	- 연도별 규모, 증감율, 전체여신대비 비율 기재	
	- 연도별 고정이하 여신중 부동산대출의 규모, 증감율, 전체 고정이하여신 대비 비율 기재	
	7. 참여정부 출범 이후, 상호저축은행의 PF(프로젝트파 이낸싱) 관련하여	622
	- 연도별 규모, 증감율, 전체여신대비 비율 기재	
	- 연도별 고정이하 여신중 부동산대출의 규모, 증감율, 전체 고정이하여신 대비 비율 기재	
	8. 최근 3년간 전체 상호저축은행 가계대출 비율	623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이재오 의원	9. 상호저축은행 관련하여	624
	- '03년 이후 '06년 8월초 현재까지 상호저축은행 전체의 신용대출 규모 증가 현황	
	- '03년 이후 '06년 8월초 현재까지 상호저축은행 예금, 대출 평균금리 변동 현황	
	10. 2003년 이후 2006년 7월말 현재까지 상호저축은행의 PF대출 분기별 증감내역, 현재 PF대출 여신잔액	625
	11. '06년 7월말 현재 상호저축은행과 관련하여	626
	- BIS비율 8%미만 상호저축은행들의 각각 총여신규모, 고정이하여신규모, PF여신 규모	
	- 고정이하 여신 15%이상 상호저축은행들의 각각 총여신규모, 고정이하여신규모, PF여신 규모	
	- 전체 상호저축은행의 PF여신 규모	
	12. 최근 3년간 상호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630
	- 각 건별 인수자(법인명, 대표자명), 인수조건, 인수금액, 인수기준, 인수과정	
	13. 2005년 이후 2006년 7월말 현재까지 PF ABS 발행 상세 내역	631
	14. 2003년 이후, 2006년 7월말 현재까지 금감원, 금감위의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현황(연도별 정리)	633
	-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 규정	
	15. 2003년 이후 2006년 7월말 현재까지 상장·등록사에 대한 금감원, 금감위 제재 현황(연도별 정리)	635
	- 검사대상, 위규내용, 제재내용	
	- 제재관련 규정 및 지침	
	16. 신용회복위원회 출범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지원실적	639
	17. 대부업 및 사금융 관련하여	640
	1) 최근 3년간 대부업체 수 증감 현황 및 대부업체 수신 규모 증감 현황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이재오 의원	2) 최근 3년간 무등록 대부업체 적발 현황 및 상세 내역	
	3) 최근 3년간 유사수신행위 적발업체 및 실태 상세 내역	
	4) 최근 3년간 대부업, 사금융 관련하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현황, 유형, 처리결과	
	18. '01년 이후 연도별 '사금융피해' 신고 접수 처리현황 - 연도별 유형별 증감현황 - 연도별 처리 상세현황	646
	19. 대부업 관련 - 금감원의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실시현황	647
	20. 금감원이 '06년 실시한 엔터주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현황	654
이종구 의원	21. 최근 3년간 우회상장과 관련하여, - 정상상장사와 우회상장사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정 혐의 등 불공정 행위 포착 내역 - 정상상장사와 우회상장사에 대한 금감위의 제재내역 비교	655
	1. 최근 자동차보험 수지악화 현황 분석 및 대책	659
	2. 보험업계의 보험사기 조사 인력 및 전체 인력 중 비중	663
	3. 신탁중앙회 지원시 예상되는 모럴헤저드 방지 방안	667
	4. 신탁중앙회 측이 검토중인 자구노력 내용	668
	5. 신탁 및 수협의 연체율이 과도한데 대한 분석 및 이를 낮출 수 있는 방안	669
	6. 바젤2에 따른 신BIS 관련,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ECAI) 선정기준	670
	7. 바젤2에 따른 신BIS 관련, 해외의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ECAI) 선정기준	670
	8. 바젤2에 따른 신BIS 관련, 해외의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ECAI) 선정사례	670
	9. 바젤2에 따른 신BIS 관련,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ECAI)의 선정 절차 및 향후 일정	670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이종구 의원	10. 은행들의 금융채 발행 급증에 대한 분석 및 리스크 관리 방안	681
	11. 일부 금융사의 강제적인 개인신용정보 활용동의 요구에 대한 공정위의 최근 시정조치와 관련, 금감원의 후속조치 내역 및 재발방지 대책	682
	12. 신용평가업과 신용조회업의 차이	684
	13. 최근 ‘안심클릭’ 등 신용카드비밀번호 해킹사건에 대한 점검결과 및 대책	686
	14. 금감원의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의 상담 내용별 건수 및 조치결과	692
	15. 금감원의 사금융 피해상담센터 상담 내용별 건수 및 조치결과	694
	16. 대부업 관련	696
	- 대부업체들의 신용정보 유출사건이후 조치내역 및 재발방지대책	
	-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내역과 결과, 조치사항(최근 3년+올해 연도별)	
진수희 의원	- 지자체의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요청 내역(최근 3년+올해 연도별)	
	- 대부업체들의 고금리요구 강압적인 추심 등 불법행위 만연에 대한 제도적 근본대책	
	17. 제재업무에 대한 내규 혹은 업무방법서 혹은 기준 혹은 체크리스트	705
	18. 내부고발자 보호 시스템 및 이를 통한 내부고발자 보호 사례와 건수(최근 3년 연도별+올해)	721
	1. 1999년 이후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와 관련된 금감원 규정 변경 내역	725
	2. '98년~현재까지 금감원에서 수집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법원판례 일체	733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차명진 의원	1. 휴면예금 관련 자료 - 정부의 입장 -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가동 실적	857
	2. 카드 관련 자료 - 2000년부터 현재까지 카드 발급(연도별) 및 연체율 현황	858
	3. 2000년에서 현재까지 펀드 등록 현황	859
	4.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단속 현황 - 연도별 자료 요약(2002년에서 현재까지)	860
	5. 신탁중앙회 현황, 문제점, 대응방안	861
	6. 저축은행 - 현황, 문제점, 정부대응책	864
	7. 보험사기 관련 자료 -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추이(유형별) - 향후 정부의 대응책	866
천정배 의원	1. 생보사 상장과 관련 1) 그동안의 경과와 추진현황 2) 생보사 상장에 대한 금감위의 입장 3)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과거와 같이 금감위 산하가 아닌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설치된 이유 4) 금감위, 금감원,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생보사 상장과 관련 연구용역 발주한 현황(시기, 대상, 용역과제 등) 5) 연구용역 발주와 관련된 예산집행 현황 6)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7)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가 중도에 취소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이유	871
	2. 맞춤형 전문경영컨설팅 서비스 관련 (1) 도입배경 (2) 제도 개요 및 경과 (3) 도입 성과 (4) 한계 및 보완책	875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천정배 의원	3. 현재 추진중인 금융회사대상 검사만족도 조사관련 (1) 추진배경 (2) 설문지 내용 (3) 설문조사 결과 (4)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보완이나 개선을 했는지 여부	879
	4. 금감원의 정책고객(정책대상자) 관련, 정책고객집단 분류	882
	5. 최근 3년간 금감위(원)에서 수행한 '고객만족도 평가' 개요 및 결과	883

서 해 석 의 원

1. 해외 금융감독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후 업무협조 내역 관련 추가 자료

☐ 자료 : 별도 제출

**2. 비상상황(자연재해 등) 발생시 수립된 금융지원대책(보도
자료 포함) 및 각 항목별 실적, 당시 피해액**

- 자료 : 별 첨

<2006년 7월 집중호우>

☐ 금융지원대책 (보도자료 별첨)

- 은행권의 경우, 각 은행에 지원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재해복구 자금대출, 기한연장, 원리금 납입유예 등 지원
- 보험권의 경우, 각 보험사가 피해지역에 이동피해보상 및 상담센터 운영, 보험사고 접수시 청구서류 간소화,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대출의 원리금 상환유예 등 지원
- 비은행권의 경우, 피해지역 기업·가계의 신용카드 결제기일 일정 기간 연장
- 금감원은 피해지역 금융기관 점포에 대한 검사일정 변경 등

☐ 지원실적

- <붙임 1> 참조

☐ 보험권의 추정손해액 : 261억원

- 일반손해보험이 0.7억원, 재물보험이 186억원, 자동차 보험이 74억원, 풍수해보험이 0.2억원임

<2003년 태풍 매미>

☐ 금융지원대책 (보도자료 별첨)

- 은행권의 경우 재해지원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재해복구자금대출과 함께 기존대출금 기한연장, 원리금 납입유예, 연체이자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시행
- 보험권의 경우, 각 보험사가 피해지역에 이동피해보상 및 상담센터 운영, 보험사고 접수시 청구서류 간소화,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대출의 원리금 상환유예 등 지원
- 금융협회 및 각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피해지역에 수해관련 상담센터를 설치·운영

☐ 지원실적

- <붙임 2> 참조

☐ 보험권의 추정손해액 : 6,018억원

- 일반손해보험이 4,081억원, 자동차 보험이 942억원, 해상보험 등 기타가 995억원임

<붙임 1>

은행권역의 지원실적(06.7.25현재)

□ 은행권(총 18개)중 일반은행(7개) 및 특수은행(5개)에서 총 3조 6,6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 계획

○ 국민은행은 총한도 구분 없이 가게 및 기업에 대한 지원

* 외환은행 등 여타은행은 피해복구관련 자금 신청시 적극 지원할 계획

➔ 7.25. 현재 금융지원 실적 : 기업(6억원) 국민(45억원) 및 농협(0.2억원) 등 10.7억원(신규자금)

금융기관별 주요 금융지원 계획

은행별	금융지원 계획	비 고
우 리	·5,000억원 긴급지원, 금리우대(1.2%p)	“특별종합지원센터” 설치
신 한	·5,000억원 긴급지원, 금리우대(1.0%p)	
하 나	·3,000억원 긴급지원, 금리우대(0.7%p)	
씨 티	·시설·운전자금(업체 10억원), 금리우대(1.0%p)	“수해기업 특별지원반” 설치
국 민	·생활안정자금(개인 20백만원), 경영자금(업체 5억원)	
대 구	·300억원 긴급지원, 금리우대(1.5%p)	
전 북	·300억원 긴급지원, 금리우대(1.65%p)	
부 산	·1,000억원 긴급지원, 금리우대(0.5%p)	
경 남	·3,000억원 긴급지원, 금리우대(1.5%p)	“피해복구 특별 지원반” 설치
산 업	·3,000억원 긴급지원, 금리우대(1.0%p)	“피해복구 T/F” 구성
수출입	·1,000억원 긴급지원, 금리우대(1.8%p)	“종합대책반 T/F” 구성
기 업	·3,000억원 긴급지원, 금리우대(0.5%p)	영업점 ‘안내문’ 게시
농 협	·1조원 긴급지원, 금리우대(0.5%p)	
수 협	·2,000억원 긴급지원, 금리우대(1.5%p)	

* 신탁은 피해조합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축은행은 재해지원 전담창구 운영

보험권역의 지원실적(06.7.25현재)

(단 위 : 백만원)

구분	회사명	수재의연금	인력 및 물품 지원내용
손 보	신동아	-	○ 인재,평창지역 30명 3일 동안 자원봉사 및 물품 지원 계획중
	제 일	-	○ 침수지역 보상팀 현장 비상 체제 운영
	삼 성	-	○ 7.8일부터 "재해비상대책위원회" 본격 가동 - 콜센터 24시간 비상근무 체계운영 (7.9일부터 인력 100명 추가투입) - 고객사업장 방재를 위한 문자메세지 및 이메일 발송 (총 13회, SMS 7회, 이메일 6회) - 강원도 피해지역에 전담인력 추가파견 및 보상 캠프 설치(침수건 보상처리 상담안내 등 담당)
	현 대	-	○ 물품지원 - 양평동 : 컵라면200박스(3,200개), 부탄가스 1,000개 ○ 인력지원 등 - 인제군 : 견인차량 6대, 출동직원 7명, 하이플래너 6명 - 양평동 : 견인차량 5대, 하이플래너 5명 수해지역 차량 무상점검서비스 시행(예정)
	L I G	2	○ LIG 배구단 수재의연금 ○ 물품지원(7.16) : 영등포구청, 모포 500매
	동 부	-	○ 프로미봉사단 활동중, 위문품전달 캠페인 실시 ○ 재해지역 비상지원 대책팀 구성 지원활동개시 (강원도지역 5명 인력파견)
	손보협회	-	○ 업계/협회 공동 피해지역 수해복구 긴급지원단 운영 (특별재난 선포 18개 시·군, 24명)
	소 계	2	
생 보	대 한	-	○ 수해복구 및 구호물품 지원(평창, 인제, 양양) - 복구인원 : 66명 - 구호물품 : 선풍기, 라면, 이불 등(21백만원 상당)
	교 보	-	○ 수해복구 및 구호물품 지원(평창, 인제, 양구,홍천) - 복구인원 : 231명 - 구호물품 : 선풍기, 라면, 이불 등(12백만원 상당)
	신 한	26	
	소 계	26	
총 계		28	

<붙임 2>

주요 지원실적(03.10.1현재)

1. 금융지원실적

□ 기업, 산업, 수출입, 부산, 경남 등 16개 은행에서 총 2,040억원을 지원

○ 형태별 지원내역 : 신규자금지원 1,110억원, 대출금 만기연장 892억원, 원리금 납입유예 23억원 등

○ 주요은행별 지원현황 : 조흥 34억원, 우리 25억원, 하나 39억원, 대구 47억원, 부산 102억원, 경남 122억원, 산업 223억원, 기업 766억원, 수출입 452억원 등

2. 대국민 홍보 및 상담센터 등 운영실적

가. 대국민 홍보

- 금융회사의 태풍피해현황
- 태풍관련 보험사고 지원대책 마련 및 피해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지도 등
- 금융회사의 태풍피해 복구현황
- 금융기관별 피해복구를 위한 금융지원대책
- 금감원내 금융지원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비상대책본부 가동 및 상담센터 설치·운영 등

나. 현장상담 실시현황

- ☐ 피해가 심한 6개 지역에 4개팀 11명의 상담요원을 파견하여 애로사항 상담·접수 및 금융기관 등 참여 독려

대상 지역 및 인원수	설치 장소 운영 기간	상담 실적
경남지역(마산, 창원) (4명)	경남은행 본점 (9.17~20)	○ 상담 : 22건 (은행 13, 보험 3, 기타 6)
부산, 울산지역 (2명)	농협(울산) (9.17~18) 부산은행(부산) (9.19~20)	○ 상담 : 3건(은행2, 보험 1) ○ 관계기관 등 방문 협조 요청 - 울산광역시청 재해특별반 - 경남은행 울산지역본부
대구·경북(경산,의성) 및 강원(삼척)지역 (2명)	상공회의소(삼척) (9.17~9.18) 농협(경산):9.19 농협(의성):9.20	○ 상담 : 5건(은행 5) ○ 관계기관 등 방문 협조 요청 - 재해대책본부, 국민은행, 조흥은행, 농협, 대한생명
여수지역 (광주지원) (3명)	농협(여수) (9.17~9.19)	○ 상담 : 72건 (은행 31, 보험 37, 상속조회 4)

다. 금융상담센터 운영실적

- ☐ 우리원 본·지원(대구, 부산) 3곳에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

구분	운영 기간 (전화)	운영 실적
본원	9. 16 ~ 10. 10 (02-3786-8694~5, 8688)	○ 상담 : 51건 (보험관련)
대구 지원	9. 16 ~ 10. 10 (053-760-4014, 4017)	○ 상담 : 41건 (대출 및 보험관련)
부산 지원	9. 16 ~ 10. 10 (051-606-1704, 1730)	○ 상담 : 86건 (대출 및 보험관련)



보 도 참 고 자 료



·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총괄조정국		
· 담 당 자	정창모 팀장(☎ 3786-8004)		
· 배 포 일	2006. 7. 18.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88~91)

※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06.7월 집중호우 관련 금융권 피해현황 및 대응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금번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금융지원과 소비자 보호 등 각종 지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반을 구성하여 금융권의 피해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음

☐ 7.18(화) 10시 현재 피해지역 소재 은행영업점 등 16개 점포가 침수되는 등 일부 피해가 있었으나 임시조치 등으로 복구 완료하여 정상 영업중인 것으로 확인됨

○ 침수·누수 15개 점포, 정전 1개 점포

☐ 한편,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회사로 하여금 재해지원 전담 창구를 설치하여 자금지원과 피해 보상 등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적극 독려하고 있음

○ 특히, 보험회사는 이동 상담(보상)센터 운영 및 보험금 신속 지급 등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보 도 참 고 자 료



금융감독원

· 작성부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과,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 담 당 자	이윤수 사무관(☎ 3771-5155), 김영린 부국장(☎ 3771-5940)		
· 배 포 일	2006. 7. 17.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88~91)

제 목 : '06.7월 집중호우관련 금융지원대책 수립

주요 내용

- ☐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은 7.17(월) 10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 금융기관의 피해를 점검하고 피해지역의 주민과 기업의 복구를 지원하는 등 관련대책을 마련키로 하였다.
- ☐ 현재까지는 피해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침수되는 등 일부 피해가 확인되었으나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감독당국은 금융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전산센터 등 관련 피해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중이다.
- ☐ 감독당국은 피해지역 주민과 기업들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① 은행권의 경우, 각 은행에 재해지원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재해복구자금대출과 함께 기존대출금 기한연장, 원리금 납입 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

② 보험권의 경우, 각 보험회사가 피해지역에 이동(移動)피해 보상 및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한편

- 보험사고 접수시 청구서류를 간소화하고 피해사실 확인시 보험금을 신속 지급

- 이재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한편, 보험대출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원리금 상환유예

③ 비은행권의 경우, 피해지역 기업·가계의 신용카드 결제기일 일정기간 연장

④ 금감원은 피해지역 금융기관 점포에 대한 검사일정 변경 등

□ 한편, 감독당국은 이러한 금융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융감독원내에 '집중호우관련 금융분야 지원대책본부'를 설치하여

○ 피해지역 금융지원과 소비자보호 등 각종 지원대책을 총괄하고

○ 향후 피해상황을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검사총괄국, 보험감독국		
· 담 당 자	김 원 부국장(☎ 3786-7012), 손광기 팀장(☎ 3786-8100)		
· 배 포 일	2003. 9. 15 .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88~91)

※ 이 자료는 9월 16일(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금융회사의 태풍피해 복구현황 및 금융지원대책

주요 내용

□ 금번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지역 소재 영업점이 침수되거나 정전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금일(9.15) 부터는 대부분 복구가 완료되어 정상영업중이다.

- 피해 유형별로는 침수피해가 99개 점포였고, 유리창 및 간판 파손이 214개 점포, 정전피해가 415개 점포였다.
- 이밖에 각 금융회사의 전산센타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 한편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회사는 피해지역 주민과 기업들의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일련의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 은행권의 경우 농·수협, 국민, 산업, 기업, 조흥, 외환 등이 재해 지원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 재해복구자금대출과 함께 기존대출금 기한연장, 원리금 납입유예, 연체이자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시행키로 하였다.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특히 보험권의 경우에는 각 보험회사가 피해지역에 이동(移動) 피해보상 및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 보험사고 접수시 청구서류를 간소화하고 추정보험금의 50% 이상을 우선 지급하여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또한 피해복구기간을 고려하여 이재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예:금년말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보험대출의 경우에도 일정기간(예:금년말까지) 원리금의 상환유예, 연체이자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한편, 금융감독원에서는 효율적인 금융지원을 위하여 강권석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금융지원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비상지원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금융협회 및 각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피해지역에 수해 관련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피해복구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붙임 : 금융회사 태풍피해 복구현황 및 금융지원대책

(붙임)

금융회사 태풍피해 복구현황 및 금융지원대책

I. 금융회사 태풍피해 및 복구현황

정전중인 일부 영업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업점이 금일부터
정상 영업중

<은행권>

- ☐ 피해현황 ┌ 침수 : 13개은행 80개점포
 └ 파손 : 12개은행 129개점포
 └ 정전 : 10개은행 381개점포

- ☐ 복구현황 : 은행 영업점의 경우 복구가 완료되어 9.15 현재 정상
 영업중임
 다만, 농·수협 회원조합의 일부 영업점(농협 14개점포,
 수협 23개점포)은 9.15.10:00 현재 정상영업 곤란

- ☐ 전산센타 : 전 은행 피해 없음

<비은행권>

- ☐ 피해현황 ┌ 침수 : 9개 금융회사
 └ 파손 : 7개 금융회사
 └ 정전 : 11개 금융회사

- ☐ 복구현황 : 정전중인 거제 및 마산지역의 6개 신탁(경남항운 · 신마산 · 신헌 · 거제중앙 · 장승포 · 아주신탁)을 제외한 전 금융회사 정상영업중

〈보험회사〉

- ☐ 피해현황 ┌ 침수 : 3개보험사 4개점포
 └ 파손 : 12개보험사 60개점포
 └ 정전 : 2개보험사 4개점포

- ☐ 복구현황 : 침수 정도가 심한 2개 영업점(삼성생명 거제, LG화재 마산)을 제외한 전 영업점이 복구가 완료되어 9.15 현재 정상영업중임

- ☐ 전산센타 : 피해 없음

〈증권회사〉

- ☐ 피해현황 ┌ 침수 : 5개증권사 6개점포
 └ 파손 : 8개증권사 18개점포
 └ 정전 : 8개증권사 19개점포

- ☐ 복구현황 : 전 영업점이 복구가 완료되어 9.15 현재 정상영업중임

- ☐ 전산센타 : 피해 없음

II. 금융지원 대책

1. 태풍피해에 따른 금융지원 강화

피해지역 주민과 기업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금융권의 복구자금 지원과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금 조기 지급 등 금융지원을 강화

< 은행권 >

국민은행

- ☐ 주택 신축, 개·보수자금(주택파손으로 신축 또는 개·보수 희망 고객), 생활안정자금(가구당 20백만원 이내), 소상공인 재해복구자금(재해복구에 필요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을 각각 지원
- 이와 함께 '03.9~10월중 이자를 '03.11월말까지 납부시 연체이자 전액 면제

농협중앙회

- ☐ 피해복구자금 신규 지원(행정기관이 확인한 피해액중 담보 또는 신용범위 이내) 및 기존대출금 기한연장 및 원리금납입 유예(연체이자 면제)
- 신용조사, 감정평가, 제증명 발급수수료 등 대출관련수수료 면제로 고객의 불편 및 금융부담 경감 도모

☐ 농작물(과일)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

- 강원, 영·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피해실태의 신속한 조사후 수확종료 시점에서 보험금을 지급(피해지역이 10천ha로 전체보험 가입지역의 94% 수준)

수협중앙회

- ☐ 피해복구자금(일반, 상호금융, 공제, 수산정책자금)을 지원(피해 확인금액 범위 이내, 가계자금은 20백만원 이내)하고 기존대출금 기한연장 및 원리금납입 유예(연체이자 면제)를 추진
- ☐ 양식장시설 피해 어업인에 대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우선 보증을 추진하고 공제가입선탁에 대한 보험금 신속 지급

산업은행

- ☐ 생산능력 회복을 위한 피해시설 복구자금을 전액 지원하고 조업차질 등에 따른 긴급부족운영자금(중소기업 50억원, 대기업 100억원 이내, 한도초과시 본부장 승인)을 지원하는 한편 대출금 기한을 연장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2% 이내

기업은행

- ☐ 피해 중소기업의 시설자금(소요자금의 100% 이내)과 운전 자금 및 가계자금을 긴급지원하는 한편 피해기업에 대하여 대출이자를 2%p 추가 감면하는 등 금리를 우대

조흥, 외환, 부산 등 일반은행

- ☐ 태풍피해 가구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복구자금(개인 5천만원 이내, 중소기업 3억원 이내) 지원, 대출금 상환유예 및 연체 대출금 감면
- ☐ 지역소재 태풍피해 업체에 대하여 신규자금 지원 및 기존 대출금의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주택신축, 개보수 자금, 생활 안정자금, 소상공인 재해복구자금을 지원하고 태풍발생으로 인한 이자 연체의 경우 연체이자 등을 면제

< 보험권 >

☐ 신속한 피해보상

○ 보험금 신속지급

- 보험사고 접수 즉시 현장 출동·조사
-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사망, 사고 증빙서류를 행정기관 확인 및 이웃사람 증명으로 대체)

○ 보험금 우선지급 시행

- 추정보험금의 50%이상 우선 지급(피해자 방문 지급)

□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 피해복구기간을 고려하여 일정기간동안 罹災民 등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연체이자 면제)

□ 보험료 납입 유예

○ 피해복구기간을 고려하여 일정기간동안 罹災民 등에 대한 보험료 납입을 유예

⇒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및 보험료 납입 유예는 업계의 자발적인 참가를 적극 유도*하고, 유예기간은 1차로 금년 12월까지로 설정(예정)

* 9.15 현재 전 손해보험회사 및 생보사 중 삼성·교보·대한·알리안츠·흥국·금호·신한생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키로 하였음

□ 약관대출 신청시 신속대출

○ 약관대출 신청시 24시간 이내 지급

□ 풍수해 피해차량에 대한 긴급출동서비스 확대

2. 비상지원대책기구 설치·운영

금융감독원 (비상지원대책 본부)

□ 단 장 : 강권석 부원장

- 금융지원반 : 검사총괄국장(반장, 3786-7010) 및 관련부서장
- 소비자보호반 : 소비자보호센터국장(반장, 3771-5700) 및 부산, 대구지원장

* 「금융감독원 태풍관련 금융상담센터」 전용 전화번호

본 원 : ☎02-3786-8694~5, 8688

부산지원 : ☎051-606-1704, 1730

대구지원 : ☎053-760-4014, 4017

□ 운영기간 : 2003. 9. 13(토) ~ 상황 종료시

□ 주요 업무내용

- 금융회사별 피해내용 파악
- 피해내용별 대응방안 강구 및 지도
- 사고 지역에 대한 민원 파악 및 신속한 금융지원 지도
- 항구적인 금융회사 피해예방대책 수립 등

□ 우리원, 금융업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지원센터 운영

- 피해지역에 우리원 직원을 파견, 출장상담 실시
- 부산, 대구지원에 수해관련 상담센터 운영

각 금융회사 (비상지원대책반)

□ 운영기간 : 2003. 9. 13(토) ~ 상황 종료시

□ 주요 업무내용

- 침수 및 정전 등 피해내용 파악
- 파손장비의 교체 및 수선 등 신속한 복구
- 사고 지역에 대한 민원 파악 및 신속한 대응 등
- 생·손보험회 지사 및 보험회사 지점의 민원접수센터 확대·개편(보상 및 상담직원 추가 배치)
- 피해가 큰 풍수해 지역에 이동 피해보상 및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 관내지역에 대한 생필품 등 구호물자 지원

<참고 1>



태풍 피해관련 보험종목별 보상가능여부

피해유형	보험종목	담보여부	비 고
1. 인명피해 - 사망, 상해	- 생명보험 - 손해보험(상해보험 등)	○ △	- 천재위험담보특약 가입시 담보가능
2. 자동차사고 - 대인 - 대물 - 자기신체 - 자기차량	- 대인배상 I, II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 자기차량손해	△ × ○ ○	- 대인배상 I 만 보상
3. 재산피해 - 주택, 빌딩, 공장	- 화재보험 - 재산종합보험 - 주택상공종합보험	△ ○ ○	- 풍수재특약 가입시 담보가능
- 기업휴지	- 재산종합보험	○	- 기업휴지손해 가입시 담보가능
- 전자기기, 기계	- 전자기기보험, 기술보험	△	- 전자기기보험의 경우 태풍담보특약 가입시 담보가능
- 건설공사	-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	○	
- 농작물	- 농작물재해보험	○	- 농협공제에서 영위
- 선박 좌초, 침몰, 파손, 유실	- 선박보험영문약관 (500톤이상) - 어선재해보상보험 (500톤미만)	○ ○	- 수협공제에서 영위 (코리안타에서 재공제 참여)
- 건조중인 선박	- 선박건조보험	○	- 충돌배상책임손해도 담보
- 컨테이너	- 컨테이너보험	○	
- 컨테이너 적하물	- 적하보험	○	
- 크레인	- 중장비안전보험	△	- 풍수재특약 가입시 담보가능
- 유도선 침몰	- 선박보험국문약관	○	
- 해양오염	- 유류오염배상책임보험	○	- KSA(한국해운조합) 에서 영위 (손보사는 재공제 참여)

<참고 2>

손해보험회사별 긴급출동서비스 연락처

회사명	전 화 번 호
동양화재	1566 - 7711
신동아화재	1566 - 8000
대한화재	080 - 778 - 8572
그린화재	1588 - 5959
쌍용화재	1688 - 1688
제일화재	1566 - 8282
삼성화재	1588 - 5114
현대해상	1588 - 5656
엘지화재	1544 - 0114
동부화재	1588 - 0100
교보자동차	1566 - 1566

	<h1 style="margin: 0;">보 도 참 고 자 료</h1>	
·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검사총괄국, IT업무실, 각 검사국	
· 담 당 자	검사총괄팀장 김 원(3786-7012), IT검사지원팀장 권한용(3786-7170)	
· 배 포 일	2003. 9. 14.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95, 5790)

※ 이 자료는 9월 15일(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금융회사 태풍(매미) 피해 현황 및 대응책

주요 내용

- 추석 연휴 중 우리나라 남부 지역을 휩쓴 태풍(매미)으로 인하여 금융회사의 영업점이 침수되거나 정전되는 등 68개 금융회사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다.
 - 피해 유형별로는 침수피해가 99개 점포였고, 유리창 및 간판 파손 피해현황은 214개 점포로 나타났으며
 - 이밖에 정전피해가 415개 점포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 이들 피해금융회사들은 대부분 이번 태풍으로 피해가 큰 부산, 마산, 창원, 울산, 여수 소재 점포들이다.
- 그러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에서는 2003. 9. 13. 비상대책본부 등을 설치하여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점포 중 9개를 제외한 대부분 점포(98.8%)는 일요일까지 복구를 완료할 예정이다.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4)

- 이에 따라 피해지역 국민들의 금융거래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아울러 금융회사의 전산센타가 피해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함에 따라 정상영업이 불투명한 일부 영업점 고객도 인근 점포 등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 또한, 피해지역 국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태풍으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독려함과 아울러 피해지역 기업에 대한 대출금 기한 연장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금융회사 태풍피해 대응책

참고 : 1. 금융회사의 태풍 「매미」 피해 현황

2. 태풍 매미 피해관련 보험사고 현황

(붙임)

태풍 피해 대응책

□ 금융감독원내 비상대책본부 편성·운영

① 운영기간 : 2003. 9. 13(토) ~ 종료시

② 주요 업무내용

- 금융회사별 피해내용 파악
- 피해내용별 대응방안 강구 및 지도
- 사고 지역에 대한 민원 파악 및 신속한 대응 지도
- 항구적인 금융회사 피해예방대책 수립 등

□ 금융회사별 비상대책반 편성·운영

① 운영기간 : 2003. 9. 13(토) ~ 종료시

② 주요 업무내용

- 침수 및 정전 등 피해내용 파악
- 파손장비의 교체 및 수선 등 신속한 복구
- 사고 지역에 대한 민원 파악 및 신속한 대응 등

□ 태풍 관련 보험사고 지원 대책 마련

① 신속한 피해보상

- 보험사고 접수 즉시 현장 출동·조사
-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사망, 사고 증빙서류를 행정기관 확인 및 이웃사람 증명으로 대체)

② 보험금 우선지급 시행

- 추정보험금의 50%이상 우선 지급(피해자 방문 지급)

③ 태풍 피해차량에 대한 긴급출동서비스 확대

□ 피해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지도

① 대출 원리금 기간 연장 등

- 피해복구기간을 고려하여 일정기간(예; 금년 12월말까지) 동안 罹災民 등에 대한 대출원리금 기한 연장 등

② 보험료 납입 유예

- 피해복구기간을 고려하여 일정기간(예; 금년 12월말까지)동안 罹災民 등에 대한 보험료 납입을 유예

□ 기 타

- 생·손보험회를 중심으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생필품 등 구호물자 지원

(참고 1)

금융회사의 태풍 「매미」 피해현황

(‘03.9.14. 15시 현재)

(단위 : 개)

금융 권역별	침수		정전		파손	
	회사수	점포수	회사수	점포수	회사수	점포수
은 행	13	80	10	381	12	129
비은행	9	9	11	11	7	7
보 험	3	4	2	4	12	60
증 권	5	6	8	19	8	18
합 계	30	99	31	415	39	214

(참고 2)

태풍 「매미」 관련 보험사고 접수 현황

□ '03.9.14. 12:00 현재까지 태풍 매미로 인해 접수된 보험사고는 자동차보험이 13,456건 245억원, 일반손해보험이 418건 1,115억원, 화재보험이 11건 200억으로 총 1,560억원(이상 추정치)으로 나타났으며

○ 사고접수 현황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재보험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로, 통상 80~90%를 해외 재보험에 가입하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내보험사가 실제 부담할 보험금은 그만큼 줄어들 전망

<참고사항>

- 화재보험 : 현재 사고 접수중이므로 정확한 집계는 3~4일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해상보험 : 선박침몰 등의 손해는 현재 확인중
- 특종보험 : 크레인 붕괴(11기)사고로 인한 손해는 약 180억으로 추정

3. 상호협정에 의한 공동인수 보험 계약 현황

(붙임 참조)

원자력보험공동인수협정(업무처리기관: 코리안 리)

(단위: 건, 천원)

연도	공동인수보험종목	보험상품	계약건수	원수보험료	지급보험금
FY03	원자력재산보험	원자력재산보험	3	10,542,000	3,234,000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8	3,154,000	-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	43	221,000	-
	기타원자력에 관한 보험				
FY04	원자력재산보험	원자력재산보험	3	13,775,000	-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8	3,296,000	-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	39	208,000	-
	기타원자력에 관한 보험				
FY05	원자력재산보험	원자력재산보험	3	14,162,000	1,767,000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8	3,267,000	-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	51	252,000	-
	기타원자력에 관한 보험				

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업무처리: 손보험회)

(단위: 건, 천원)

연도	공동인수범위	보험상품	계약건수	원수보험료	지급보험금
FY03	500톤미만의 무선급 소형선박	선박보험	151	434,143	40,000
	방위산업관련 해상적하	적하보험	6,091	1,048,414	389,572
	방위산업관련 선박건조	선박건조보험	0	0	0
	방위산업관련 항공사고	항공보험	7	131,418	15,675
	보세화물	화재보험	1,842,136	3,089,972	854,804
		동산종합보험	0	0	0
FY04	500톤미만의 무선급 소형선박	선박보험	139	512,404	564,484
	방위산업관련 해상적하	적하보험	6,035	955,063	152,337
	방위산업관련 선박건조	선박건조보험	0	0	0
	방위산업관련 항공사고	항공보험	6	59,914	0
	보세화물	화재보험	2,055,709	3,141,129	270,270
		동산종합보험	0	0	0
FY05	500톤미만의 무선급 소형선박	선박보험	155	620,413	714,630
	방위산업관련 해상적하	적하보험	5,869	1,068,654	377,866
	방위산업관련 선박건조	선박건조보험	0	0	0
	방위산업관련 항공사고	항공보험	8	204,933	0
	보세화물	화재보험	2,733,759	3,166,343	113,551
		동산종합보험	0	0	0

자동차보험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업무처리: 코리안리)

(단위: 대, 천원)

연도	구분	평균유효대수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FY03	개인용	62,370	28,341,163	31,822,836
	업무용	44,041	21,982,515	24,051,674
	영업용	84,485	69,529,939	57,263,845
	이륜차	42,347	6,859,515	5,852,907
	소계	233,243	126,713,132	118,991,262
FY04	개인용	62,198	19,091,188	24,855,863
	업무용	51,917	15,541,731	19,461,919
	영업용	84,910	43,671,930	44,455,841
	이륜차	44,614	3,958,465	4,395,588
	소계	243,639	82,263,314	93,169,211
FY05	개인용	47,089	10,189,948	17,238,787
	업무용	45,157	12,920,805	15,998,959
	영업용	84,259	40,601,969	32,142,146
	이륜차	40,957	3,804,141	3,176,581
	소계	217,462	67,516,863	68,556,473

손해보험공동인수특별협정(업무처리: 한국화재보험협회)

(단위: 건, 천원)

연도	공동인수범위	보험상품	계약건수	원수보험료	지급보험금
FY03	1. 방산업체와 방산시설과 물자	화재보험	122	4,171,551	2,643,656
		조립보험	51	1,125,340	929,099
		기관기계보험	-	-	-
		건설공사보험	1	122,808	-
		동산종합보험	70	349,596	95,210
		운송보험	237	126,023	53,412
		재산종합보험	77	12,090,629	20,664,632
	2. 국유건물로서 아래부처의 건물 * 국회, 국방부, 법무부, 감사원, 행자부소속 정부종합청사,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정홍보처 소속 국립영상제작소, 정보통신부 소속 전산과리소 전파연구소, 중앙전파 관리소, 국세청(세무서 제외), 통 계청, 관세청	화재보험	1,337	2,166,690	1,482,774
		장기화재보험	-	-	-
		재산종합보험	13	479,927	628,844
		테러보험	-	-	-
		동산종합보험	16	39,069	-
	3. 상기와 국공유 건물	테러보험	-	-	-
FY04	1. 방산업체와 방산시설과 물자	화재보험	108	6,584,252	1,449,696
		조립보험	26	724,418	1,045,548
		기관기계보험	-	0	-
		건설공사보험	3	368,423	1,500,800
		동산종합보험	74	263,836	-
		운송보험	293	136,402	-
		재산종합보험	72	16,305,072	3,985,301
	2. 국유건물로서 아래부처의 건물 * 국회, 국방부, 법무부, 감사원, 행자부소속 정부종합청사,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정홍보처 소속 국립영상제작소, 정보통신부 소속 전산과리소 전파연구소, 중앙전파 관리소, 국세청(세무서 제외), 통 계청, 관세청	화재보험	1,521	2,774,877	1,856,817
		장기화재보험	-	-	-
		재산종합보험	17	726,244	401,678
		테러보험	-	-	-
		동산종합보험	17	29,053	2,100
	3. 상기와 국공유 건물	테러보험	-	-	-

(단위: 건, 천원)

연도	공동인수범위	보험상품	계약건수	원수보험료	지급보험금
FY05	1. 방산업체와 방산시설과 물자	화재보험	135	3,066,144	12,412,820
		조립보험	35	1,959,723	-
		기관기계보험	-	-	-
		건설공사보험	-	-	1,386,000
		동산종합보험	69	219,838	-
		운송보험	548	159,429	-
		재산종합보험	91	18,394,725	399,857
	2. 국유건물로서 아래부처의 건물 * 국회, 국방부, 법무부, 감사원, 행자부소속 정부종합청사,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정홍보처 소속 국립영상제작소, 정보통신부 소속 전산과리소 전파연구소, 중앙전파 관리소, 국세청(세무서 제외), 통 계청, 관세청	화재보험	1613	3,717,268	673,777
		장기화재보험	-	-	-
		재산종합보험	86	2,014,395	12,254
		테러보험	-	-	-
		동산종합보험	20	45,988	21,993
	3. 상기외 국공유 건물	테러보험	-	-	-

4. 2003년 이후 연도별, 금융기관별 신용카드 및 카드론 발급 현황 : 2006년은 월별

□ 신용카드수 현황¹⁾

(단위 : 천매)

	'03말	'04말	'05말	'06.3말	'06.6말
비씨카드	51	45	37	36	39
엘지카드	17,873	13,855	16,833	17,038	17,448
삼성카드	14,268	10,664	11,125	11,258	11,460
현대카드	2,774	3,545	5,029	5,351	5,733
롯데카드	6,809	6,781	7,660	7,864	7,885
신한카드 ²⁾	2,073	2,399	2,909	3,111	6,020
계	43,848	37,289	43,593	44,658	48,585

주1) 유효기간 내에 있는 모든 카드수

주2) 신한카드와 조흥은행 카드사업부문 합병('06.4)

□ 카드론 이용실적¹⁾

(단위 : 억원)

	'03년중	'04년중	'05년중	'06.1/4분기중	'06.2/4분기중
비씨카드	0	0	0	0	0
엘지카드	82,068	19,766	26,627	8,365	7,944
삼성카드	121,041	19,719	19,741	4,644	4,316
현대카드	8,595	4,272	3,320	1,649	1,636
롯데카드	541	719	3,064	1,515	1,783
신한카드 ²⁾	2,096	1,426	1,237	536	786
계	214,341	45,902	53,989	16,709	16,465

주1) 기간중 취급된 금액 기준

주2) 신한카드와 조흥은행 카드사업부문 합병('06.4)

5. 2003년 이후 연도별, 유형별 사금융 피해접수 현황 및 금감원
적발·조치현황, 2006년 8월 현재 시도별 등록현황

1) 사금융 피해 상담(붙임 1) 및 수사기관 통보(붙임2) 현황

- ☐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설치('01.4월)·운영하는 한편 불법 혐의업체를 수사당국에 통보
하고 있음

* 대부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는 관할 시·도가, 형사처벌은 사법기관이 담당

2) 시도별 대부업체 등록 현황 : 붙임 3

- ☐ 서민금융이용자 보호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별
시·도로부터 수집한 현황을 단순취합한 것임

* 현재 '06.6월 현황까지 취합

(붙임1)

사금융피해상담센터 상담현황

(단위 : 건)

기 간	고금리	불법적 채권추심	대부광고 ¹⁾	대부중개	기타부당 ²⁾	대부업 등록 등 문의	단순상담 ³⁾	계
'03년	1,126	760	-	51	240	151	856	3,184
'04년	872	551	-	9	410	7	1,049	2,898
'05년	479	374	62	73	484	421	1,334	3,227
'06.7월	250	222	27	48	373	203	1,275	2,398
총계	2,727	1,907	89	181	1,507	782	4,514	11,707

1) 대부광고 :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05.8월부터 새로 분류

2) 기타부당 : 대출사기, 부채증명서 발급거부, 부당수수료 부과 등

3) 단순상담 : 압류·경매, 제도권금융기관 조회, 신용조회 등

(붙임2)

금융질서교란사범 수사기관 통보현황

(단위 : 개)

기간	대부업법 위반				유사 수신	카드깡	기타 ²⁾	계
	이자율 위반	불법적 추심	무등록 대부업	중개 수수료 ¹⁾				
'03년	106	32	12	-	133	2,194	136	2,613
'04년	241	28	13	-	181	1,322	79	1,864
'05년	73	5	70	-	166	693	123	1,130
'06.7월	11	5	91	1	102	92	70	372
총계	431	70	186	1	582	4,301	408	5,979

주1) 중개수수료 수취 :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05.9월부터 금지

주2) 기타 : 대출사기, 금융기관 유사상호 사용, 알선수재, 사문서위조 등 기타 법령위반

* 두 개 이상의 위반이 있는 경우 1개의 대표행위 위반으로 취급

(붙임3)

지역별 대부업 등록 및 취소현황

(06.6월말 현재, 단위 : 개)

지역	등록(누적)	등록취소 (누적)	등록취소(누적)		등록업체
			자진취소(누적)	직권취소(누적)	
서울	9,774	4,113	2,839	1,274	5,661
경기	5,079	2,032	1,915	117	3,047
부산	2,453	1,333	886	447	1,120
대구	1,571	912	604	308	659
인천	1,443	777	582	195	666
광주	1,054	527	359	168	527
대전	997	425	404	21	572
울산	723	333	333	-	390
강원	794	396	325	71	398
충남	794	381	267	114	413
충북	891	493	484	9	398
전남	688	236	217	19	452
전북	984	308	308	-	676
경남	1,380	684	549	135	696
경북	826	242	240	2	584
제주	245	137	105	32	108
합계	29,696	13,329	10,417	2,912	16,367

6. 보험관련

- 방카슈랑스 관련 민원현황

(단위 : 건)

기간	분기	분기별 건수	연도별 총건수
2003년	4/4분기	22	22
2004년	1/4분기	2	25
	2/4분기	5	
	3/4분기	6	
	4/4분기	12	
2005년	1/4분기	10	43
	2/4분기	16	
	3/4분기	9	
	4/4분기	8	
2006년	1/4분기	14	20
	2/4분기	6	

7. 외국운용사가 운영하는 해외 펀드상품 판매실적, 펀드 가입규모, 국내법인의 해외투자펀드 설정액 및 투자액, 평가액(설정액+수익) 등 추이

【 외국펀드 】

(단위 : 십억원)

구 분	05.6월말	9월말	12월말	06.3월말	5월말
판매실적	4,349	5,939	6,125	7,965	9,298

외국펀드 : 국내판매 외국펀드(외국 자산운용사 운용)

【 해외투자펀드 】

(단위 : 십억원)

구 분	05.6월말	9월말	12월말	06.3월말	5월말
설정액	6,243	6,350	6,305	7,801	9,468
NAV	6,402	6,687	6,704	8,428	9,944

해외투자펀드 : 해외투자 국내펀드(국내자산운용사 운용)로서, 해외 유가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 기준

신 학 용 의 원

1. 각 은행별 BIS비율(2003~2006.7)

“붙임 참조”

(붙임)

□ 각 은행별 BIS비율(2003~2006.7)

	03년	04년	05년	06년 6월
조흥	8.87	9.40	10.94	
우리	11.23	12.20	11.65	11.48
제일	12.00	11.91	10.74	10.19
하나	11.17	11.83	13.29	11.67
외환	9.32	9.47	13.68	13.89
신한	10.49	11.94	12.23	11.74
한국씨티	10.98	12.42	15.03	14.24
국민	9.81	11.14	12.95	15.20
시중은행	10.34	11.31	12.51	12.74
대구	10.58	10.66	11.33	11.60
부산	11.66	10.84	12.25	11.61
광주	10.72	11.81	11.60	11.89
제주	10.96	10.91	11.71	12.22
전북	10.79	10.72	11.53	11.54
경남	11.69	11.34	10.59	11.42
지방은행	11.13	11.02	11.52	11.63
일반은행	10.40	11.29	12.43	12.65
산업	16.22	18.08	18.43	18.24
기업	9.88	11.17	11.11	11.16
수출입	14.41	12.86	13.87	12.71
농협	10.66	11.43	11.81	12.01
수협	11.71	11.21	12.59	11.96
특수은행	12.77	13.71	14.09	13.84
국내은행	11.16	12.08	13.00	13.05

* 조흥은행은 '06.4.1 신한은행에 통합

2. 2001~2006년 8월까지 각 연도별 채권발행 증가 및 감소현황

1) 연도별 보증채, 무보증채 채권발행 잔액

□ 2001~2006년 8월까지 각 연도별 보증채, 무보증채 채권발행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억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8월
보 증	36,517	26,320	20,191	7,665	2,732	3,237
무보증	801,803	1,033,283	1,145,356	968,458	924,029	895,838

주 : ABS, 담보부사채 제외

2) 은행별 금융채 발행잔액(현재 존속은행 기준)

(단위 : 조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6월
우 리	3.1 ¹⁾	6.0	7.8	10.8	15.2	21.8
제 일	0.6	2.2	5.8	8.9	9.3	8.4
하 나	1.9	4.1 ²⁾	6.3	8.2	10.4	12.3
외 환	3.0	3.3	4.1	6.5	6.0	6.4
신 한	3.8	6.4	9.2	10.9	12.4	21.5 ³⁾
한국씨티	1.5 ⁴⁾	5.1 ⁴⁾	4.5 ⁴⁾	6.5	4.5	3.6
국 민	9.1	17.8	19.3	22.0	16.6	22.1
대 구	0.4	0.3	0.3	0.3	0.3	0.3
부 산	0.6	0.2	0.2	0.4	0.4	0.4
광 주	0.6	0.5	0.5	0.4	0.6	0.7
제 주	0.06	0.04	0.04	0.04	0.04	0.04
전 북	0.3	0.2	0.2	0.1	0.3	0.3
경 남	0.7	0.6	0.6	0.3	0.8	0.9
총계 ⁵⁾	28.8	52.6	65.3	82.4	84.5	98.7

주 : 1) 구 한빛은행 발행잔액

2) 구 서울은행 발행잔액 포함

3) 구 조흥은행 발행잔액 포함

4) 구 한미은행 발행잔액

5)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은행의 은행채 발행잔액 포함

3) 카드사별 카드채 발행잔액

(단위 : 억원)

	'01말	'02말	'03말	'04말	'05말	'06.6말
비씨카드	12,600	3,400	1,500	800	200	0
LG카드	50,250	71,471	69,715	33,708	34,570	39,155
삼성카드	61,876	76,920	91,030	94,629	71,572	62,343
현대카드	0	6,000	10,929	9,763	15,353	15,902
롯데카드	3,107	0	1,100	6,500	10,450	11,650
신한카드	..	15,700	2,600	0	1,800	19,200
국민카드	48,810	59,380
외환카드	26,740	37,100	22,680
우리카드	..	32,000	19,444
계	203,383	301,971	218,998	145,401	133,944	148,250

주1) 대차대조표상 단기사채, 유동성사채, 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의 합계

2) 각사 제출 자료 기준

3) '06.6말 신한카드의 회사채 발행잔액에는 '06.4.1. 합병된 (구)조흥은행 카드사업부 발행잔액 포함

3. 회계법인별 증선위에서 지정한 외부감사대상 회사현황

- 첨부자료 참조

03~'06 회계법인별 지정회사수 현황

연 번	'03년도		'04년도		'05년도		'06년도 9월 현재	
	회계법인명	회사수	회계법인명	회사수	회계법인명	회사수	회계법인명	회사수
1	가립	1	가립	1	가립	1	남일	1
2	남일	1	남일	1	나무	1	다산	5
3	다산	1	다산	3	남일	2	대명	3
4	다인	2	다인	1	다산	6	대성	2
5	대성	3	대성	3	다인	2	대주	6
6	대주	7	대주	8	대명	3	대현	1
7	대현	1	대현	1	대성	5	동남	1
8	미래	1	동남	1	대주	10	부일	2
9	보람	1	동명	1	대현	2	삼경	3
10	부일	1	미래	1	동남	3	삼덕	9
11	삼경	3	보람	1	동명	2	삼일	49
12	삼덕	1	부일	1	두레	1	삼정	19
13	삼영	1	삼경	4	미래	2	삼화	1
14	삼일	29	삼덕	8	보람	2	새빛	1
15	삼정	15	삼영	1	부일	3	새시대	1
16	삼화	1	삼일	57	삼경	6	서일경영	2
17	상록	1	삼정	15	삼덕	15	선진	1
18	서일경영	1	삼화	1	삼영	1	성도	3
19	선명	1	상록	1	삼일	99	성신	1
20	선일*	2	새빛	1	삼정	36	세림	2
21	선진	1	새시대	1	삼화	3	세일	1
22	성도	1	서일경영	2	상록	2	신성	1
23	성신	1	선일*	1	새빛	4	신우	4
24	세림	1	선진	1	새시대	2	신원	2
25	세일	1	성도	3	서일경영	3	신한	8
26	세정*	1	성신	1	서정	2	안진	26
27	송현	1	세림	1	선명	1	우리	3
28	신성	1	세영	1	선진	3	위드	1
29	신우	3	세일	1	성도	3	이정	1
30	신한	8	세현	1	성신	2	이지	1
31	안건	2	신우	4	성지	1	이춘	1
32	안진	16	신원	1	세림	2	인덕	2
33	열린	1	신한	7	세영	2	인일	1
34	우리	2	안건	6	세일	2	재정	1
35	위드	1	안진	10	세현	2	정동	1
36	이정	1	열린	1	신성	2	정일	1
37	이지	1	우리	3	신영	2	정진	1
38	이춘	1	위드	1	신우	8	제원	1
39	인덕	2	이정	1	신원	3	지암	1
40	인일	1	이춘	1	신정	2	지평	1
41	정연	1	인덕	2	신한	15	참	1
42	정일	1	인일	1	신화	3	충정	1
43	제원	2	일신	1	안진	62	한경	1
44	지성	1	정연	1	열린	2	한영	23

45	참	1	정일	1	우리	7	한울	2
46	천지	2	제원	3	우림	2	화인경영	3
47	충정	1	참	1	위드	2	효림	1
48	태영	1	천지	1	이정	2		
49	하나*	6	충정	1	이지	2		
50	한길	2	태영	2	이춘	5		
51	한림	1	하나*	9	인덕	4		
52	한영	6	한길	1	인일	2		
53	화인경영	2	한림	1	일신	2		
54			한영	3	재정	1		
55			화인경영	3	정동	2		
56					정연	2		
57					정일	2		
58					정진	1		
59					제원	4		
60					제일	1		
61					중앙	1		
62					지성	1		
63					지암	1		
64					참	2		
65					천지	1		
66					청안	2		
67					충정	3		
68					태영	2		
69					한경	1		
70					한길	2		
71					한림	2		
72					한미	2		
73					한영	61		
74					한울	3		
75					화인경영	6		
76					효림	1		
합 계		148		190		467		204

* 선일, 세정, 하나회계법인은 피합병소멸법인

4. 임원 문책경고 및 직원 문책요구에 대한 조치권자 현황

금융권역 제재구분	은행, 신탁회사,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상호저축은행
임원 문책경고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장
직원 문책 요구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위원회	○면직요구 : 금융감독위원회 ○정직~주의요구 : 금융감독원장

5. 2006년 중 카드사 수수료와 관련하여 분쟁 있었던 내용

☐ 분쟁 유형

년도	분쟁건수	분쟁유형(내용)	처리결과
2006년	2	리볼빙수수료 무료 이벤트 행사시 리볼빙을 사용하였는데, 수수료를 부과 한 것은 부당함	취하 (민원인 요청 수용됨)
		카드론 조기 상환시 선 납입한 취급수수료를 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취하 (민원인 요청 수용됨)

6. 금감원 보험상품 심사기준

- ☐ 감독당국에서는 보험업법 제127조 등에 의거 보험상품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붙임 : 보험상품심사 관련 법령> 참조

<붙임> : 보험상품심사 관련 법령

<붙임>

보험상품심사 관련 법령

□ 보험업법

제127조 (기초서류변경의 신고) ①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매분기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제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9조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료율을 산출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험요율이 보험금 및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2.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3.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제131조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의 예탁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거나 보험회사의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기초서류의 변경 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장래에 향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명령을 받은 기초서류로 인하여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가 명백하게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납입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하거나 보험금을 증액하도록 할 수 있다.

⑤보험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 (기초서류변경의 신고) ①보험회사가 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보험회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동 보험상품의 기초서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초서류를 별표 1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기초서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3. 보험계약청약서의 양식변경 등 이미 신고 또는 제출된 기초서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②보험회사가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초서류의 시행예정일의 30일전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보험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을 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험상품신고(제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이 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1항제2호·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계리사가 검증·확인한 기초서류
2.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의 정확성 여부와 예정위험률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보험요율산출기관의 확인서

[별표 1] : 기초서류의 작성기준(제9조제2항 및 제71조제1항관련)

□ 보험업감독규정

제7-82조(보험상품의 심사) ①감독원장은 보험회사가 신고 또는 제출한 보험상품에 대하여 제7-83조 내지 제7-85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 등을 심사한다.

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상품을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된 보험상품에 대하여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영 제71조제3항에 의하여 변경을 권고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험상품에 대하여는 법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보험상품의 변경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감독원장은 제출된 보험상품의 내용 중 보험계약자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거나 불명확한 약관조항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회사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전에 그 내용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별표 14-2]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신고기준(제7-50조의2 관련)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9조(보험상품심사기준) 감독규정 제7-86조에 의하여 보험상품심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심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별표 18] : 보험상품심사기준(제5-19조관련)

7. 금감원과 대부업체와의 업무공조 내용

-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권한은 관할 시·도에, 법령 개정관련 권한은 재정경제부에 있음
 - * 대부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는 관할 시·도가, 형사처벌은 사법기관이 담당
- ☐ 금융감독원은 직접적인 감독권한은 없으나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설치('01.4월)·운영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반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 우리원과 대부업체와의 업무공조 내용은 없으며, 다만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자료(포스터·리플렛 등) 배포와 관련하여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재경부 사단법인)의 협조를 받은 바 있음

8.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관련

- '04~'06년 상반기까지 월별 상담 유형별 건수, 처리내역, 해결율
- '04~'06년 각 분기당 각 업체별 피해상담건수
- '04~'06년 각 분기별 상담자 유형(대출금액, 이율, 피해금액, 연령, 성별, 직업 등)

1) '04~'06년 상반기까지 월별 상담 유형별 건수, 처리내역, 해결율

- ☐ 「사금융피해상담센터」는 대부업법 등 관련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상담을 수행하는 한편 피해사례 홍보를 통해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 유형별 상담건수 : <붙임 1> 참조

2)~3) '04~'06년 각 분기당 각 업체별 피해상담건수 및 상담자 유형

- ☐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서는 상담 신청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상담하고 있으나 신청자의 연령, 직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음

- 다만, 금융감독원은 상담자의 평균 이용금리 및 이용금액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음 : <붙임 2> 참조

(붙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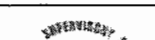

사금융피해상담현황

(단위 : 건)

기간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대부광고 ¹⁾	대부중개	기타부당 ²⁾	대부업등록 등 문의	단순상담 ³⁾	계
04년-1월	50	44	-	4	31	2	80	211
04년-2월	46	33	-	5	26	2	101	213
04년-3월	33	52	-	-	2	-	137	224
04년-4월	51	42	-	-	41	-	93	227
04년-5월	92	28	-	-	56	-	56	232
04년-6월	99	40	-	-	46	3	96	284
04년-7월	147	39	-	-	36	-	84	306
04년-8월	129	75	-	-	55	-	98	357
04년-9월	94	33	-	-	40	-	70	237
04년-10월	51	50	-	-	36	-	89	226
04년-11월	43	63	-	-	18	-	93	217
04년-12월	37	52	-	-	23	-	52	164
04년합계	872	551	-	9	410	7	1,049	2,898
05년-1월	40	36	-	-	32	-	63	171
05년-2월	28	24	-	-	24	-	40	116
05년-3월	35	39	-	-	36	-	77	187
05년-4월	35	29	-	-	27	-	77	168
05년-5월	32	31	-	-	26	8	54	151
05년-6월	21	10	-	-	22	11	71	135
05년-7월	35	19	-	-	31	10	62	157
05년-8월	65	30	24	20	34	190	89	452
05년-9월	32	24	13	36	22	44	79	250
05년-10월	35	34	7	5	77	48	250	456
05년-11월	67	57	10	3	90	61	248	536
05년-12월	54	41	8	9	63	49	224	448
05년합계	479	374	62	73	484	421	1,334	3,227
06년-1월	55	26	6	11	63	48	232	441
06년-2월	38	38	2	4	82	38	230	432
06년-3월	34	42	5	7	57	37	224	406
06년-4월	24	23	2	5	18	33	182	287
06년-5월	18	24	5	4	40	17	143	251
06년-6월	28	41	3	7	47	16	162	304
06년합계	197	194	23	38	307	189	1,173	2,121

- 1) 대부광고 :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05.8월부터 새로 분류
 2) 기타부당 : 대출사기, 부채증명서 발급거부, 부당수수료 부과 등
 3) 단순상담 : 압류·경매, 제도권금융기관 조회, 신용조회 등

(붙임 2)

	<div>보 도 자 료</div>	 금융감독원
·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	
· 담 당 자	조성목 팀장(3786-8155~6)	
· 배 포 일	2006. 1. .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95, 5790)

※ 이 자료는 1월 31일(화)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영세서민보호를 위한 무등록 불법대부업체 감시 강화!

- '05년 「사금융피해상담센터」 상담현황 -

주요 내용

- ☐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는 '05년중 총 3,227건의 사금융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이중 불법고리사채·대출사기 등 불법혐의업체 148개를 수사당국에 통보하였다.
- ☐ 상담자 1인당 평균대출금리는 연 196%로서 전년 대비 26%p 하락하였으나, 아직도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연 66%)의 3배에 달했다.
 - 무등록업체 이용자의 평균금리(연 229%)는 대부업법 시행전(연 219%)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등록업체의 평균금리(연 107%*)는 112%p 하락하였다.
 - * 법상 최고금리(연 66%)를 초과하는 이유 : 대부업법 시행전에 체결된 고금리 대부계약이 현재까지 계속, 상담자가 무등록업체를 등록업체로 오인, 등록업체중 불법고리사채 수취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
 - 또한 1인당 평균대출금액은 무등록업체 836만원, 등록업체 449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04년도 무등록업체 984만원, 등록업체 418만원)
- ☐ '05년중 수사기관에 통보된 148개 업체중 91%(135개)가 무등록업체이고 등록업체는 9%(13개)이다.
 - 통보업체중 등록업체 비중은 '02년 21%, '03년 38%, '04년 19%, '05년 9%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 금융감독원은 무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영세서민금융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중 무등록업체의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금감원은 '05년 4/4분기중 수도권 생활정보지를 대상으로 무등록 사채업자의 대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법 혐의업체 130여개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음

- 또한 상환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돈을 어디서 빌려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사람의 경우 불법사채를 쓰지 말고,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www.egloan.co.kr)를 이용하여 자신의 신용도 또는 담보에 적합한 대출상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불법사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 참고 : 관련 통계자료

금융질서 교란사범(유사수신,카드깡,고리사채) 상담 · 신고

- ① 관할 경찰서 수사과 : 불법고리사채, 불법추심, 유사수신 등 금융질서 교란행위
- ②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02-3786-8655~8] : 사금융, 유사수신행위
- ③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02-3771-5950~2] :신용카드 관련 범죄[불법카드할인(깡) 업체 등]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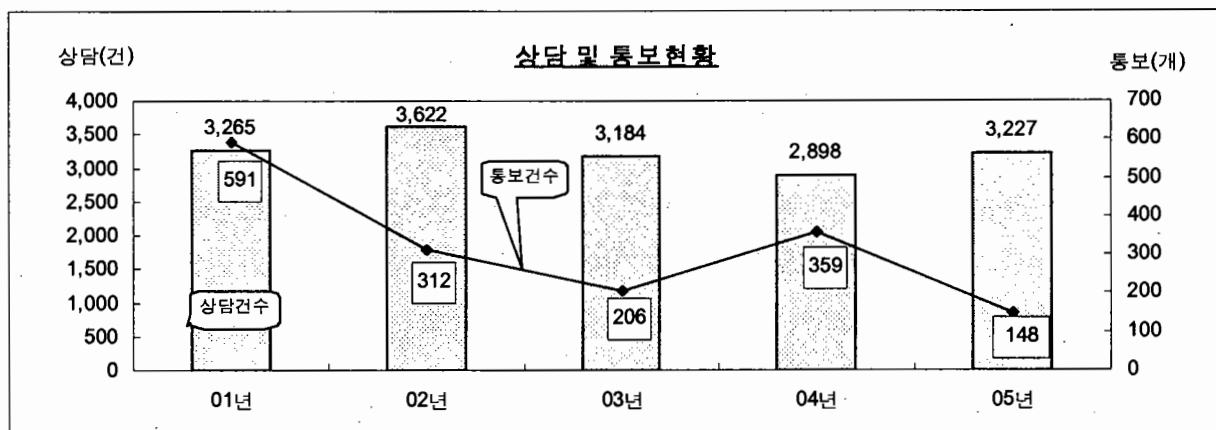
<관련 통계자료>

【상담 및 통보현황】

(단위 : 건, 개)

구 분	법 시행전 (‘01.4~‘02.10)		법 시행후 (‘02.11~‘05.3)			합 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상담(A)	3,265	3,622	3,184	2,898	3,227	16,196
		2,895 727				
월평균	363	302	265	242	269	284
		290 364				
통보(B)	591	312	206	359	148	1,616
		280 32				
월평균	66	26	17	30	12	28
		28 16				
통보율 (B/A)	18%	8%	6%	12%	5%	10%
		10% 4%				

* ‘02.10.27 법이 시행되었으나 편의상 02.10월말까지 시행전으로 구분(이하동일)



【등록여부별 수사기관 통보현황】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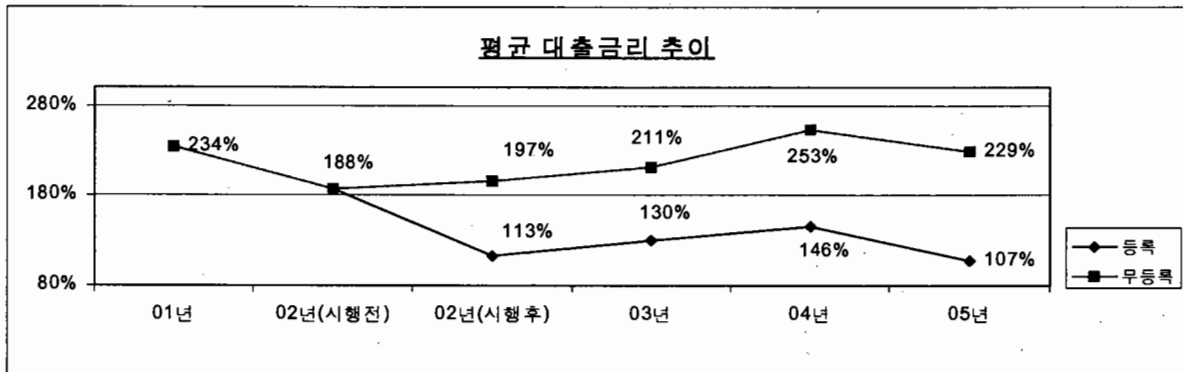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계
등 록	6	77	71	13	167
무등록	22	127	294	135	578
합 계	28	204	365	148	745

【1인당 평균대출금리】

(단위 : %)

구분	법 시행전(∼'02.10)			법 시행후('02.11∼'05.3)					전체
	'01년	'02년	평균	'02년	'03년	'04년	'05년	평균	
등록				113	130	146	107	131	210
무등록	234	188	219	197	211	253	229	229	
전체				186	189	222	196	204	

* 파악이 가능한 상담건수 기준이며, 분석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대출금액 2억원이상의 극단값('04년∼'05년 28건)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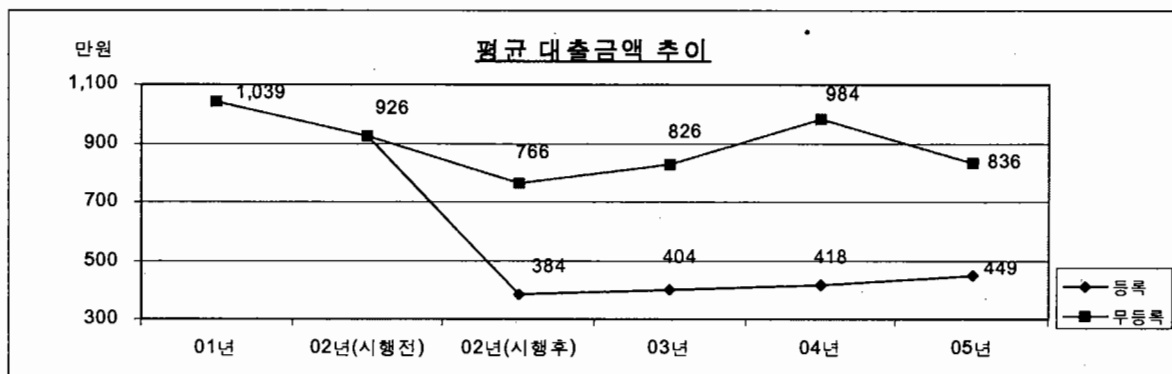


【1인당 평균대출금액】

(단위 : 만원)

구분	법 시행전(∼'02.10)			법 시행후('02.11∼'05.3)					전체
	'01년	'02년	평균	'02년	'03년	'04년	'05년	평균	
등록				384	404	418	449	419	847
무등록	1,039	926	998	766	826	984	836	882	
전체				704	701	818	741	756	

* 파악이 가능한 상담건수 기준이며, 분석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대출금액 2억원이상의 극단값('04년∼'05년 28건)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9. 사금융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붙임 참조”

(붙임)

사금융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2006. 6.



(서민금융지원팀)비은행감독국

< 요약 >

I. 설문조사 개요

- ◆ '05.10~'06.2월 사금융 이용자 5,133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인터넷설문 81%(4,147명) : 서면설문 19%(986명)
 - 남성 65%(3,338명) : 여성 35%(1,795명)
 - 사채보유자 60%(3,061명) : 사채미보유자 40%(2,072명)
 - 금융채무불이행자 34%(1,762명) : 정상거래자 66%(3,371명)
 - 등록업체 이용 45%(2,331명) : 무등록업체 이용 54%(2,777명)

II. 분석결과 및 시사점

1. 자금용도, 이용액·업체 수(추정), 신규이용 시기 등

- ☐ 자금용도는 기존 대출금 상환 41%*로 가장 큰 비중, 전년 대비
가계생활 자금 이용 비중 증가('04년 20% → '05년 36%)

* 은행대출금 상환 16%, 카드대금 상환 20%, 사금융 상환 6%

- ☐ 1인당 평균 이용액 950만원, 이용업체수 2.1개

○ '04년 대비 이용액 50만원 증가, 이용업체수 0.4개 감소

- ☐ 사금융채무 보유자의 42%가 '04년 이후 신규이용자*이고,
62%가 非금융채무불이행자

* '98년 이전 8% → '98~'99년 6% → '00~'01년 13% → '02~'03년 31%

시사점

- ☒ 생계형 사금융 이용자 증가, 소액·복수의 사금융 이용
- ☒ 제도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대적 저신용자가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 ⇒ 사금융 신규수요 지속 발생

2. **대부업법 인식정도, 대부업체 선택기준**

- ☐ 대부업법의 주요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가 37%로 '04년도(45%)에 비해 인식도가 높아졌으나 아직도 문제성 심각
 - 내용별 인식정도는 금리제한 50%, 불법 채권추심 37%, 등록의무화 32%
- ☐ 대부업체 선택시 고려대상으로 이자율 43%, 대출가능금액 22%, 신속성 17% 등 주로 대출가능여부를 선택
 - 대부업 등록여부는 6%만이 선택하는 등 피해예방에 소홀

시사점

- ☒ 사금융이용자는 불법사금융 피해에 취약한 상태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 강화 필요

※ 법상 금리제한을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에 비해 불법 고금리 계약체결 비중이 9%p 높음

3. **사금융 이용금리, 접촉 수단**

- ☐ 법상 상한 이자율(연66%)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75% [계약 이자율을 모르는 경우(13%) 포함]로 '04년 대비 7%p 감소
 - 추정 평균금리 : 무등록업체 연 230%, 등록업체 연 167%
- ☐ 이용자는 생활정보지(36%), 인터넷(30%), 친구 등 지인(14%), 핸드폰 문자메세지(7%), 일간지(6%) 등을 통해 사금융 접촉

시사점

- ☒ 대부업법 제정·시행에도 불구하고 불법 고리사채가 성행
- ☒ 대출광고는 사금융이용자 피해방지 정책시행의 중요한 대상

4. 불법 채권추심, 기타 부당사례 경험

- ☐ 불법 채권추심을 경험하지 않은 자가 61%로 '04년(29%) 대비 32% 증가
 - 무등록업체 이용자는 등록업체 이용자에 비해 2배 이상 경험
- ☐ 계약체결시 타인의 연락처 요구(54%), 선이자 등 수수료 공제(52%) 등의 부당사례 경험
 - 그 밖에 중개수수료 수취(37%), 실제 채무액보다 많은 금액의 계약서·어음 작성(32%), 계약서 미교부(31%) 등 경험

시사점

- ☒ 꾸준한 단속·홍보 실시로 불법 채권추심행위 현저히 감소, 다만 타인의 연락처 요구, 수수료 수취 등 부당한 피해 지속

5. 연체 일수, 자력상환 가능여부 등

- ☐ 연체일수와 관련하여 정상여신(정상납부를 포함한 연체기간 3개월 이내) 77%, 6개월 이상 장기연체 17%
- ☐ 자력상환 가능('04년 20%→'05년 48%) 및 파산 등 상환포기('04년 12%→'05년 26%)가 증가한 반면, 채무조정제도 이용 등 신용회복 노력('04년 63%→'05년 24%)은 감소
- ☐ 이용 사금융업체 수 ↑ ⇒ 금융채무불이행자 비율 ↑

이용업체 수	1개	2개	3개	4개	5개
금융채무불이행자 비율	35%	37%	40%	43%	52%

시사점

- ☒ 사금융시장내 양극화 심화 및 사금융 이용에 따른 채무 구조 악화 등으로 잠재적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구조

6. 기타

- ☐ 제도금융을 이용하지 않은 사유로 연체기록(25%), 안 될 것 같아서(24%), 보증·담보요구(21%), 긴 대출심사기간(11%)
 - 대부업체의 신용조회기록 이라고 답한 경우도 5%
- ☐ 가족 몰래 사금융 이용한 자가 86%이며, 현재까지 가족이 알지 못하는 자의 87%가 앞으로도 비밀로 하겠다고 응답
- ☐ 사금융이용에 대하여 후회 88%(후회하며 앞으로 이용 않겠다 51%, 후회하나 어쩔수 없다 38%)

시사점

- ☒ 제도금융권의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금융 이용하는 자가 상당수(대출이 안 될 것 같아서 24%, 긴 대출심사기간 11%)
- ☒ 경제적 어려움을 가족과 함께 해결하는 문화 필요

1.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 목적

- ☐ **사금융** 이용자의 근본 이용원인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자금수요자 시각에서 사금융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
 - 구조적 문제점 파악 및 장·단기적인 정책방향 제시 등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대부업법 등 관련제도 개선 및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2 설문대상 등

- ☐ **설문대상** : 사금융 이용경험이 있거나 이용하려는 자
- ☐ **설문기간** : '05.10.21(금)~'06.2.16(목) (약 4개월간)
 - * '02.3월(6,829명), '03.9월(1,615명) 및 '04.9월(3,859명)에 이은 4차 설문조사
- ☐ **설문방법** : 인터넷 및 서면을 통한 무기명 설문 실시
 - * 서면설문은 신용회복위원회 및 등록 대부업체 등을 통해 배포·회수
- ☐ **참여인원** : **5,133명*** <인터넷 81%(4,147명), 서면 19%(986명)>
 - * 현재 사금융 채무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채무자는 3,061명(60%)
 - 최근 3년간 인터넷을 통한 설문참여자 비중이 점차 증가 ('03년 31% → '04년 76% → '05년 81%)

3 설문분석 관련 유의점

□ 설문매체(인터넷 및 서면) 및 설문참여자 특성에 따른 구분 없이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분석

⇒ 인터넷 설문참여자의 증가가 설문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

* '03년 설문시 대형대부업체를 통한 설문비중이 컸음

□ 응답자에 따라 이용원인, 처음이용시기 등 일부 설문결과는
현 상황이 아닌 과거 또는 미래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음

* 설문응답자의 37%는 설문조사 시점에 사금융 채무 없음

⇒ '04년도와의 비교는 설문시점간 결과의 단순비교

II. 설문참여자 일반 특성

1 성별·연령별 현황

□ 설문참여자 총 5,133명중 남성이 65%, 여성이 35%로 남성의
참여율이 높음

○ 남성 참여율이 '04년(49%)에 비해 크게 증가

□ 연령별로는 30대가 40%로 가장 많으며 20대 28%, 40대 21%순
으로 20~40대가 대부분

○ '04년도 30대 비율이 가장 높음(46%)

【성별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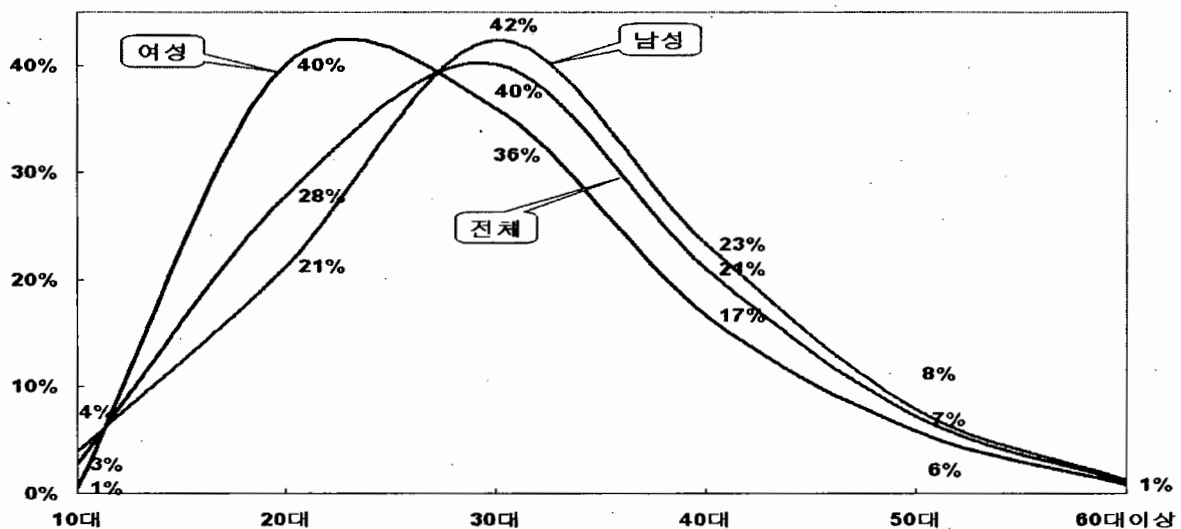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남성(65%)	여성(35%)
10대	3(0%)	6(0%)	139(3%)	130(4%)	9(1%)
20대	541(33%)	1,112(29%)	1,429(28%)	710(21%)	719(40%)
30대	623(39%)	1,789(46%)	2,060(40%)	1,414(42%)	646(36%)
40대	329(20%)	763(20%)	1,077(21%)	778(23%)	299(17%)
50대	80(5%)	174(5%)	370(7%)	264(8%)	106(6%)
60대 이상	3(0%)	15(0%)	58(1%)	42(1%)	16(1%)
계	1,615(100%)	3,859(100%)	5,133(100%)	3,338(100%)	1,795(100%)

* '03년 무응답 36명(2%)

- 20대 ~ 40대 참여율이 남성(86%), 여성(93%)로 모두 높으나, 남성은 30대(42%)가, 여성은 20대(40%)가 가장 많이 참여
-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20 ~ 30대 젊은 층의 참여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임

< 성별 · 연령별 분포도('05) >



2 학력별 현황

- 설문참여자의 학력은 고졸이상이 92%이며, 고졸(45%) 및 대졸(43%)이 비슷하게 참여
- '04년(95%)의 경우에도 고졸이상의 참여비율이 높았음

【학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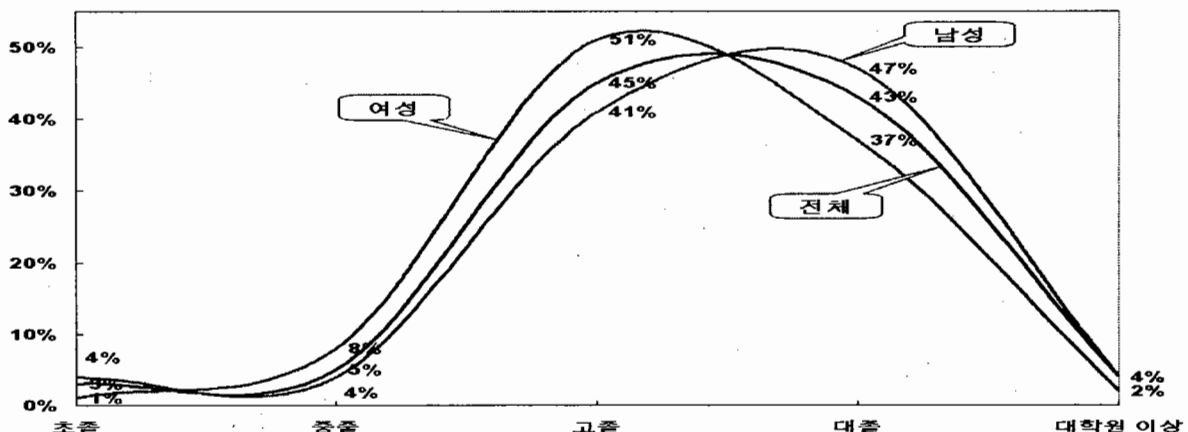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남성(65%)	여성(35%)
초졸	9(1%)	52(1%)	162(3%)	141(4%)	21(1%)
중졸	82(5%)	166(4%)	281(5%)	131(4%)	150(8%)
고졸	783(46%)	2,121(55%)	2,290(45%)	1,368(41%)	922(51%)
대졸	705(44%)	1,448(38%)	2,219(43%)	1,559(47%)	660(37%)
대학원 이상	32(2%)	72(2%)	181(4%)	139(4%)	42(2%)
계	1,615(100%)	3,859(100%)	5,133(100%)	3,338(100%)	1,795(100%)

* '03년 무응답 50명(3%)

- 성별·학력별로는 남녀 모두 고졸이상의 참여자가 각각 92%, 90%로 대부분을 차지
- 남성 참여자는 대졸 비중(47%)이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고졸 비중(51%)이 가장 높음

< 성별·학력별 분포('05) >



3 직업별 현황

□ 설문참여자의 직업은 회사원 및 자영업자가 각각 45% 및 22%로 대부분이며 무직도 8%로 높은 비중

○ 공무원의 비중이 '04년 2%에서 6%로, 대학(원)생이 '04년 1%에서 '05년 3%로 상승

【학력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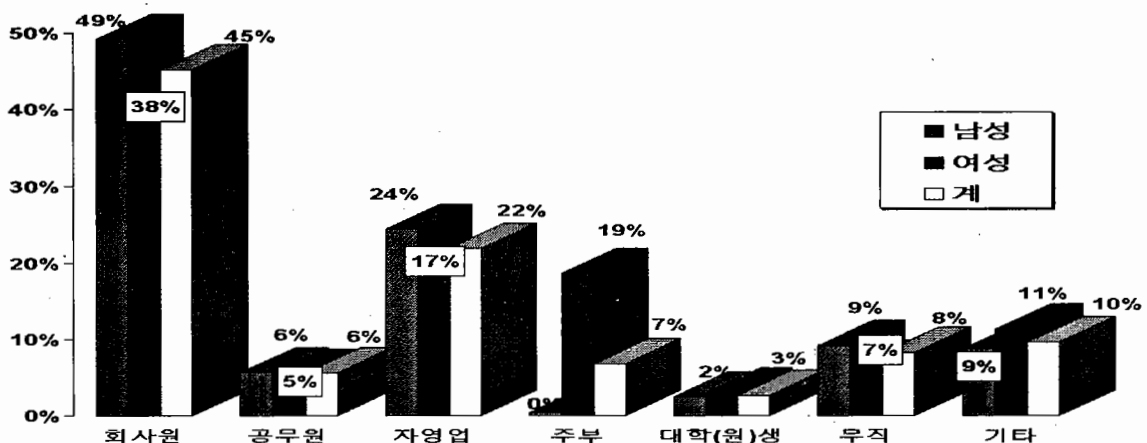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남성(65%)	여성(35%)
회사원	478(48%)	1,600(41%)	2,317(45%)	1,641(49%)	676(38%)
공무원	50(3%)	80(2%)	287(6%)	189(6%)	98(5%)
자영업	376(24%)	758(20%)	1,125(22%)	813(24%)	312(17%)
주부	147(9%)	493(13%)	348(7%)	13(0%)	335(19%)
대학(원)생	22(1%)	42(1%)	136(3%)	83(2%)	53(3%)
무직	119(8%)	248(6%)	424(8%)	306(9%)	118(7%)
기타	110(7%)	638(7%)	496(10%)	293(9%)	203(11%)
계	1,615(100%)	3,859(100%)	5,133(100%)	3,338(100%)	1,795(100%)

* '03년 무응답 43명(3%)

** 기타 : 프리랜서 또는 강사 등 서비스업, 일용직 등

□ 여성참여자의 경우 주부의 비중이 19%로 회사원(38%)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

< 성별 · 직업별 분포('05) >



4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별 현황

- 설문참여자의 66%가 정상거래자로 '04년(25%)보다 크게 증가
- 사금융채무 보유자(3,061명)의 62%(1,906명)는 정상채무자
 - ☞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아니나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상대적 저신용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

(단위 : 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남성(65%)	여성(35%)
금융채무불이행자	507(31%)	2,897(75%)	1,762(34%)	1,159(35%)	603(34%)
정상거래자	1,015(63%)	362(25%)	3,371(66%)	2,179(65%)	1,192(66%)
계	1,615(100%)	3,859(100%)	5,133(100%)	3,338(100%)	1,79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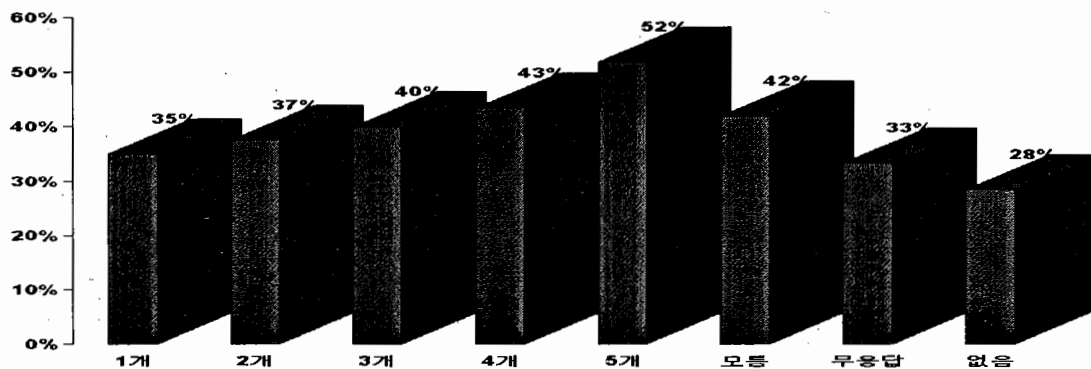
* '03년 무응답 93명(6%)

- 현재 이용중인 사금융업체의 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금융채무불이행자 비중이 높음

【사금융이용업체수별 금융채무불이행자 비율】

이용업체수	1개	2개	3개	4개	5개	모름	무응답	없음
비율	35%	37%	40%	43%	52%	42%	33%	28%

< 사금융 이용업체수별 금융채무불이행자('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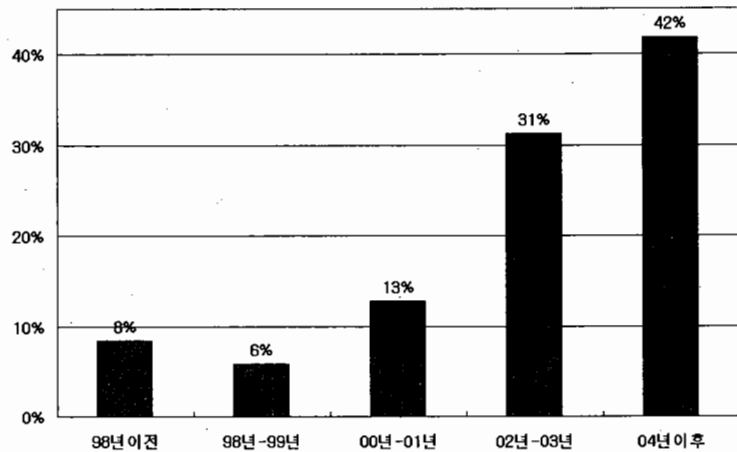
5 최초 사금융 이용시기

- 현재 사금융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3,061명 중 42%는 '04년 이후 처음 사금융을 이용했으며, 31%는 '02~'03년 중 처음 이용
- ☞ 최근 서민금융회사의 소액신용대출 억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신용 대출수요자가 사금융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

【최초 사금융 이용시기】

구 분	아는 사람
98년 이전	255명(8%)
98년~99년	175명(6%)
00년~01년	388명(13%)
02년~03년	955명(31%)
04년 이후	1,278명(42%)
무 응 답	10명(0%)
계	3,061명*

* 현재 사금융채무 보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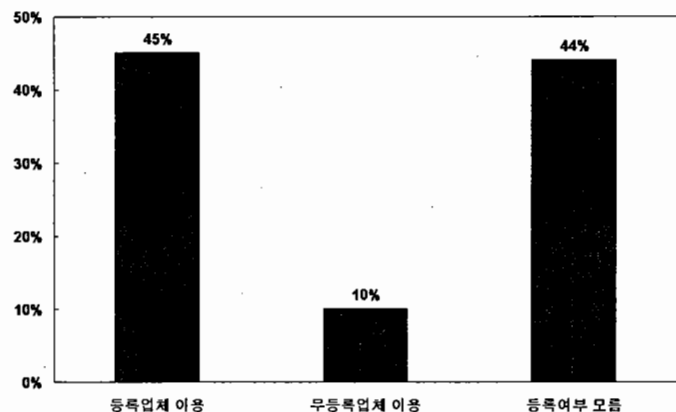


6 등록업체 이용여부

- 응답자의 45%가 등록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으며, 무등록업체 이용이 10%, 44%는 이용업체의 등록여부를 모름
- '모름' 응답자의 상당수가 무등록업체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

【이용업체의 등록여부】

구 분	응답
등록업체 이용	2,331명(45%)
무등록업체 이용	501명(10%)
등록여부 모름	2,276명(44%)
무응답	19명(0%)
계	5,133명



시사점 1 : 사금융시장 동향

- ☐ 다양한 계층이 광범위하게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으며, 신규 사금융 수요가 지속 발생
 - 남녀노소, 학력, 직업 구분 없이 사금융 이용
 - 특히 젊은 층, 고학력, 회사원 층의 이용이 많음
 - 여성의 경우 20대 젊은층의 이용이 많으며, 주부의 사금융 이용도 상당수
- ☐ 사금융 이용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간 상관관계 존재
 - 이용중인 사금융업체 수가 많은 집단일수록 동일 집단 내에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 제도권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수요와 공급간 불일치 심화로 영세서민의 사금융시장 편입현상 발생
 - 금융회사의 여유자금이 저신용자에게 공급되는 것은 아님
 - 외환위기 상황 극복에도 불구하고, 급전이 필요한 상대적 저신용자*는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아니지만 신용도가 낮아 제도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자
- ☐ 불법사채업 성행으로 영세서민의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사금융 환경

Ⅲ. 사금융 이용실태 분석 및 시사점

1 근본 이용원인

□ 사금융 이용의 근본 원인은 어려워진 경제여건(교육비등 급전필요 26%, 사업실패 19%, 실직 17% 등 62%)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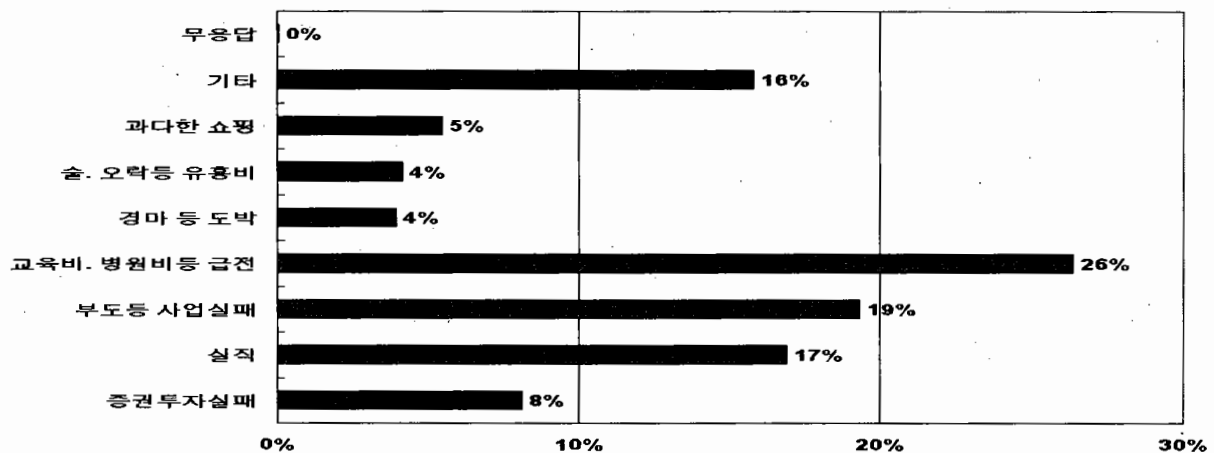
* 기타 응답도 집안일, 생활자금, 주택비 등 생활비 성격이 많음

【근본 이용원인】

(단위 : 명)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남성(65%)	여성(35%)
증권투자실패	140(9%)	147(4%)	415(8%)	319(10%)	96(5%)
실직	290(18%)	629(16%)	866(17%)	551(17%)	315(18%)
부도등 사업실패	322(20%)	1,077(28%)	993(19%)	737(22%)	256(14%)
교육비·병원비등 급전	333(21%)	834(22%)	1,354(26%)	814(24%)	540(30%)
경마 등 도박	37(2%)	29(1%)	202(4%)	140(4%)	62(3%)
술·오락등 유흥비	76(5%)	115(3%)	213(4%)	157(5%)	56(3%)
과다한 쇼핑	197(12%)	217(6%)	279(5%)	123(4%)	156(9%)
기타	153(9%)	563(15%)	809(16%)	495(15%)	314(17%)
무응답	67(4%)	248(6%)	2(0%)	2(0%)	0(0%)
계	1,615(100%)	3,859(100%)	5,133(100%)	3,338(100%)	1,795(100%)

< 근본 이용원인('05) >



-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교육비등 급전 비중이 6%p 높은 반면 사업실패 비중이 8%p 낮음

➔ 경제활동 참가비중에 따른 사회구조적 특성 반영

【경제활동 참가율】 남성 74%, 여성 49%(통계청, '06.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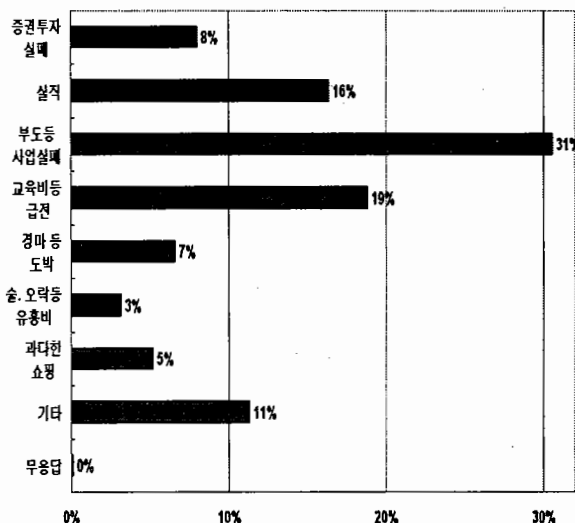
-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사업실패(31%)를, 정상채무자는 교육비등 급전(30%)을 1순위 근본원인으로 응답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별 근본 이용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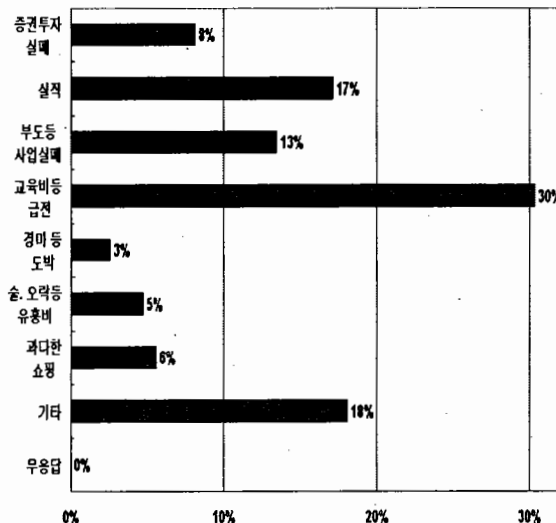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금융채무불이행자	정상채무자	계
증권투자실패	141(8%)	274(8%)	415(8%)
실직	288(16%)	578(17%)	866(17%)
부도등 사업실패	538(31%)	455(13%)	993(19%)
교육비·병원비 등 급전	332(19%)	1,022(30%)	1,354(26%)
경마 등 도박	116(7%)	86(3%)	202(4%)
술·오락등 유흥비	55(3%)	158(5%)	213(4%)
과다한 쇼핑	91(5%)	188(6%)	279(5%)
기타	199(11%)	610(18%)	809(16%)
무응답	2(0%)	0(0%)	2(0%)
계	1,762(100%)	3,371(100%)	5,133(100%)

< 금융채무불이행자 >



< 정상채무자 >



2 자금용도

□ 사금융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사람이 41%

- 대출금 상환비중(41%)이 '04년(61%)에 비해 크게 감소(20%p)했는데, 신용카드 연체대금 상환비중 감소*에 기인

* '04년 40% → '05년 20%

- 가계생활자금 사용(36%)이 '04년(20%)에 비해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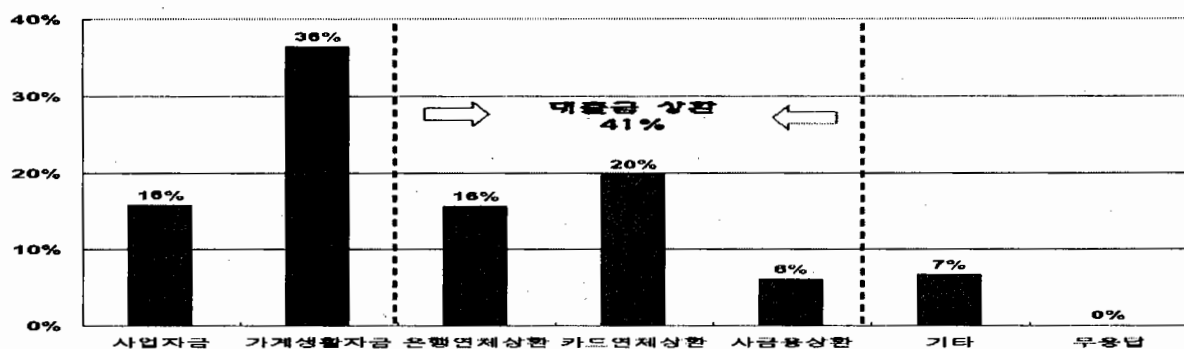
□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카드연체대금 상환용도가 7%p 높은 반면, 사업자금 용도는 9%p 낮음

【자금용도】

(단위 : 명)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남성(65%)	여성(35%)
사업자금	175(11%)	539(14%)	808(16%)	624(19%)	184(10%)
가계생활자금	451(28%)	762(20%)	1,868(36%)	1,197(36%)	671(37%)
대출금 상환	922(57%)	2,369(61%)	2,118(41%)	1,320(40%)	798(44%)
은행연체 상환	277(17%)	628(16%)	800(16%)	534(16%)	266(15%)
카드연체 상환	573(35%)	1,529(40%)	1,012(20%)	577(17%)	435(24%)
사금융 상환	72(4%)	212(5%)	306(6%)	209(6%)	97(5%)
기타	44(3%)	141(4%)	338(7%)	196(6%)	142(8%)
무응답	23(1%)	48(1%)	1(0%)	1(0%)	0(0%)
계	1,615(100%)	3,859(100%)	5,133(100%)	3,338(100%)	1,79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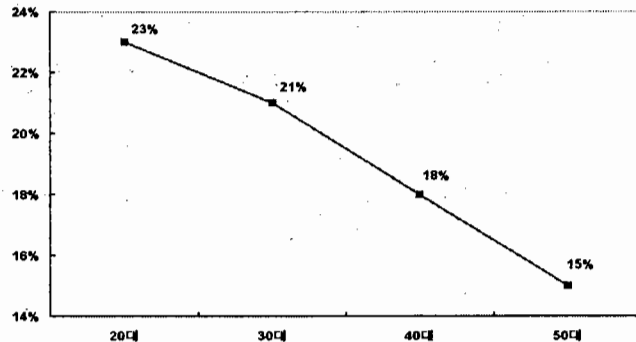
< 자금용도('05) >



- 카드연체상환 용도의 연령대별 비중은 20대(23%)가 가장 높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

【연령대별 카드연체상환 비중】

연령대	카드연체상환
20대	23%
30대	21%
40대	18%
50대	15%



시사점 2 : 근본 이용원인 및 자금용도

- 가계생활자금 이용 비중 증가('04년 20%→'05년 36%)로 보아 생계형 사금융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직도 기존 채무상환 용도로 사금융을 가장 많이 이용(41%)
-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사금융을 통해 기존 채무를 상환 (돌려막기)함에 따라 채무해소의 어려움 심화
 - 카드연체 상환을 위한 젊은 층의 사금융 이용 비중이 높음

【필요사항】

- ➡ 경기활성화 및 실직자 등을 위한 취업기회·복지제도 확대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 필요
- ➡ 사금융을 포함, 기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통하여 채무자의 자활을 지원하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 분할상환, 기한유예 등 채무자의 자발적 노력에 의한 채무해소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감액 등의 조정
- ➡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신용교육 필요

3 대부업법 인식도

□ 금리제한(연 66%), 불법적 채권추심 금지 등 대부업법상 주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37%

○ '04년도(45%)에 비해 인식도가 높아졌으나 아직도 문제성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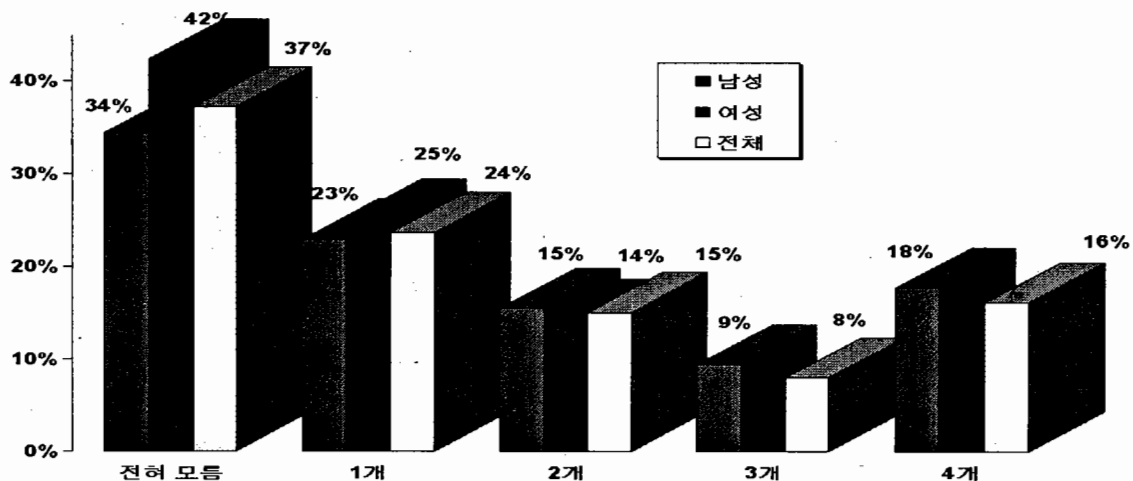
○ 남녀별로는 전혀모름 응답이 여성 42%, 남성 34%로 여성의 인식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대부업법 인식도】

(단위 : 명)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남성(65%)	여성(35%)
전혀모름	373(23%)	1739(45%)	1,909(37%)	1,149(34%)	760(42%)
1개 이상	1,215(75%)	2,007(52%)	3,224(63%)	2,189(66%)	671(58%)
1개	291(18%)	516(13%)	1,215(24%)	765(23%)	450(25%)
2개	378(23%)	673(17%)	773(15%)	516(15%)	257(14%)
3개	258(16%)	355(9%)	409(8%)	315(9%)	94(5%)
4개	288(18%)	463(12%)	827(16%)	593(18%)	234(13%)
무응답	27(2%)	113(3%)	0(0%)	0(0%)	0(0%)
계	1,615(100%)	3,859(100%)	5,133(100%)	3,338(100%)	1,795(100%)

< 대부업법 인식도('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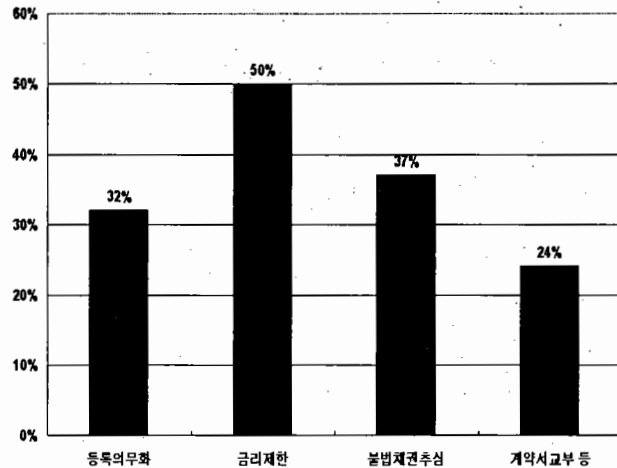


- 전체응답의 각 항목별 인식정도는 금리제한 50%, 불법채권추심 37%, 등록의무화 32%로 전반적으로 낮음

⇒ 사금융이용자의 관심 정도에 따라 법 항목별 인식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항목별 인식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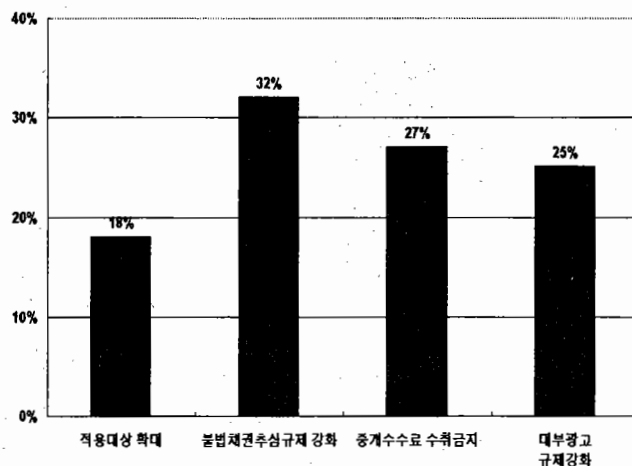
구 분	아는 사람
등록의무화	1,644명(32%)
금리제한	2,560명(50%)
불법채권추심	1,910명(37%)
대부계약서 교부 등	1,219명(24%)
비율산출기준	5,133명



- 불법적 채권추심 금지 강화 등 개정 대부업법('05.9월)의 주요내용에 대한 인식정도는 전반적으로 낮음

【개정 항목별 인식정도】

구 분	아는 사람
적용대상 확대	901명(18%)
불법채권추심 규제 강화	1,661명(32%)
중개수수료 수취금지	1,400명(27%)
대부광고 규제강화	1,267명(25%)
비율산출기준	5,133명



4 대부업자 선택기준

□ 대부업자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이자율(43%), 대출가능금액(22%), 대출의 신속성(17%)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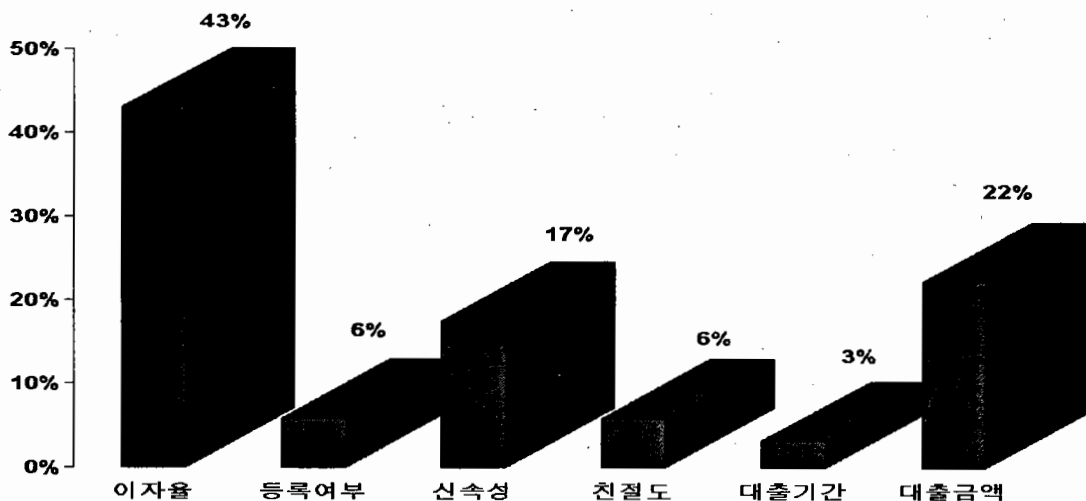
○ 대부업 등록여부는 6%로 사금융이용자가 대부업자 선택시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대부업자 선택기준】

(단위 : 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이자율	720(45%)	1,369(35%)	2,209(43%)
대부업 등록여부	113(7%)	151(4%)	301(6%)
대출의 신속성	319(20%)	839(22%)	896(17%)
친절도	27(2%)	32(1%)	301(6%)
대출기간	37(2%)	105(3%)	162(3%)
대출가능금액	330(20%)	1,239(32%)	1,140(22%)
기타	18(1%)	71(2%)	110(2%)
무응답	51(3%)	53(1%)	14(0%)
	1,615명(100%)	3,859명(100%)	5,133명(100%)

< 대부업자 선택기준('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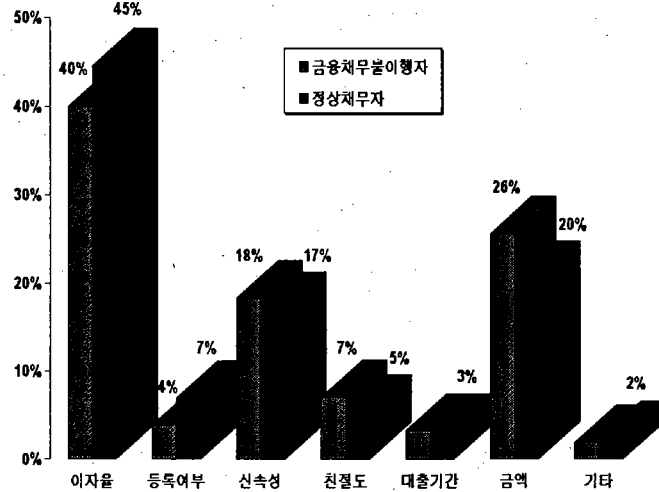


□ 정상채무자에 비해 금융채무불이행자는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6%p 높고 이자율 비중이 5%p 낮음

○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상대적으로 상환가능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당장 대출가능한 금액에 주된 관심을 기울임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별】

구분	금융채무불이행자	정상채무자
이자율	40%	45%
대부업 등록여부	4%	7%
대출의 신속성	18%	17%
친절도	7%	5%
대출기간	3%	3%
대출금액	26%	20%
기타	2%	2%
무응답	0%	0%



시사점 3 : 법 인식도 및 사금융 선택기준

□ 사금융이용자의 상당수(1/3 이상)가 관련법령인 대부업법에 대하여 잘 모름

○ 사금융 선택시 대출가능여부(이자율 및 대출금액)가 주된 관심사이므로 불법 사금융피해에 대한 사전예방 곤란

○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대부업법의 주요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자기보호 능력이 떨어짐

【필요사항】

➡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부업법의 내용 및 사금융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5 평균 이용 금리수준

□ 현재 사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의 75%*가 대부업법상 상한 이자율(월 5.5%)을 초과하는 사금융을 이용

* 이자율을 모르는 경우를 포함 : 보통 법정금리 초과 고금리 피해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사금융의 이자율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

** 다만, 법 시행전 체결된 계약까지 포함하고 있어 현행 대출금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법정 금리이내 이용은 '04년 설문 대비 10%p 증가

○ 설문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이자율은 월 17%(연204%)로 '04년도(월 19%, 연228%)에 비하여 다소 하락

【월평균 이용금리】

(단위 : 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5.5% 이하	724(45%)	567(15%)	754(25%)
5.5% 초과	787(49%)	3,158(82%)	1,900(62%)
5.5%~10%	489(30%)	1,161(30%)	790(26%)
10%~20%	122(8%)	713(18%)	324(11%)
20%~30%	73(5%)	576(15%)	296(10%)
30%초과	103(6%)	708(18%)	490(16%)
모름	-	-	403(13%)
무응답	104(6%)	134(3%)	4(0%)
계	1,615(100%)	3,859(100%)	3,061*(100%)
추정 금리	월 11%(연132%)	월 19%(연228%)	월 17%(연204%)

* 전체응답자(5,133명) 중 사금융채무가 있다고 응답한 자

** 평균금리 산출근거 : $(\sum \text{각 구간의 중간값} \times \text{각 구간별 응답자수}) / (\text{전체 응답자수})$ 로 구하되, 월5.5%이하의 경계값인 5.5%를 사용하고 월 30%이상은 30%-60%의 중간값인 45%를 사용

- 대부업 등록여부별로는 무등록업체 이용자의 86%, 등록업체 이용자의 60%가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사금융을 이용

* 이자율을 모르는 경우를 포함

- 설문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이자율은 등록업체 월 14% (연167%), 무등록업체 월 19%(연 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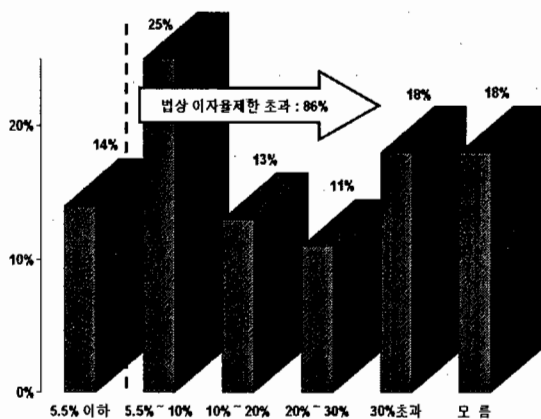
【 이용업체의 등록여부별 월평균 이용금리 】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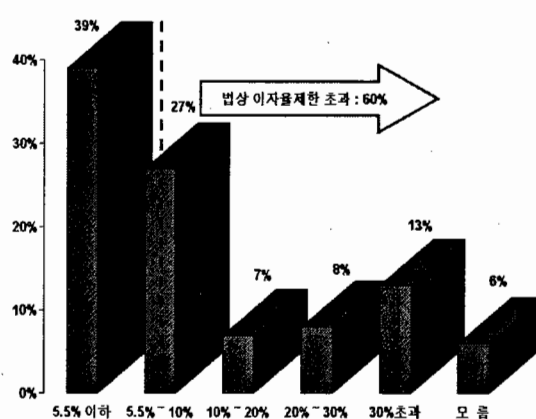
구분	등록업체 이용	무등록업체 이용		
			무등록	모름(무등록 추정)
5.5% 이하	519(39%)	235(14%)	47(15%)	188(13%)
5.5% 초과	722(54%)	1,178(68%)	230(73%)	948(67%)
5.5%~10%	354(27%)	436(25%)	72(23%)	364(26%)
10%~20%	92(7%)	232(13%)	40(13%)	192(14%)
20%~30%	103(8%)	193(11%)	45(14%)	148(10%)
30%초과	173(13%)	317(18%)	73(23%)	244(17%)
모 름	85(6%)	318(18%)	37(12%)	281(20%)
무응답	-	4(0%)	-	4(0%)
계	1,326(100%)	1,735(100%)	314(100%)	1,421(100%)
추정 금리	월14%(연167%)	월19%(연230%)	21%(연252%)	월19%(연225%)

* 평균금리 산출근거 : (Σ 각 구간의 중간값x각 구간별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로 구하되, 월5.5%이하는 경계값인 5.5%을 사용하고 월 30%이상은 30%-60%의 중간값인 45%를 사용

< 무등록업체 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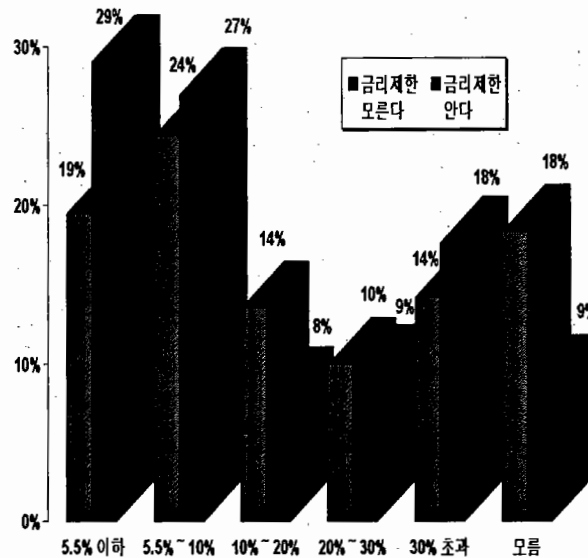
< 등록업체 이용 >



- 법상 금리제한을 아는 사람과 비교할 때, 모르는 사람이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사금융 이용비중이 9%p 높음

【금리제한 인지여부별('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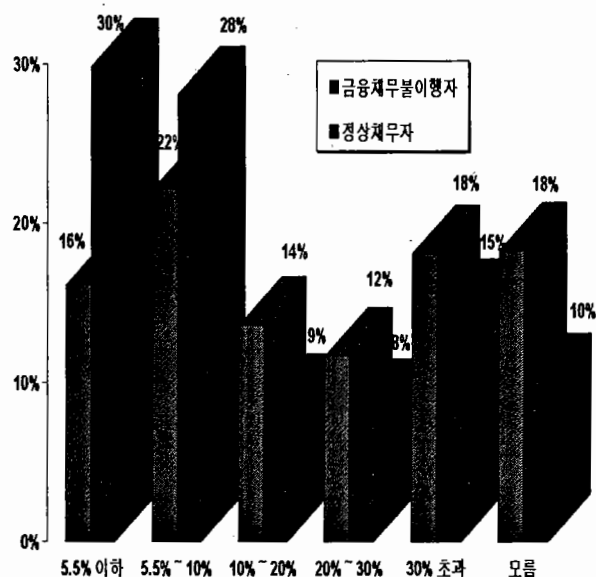
구분	금리제한 모른다	금리제한 안다
월 5.5% 이하	19%	29%
월 5.5% 초과	80%	71%
월 5.5%~10%	24%	27%
월 10%~20%	14%	8%
월 20%~30%	10%	9%
월 30% 초과	14%	18%
모름	18%	9%



-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정상채무자와 비교할 때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사금융을 이용하는 비중이 14%p 높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별('05)】

구분	금융채무 불이행자	정상 채무자
월 5.5% 이하	16%	30%
월 5.5% 초과	84%	70%
월 5.5%~10%	22%	28%
월 10%~20%	14%	9%
월 20%~30%	12%	8%
월 30% 초과	18%	15%
모름	18%	10%



6 1인당 사금융 이용액

□ 1인당 사금융 이용액은 5백만원 이하 56%, 5백만원~1천만원 24%로, 1천만원 이하의 소액이 대부분(80%)

○ 설문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1인당 이용액은 약 950만원으로 '04년도(900만원)와 비슷함

【1인당 이용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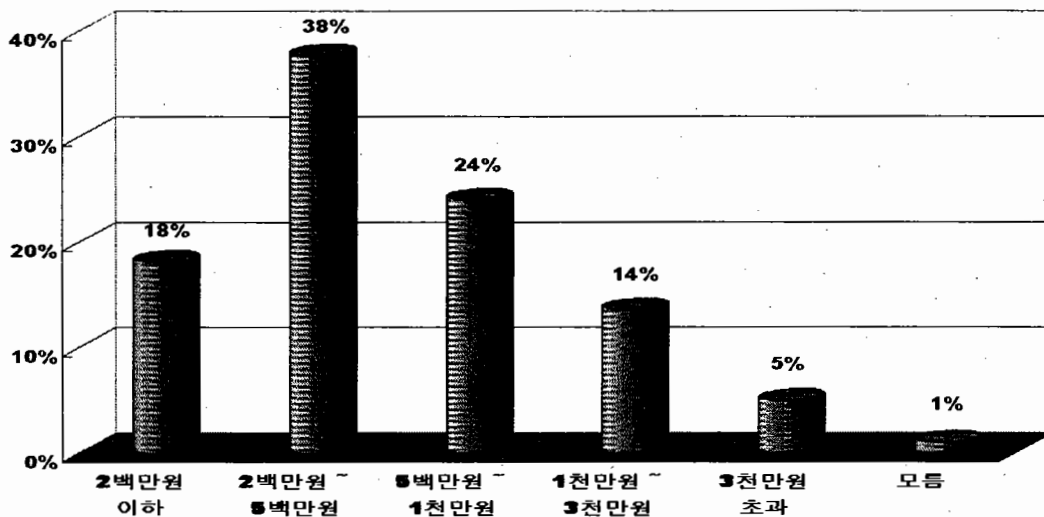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백만원 이하	266(16%)	550(15%)	556(18%)
2백만원~5백만원	629(39%)	1,294(35%)	1,154(38%)
5백만원~1천만원	388(24%)	1,048(28%)	735(24%)
1천만원~3천만원	155(10%)	497(13%)	417(14%)
3천만원 초과	51(3%)	136(4%)	153(5%)
모름	-	-	32(1%)
무응답	126(8%)	205(5%)	14(0%)
계	504(100%)	3,730(100%)	3,061*(100%)
1인당 추정 이용액	790만원	900만원	950만원

* 전체응답자(5,133명) 중 사금융채무가 있다고 응답한 자

** 이용액 추정근거 : $(\sum \text{각 구간의 중간값} \times \text{각 구간별 응답자 수}) / (\text{전체 응답수})$ 로 구하되, 3천만원초과는 7천5백만원을 중간값으로 사용

< 1인당 사금융 이용액('05년) >



□ 1인당 총 부채액(사금융 포함)은 3천만원 이하가 69%로 '04년(64%) 대비 5%p 증가

○ 설문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1인당 부채액은 약 3천4백만원으로 '04년도(약 3천6백) 대비 다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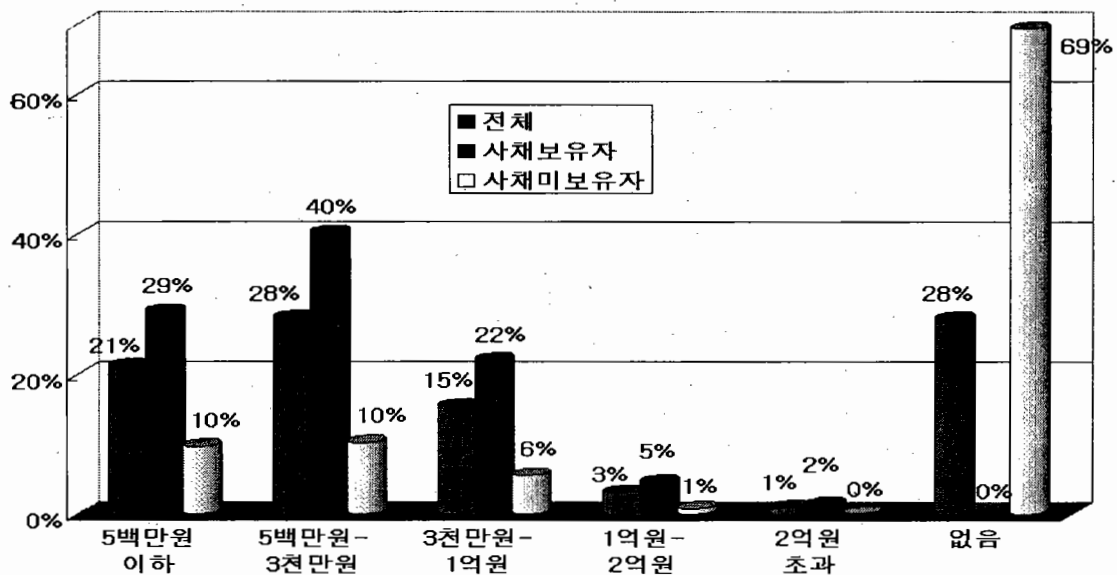
【사금융채무 보유자의 1인당 총부채액】

(단위 : 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사채보유자	미보유자
없음	84(5%)	75(2%)	1,439(28%)	-	1,439(69%)
5백만원 이하	358(22%)	584(16%)	1,090(21%)	889(29%)	201(10%)
5백만원 ~ 3천만원	709(44%)	1,799(48%)	1,447(28%)	1,233(40%)	214(10%)
3천만원 ~ 1억원	310(19%)	1,052(28%)	794(15%)	678(22%)	116(6%)
1억원 ~ 2억원	88(5%)	126(3%)	161(3%)	142(5%)	19(1%)
2억원 초과	12(1%)	30(1%)	52(1%)	47(2%)	5(0%)
모름	-	-	101(2%)	60(2%)	41(2%)
무응답	54(3%)	64(2%)	49(1%)	12(0%)	37(2%)
계	1,615(100%)	3,730(100%)	5,133(100%)	3,061(100%)	2,072(100%)
1인당 추정 이용액	3천4백만원	3천6백만원	3천4백만원	3천5백만원	2천9백만원

** 총부채액 추정근거 : $(\sum \text{각 구간의 중간값} \times \text{각 구간별 응답자 수}) / (\text{전체 응답수})$ 로 구하되, 2억원초과는 3억5천만원을 중간값으로 사용

< 1인당 총부채액 비중('05) >



7 대출받은 사금융 업체 수

□ 사금융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51%가 2개 이상의 사금융업체를 이용

○ 설문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1인당 이용업체수는 2.1개로 '04년 (2.5개) 대비 0.4개 감소

【사금융 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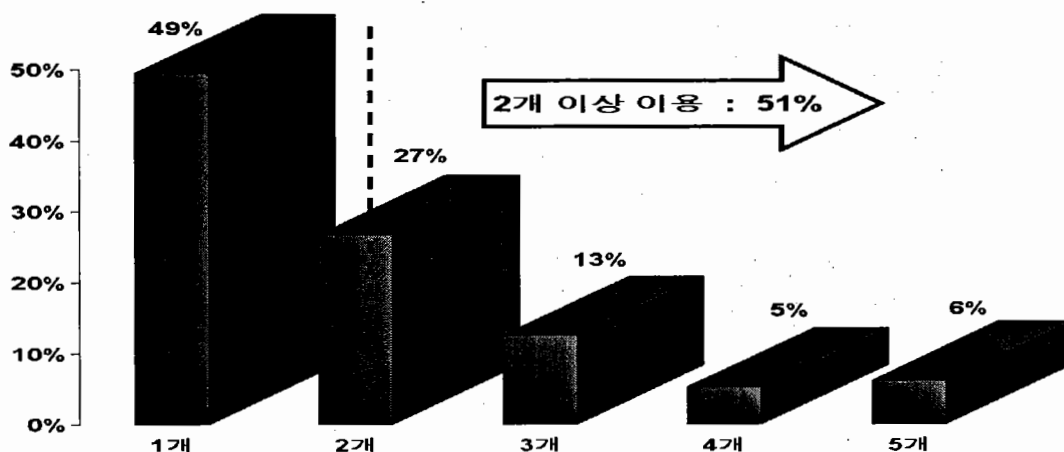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전체	사금융 채무자만
없음	199(12%)	414(11%)	1,913(37%)	-
1개	538(33%)	1,185(32%)	1,513(29%)	1,513(49%)
2개	444(27%)	892(24%)	819(16%)	819(27%)
3개	216(13%)	548(15%)	383(7%)	383(13%)
4개	75(5%)	295(8%)	159(3%)	159(5%)
5개 이상	54(3%)	284(8%)	187(4%)	187(6%)
모름	-	-	117(2%)	-
무응답	89(6%)	85(2%)	42(1%)	-
계	1,615(100%)	3,703(100%)	5,133(100%)	3,061(100%)
1인당 추정 이용업체수	2.1개	2.5개	2.1개	2.1개

* 추정이용업체수 산정시에는 현재 사금융채무가 있는 자만 고려

** 1인당 이용업체수 추정근거 : $(\sum \text{각 구간의 중간값} \times \text{구간별 응답자 수}) / (\text{전체 응답수})$ 로 구하되, 5개이상은 중간값은 7.5개를 사용

< 사금융채무자의 대출받은 사금융 업체수('05년) >



8 연체 일수

- **정상여신**(정상납부를 포함한 연체기간 3개월 이내*)이 77%인 반면, 6개월 이상 **장기연체**도 17%('모름' 포함)로 나타남

* 비은행 업종 자산건전성 분류(연체기간 기준)에 따름

- 정상여신 비중은 '04년(63%) 대비 14%p 증가하고 6개월 이상 장기연체는 '04년(25%) 대비 7%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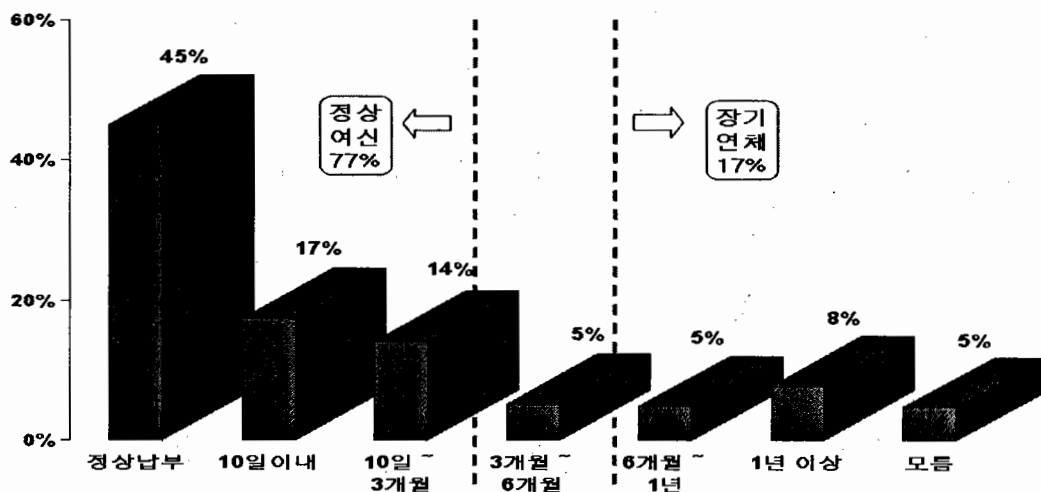
【평균 연체 일수】

(단위 : 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정상납부	570(35%)	974(25%)	1,377(45%)
10일 이내	559(35%)	742(19%)	533(17%)
10일 ~ 3개월	276(17%)	717(19%)	434(14%)
3개월 ~ 6개월	56(3%)	318(8%)	158(5%)
6개월 ~ 1년	56(3%)	267(7%)	149(5%)
1년 이상		678(18%)	236(8%)
모름	-	-	145(5%)
무응답	98(6%)	163(4%)	29(1%)
계	1,615(100%)	3,859(100%)	3,061*(100%)

* 현재 자금용채무가 있다고 응답한 자

< 연체일수('05) >



9 부채상환 가능성

□ 향후 자력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력으로 상환가능하다는 응답이 48%로 '04년(20%) 대비 28%p 증가

○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력상환가능 응답이 9% 높음

□ '04년도 대비 채무조정제도 이용은 감소(63%→24%)한 반면, 개인파산 등 상환불능은 증가(12%→26%)

➡ 사금융 부문도 양극화 현상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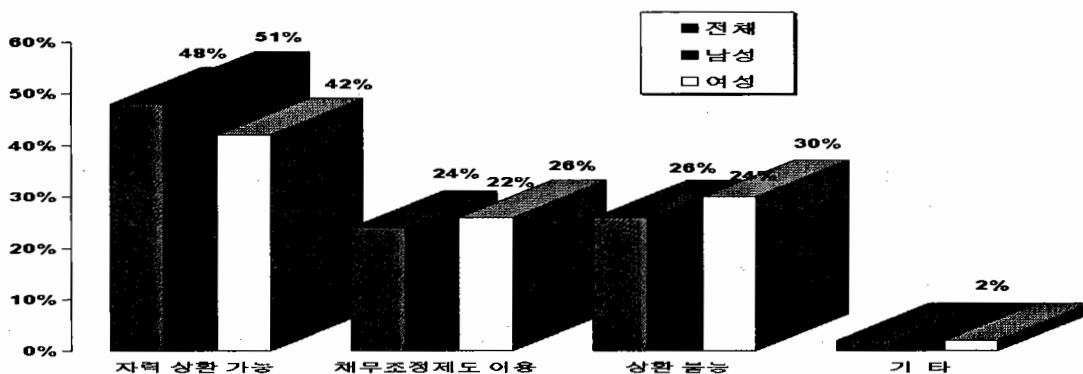
【부채상환 가능성】

(단위 : 명)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남성(66%)	여성(34%)
자력 상환 가능	822(51%)	785(20%)	1,461(48%)	1,024(51%)	437(42%)
채무조정제도 이용	368(23%)	2,450(63%)	733(24%)	460(22%)	273(26%)
신용회복제도	-	-	513(17%)	311(15%)	202(19%)
개인회생제도	-	-	220(7%)	149(7%)	71(7%)
상환 불능	282(17%)	444(12%)	801(26%)	490(24%)	311(30%)
개인파산·면책	-	-	166(5%)	97(5%)	69(7%)
모르겠다	-	-	635(21%)	393(20%)	242(23%)
기 타	65(4%)	124(3%)	62(2%)	33(2%)	29(3%)
무응답	98(5%)	56(1%)	4(0%)	2(0%)	2(0%)
계	1,615(100%)	3,859(100%)	3,061*(100%)	2,009(100%)	1,052(100%)

* 현재 사금융채무가 있다고 응답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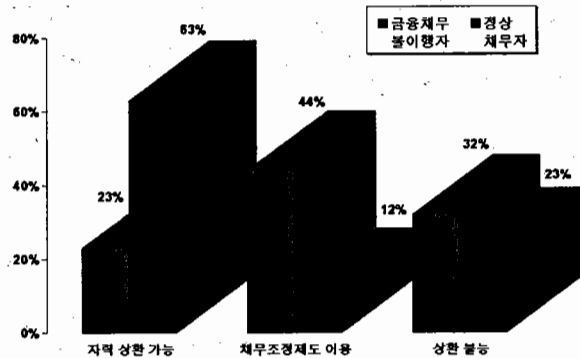
< 부채상환 가능성('05) >



- 자력상환이 가능하다는 응답도 금융채무불이행자 23%, 정상채무자 63%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남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별('05)】

구분	금융채무 불이행자	정상 채무자
자력상환 가능	23%	63%
채무조정 제도 이용	44%	12%
상환불능	32%	23%



시사점 4 : 이용금리·금액 및 상환가능성 등

- 대부업법상 금리제한에 불구하고 사금융이용자의 상당수가 아직도 법상 제한을 넘는 고금리를 사용하고 있음
- 일단 사금융 이용시 사금융업체와의 거래관계가 심화
 - 성급한 금리제한 강화시 사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 의문

【필요사항】

- ➔ 서민금융회사 활성화를 통해 영세서민·자영업자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고, 제한금리 인하문제는 신중하게 접근

- 사금융이용자도 정상납부·자력상환 가능한 자와 장기연체·자력상환 불가능자 간의 차이가 커짐
- 사금융이용자 계층별 양극화 심화

【필요사항】

- ➔ 저리의 정책자금·신용회복제도 등을 통해 사금융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 필요

10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

□ 불법채권추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61%로 '04년(29%) 대비 32%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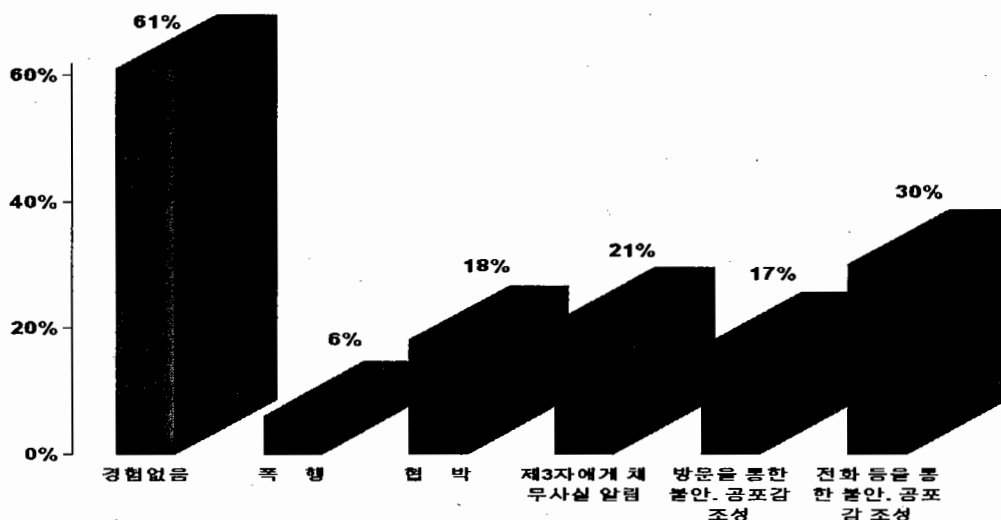
- 전화 등을 통한 불안·공포감 경험자가 30%,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경험자가 21%로 나타남
- 폭행을 제외하고 각종 불법채권추심을 경험한 비율은 '04년에 비하여 상당부분 감소

【불법채권추심 경험】

(단위 : 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경험없음	871(54%)	1,119(29%)	3,113(61%)
폭행	49(3%)	116(3%)	283(6%)
협박	238(15%)	1,462(39%)	911(18%)
제3자에게 채무사실 알림	312(19%)	1,505(39%)	1,099(21%)
방문을 통한 불안·공포감 조성	157(10%)	1,066(28%)	858(17%)
전화 등을 통한 불안·공포감 조성	445(28%)	2,182(57%)	1,534(30%)
비율산출기준	1,615명	3,859명	5,133명

< 불법채권추심 경험('05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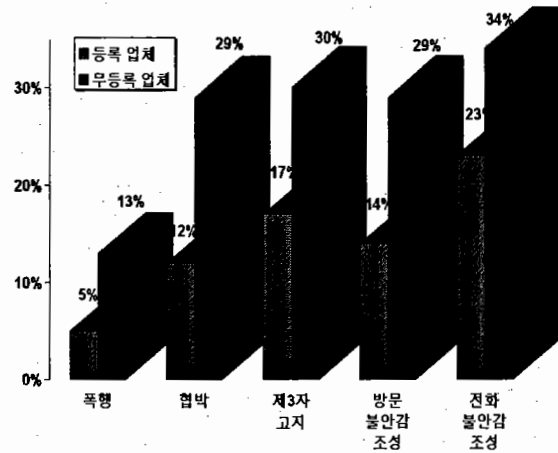


□ 무등록업체를 이용한 사람은 등록업체 이용자보다 불법추심 피해가 2배이상 많음

○ 등록업체 이용자도 전화등을 통한 불안·공포감 조성 및 제3자에게 채무사실이 알려진 경험비중이 상당

【등록 여부별 불법추심 경험】

구 분	등록업체	무등록업체
폭행	5%	13%
협박	12%	29%
제3자에게 채무사실 알림	17%	30%
방문을 통한 불안·공포감 조성	14%	29%
전화등을 통한 불안·공포감 조성	23%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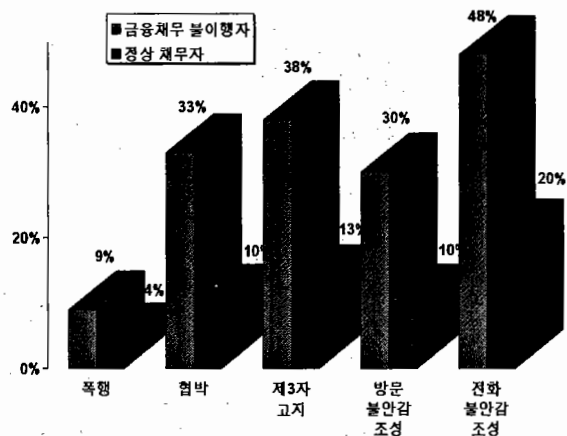


□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정상채무자에 비해 불법추심 피해가 2~3배이상 많음

○ 정상채무자도 일정부분 불법추심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별】

구 분	금융채무불이행자	정상채무자
폭행	9%	4%
협박	33%	10%
제3자에게 채무사실 알림	38%	13%
방문을 통한 불안·공포감 조성	30%	10%
전화등을 통한 불안·공포감 조성	48%	20%



11 대부계약 체결시 경험한 부당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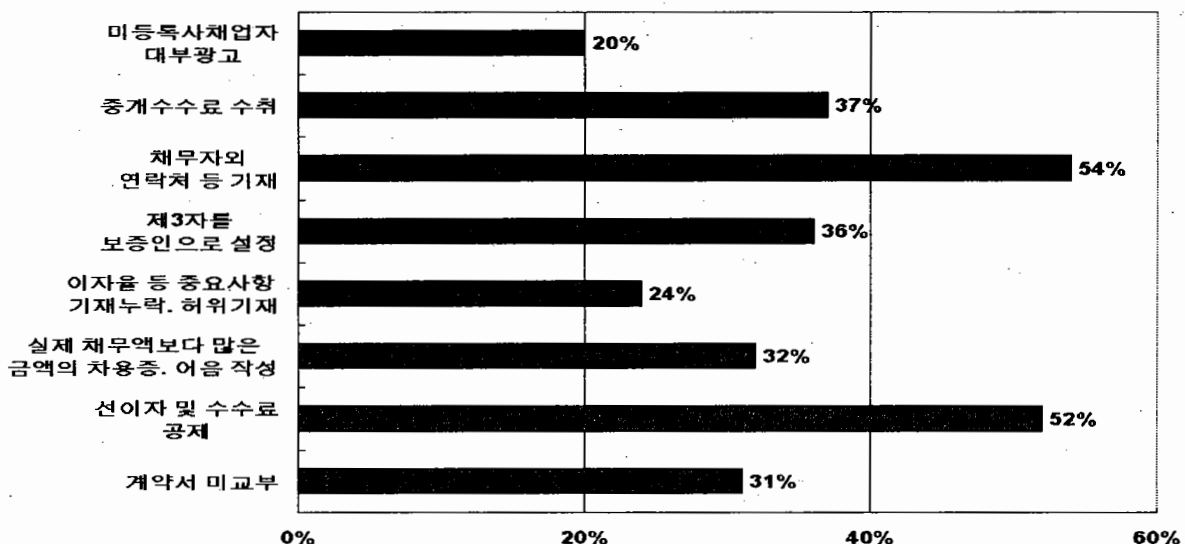
- 대부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가족 등 타인의 연락처 및 인적사항 기재를 요구받은 사람이 54%('04년 64%)
- 선이자 및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금전을 차용한 경우가 52%('04년 52%)이며 기타 계약서 미교부 등의 부당 사례를 경험

【대부계약 체결시 경험한 부당사례】

(단위 : 명)

구분	2004년	2005년
계약서 미교부	996(26%)	1,574(31%)
선이자 및 수수료 공제	2,262(59%)	2,678(52%)
실제 채무액보다 많은 금액의 차용증·어음 작성	1,353(35%)	1,666(32%)
이자율 등 중요사항 기재누락·허위기재	906(23%)	1,216(24%)
제3자를 보증인으로 설정	699(18%)	1,861(36%)
채무자의 연락처 등 기재	2,459(64%)	2,797(54%)
중개수수료 수취	-	1,902(37%)
미등록사채업자 대부광고	-	1,038(20%)
비율산출기준	3,859명	5,133명

< 대부계약 체결시 경험한 부당사례('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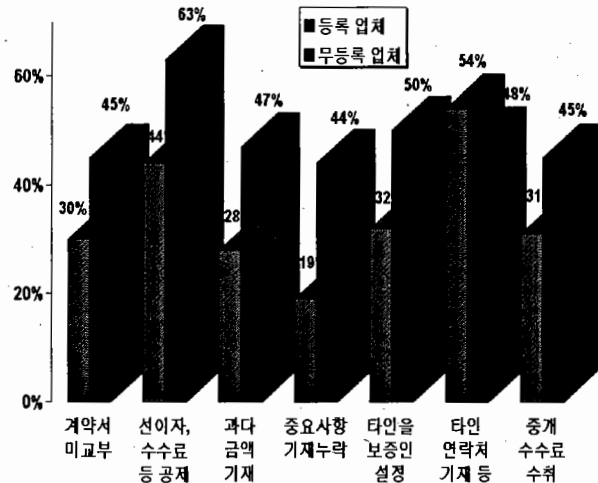


□ 무등록업체를 이용한 사람은 등록업체를 이용한 사람에 비해 계약체결과 관련 부당한 사례를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

○ 등록업체의 경우 향후 채권추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변 관계인의 연락처 기재요구가 많은 것(54%)으로 나타남

【등록 여부별 부당사례 경험】

구분	등록업체	무등록업체
계약서 미교부	30%	45%
선이자,수수료 등 공제	44%	63%
과다금액 기재	28%	47%
중요사항 기재누락	19%	44%
타인을 보증인으로 설정	32%	50%
타인 연락처 기재 등	54%	48%
중개수수료 수취	31%	45%



시사점 5 : 불법채권추심 · 기타 부당사례

□ 무등록업체를 이용할 경우 불법채권추심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부당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음

【필요사항】

➡ 불법업체 단속강화를 통해 무등록업체의 대부업 등록유도

□ 관계인의 연락처 기재요구 등 불법은 아니나 부당한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

【필요사항】

➡ 부당한 피해에 대해 감독권한이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지도(단기방안) 및 명시적인 규제근거 마련(장기방안)

12 제도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연체기록(25%), 대출이 안 될 것 같아서(24%), 보증·담보 요구(21%), 긴 대출심사기간(11%)이 제도금융을 이용하지 않은 주요 이유로 나타남

○ 제도금융의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도 35%

* 대출이 안될 것 같아서(24%), 긴 대출심사기간(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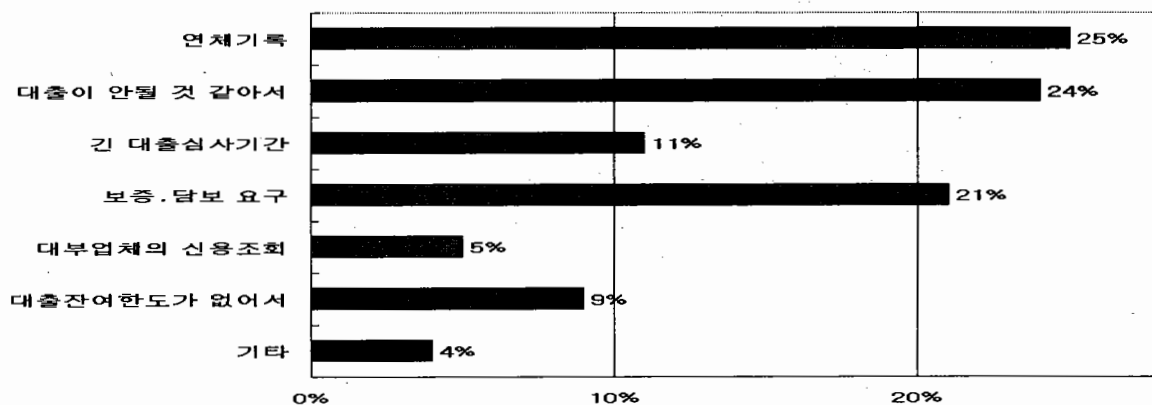
○ 대부업체의 신용조회기록 때문에 제도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5%

【제도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연체 기록	319(20%)	795(21%)	1,280(25%)
대출이 안될 것 같아서	339(21%)	866(22%)	1,252(24%)
긴 대출심사 기간	231(14%)	296(8%)	541(11%)
보증·담보 요구	457(28%)	995(26%)	1,079(21%)
대부업체의 신용조회기록	-	132(3%)	275(5%)
대출잔여한도가 없어서	166(10%)	487(13%)	479(9%)
기타	18(1%)	57(1%)	186(4%)
무응답	85(5%)	231(6%)	41(1%)
	1,615명(100%)	3,859명(100%)	5,133명(100%)

< 제도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05) >



13 사금융을 알게 된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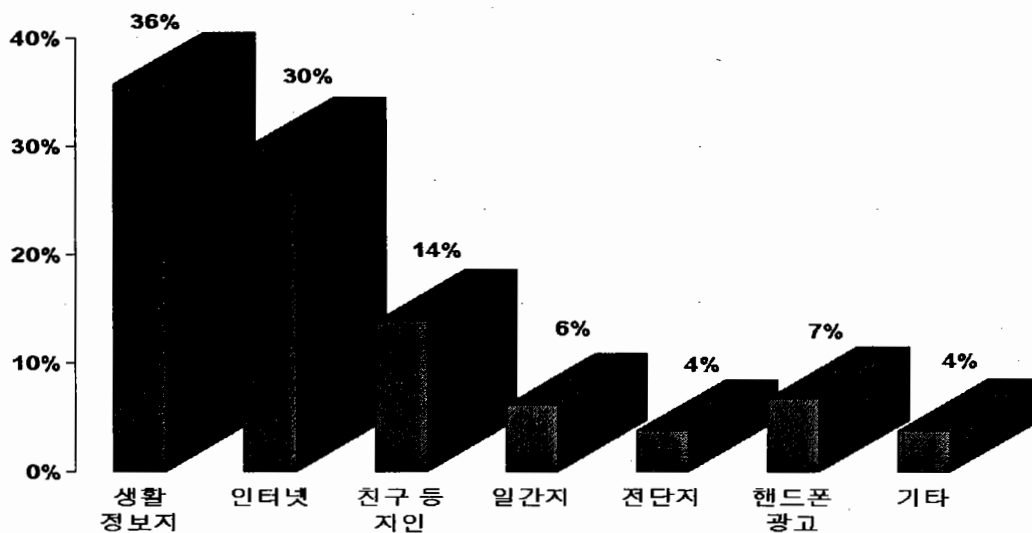
- 대부업체를 알게 된 경로와 관련 생활정보지가 3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인터넷 30%, 친구 등 지인 14%를 차지
- '04년에 비해 생활정보지는 9%p 감소하고, 인터넷은 11%p 증가
- 전체설문응답의 81%가 인터넷 응답인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사금융을 알게 된 경로】

(단위 : 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생활정보지	653(40%)	1,735(45%)	1,836(36%)
인 터 넷	343(21%)	748(19%)	1,527(30%)
친구 등 지인	248(15%)	706(18%)	711(14%)
일 간 지	164(10%)	180(5%)	313(6%)
전 단 지	163(10%)	275(7%)	192(4%)
핸드폰 광고	-	39(1%)	345(7%)
기 타	-	127(3%)	193(4%)
무 응 답	44(3%)	49(1%)	16(0%)
	1,615명(100%)	3,859명(100%)	5,133명(100%)

< 사금융을 알게 된 경로('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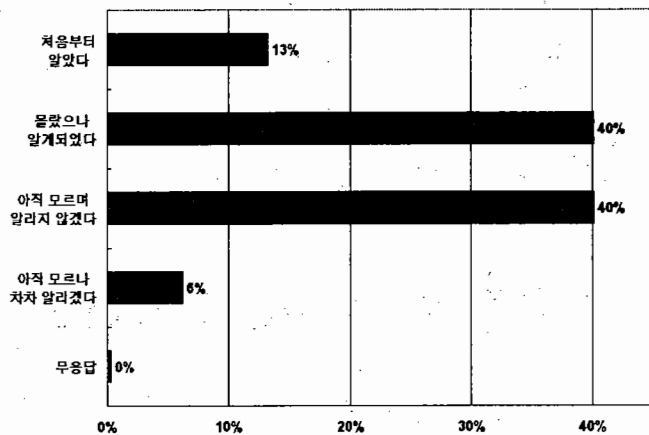


14 사금융 이용사실의 가족 인지여부

- 현재 사금융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의 86%가 가족 몰래 사금융을 이용
- 현재까지 사금융채무에 관하여 가족이 알지 못하는 1,419명 중 87%(1,228명)는 앞으로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겠다고 응답

【가족 인지여부】

구 분	응답자수
처음부터 알았다	405명(13%)
몰랐으나 알게 되었다	1,228명(40%)
아직 모르며 알리지 않겠다	1,228명(40%)
아직 모르나 차차 알리겠다	191명(6%)
무응답	9명(0%)
비율산출기준	3,06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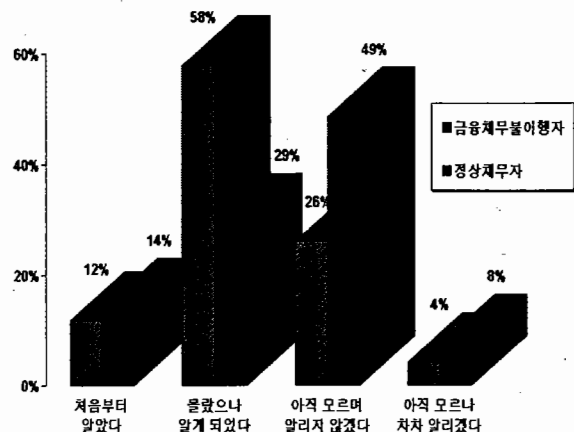


* 현재 사금융채무가 있다고 응답한 자

- 정상채무자의 49%는 가족이 사금융이용 사실을 알지 못하며 앞으로도 알리지 않겠다고 응답
- 사금융을 이용사실을 가족이 처음부터 알았다는 응답비중은 정상채무자(12%)와 금융채무불이행자(14%) 모두 미미

【금융채무불이행자별】

구 분	금융채무불이행자	정상채무자
처음부터 알았다	12%	14%
몰랐으나 알게 되었다	58%	29%
아직 모르며 알리지 않겠다	26%	49%
아직 모르나 차차 알리겠다	4%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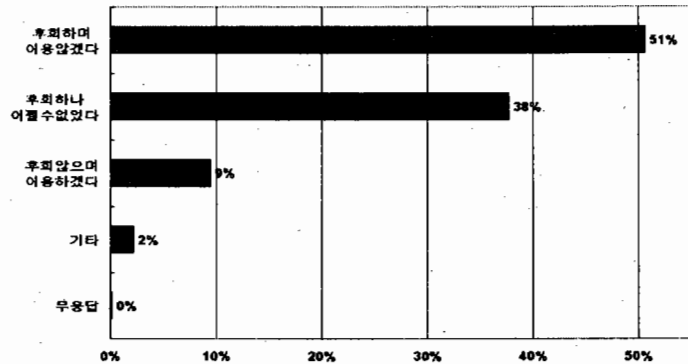


15 사금융 이용후 현재의 심정

- ☐ 사금융을 이용한 후 현재 후회하고 있다는 응답이 88%이고, 후회는 하고 있으나 어쩔 수 없었다는 응답도 38%

【현재의 심정】

구분	응답자수
후회하며 이용않겠다	1,548명(51%)
후회하나 어쩔수없다	1,154명(38%)
후회않으며 이용하겠다	289명(9%)
기타	66명(2%)
무응답	4명(0%)
비율산출기준	3,061명*



* 현재 사금융채무가 있다고 응답한 자

시사점 6 : 사금융 이용관련

- ☐ 사금융이용자의 상당수가 제도금융기관의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사금융을 이용

【필요사항】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이용 유도 및 금융회사 대출절차의 신속·간이화

- ☐ 주로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을 통해 사금융을 접함

【필요사항】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 대출광고의 정화 필요

- ☐ 사금융이용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리고, 사금융업체는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위협

【필요사항】 경제적 어려움을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문화 조성

- ☐ 사금융이용이 불가피한 상대적 저신용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안 택 수 의 원

1. 상장자문의 생보사 상장과 관련 03년, 06년 공청회 개최
보고서 2건

- ☐ 2003년 상장자문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음
- ☐ 2006년 상장자문위원회는 지난 7.13일 증권선물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첨부> 2006년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공청회 자료

생명보험회사 상장

2006. 7. 13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 목 차 >

I. 생보사 상장 개요

II. 국내 생보사의 성격

1. 논의 배경
2. 법적 형태
3. 실질적 운영 방식
4. 종합의견

III. 계약자배당과 관련된 쟁점사항

1. 내부유보액의 처리
2. 계약자배당의 적정성
3. 자산의 재평가 및 배분 여부

I. 생보사 상장 개요

1. 논의경과

□ 생보사들이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80년대 중반부터 생보사 상장에 관해 수차례의 논의가 있었으나, 생보사 성격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인해 상장 유보

○ 교보('89)와 삼성('90)은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으나, '90년말 증시침체 등 여건악화로 상장 추진 보류

○ 삼성자동차 처리('99) 및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기한 도래('03)에 따라 생보사의 상장문제가 재논의되었으나,

- 생보사 성격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하여 상장방안 결정 유보

□ '06.1월, 정부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거래소 산하에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현행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을 근거로 생보사 상장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35조):**

거래소는 법인의 주권상장이 공익과 투자자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2) 이익배분 등에 관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

□ '06.2월에 구성된 상장자문위원회*는 현행 법체계, 과거의 논의 내용,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론적·실증적 분석 및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상장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제시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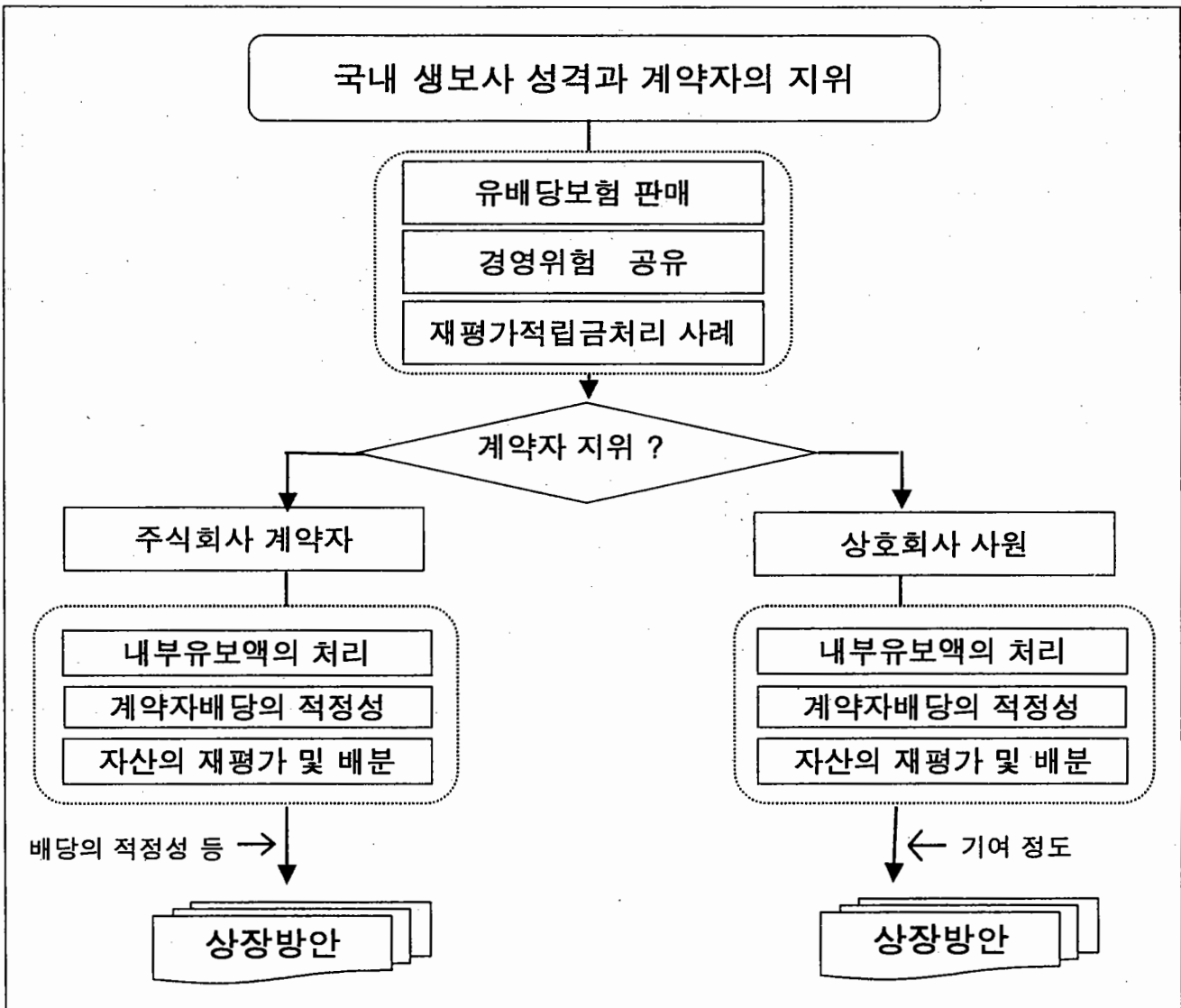
※ 법률, 보험, 재무, 회계·계리, 유가증권상장 분야 전문가로 구성

2.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검토 방향

□ 상장자문위원회는 과거 상장추진 과정에서 제시된 논의들을 토대로 국내 생보사의 성격과 그에 따른 계약자 지위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검토

- 내부유보액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자산의 재평가 및 배분에 관한 사항

< 그림 1 > 생보사 상장관련 검토 방향



II. 국내 생보사의 성격

1. 논의 배경

- 국내 생보사는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지만 상호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므로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어, 국내 생보사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과거의 보험관련 법규 및 감독정책, 국내 생보사의 운영방식, 외국의 사례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검토

2. 법적 형태

- 국내 생보사는 법인의 설립 형태면에서 살펴보면, 상법 및 보험업법에 의하여 주주의 납입자본금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 국내 생보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주금을 납입한 주주로 구성된 주주총회이며, 업무집행기관 또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와 대표이사
- 반면, 보험업법상 상호회사는 보험계약자로 구성된 사원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업무집행기관 또한 사원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와 대표이사
- 계약자의 권리·의무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내 생보사의 계약자는 상호회사의 사원과 같은 의결권이 없고, 주주로서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등 상호회사의 사원과는 차이가 존재
- 또한, 국내 생보사의 계약자는 청산시 여타 채권에 비해 보험금 등의 선취권이 인정되고, 주주는 법률에 의한 주식의 무상소각·파산으로 인한 투자원금 손실 위험을 지게 됨

- 반면, 보험업법상 상호회사 사원은 의결권을 가지며 일반채권자보다 후순위의 잔여재산 청구권을 가짐

□ 따라서, 국내 생보사는 법인의 설립 및 출자관계, 의사결정기구,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고려할 때, 상법 및 보험업법상 주식회사가 아님을 인정하기 어려움

< 표 1 > 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간 차이점 비교

구 분		주 식 회 사	상 호 회 사
법인의 성격		상법에 의거 설립된 영리법인	보험업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
설립시의 출자관계		회사구성원인 주주가 출자한 자본 (자기자본)	기금각출자에 의해 각출된 기금 (추후 동일한 금액의 적립을 조건으로 기금상각 가능)
구성원		주주	사원(= 보험계약자)
최고 의사결정기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업무집행기관		이사회	이사회
회계감사기관		감사	감사
계약자 권리	의결권	없음	사원당 1표(정관으로 별도 규정 가능)
	청산시 잔여재산 청구권 순위	일반채무보다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 순위가 선행순위	일반채무보다 사원의 보험금 청구권 순위가 후순위
계약자 의무	채권자에 대한 의무	없음	납입한 보험료를 한도로 책임
	회사 지급불능시	여타 채권에 비해 보험금 등의 선취권은 보유하나, 회사재산이 보험금지급 등에 부족시 일부 삭감 발생 가능	원칙적으로 보험금 등의 삭감 가능

3. 실질적 운영 방식

가. 유배당보험 위주의 판매

□ '92.8월 이전까지 유배당보험의 판매만이 허용

- '92.8월부터 보장성보험 및 양로보험에 한하여 무배당보험이 허용되었으며, '00.4월 이후 모든 상품으로 확대

□ 과거에 주식회사인 생보사가 유배당보험 위주로 판매한 것은 당시의 환경과 제도에 기인

- 국내 생명보험산업은 초기에 보험료율 산출에 필요한 통계가 부족하고 금리변동성이 높은 등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유배당보험 판매만을 허용

□ 유배당보험은 이익을 계약자에게 환원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배당검증비용(Verification Cost)*이 발생

※ 이익의 원천과 규모 등을 검증하는 비용

- 이에 따라 계약자와 주주간 이익배분문제가 발생하는 주식회사 보다는 상호회사에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

- 그러나 경쟁심화, 위험의 불확실성 증가 등 보험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험사의 설립형태와 관계없이 생보사의 경영정책에 의하여 유·무배당보험을 자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 국내의 보험시장 환경 및 외국의 생보사 설립형태별 판매 상품을 감안할 때, 유배당보험의 판매는 생보사의 설립형태와는 무관

< 표 2 > 외국생보사(주식/상호회사)의 판매상품 현황

(단위 : %)

구 분		회 사	설립연도	판매상품 비중	
				유배당	무배당
미 국	주식회사	Nationalwide Life Ins. Co.	1929	44	56
		State Farm Life Ins. Co.	1929	100	0
		Canada Life Ins. Co.(N.Y)	1971	93	7
		Hartford Life Ins. Co.	1902	73	27
		Lincoln Life Ins. Co.	1905	1	99
	상호회사	Metlife	1868	89	11
일 본	주식회사	협영생명	1945	100	0
영 국	주식회사	Prudential Ass.	1848	85	15
대 만	주식회사	國泰人壽	1962	100	0

주) 판매상품 비중은 '96~'97 신계약 기준

나. 계약자가 주주지위로서의 경영위험 부담 여부

(1) 자본금 및 자기자본

□ '90년이전 기존 생보사의 자본금*은 자산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

※ 자본금의 상당부분은 자산재평가를 통해 충당

○ 또한 대부분의 보험사가 특정기간에 자기자본이 잠식된 상태

< 표 3 > 기존 생보사 자기자본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A사	1.8	1.5	1.0	△3.9	△11.2	△12.4	△13.6	△14.6	△15.3	△15.8
B사	0.4	0.1	0.3	0.3	0.2	0.2	5.0	5.0	10.0	63.2
C사	1.5	2.0	5.0	5.0	5.0	5.0	5.0	5.0	△27.9	△28.3
D사	5.0	5.0	5.2	5.0	5.0	5.0	5.0	3.8	4.4	7.1
구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A사	△16	△40	△332	△667	△1,184	△1,170	△566	△225	△116	△17
B사	84	0.1	91	146	191	225	245	631	935	2,906
C사	△27	△20	△71	△128	△142	△142	△33	15	17	11
D사	49	△7	77	53	66	110	321	1,052	3,460	2,687

□ 그러나 계약자는 생보사의 파산과 관련하여 사전적으로 채권자로서의 위험만을 부담하고, 사후적으로도 경영위험을 부담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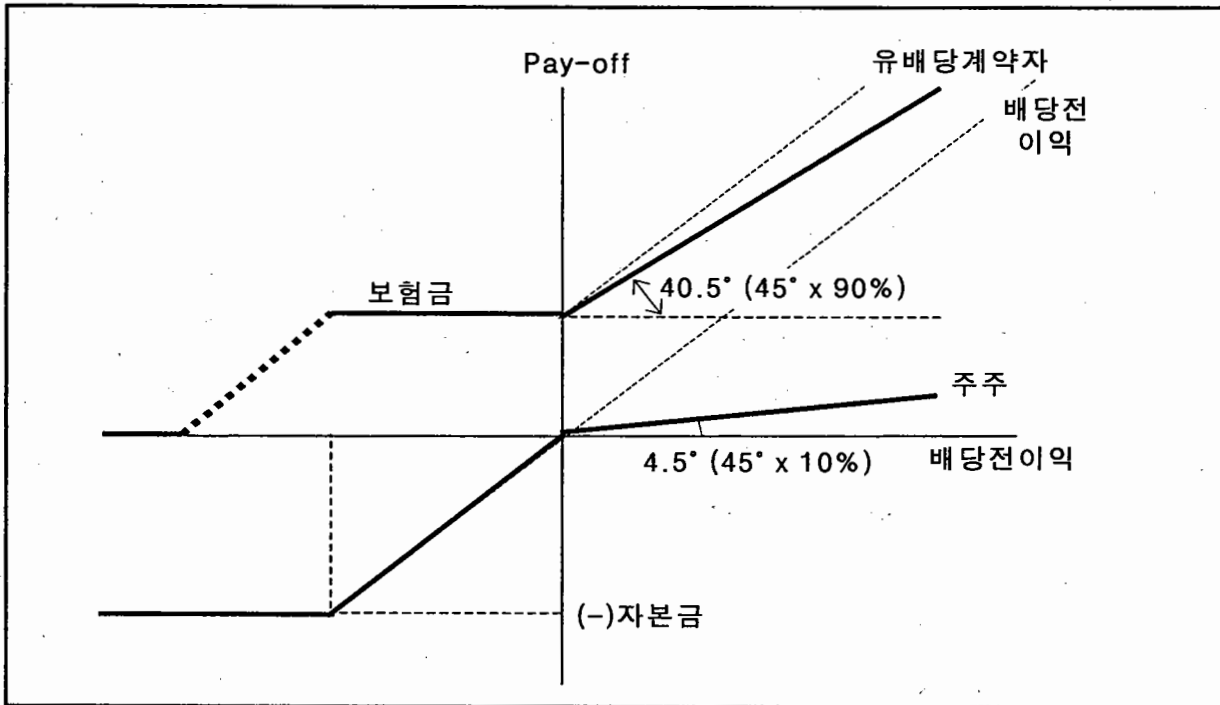
① 사전적으로 계약자는 채권자로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보험금을 보장받을 권리를 보유

○ 생보사의 파산시 계약자가 보험금액의 삭감 등 위험을 부담할 경우에도, 이는 채권자로서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주주로서의 위험부담*과는 상이

※ 주주는 자기자본의 범위내에서 위험을 부담

- 아울러, 계약자보호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로서의 위험 부담도 상당부분 경감

< 그림 2 > 주주와 계약자의 이론적 Pay-off Structure



- ② 사후적 관점에서 외환위기 당시 생보사 파산사태를 보더라도 계약자는 보험금 삭감이나 보험료 증액 등의 채권자로서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음※

※ 태평양 등 5개 생보사 계약자의 경우 계약이전방식으로 보호됨

- 반면 주주는 경영권을 상실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었으며, 파산시 주식을 무상소각 당하는 등 자기자본 범위내에서 위험을 부담※

※ 제일생명 : 조양상선그룹이 인수('73, 2억→5억으로 증자)

흥국생명 : 태광그룹이 인수('73, 2억→5억으로 증자)

(舊)고려생명 : 자산과 부채를 동해생명으로 포괄이전후 청산('73)

□ 한편, '90년 이전에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생보사를 운영할 경우, 자발적 증자의 유인이 약함

○ 재무부장관은 사업규모 및 자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생보사에게 증자 명령을 할 수 있었음에도 증자명령을 하지 않음

□ 타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자본잠식이 상당기간 지속[※]되었음에도 주식회사의 속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는 없음

※ A손해보험사는 '82~'95년, B은행 '83~'84년, C리스사 '89~'03년 자본잠식 상태

□ 상기 사항을 감안할 때, 생보사의 자기자본 잠식 사례를 이유로 계약자가 주주로서의 경영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님

○ 다만, 일부 보험사는 장기간 자본잠식이 지속됨으로써 투자수익이 감소하여 계약자배당이 부족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2) 배당재원을 이용한 결손보전

- ☐ 계약자배당은 보험상품의 장기성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계약자배당은 장래손익 전망 등을 기초로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특정기간에 이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미래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자배당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유배당보험에서 누적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향후에 발생하는 유배당보험 이익으로 보전하는 것이 일반적
- ☐ 외국의 경우에도 유배당보험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배당보험 이익을 미할당잉여금 형태로 유보하는 것이 일반적
 - 유배당보험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미할당잉여금을 사용

< 참조 1 > : 감독회계상 주식회사의 유배당보험 손익처리(캐나다, 미국)

- 대차대조표의 자본계정을 '계약자지분 계정(policyholder's equity 또는 participating surplus fund)'과 '주주지분 계정(stockholder's equity 또는 stockholder's fund)'으로 양분하고,
- '계약자지분 계정'내에 누적손실(이익)을 계상하여 추후에 발생하는 이익으로(손실을) 보전
- '주주지분 계정'에는 유배당보험 이익 중 주주지분(예:10%)이 계상되며, 계약자지분 계정에 누적결손이 있더라도 이익이 발생한 년도에는 주주지분을 확보

- ☐ 따라서 유배당보험의 이익으로 결손을 보전한 점을 경영위험 공유로 보기 어려움
 - 다만, 국내 생보사가 과거 손익과 비교하여 계약자배당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3) 계약자보호제도의 불비

- ☐ 이론적으로 볼 때, 계약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 파산시 금융소비자(채권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장치[※]

※ 계약자보호제도가 있을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권자의 위험부담 감소

- 생보사에 있어서도 계약자보호제도의 존재 여부에 따라 계약자의 지위가 변경(계약자 → 주주)되는 것은 아님

- ☐ 외환위기 당시 생보사의 파산시에도 계약자는 보험금 삭감 또는 보험료 증액 등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음

- 반면, 부실 생보사 주주는 주식을 무상 소각당하는 경영위험을 부담

- ☐ 우리나라 보험산업에서는 타금융권에 앞서 계약자보호제도[※]가 도입

※ '62년 공탁금제도('77년 폐지, 다만 재경부장관의 예탁명령권 및 예탁재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유지), '88년 계약자보호예탁금제도, '89년에는 보험보증기금제도 및 보호예탁금제도가 도입

※ 은행권은 '96년부터, 상호신용금고 등 단기금융회사는 '83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 ☐ 계약자보호제도는 소비자보호제도로서 계약자의 경영위험 부담 논란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다. 재평가적립금 처리

- 교보('89)와 삼성('90)은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
- 당시 재무부는 재평가적립금에 대한 계약자와 주주간 합리적인 이익배분을 위해 「생보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90.8월)」(이하 '재평가처리지침'이라 함)을 제정
 - 보험업법(§97 ③)에서는 재평가적립금에 대하여 계약자 배당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 재평가적립금에 대한 주주와 계약자간 구체적 배분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

< 표 4 > 재평가적립금의 배분기준(재평가처리지침, '90.8)

K율	주 주	계약자	내부유보
100%	0~30%	40% 이상	잔여분
50~100% 미만	0~20%	50% 이상	"
50% 미만	0~10%	60% 이상	"

- 당시 재무부는 '주식회사 형태인 생보사의 주인은 주주이며, 계약자는 회사에 대하여 시설이용, 보험금청구 등 채권자의 위치에 있다'※는 입장

※ 생보사 기업공개에 관한 시각(90.3월, 재무부) : “재평가적립금 및 당기 이익의 계약자·주주간 배분기준” 마련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견해들을 수렴하여 발표된 자료

□ '90년 당시 부동산 재평가적립금중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분한 것은 부동산 재평가지 장부가액(book value)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 계약자에게 재평가적립금을 배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이 처분될 경우, 계약자 몫이 줄어들기 때문
- 즉, 재평가적립금의 주주·계약자 배분도 통상의 경상이익 배분과 동일하게 이루어 짐

< 표 5 > 재평가적립금 배분여부에 따른 계약자 몫 비교(예시)

	매입가	재평가 후			처분시			계약자 몫의 합 (A+B)
		장부가	평가의	계약자몫 (A)	처분가	처분의	계약자몫 (B)	
배분시	100	150	50	35	200	50	35	70
미배분시	100	150	50	0	200	50	35	35

주) 계약자 몫의 투자손익 비율을 70%로 가정

< 참조 2 > 재평가적립금 배분이유(생보사 기업공개에 관한 시각, 재무부, '90.3)

- 재평가차익도 경상이익과 같이 자본금의 투자수익, 계약자의 기여 및 주주·경영자의 경영노력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 그 배분도 주주와 계약자 그리고 회사의 경영안정성을 위한 사내 유보방법으로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함

□ 따라서 “재평가처리지침”에서 재평가적립금중 계약자 몫을 인정한 것은 일종의 경상이익에 대한 계약자 배분으로서, 생보사의 주식 회사적 성격을 부인한 사례로 보기 어려움

4. 종합의견

□ 국내 생보사 성격에 대하여 형식적·실질적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부인하기 어려움

- 주식회사 계약자와 상호회사 사원은 권리와 의무에 차이가 있음
- 유배당보험의 판매는 생보사의 설립형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 유배당보험 이익으로 유배당보험 결손을 보전하는 것은 유배당보험 운영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
- 생보사의 자본잠식 및 계약자보호제도의 불비가 계약자와 주주의 지위를 변경시키는 것은 아님
- 재평가처리지침 제정 과정에서 계약자 몫을 인정한 것은 계약자 배당제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평가적립금도 경상이익 배분기준에 준하여 배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다만, 과거 생보사의 자본잠식, 배당재원을 이용한 결손보전 등으로 인하여 배당이 부족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 과거 계약자배당이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자배당과 관련된 여타 요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Ⅲ. 계약자배당과 관련된 쟁점사항

1. 내부유보액의 처리

가. 논의 배경

- ☐ 생보사 상장과 관련, '90년 재평가처리지침에 따라 적립된 내부유보액의 성격 및 처리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음
- ☐ 따라서,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평가처리지침의 구체적 내용 및 당시의 정부 입장 등을 검토하여 그 성격과 역할에 부합하는 처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나. 내부유보액 현황

- ☐ 교보와 삼성이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처리지침”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중 일부(삼성 878억, 교보 662억)를 내부에 유보
- ☐ 재평가처리지침에서는 내부유보액의 처리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참조 3 > 내부유보액의 처리방법(재평가처리지침, '90.8)

- ① 내부유보액은 자본계정에 계리(지침§14①)
- ② 내부유보액은 유가증권 분석 등의 경우에 회사의 자기자본에서 제외(지침§14①)
- ③ 대차대조표 주식사항으로 장래의 계약자배당에 사용될 재원임을 명시(지침§14①)
- ④ 사전에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계약자배당 실시 가능(지침§14②)
- ⑤ 결손보전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결손보전에 사용된 금액은 향후 발생하는 주주지분이익으로 우선 보충해야 함(지침§14③)

< 표 6 > 교보와 삼성의 재평가적립금 처리 내역

구 분	교보('89)		삼성('90)	
	금액(억원)	비율(%)	금액(억원)	비율(%)
재평가차액	2,265	-	3,017	-
재평가세 등	(68)	-	(91)	-
재평가적립금	2,197	100.0	2,927	100.0
주주지분 배분	656	29.9	876	29.9
계약자지분 배분	879	40.0	1,173	40.0
공익사업출연	300	40×34.2	391	40×33.3
재평가특별배당	289	40×32.9	391	40×33.3
배당안정화준비금	289	40×32.9	391	40×33.3
내부유보	662	30.1	878	30.0

다. 내부유보액의 성격

- 재평가처리지침상 내부유보액은 재평가적립금중 계약자·주주 배당후 잔여분으로서 “회사의 준비금”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 궁극적으로 계약자배당에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회사에 유보된 “계약자 몫”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 내부유보액은 궁극적으로 계약자배당에 사용될 재원으로 결손 보전에 사용되더라도 추후 주주가 다시 보충토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부채적 성격을 부인하기 곤란
 - 특히, 결손보전후 주주가 다시 보충토록 한 것은 주주에게 한시적으로 credit-line 기능만을 제한적으로 부여한 것에 불과

□ 전술한 바와 같이 '유배당보험에서 발생한 손실은 유배당보험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유배당보험의 특성임을 감안할 때,

- 계약자 몫인 내부유보액이 결손보전에 사용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본적 성격을 인정하기는 곤란

□ 아울러 내부유보액이 자본잉여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으나, 재평가 처리지침상 통상적인 자본과 달리 대차대조표의 주석으로 자기자본에서 배제하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 내부유보액은 계약자 몫의 "자본"이라기 보다는 미국·캐나다 감독회계에서 나타나는 계약자 몫의 "미할당잉여금[※]"과 유사

※ 미국·캐나다의 경우, 계약자 몫의 미할당잉여금(계약자에 대한 미래 배당재원으로 사용 : 부채)을 감독회계에서 자본계정으로 처리

< 참조 4 > 내부유보 이유 (생보사 기업공개에 관한 시각, 재무부, '90.3)

- 90년 부동산재평가차익은 미실현이익이므로 계약자 배당형태로 전액 사외유출할 경우, 회사의 계속성, 재무건전성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계약자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보험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회사전체의 재무적 안전성(일정금액의 내부유보)을 우선 고려한 후 주주 또는 계약자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 한편, 내부유보액은 지급여력금액 산정시 자기자본에 합산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지급여력금액에는 자기자본 이외에 “확정되지 않은 부채[※]”도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

※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상 계약자에 대한 부채인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계약자지분조정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등은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지급여력금액에 가산(보험업감독규정 §7-1)

※ 미국의 경우, 특정계약자에 할당되지 않는 미할당잉여금은 청산시 잔여재산 청구 우선순위에서 주주의 청구권과 동일한 순위에 해당되며 지급여력 금액에 가산(뉴욕주 보험법 §7435(a))

- 상기사항을 감안할 때 내부유보액은 계약자에 대한 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며,

- 관련기관의 해석을 구하여 현행 자본계정에서 부채계정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2. 계약자배당의 적정성

가. 논의 배경

-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배당재원으로 결손을 보전하는 등 과소배당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존재
 -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은 보험상품의 장기성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쳐 검토할 필요
- ☐ 따라서, 과거 생보사의 손익발생 추이 및 계약자배당 내역, 외국의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당의 적정성을 판단하고자 함

나. 계약자배당 현황

- ☐ 계약자배당이 자유화되는 '90년대초 이전까지 회사의 이익규모와 관계없이 정부의 배당지침에 따라 배당을 실시
 - 계약자배당 자유화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이익이 부족한 생보사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타생보사와 동일수준의 배당 실시
- ☐ 이에 따라 배당지침 수준을 초과하는 이익을 시현한 생보사도 초과 이익금에 대하여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지 않음
 - ※ 배당전이익이 발생하였으나, B사는 '77년~'78년 및 '80년~'81년, C사는 '78년~'81년 동안 확정배당 이외의 계약자배당을 실시하지 않음(□)
 - 반면, 일부 생보사는 배당전손실이 발생하거나, 결손이 누적된 경우에도 계약자배당을 실시
 - ※ B사는 '82년~'83년에, C사는 '82년에, A사 및 D사는 '85년까지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익규모를 초과하여 확정배당 등 계약자배당을 실시(▣)

< 표 7 > '77 ~ '83년 손익 및 계약자배당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77	'78	'79	'80	'81	'82	'83
A사	확정배당전손익	△1	△6	5	35	47	△76	△244
	계약자배당	0	1	6	35	47	16	20(7)
	확정배당후손익	△1	△7	△1	△0	0	△92	△264
B사	확정배당전손익	2	1	6	103	156	△78	△17
	계약자배당	0	0	6	50	135	6	27
	확정배당후손익	2	1	0	53	21	△84	△44
C사	확정배당전손익	0	7	40	142	223	△7	143
	계약자배당	0	6	34	135	203	46	39(16)
	확정배당후손익	0	1	6	7	20	△53	104
D사	확정배당전손익	△1	0	1	6	14	2	△37
	계약자배당	0	0	1	6	14	27	10
	확정배당후손익	△1	△0	△0	△0	0	△25	△47

주) 계약자배당은 확정배당과 사차배당의 합이고, 괄호 내는 사차배당

□ '90년 주주·계약자간 이익배분기준이 마련되면서 누적결손이 발생할 경우 주주지분으로 결손을 우선 보전한 후, 잔여결손에 대하여 계약자지분으로 보전

- 기존 생보사의 경우에는 부실규모가 큰 일부회사를 제외하고는 계약자지분을 결손보전에 사용하지 않음
- '80년대말 신설된 생보사의 경우에는 설립 후 상당기간 동안 적자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배당전이익을 결손보전에 사용

< 표 8 > 계약자지분을 이용한 결손보전 등의 현황(이익배분기준 마련후)

(단위: 억원)

구 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총계
기 존 생 보 사	A사	결손보전																	0
		추가배당			49					603	344								996
	B사	결손보전	32	110	73										2,100	872			3,187
		추가배당				44	24	32	30	93	137		131	658					1,149
	C사	결손보전																	0
		추가배당			54	63	51	37	6	25	44			32		2	3		317
신 설 생 보 사	D사	결손보전													292	118	55	66	531
		추가배당	1	7	7	11	11	17	19	14	27	34	12	30					189
	E사	결손보전											414						414
		추가배당			2	12	2	31	34	26	49	78		62	41	10	18	25	390
	F사	결손보전														111	130	97	338
		추가배당		3	6	9	5	6	9	7	22	48	27	63					205

주) 결손보전 : 계약자지분의 결손보전액, 추가배당 : 결손시 배당액 + 이익배분기준 초과배당액

□ 외국에서는 유배당보험의 결손을 미할당잉여금에 계상토록 한 후
향후 발생하는 유배당보험의 이익으로 결손을 보전*

※ 우리나라는 '90년 이후 누적결손을 주주가 우선 보전하도록 되어 있어 누적
결손을 전액 계약자가 보전하는 외국에 비해 계약자에게 유리

< 참조 5 >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익배분방식 비교

① 미국 뉴욕주(감독회계기준)

- 유배당보험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90%는 계약자 몫 10%는 주주 몫
- 유배당보험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전액 계약자가 부담

< 예시 >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배당전손익	1,000	△1,000	△1,000	1,000	1,000
계약자 몫	900	△1,000	△1,000	900	900
주주 몫	100	-	-	100	100
계약자잉여금 ^(주)	900	△100	△1,100	△200	700
주주잉여금	100	100	100	200	300
비 고	9:1 배분	당기손실 계약자부담	당기손실 계약자부담	9:1 배분	9:1 배분

주) 손실을 차기로 이월하며, 장래손익전망 등을 고려하여 계약자배당률을 자율적으로 결정

② 우리나라('90년 이후)

- 유배당보험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 누적결손이 없는 경우 : 계약자 몫을 계약자배당재원으로 활용
 - 누적결손이 있는 경우 : 주주 몫으로 누적결손을 우선 보전하고도 잔여 결
손이 있는 경우 계약자 몫으로 잔여누적결손을 보전

< 예시 >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배당전손익	1,000	△1,000	△1,000	1,000	1,000
계약자 몫	900	-	-	900	900
주주 몫	100	△1,000	△1,000	100	100
계약자잉여금 ^(주)	900	900	900	900	1,000
주주잉여금	100	△900	△1,900	△900	-
비 고	9:1 배분	당기손실 주주부담	당기손실 주주 부담	주주부담(100)후 계약자부담(900)	주주부담(100)후 계약자부담(800)

주) 계약자잉여금은 누적결손 보전에 사용할 수 없고, 5년 이내 계약자배당으로 사용

□ '90년 이전에는 초기 보험시장 형성과정과 외형성장 위주의 영업 정책으로 인하여 초과사업비가 발생

- 특히, '80년대에는 '82년 금리인하조치에 따른 보험료 인상요인을 흡수하기 위해 정부가 예정사업비율을 인하함으로써 사업비차 손실이 확대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생보사의 사업비율은 일본에 비해 '80년 이전 까지 높았으나, 예정사업비 인하 이후에는 낮은 수준으로 하락

< 표 9 > 한국과 일본의 사업비율 추이 비교

(단위 : %)

구 분	'70	'75	'80	'85	'90	'95	'00
한 국	32.0	31.2	24.0	13.8	11.7	18.2	14.9
일 본	25.9	27.8	23.8	17.9	15.4	13.8	14.1

주) 사업비율 = 실제사업비 ÷ 수입보험료

자료) 한국은 보험통계연감, 일본은 생명보험사업개황으로부터 작성

□ 보험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사업비율이 정상화되면서, '90년 이후에는 사업비차이익이 발생

- 다만, 신설사는 설립 후 10년 이내에서 대부분 초과사업비가 발생

□ 한편, 투자수익률[※]과 관련하여서는 계열사 지원 등으로 인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생보사도 있는 반면, 계열사의 주가 상승으로 계약자의 이익을 증진시킨 경우도 존재

※ 생보사의 대출수익률은 전반적으로 은행의 대출수익률 보다 1~2%p 높은 수준

□ 따라서, 상기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 유배당보험 손익과 계약자배당액을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의 계약자배당율을 산출할 경우, 대부분의 생보사가 90% 수준을 상회하는 배당을 실시
- 그러나 이와 같은 단순한 분석은 과거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적인 정합성을 갖고 있는 재무·계리적 분석방법을 이용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

< 표 10 > 계약자배당률의 추정(회사설립~'05.12)

(단위 : %)

구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배당율	89%	100% ↑	88%	114%	100% ↑	100% ↑	100% ↑

주1) 계약자배당률 = 계약자배당액 현재가치 ÷ 유배당보험 손익의 현재가치

2) 100% ↑는 유배당보험 손익의 현재가치가 (-)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배당을 실시한 것을 의미

다. 배당의 적정성 검토

◇ 과거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금흐름분석을 이용한 자산할당 (Asset Share)방법과 옵션모형을 이용한 유·무배당보험상품 비교를 통하여 배당의 적정성을 검토

(1) 자산할당(Asset Share)방법을 이용한 배당의 적정성 검토

□ 분석대상

- 기존 생보사와 신설 생보사로 구분하여 7개 회사를 선별

□ 자산할당(Asset Share, 이하 'AS'라 함) 방법

- AS란, 과거의 순현금흐름과 투자이익을 합산하여 누적한 금액
- AS는 분석대상회사의 회사 설립당시부터 '05.12까지 이원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
 - 투자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흐름은 유배당보험 현금흐름, 무배당보험 현금흐름 및 자본 현금흐름으로 직접 귀속이 가능하므로 각각에 직접 귀속
 - 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하므로, 투자이익은 유배당/무배당/자본 계정별 AS에 회사 전체 투자이익률을 곱하여 산출
 - 자본이 완전잠식된 경우에는 자본계정의 투자이익이 (-)로 계산되고, 그 해당액만큼 유배당보험 계정의 투자이익이 증가

< 참조 6 > 자산할당(Asset Share)

- 자산할당(Asset Share)방법은 일정한 전제하에 각 보험계약으로 할당한 자산액을 이용하여 생보사의 자산형성에 기여한 공헌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 자산할당(AS)이란, 전체 보험계약을 보험수리상 동질적인 보험계약집단으로 구분하고, 운용이율, 사망률, 사업비, 효력상실해약률 등의 실적을 바탕으로 각 집단의 누적현금흐름을 산출한 것
- 즉, 각 보험계약(유배당보험, 무배당보험)의 AS는 과거의 순현금흐름과 이에 대한 총자산이익률 기준의 투자이익을 합산하여 누적한 금액으로 산출
 예) 유배당보험 AS = $\sum(\text{수입보험료} + \text{투자이익} - \text{지급보험금} - \text{해약환급금} - \text{사업비} - \text{계약자배당금} - \text{주주귀속잉여})$
- Net Asset Share(혹은 Surplus)를 「Asset Share - 책임준비금」으로 정의하여, 각 계정의 공헌도를 측정가능

□ 계약자배당의 적정성 판단기준

- 보험사의 경영이 보험료 설정당시의 가정대로 이루어진다면 AS와 책임준비금 수준은 유사
 - 그러나 실현손익에 대해 배당수준이 과도하거나 과소할 경우 AS와 책임준비금간에는 차이가 발생
- ※ 사업비나 투자수익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보험사가 조정할 있는 요소는 계약자배당이라고 가정
- 즉, 「AS - 책임준비금」으로 정의된 Net AS가 음(-)이면 배당금이 경영실적과 비교하여 과다(혹은 적정) 지급된 것이며, Net AS가 양(+)이면 배당금이 과소 지급된 것으로 해석

< 참조 7 > 계약자배당 적정성 판단기준

과다(또는 적정) 배당	과소 배당
Asset Share < 책임준비금	Asset Share > 책임준비금

□ 분석결과 1 : 원가AS*와 현행 책임준비금

※ 원가 AS는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이 포함되지 않은 AS

< 시나리오 1 > : 주주가 결손을 매년 보전하지 않는 경우

- 계약자의 자산형성 기여도인 AS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주주가 결손을 보전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합리적
- 분석결과, 분석대상 모든 생보사에서 Net AS가 음(-)으로 나타나므로 평가손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과거 배당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표 11 > 주주의 결손보전이 없다는 가정하의 Net AS

구 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Net Asset Share	(-)	(-)	(-)	(-)	(-)	(-)	(-)

< 시나리오 2 : 시나리오 1 + 초과사업비를 주주가 부담 >

- 초과사업비 사용으로 인한 배당재원의 감소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초과사업비를 주주가 부담한다고 가정
- 분석결과, D사를 제외한 분석대상 모든 생보사에서 Net AS가 음(-)으로 나타나므로 평가손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업비 과다집행으로 인하여 계약자배당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표 12 > 초과사업비 주주 부담 가정하의 Net AS

구 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Net Asset Share	(-)	(-)	(-)	(+)	(-)	(-)	(-)

< 시나리오 3 : 시나리오 1 + 계약자의 이익배분비율을 90%로 소급하여 적용 >

- 과거의 계약자 이익배분비율(70% 또는 85%)이 현재에 비해 낮았던 점을 고려하여, 회사설립 당시부터 현행수준(90%)의 이익배분이 이루어졌다고 가정
- 분석결과, 분석대상 모든 생보사에서 Net AS가 음(-)으로 나타나므로 평가손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현행수준의 이익배분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과거 배당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표 13 > 현행 이익배분기준 가정하의 Net AS

구 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Net Asset Share	(-)	(-)	(-)	(-)	(-)	(-)	(-)

< 참조 8 > 주주가 유배당결손을 부담하는 경우의 AS 분석

- Net AS가 음(-)인 A사·C사·F사의 경우 과거 배당이 적정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 Net AS가 양(+)인 B사·D사·E사·G사의 경우 논리적으로 과거 배당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주주의 결손보전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한 후 배당의 적정성을 평가할 필요

< 주주에 의한 결손보전시 Net Asset Share >

구 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Net Asset Share	(-)	(+)	(-)	(+)	(+)	(-)	(+)

- 즉, B사·D사·E사·G사의 경우,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 1과 비교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임
- 주주가 결손을 보전하게 되면 결손보전액만큼 유배당 AS가 커지게 되므로, 주주의 결손보전이 큰 경우 계약자배당을 적정하게 하였더라도 AS가 커져서 Net AS가 양(+)이 되는 현상이 발생

□ 분석결과 2 : 시가AS와 GPV※

※ GPV(Gross Premium Valuation, 영업보험료식 책임준비금) : 향후 금리, 위험률 및 사업비 등 현재시점의 최선의 기초율에 의거하여 평가시점에서 재산출한 책임준비금을 의미하며, 시가준비금으로 해석될 수 있음.

- AS를 계산할 때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을 포함(시가 AS)할 경우, 부채도 시가로 평가(GPV)하여 비교하는 것이 일관성의 원칙에 부합
- '시가AS - GPV'를 Net AS로 정의하며, Net AS로 미래를 포함한 전체 분석기간 동안의 배당의 적정성을 평가
 - Net AS가 음(-)이면 향후 배당재원이 충분치 않다는 의미
- 분석결과, 분석대상 모든 생보사에서 Net AS가 음(-)으로 나타남
 - 이는 기존 유배당보험에서 향후 결손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미래 배당의 적정성 측면에서 보면 미래배당재원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의미

< 표 14 > 유배당보험의 배당재원 충분성 검토(할인률 5% 가정)

구 분	A	B	C	D	E	F	G
Net Asset Share	(-)	(-)	(-)	(-)	(-)	(-)	(-)

(2) 옵션모형을 이용한 적정성 검토

□ 분석대상

- 예정이율만 차이가 있고 급부가 동일한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을 비교 분석

□ 분석방법

- '유·무배당보험간 예정이자율 차이^{*}와 계약자배당 청구권의 콜옵션가치를 비교하여 이자율차배당의 적정성을 분석

※ 유배당보험(7.5%)과 무배당보험(8.5%)의 보장이율 차이(1%p)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계약자배당 청구권 구입을 위해 계약자가 추가로 지불한 보험료에 해당

- 과거의 이자율차배당 실적을 바탕으로 사후적 옵션가치를 산출하여 사전적 옵션가치와 비교함으로써 이자율차배당의 적정성을 분석

□ 적정성 판단기준

- 유배당 상품의 추가적인 보험료라고 볼 수 있는 γ 는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간 예정이율의 차이로 일종의 콜옵션(call option)의 성격을 갖는 배당가치에 따라 결정됨^{*}

※ 유배당보험 보험료 = 무배당보험 보험료 + 계약자배당 예상치(=콜옵션가치)

< 표 15 >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의 현금흐름

	유배당	무배당	차이
보험료	X_D	X_N	γ
보험금	C_t	C_t	0
약정 투자수익	$\sum r_D$	$\sum r_N$	$\sum (r_D - r_N)$
배당금	$r < r_D$ 일 때, $p \cdot \text{Max}[\sum_{t=1}^T (y_t - r_D), 0]$ $r > r_D$ 일 때, $p \cdot \text{Max}[\sum_{t=1}^T (y_t - r), 0]$	0	→ 유배당의 배당금과 동일

주) r : 정기예금 금리, r_D : 배당보험 예정이율, r_N : 무배당보험 예정이율,
 p : 계약자 이익배분율, y_t : 실제 수익률

- 따라서, 계약자가 지불한 추가보험료(γ)와 유배당보험에 내재된 콜옵션의 가치를 비교함으로써 이자율차배당의 적정성을 판단 가능

< 표 16 > 이자율차배당의 적정성 판단 기준

추가보험료 > 사전적 콜옵션가치	추가보험료 = 사전적 콜옵션가치	추가보험료 < 사전적 콜옵션가치
유배당계약자가 추가로 지불한 보험료보다 사전적 콜옵션의 가 치가 크기 때문에 당시 상황 에서 계약자가 비싼 보험료를 지불	적정한 가격	유배당계약자가 추가로 지불한 보험료가 내재된 콜옵션의 가치 보다 작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서 계약자는 저렴한 보험료를 지불
추가보험료 > 사후적 콜옵션가치	추가보험료 = 사후적 콜옵션가치	추가보험료 < 사후적 콜옵션가치
유배당계약자가 추가로 지불한 보험료가 사후적 콜옵션의 가치 보다 크기 때문에 계약자는 추 가적인 이익배분 요구의 정당성 확보(이자배당 부족)	적정한 이차배당	유배당계약자가 추가로 지불한 보험료가 사후적 콜옵션의 가치 보다 작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 익배분요구가 합리화되지 못함 (이자배당 충분)

□ 분석결과

- ① 사전적으로 유배당보험에 내재되어 있는 옵션가치가 예정이자율
차이의 가치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유배당보험의 사전적 옵션가치는 예정이자율 차이에 비해 75%
정도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② 사후적으로 볼 때, 계약자가 납입한 추가보험료에 비해 더 많은
배당이 지급되었던 것으로 나타남
 - 유배당보험의 사후적 옵션가치는 예정이자율 차이의 가치에
비해 175%를 상회하는 높은 가치를 보임
 - 한편, 이러한 결과는 사전적 옵션가치가 보수적으로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③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무배당보험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쌌다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으나, 생보사간 무배당보험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무배당보험의 보험료가 과대평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표 17> 현재 판매되는 무배당보험의 가격비교

(단위 : %, 원)

구 분	A사	B사	C사	D사	E사
유배당보험비중	48.3	44.9	23.3	42.4	2.1
무배당보험 가격	219	224	219	208	218

주1) 유배당보험 비중 : 2006년 3월 현재 유배당보험의 책임준비금 비율

2) 현재 판매중인 무배당종신보험 (남자 40세, 20년납, 가입금액 10만원)

(3) 검토의견

- ☐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과거 계약자에게 과소 배당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확인할 수 없음

3. 자산의 재평가 및 배분

가. 논의배경

- ☐ 상장 전에 부동산 등 장기투자자산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한 후,
 - 과거 '90년 생보사 상장 논의과정에서와 같이 자산형성에 기여한 계약자 및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해 검토

나. 상장 전 기존자산의 재평가

- ☐ '98년 시가회계제도의 도입으로 대부분의 자산은 시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부동산 등 일부의 경우만 장부가로 평가
 - 시가 평가로 인해 발생한 미실현손익은 손익계산서* 또는 대차대조표*를 통해 계약자 몫과 주주 몫으로 구분하고 있음

※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파생상품평가이익 등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등

< 표 18 > 매도가능증권 등 평가손익('06.3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삼성	대한	교보	흥국	금호	신한	미래
계약자지분조정	30,630	1,733	101	100	225	56	-
자본조정	29,783	1,523	110	108	262	147	△29
매도가능증권 등 평가손익	60,413	3,256	211	208	487	203	△29

- ☐ 장부가로 계상하고 있는 부동산을 주식가치 산정을 위해 시가로 평가하더라도, 그 금액을 재무제표에 계상하는 것은 불가*

※ 자산재평가법상 자산재평가제도가 폐지('00년)되어 동 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할 수 없음

☐ 만약, 회계기준 또는 법령을 변경하여 생보사 상장시 시가로 평가된 금액을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 타산업과의 형평성 및 비교가능성이 저해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회계처리로 인해 국제적 정합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음

다. 부동산 등의 평가차익의 계약자 배분 가능성

☐ 부동산 장부가액을 재평가금액으로 증액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없으므로 주식가치 산정을 위한 시가 평가로 인해 발생한 평가차익을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

☐ 만약, 계약자 몫의 부동산평가차익 상당액을 주주 몫의 이익잉여금에서 배분할 경우,

- 향후 동 자산의 처분시 계약자에게 다시 배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 부동산의 미실현이익을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없어 지급여력금액에 가산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면 재무건전성 악화가 야기될 수 있음

☐ 과거 '90년 생보사 상장 논의 과정에서 재평가처리지침을 제정하여 계약자에게 평가차익 중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분한 것은

- 자산 처분시 계약자배당 자원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에 배분한 것임

※ 자산 시가평가로 인한 장부가액 ↑ → 자산처분시 처분익 ↓ → 계약자배당 자원 ↓

< 표 19 > 자산 시가평가 여부에 따른 계약자 몫 비교(예시)

	매입가	시가 평가 후			처분시				계약자몫 의 합 (A+B)
		장부가	평가익	계약자몫 (A)	처분가	장부가	처분익	계약자몫 (B)	
원가평가	100	100	0	0	200	100	100	70	70
시가평가	100	150	50	35	200	150	50	35	70

주) 계약자 몫의 투자손익 비율을 70%로 가정

□ 결국, 부동산 등 미실현이익의 계약자 몫이 해당 자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이익에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지가 관건

- 부동산 등의 처분은 상당기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데다 최근 무배당보험 신규판매가 대부분인 상황이므로
- 현행 당기 준비금비율의 투자이익 배분기준에 의할 경우, 부동산 등의 투자이익 중 계약자 몫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 현재 구분계리 T/F에서 논의중에 있으며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향후 개선방안이 제시될 계획

2. 금융기관(국채은행, 시중은행, 보험, 증권사, 투신사 등)의
대표자 명, 본사주소, 전화번호 등 상세내역표(외국금융사
포함)

☐ 세부내역

“ 불임 참조 ”

<붙임>

□ 국내증권회사

회사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교보증권	최명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3771-9000
굿모닝 신한증권	이동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굿모닝신한타워	3772-1000
대신증권	노정남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번지	769-2000
대우증권	손복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대우증권빌딩	768-3355
대한투자증권	조왕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3771-7114
도이치증권	임성근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33 영풍빌딩 17층	316-8888
동부증권	정종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5번지	369-3000
동양종합금융증권	전상일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85	3770-2000
리딩투자증권	박대혁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736-1 한솔빌딩12층	2009-7000
맥쿼리증권	하정현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0 한화빌딩 8층	3705-8788
메리츠증권	조정호, 김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0	785-6611
미래에셋증권	최현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 미래에셋빌딩2층	3774-1700
부국증권	장옥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번지	784-1010
브릿지증권	이상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2	3779-3000
비엔지증권중개	서정계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5-5 대연각센터빌딩 11층	772-1000
비엔피 파riba 증권중개	이승국	서울 중구 태평로2가 310번지 태평로빌딩 22층	2125-0500
삼성증권	배호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6번지	2020-8000
서울증권	강찬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번지	368-6114
NH투자증권	남영우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1	2004-4114

회사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신영증권	원종석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번지	2004-9000
신흥증권	지승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3번지	3787-2114
씨티그룹 글로벌마켓증권	함춘승, 박장호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226 흥국생명빌딩 17,18층	3705-0600
우리투자증권	박종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번지	768-7000
유화증권	윤경립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번지	3770-0100
이트레이드증권	다카하시 요시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2 KT빌딩 8층	3779-0100
코리아RB 증권중개	김창한	서울시 중구 명동1가 60번지 개양빌딩 9층	550-6200
키움닷컴증권	김봉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번지 유화증권빌딩	3787-5000
푸르덴셜투자증권	정진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8 푸르덴셜 타워	3770-7114
흥국증권중개	정동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교보빌딩 13층	780-9190
하나증권	임창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번지	3771-3000
한국투자증권	홍성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789-4114
한누리투자증권	김종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번지 쌍용타워	3777-8000
한양증권	유정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1번지	3770-5000
한화증권	진수형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번지 한화증권빌딩	3772-7000
현대증권	김지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번지	768-0114
CJ투자증권	김홍창	서울시 중구 장교동 1번지 장교B/D	318-9111
CLSA코리아증권	앤드류 레널드, 김기수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116 세안빌딩 15층	397-8400
KGI증권	차이웨이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5번지	3770-9000
KIDB채권중개	박광호	서울시 중구 명동1가 1-1 서울YWCA빌딩 902호	771-4370
SK증권	김우평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10번지	3773-8245

□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

회사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ABN AMRO Asia Ltd.	이재원	중구 남대문로 5가 서울시티타워빌딩 12층	2131-6400
Credit Agricole Cheuvreux Securities Ltd.	이강현	종로구 종로1가 교보빌딩 19층	3700-1400
BARCLAYS CAPITAL	주진술	중구 태평로1가 84 서울파이낸스빌딩 23층	2126-2600
Credit Suisse Securities(Europe) Limited	박상용, 이천기	중구 소공동 110 한화빌딩 13층	3707-3700
Daiwa Securities SMBC	한기원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번지 대한투신빌딩 6층	787-9100
Goldman Sachs (Asia) L.L.C	임태섭 Hobart L. Epstein	종로구 신문로 1가 226 흥국생명빌딩 21층	3788-1000
Hongkong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방춘호	중구 봉래동 1가 25 HSBC빌딩 7층	3706-8700
J.P.Morgan Securities (Far East) Limited	임석정	중구 정동 34-35 제이피모간플라자	758-5750
Lehman Brothers International (Europe)	민유성	중구 소공동 110 한화빌딩 12층	317-5000
Merrill Lynch International Inc.	최형호	중구 태평로1가 84 서울파이낸스빌딩 29층	3707-0400
Morgan Stanley & Co. International Ltd.	양호철	종로구 신문로 1가 226번지 흥국생명빌딩 22~23층	399-4848
Nomura(野村) International(Hong Kong) Limited, Seoul Branch	니시노 노리히꼬	중구 태평로 1가 84번지 서울파이낸스센터17층	3783-2000
SG Securities (HK) Ltd.	니콜라스 기이 존슨	종로구 신문로 1가 116번지 세안빌딩 11층	2195-7114
UBS Securities	이재홍, 장영우	종로구 서린동 33번지 영풍빌딩 10층	3702-8888

□ 자산운용사

금융회사명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대한투자신탁운용	한동직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27-3	02-3771-7114
푸르덴셜자산운용	이창훈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8 푸르덴셜타워 5층	02-3770-7020
CJ자산운용	나효승	서울 중구 장교동1 장교빌딩 9층	02-727-2700
삼성투자신탁운용	강재영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1	02-3774-7600
동양투자신탁운용	정진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8	02-3770-1300
대신투자신탁운용	이재창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02-769-3247
산은자산운용	조강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6	02-3774-8000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 산운용	백경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02-789-0300
교보투자신탁운용	김석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교보증권빌딩 12층	02-767-9600
신영투자신탁운용	이종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02-2004-9500
신한BNP Paribas투자신탁운용	장 오디베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굿모닝신한타워 18층	02-767-5777
한화투자신탁운용	윤육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한화증권B/D 9F 한화투자신탁운용	02-3772-6000
서울자산운용	유병덕	서울시 영등포구여의도동 23-9 서울증권빌딩 7층	02-2129-3360
동부투자신탁운용	김호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5-5 동부B/D 11,12F	02-787-3700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 운용	마크 브라우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번지 CCMM빌딩 3층	02-3774-0600
SH자산운용	유병득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8	02-761-1144

금융회사명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랜드마크자산운용	최홍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02-3774-0800
KB자산운용	이원기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23-2	02-2167-8200
흥국투자신탁운용(주)	이성동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226번지 흥국생명빌딩5층	02-2002-7500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정상기, 송승욱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	02-3774-2080
아이투자신탁운용	우경정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굿모닝신한타워 23층	02-3215-3000
미래에셋투자신탁운용	김경록, 하우성, 이정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 미래에셋빌딩	02-3774-1500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 터스자산운용주식회사	이원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1 알리안츠타워18층	02-2071-9900
PCA투자신탁운용	황성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굿모닝타워 15층	02-2126-3500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 자문	구재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	02-3774-1600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 용	곽태선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87번지 삼성화재B 7층	02-3788-0500
마이애셋자산운용투자 자문	권영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9 한국증권금융빌딩 10층	02-3774-6114
굿앤리치자산운용	조덕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1 삼성생명빌딩 15층	02-783-4321
KTB자산운용	장인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	02-788-8400
유리자산운용	차문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	02-2168-7900
피닉스자산운용	김태복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한화증권빌딩 26층	02-780-2545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조재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02-3787-3500
플러스자산운용	김기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사학연금회관 13층	02-3787-2700
맥쿼리아이엠엠자산운 용	이지형	서울 중구 소공동 110 한화빌딩 4층	02-3782-2300
현대와이즈자산운용	조영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2 해성빌딩 10층	02-3453-5011
슈로더투자신탁운용	전길수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84 서울파이낸스센터 15층	02-3783-0500
(주)골든브릿지자산운용	최형철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2 골든브릿지빌딩 5층	02-360-9525
한국투자신탁운용	김범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02-3276-4700
도이치투자신탁운용	신용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33 영풍빌딩 19층	02-724-7400
알파에셋자산운용	박승득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2	02-769-7600
농협CA투자신탁운용	조우봉, 필립바체비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6 HP빌딩 5층	02-368-3600

금융회사명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칸서스자산운용	김영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02-2077-5000
피델리티자산운용	에반 아더 헤일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84 서울 파이낸스센터 4층	02-3783-0901
기은SG자산운용	알버트르쿨로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87번지 삼성화재빌딩 7층	02-727-8800
한국인프라자산운용(주)	반기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02-786-2974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 럭처자산운용	닉 반 겔더	서울 중구 소공동 110 한화빌딩 11층	02-3705-8500
한국밸류자산운용	이용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02-3276-6000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 산운용	성운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CCMM 빌딩 10층	02-3774-0608
다올부동산자산운용	박동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1층	02-2190-6500

※ 2006년 6월 업무보고서 기준

국내은행

은행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한국산업은행	김창록 金昌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02) 787-7000
(The Korea Development Bank)			
농협중앙회	정용근 鄭容根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02) 397-5114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신한은행	신상훈 申相勳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20	02) 756-0505
(Shinhan Bank)			
우리은행	황영기 黃永基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번지	02) 2002-3000
(Wooribank)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John Filmeridis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00	02) 3702-3114
(Standard Chartered First Bank Korea Limited)			
하나은행	김종열 金宗烈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02) 2002-1111
(Hana Bank)			
중소기업은행	강권석 姜權錫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	02) 729-6114
(Industrial Bank of Korea)			729-7114
국민은행	강정원 姜正元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02) 2073-7114
(Kookmin Bank)			
(주)한국의외환은행	Richard F. Wacker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81	02) 729-0114
(Korea Exchange Bank)			
한국씨티은행	허영구 河永求	서울시 중구 다동 39번지	02) 3455-2114
(Citibank Korea Inc.)			
한국수출입은행	신동규 辛東奎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1	02) 3779-6114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수협중앙회	장병구 張炳九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6	02) 2240-2114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신용보증기금	김규복 金圭復	서울시 마포구 공덕2동 254-5	02)	710-4114
(Korea Credit Guarantee Fund)				
대구은행	이화연 李和彦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053)	756-2001
(Daegu Bank)				
부산은행	이장호 李帳鎬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38	051)	642-3300
(Pusan Bank)			051)	803-0851
광주은행	정태석 鄭泰錫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062)	239-5000
(The Kwangju Bank)				
제주은행	윤광림 尹廣林	제주도 제주시 이도1동 1349	064)	720-0200
(Jeju Bank)				
전북은행	홍성주 洪性宙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063)	250-7114
(Jeonbuk Bank)				
경남은행	정경득 鄭庚得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46-1	055)	290-8000
(Kyongnam Bank)				
기술신용보증기금	한이현 韓利憲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17-17	051)	460-2301
(Korea Technology Credit Guarantee Fund)				
한국주택금융공사	정홍식 鄭弘植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6-1	02)	789-9263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02)	2014-8114

외은지점

(2006. 9. 11. 현재)

은행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JPMorgan Chase Bank, N.A. 제이피모간 체이스은행	이성희	서울시 중구 정동 34-35 제이피모간 플라자	758-5114 758-5423
The Bank of Tokyo-Mitsubishi UFJ, Ltd. 미쓰비시도쿄유에프제이은행	아사바 마사시 ASABA MASASHI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33 영풍빌딩 4층	399-6434 399-6496
Bank of America National Association 뱅크 오브 아메리카	스테판 씨 제임스 Stefan C. James	서울시 중구 장교동1 한화빌딩 9층	2022-4500 2022-4525
Mizuho Corporate Bank, Ltd.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나리카와 아츠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84번지 서울파이낸스센터 19층	3782-8610 754-6844
CALYON Bank 칼리온은행	미셸 로아 Michel Roy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 교보빌딩 19층	3700-9500 738-0325
BNP Paribas 비엔피 파리바은행	필립 레니엑스 Philippe Reynieix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310 태평로빌딩 23, 24층	317-1700 757-2530
American Express Bank, Ltd. 아메리칸익스프레스은행	최재익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4-8 광화문빌딩	399-2900 399-2966
ING Bank N.V. 아이엔지은행	에릭 베르사블 Erik Versavel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226 홍국생명빌딩 15층	317-1800 317-1883
Indian Overseas Bank 인도해외은행	알 알라말라이 R ANNAMALAI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 25-5 대연각빌딩 1층	753-0741 756-0279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Ltd. 호주뉴질랜드은행	프랭크 갬블 Frank Gamble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 교보빌딩 18층	730-3151~60 737-6325
The Bank of Nova Scotia 노바스코셔은행	테리 벨 Terry Bell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39 동아미디어센터 16층	2020-2340~41 2020-2344
Deutsche Bank AG 도이치은행	김수룡(공동), 김명환(공동) Michael Hellbeck(공동)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33 영풍빌딩 18 ~ 19층	724-4500 736-3871
ABN · AMRO Bank 에이비엔알로은행	안드레 반델물런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581 서울시타워빌딩 11, 12층	2131-6000 2131-6010
Union de Banques Arabes et Francaises 유바프은행	에릭 레인하트 Eric Reinhart	서울시 중구 순화동 1-170 에이스타워 3층	3455-5300 3455-5353
DBS Bank Ltd. 디비에스은행	방효진 Eugene Bang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84번지 서울파이낸스빌딩 18층	6322-2660 732-7953
Sumitomo Mitsui Banking Corp.	이와미 히로유키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33	732-1801

은행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미쓰이스미토모은행(三井住友銀行)	岩見博之	영풍빌딩 7층	399-6330
Societe Generale	베에르 이브 그리모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116	2195-7777
소시에테제네랄은행	Pierre-YVES Grimaud	세안빌딩 10층	2195-7700
United Overseas Bank, Ltd.	류찬한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	739-3916~9
대화은행(大華銀行)	Liew Chan Harn	교보빌딩 1508호	730-9570
The Yamaguchi Bank, Ltd. (Pusan Branch)	카와소에 타카노리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6가 69	051) 462-3281
야마구찌은행(山口銀行) 부산지점	河添孝典	국제회관 3층	051) 462-3282
National Bank of Pakistan	압둘 가푸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	732-0277
파키스탄국립은행	Abdul Ghafoor	교보빌딩 1210호	734-5817
The Bank of New York	김용덕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33	399-0001~6
뉴욕은행		영풍빌딩 23층	399-0055
HSBC(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td.)	사이먼 나이젤 쿠퍼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25	2004-0000
홍콩상하이은행	Simon Nigel Cooper	HSBC빌딩	318-9100
Bank of China	왕립군(王立軍)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33	399-6288
중국은행(中國銀行)	Wang, Li Jun	영풍빌딩 1, 2층	399-6265
Metropolitan Bank and Trust Company	비센테 피 살라잘 2세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120	779-2751~2
메트로은행	Vicente P. Salazar Jr.	단암빌딩 2층	779-2750
Credit Suisse	박성우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0	3707-3803
크레디트스위스은행		한화빌딩 14층	3707-3877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최기천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310	755-5688
중국공상은행(中國工商銀行)	Cui, Ji Qian	태평로빌딩 17층	755-3748
UBS AG	손광리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33	3702-8888
유비에스은행	Sean Lee	영풍빌딩 10층	3702-8714
Bank Mellat	알리 아프잘리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89-13	2007-6700
멜라트은행	Ali Afzali	금강타워 13, 14층	557-4448
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mpany	윌리엄 S. 박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84	3706-4500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William s. Park	서울파이낸스센터빌딩 18층	3706-4545
Barclays Bank PLC	최석윤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84	2126-2700
바클레이즈은행		서울파이낸스센터빌딩 23층	2126-2701
China Construction Bank	진재홍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84	6730-1718
중국건설은행(中國建設銀行)		서울파이낸스센터빌딩 7층	6730-1701
Wachovia Bank, N. A.	김충곤	서울시 중구 소공동 21	3706-3114
와코비아은행		삼화빌딩 10층	3706-3141

은행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Oversea-Chinese Banking Corporation Ltd. 오버시차이니스은행	빈센트리	서울시 중구 순화동 1-170 에이스타워 20층	754-4355 754-2343
Bank of Communications Seoul Br. 교통은행	남광혁 南光赫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87 삼성화재빌딩 6층	2022-6888 2022-6899
Morgan Stanley Bank International Limited 모간스탠리은행	박장호 Park, Jang Ho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226번지 한국생명빌딩 23층	3275-4500 3275-4619/4620

금융기관(생보사) 현황자료 (2006.6.현재)

금융기관명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대한생명보험(주)	신은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번지	789-5114
알리안츠생명보험(주)	마누엘 바우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1 알리안츠타워	3787-7000
삼성생명보험(주)	이수창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가 150	751-8013
흥국생명보험(주)	김성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226번지	2002-7000
교보생명보험(주)	신창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가 1번지	721-2121
LIG생명보험(주)	이용문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3번지 럭키생명빌딩	051)461-7700
미래에셋생명보험(주)	윤진홍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68번지 미래에셋생명빌딩	3271-4114
금호생명보험(주)	최병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57 금호빌딩 5층	6303-5000
동부생명보험(주)	조재홍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1-10 동부금융센타7층	1588-3131
동양생명보험(주)	박종진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85 동양금융빌딩	1577-1004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스튜어트 비 슬로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1 성원빌딩	3469-9600
푸르덴셜생명보험(주)	황우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8 푸르덴셜타워	2144-2000
녹십자생명보험(주)	김소영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68	3284-7000
신한생명보험(주)	한동우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가 14번지	3455-4000
PCA생명보험(주)	윌리엄 라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81 서울시티타워 18층	2129-1700
뉴욕생명보험(주)	린든 맥멜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68-5 신영빌딩 10·11층	2107-4600
ING생명보험(주)	론반 오이엔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16 세안빌딩 17층	3703-9500
하나생명보험(주)	로저스틸, 이정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하나은행본점 17층	3709-7300
KB생명보험(주)	윤인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 증권업협회-코스닥빌딩 7,8층	398-6800
라이나생명보험(주)	이영호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81 서울시티타워 14층	3781-1000
아메리카생명보험(주) 한국지점	고든 왓슨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가 64-5 신일빌딩 9층	3707-4800
에스에이치앤씨생명보험(주)	에르베 지로동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81 서울시티타워 11층	3788-8800

금융기관(손보사) 현황자료 (2006.6.현재)

금융기관명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원명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5-2 메리츠타워	3786 - 1114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	권치신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가 43번지	6366 - 7000
대한화재해상보험(주)	이준호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51-1	3455 - 3114
그린화재해상보험(주)	이영두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81번지 서울시티타워	3788 - 2000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	오용일	서울 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60	724 - 9114
제일화재해상보험(주)	김우환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2-1	316 - 8114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황태선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87	1588 - 5114
현대해상화재보험(주)	하종선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78	1588-5656
LIG손해보험(주)	구자준, 이기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9-11	1544-0114
동부화재해상보험(주)	김순환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10	1588 - 0100
코리안리저보험(주)	박종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	3702 - 6000
서울보증보험	정기홍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74	3671 - 7000
교보자동차보험	신용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03-22 교보타워빌딩 8층	3479 - 4923
A.H.A 한국지점 (아메리칸홀어슈어런스컴퍼니)	게리 먼스터맨	서울 종로구 서린동 136 서울센트럴빌딩 18층	2260-6800
ACE 한국지점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그레고리 오테른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91번지 국제센터빌딩 6층	3785-3100
FEDERAL 한국지점 (페더럴인슈어런스컴퍼니)	마리오 델로스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45번지 코오롱빌딩 8층	3705-9700
Royal & Sun Alliance 한국지점 (로얄앤드선얼라이언스)	필립 노먼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서울파이낸스센터빌딩 21층	3782-4702
웰튼재보험 한국지점	정준섭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64-8 광화문 빌딩 18층	750-8500
스위스재보험 한국지점	안드레아스 볼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	397-0300
민헨재보험 한국지점	토비아스 피아니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33	398-0300
FATIC 한국지점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최명석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702호	399-2460
미쓰비시토토해상화재보험(주) 한국지점	다케오카 타츠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33번지 영광빌딩 23층	3702-5800
임플로이어스 리인슈어런스 코퍼레이션 한국지점	신영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33번지 영광빌딩 9층	399-5800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주) 서울지점	니시오카 히로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87 삼성화재빌딩 8층	752-0858
교원나리자동차보험(주)	송면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112-1 한국교직원공제회 동원회관	6670-8020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주)	최세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8-6 LG화재 강남빌딩3층	2050-8003
SCOR Re 한국지점	김정산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가 310 태평로빌딩 25층	779-7267
RGa 리인슈어런스 컴파니 한국지점	다나엘 코세트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84번지 파이낸스센터 20층	6730-1350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허정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93-2 현대해상 강서사옥 12층	2628-2020

3. '00년 이후 금융기관 전산위기대응과 관련 - 훈련 현황

□ 훈련 목적

- 재해 등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금융 업무 마비 방지 및 정부차원의 금융전산분야 위기대응능력 제고

* '06년도 을지연습(8.21~8.23)에 앞서 통합 연습 실시

□ 일자 및 주관 : '06. 8.17. ~ 8.18, 금감위/금감원

□ 훈련대상 금융기관

- 전산센타 화재발생 : 국민은행
- 해킹에 의한 전산시스템 마비 : 대신증권
- 인적재해(예, 파업) : 국민은행 제외 7개 시중은행

□ 훈련 참가기관

- 비상기획위원회,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노동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국가사이버안전센터(국가정보원)
- 한국은행 등 28개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
 - 은행 : 국민은행 등 8개,
 - 증권 : 대신증권 등 15개
 - 유관기관 : 한국은행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코스콤 금융결제원

□ 훈련 방법

(3개 분야 독립 실시)

일 시	상 황	조 치 내 용
8.17 09:20 (관심)	인재: 인적재해 선언 전자: 금융권 사이버 해킹 공격 예상	인재: 인적재해 사고 보고 전자: 증권사 전산시스템 점검 지시
8.17 10:30 (주의)	화재: 국민은행 전산센터 2층 화재발생 인재: 인적재해 돌입 전자: 대신증권 서비스 거부공격 탐지	화재: 화재발생 사고 보고 인재: 전산센터 경계 강화 전자: 전자적 침해사고 발생 보고
8.17 13:10 (경계)	화재: 화재 확산 인재: 전산시스템 장애발생 전자: 증권거래 장애발생	화재: 재해복구센터 가동 준비 인재: 비상대응인력 투입 전자: 보안전문인력 투입
8.17 14:20 (심각)	화재: 전산센터 소실 인재: 전산시스템 다운 전자: 증권거래 업무 마비	화재: 재해복구센터 가동 및 대지급시스템 인재: 은행공동망 비상대응 등 전자: 증권거래 및 자금결제 비상대응
8.17 16:40 (주의,해제)	화재: 정상 복구 인재: 파업 종료 전자: 침해차단 및 복구	화재: 업무 정상화 보고 인재: 파업 종료 보고(재발방지대책) 전자: 상황 보고

□ 훈련 결과

- 전산센터 화재에 대한 소방방재청 진화, 경찰청 경비 등 사고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재해복구센터(DR) 전환이 1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었음
- 전자적침해의 경우 해킹공격에 대한 원인분석 및 차단, PC바이러스에 대한 처치 및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대응이 적절하게 수행됨
- 인적재해의 경우 파업 등 전산업무 담당자 사고발생 시 대체인력 투입, 전산시스템 통제 등 인적재해에 대한 위기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 짐

⇒ 비상계획위원회, NSC 등의 평가결과 전체적으로 훌륭하게 수행되었다고 강평함

□ 향후 추진내용

- 금번 위기대응 연습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관계기관 간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 강구
- 금년 하반기중 「금융전산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개정하여 반영

※ 용역현황, 투자현황, 금융전산사고현황은 금년도가 최초 훈련인 관계로 해당사항 없음

4. 2000~2006년 6월말 현재 연도별 외환 불법거래 적발 현황

□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 적발 및 조치내역

(단위 : 건)

구 분	적 발 실 적		계	행정처분	
	기 업	개 인		거래 정지	경고 등
'00년	23	9	32	10	22
'01년	82	41	123	77	46
'02년	185	193	378	190	188
'03년	124	91	215	133	82
'04년	98	97	195	182	13
'05년	120	213	333	306	27
'06.6월	35	87	122	97	25
계	667	731	1,398	995	403

5. '04-06.8월 현재 투자자문업 및 자산운용사 등록관련
- 신청회사 수, 승인회사 수, 반려회사 수 현황

□ 자산운용사

	'04년	'05년	'06.1월 ~ '06.8월
신청	9	2	4
승인	9	2	3
반려	-	-	1*

* (가칭)키움자산운용: 자산운용업 허가요건 미충족으로 회사가 철회

□ 투자자문사

	'04년			'05년			'06.1월 ~ '06.8월		
	전업	겸업	역외	전업	겸업	역외	전업	겸업	역외
신청	4	5	8	11	1	22	19	-	4
승인	4	5	8	11	1	22	19	-	4
반려	-	-	-	-	-	-	-	-	-

6. 2003 ~ 2006년 6월말 현재 펀드(자산운용업) 허가 현황

7. 2000 ~ 2006년 6월말 현재 펀드(자산운용업) 사고 현황

1. 2003 ~ 2006년 6월말 현재 자산운용업 허가 현황

	회사명	허가일
1	농협CA투자신탁운용	2003-03-28
2	KTB자산운용	2004-01-04
3	플러스자산운용	2004-01-04
4	알파에셋자산운용	2004-01-05
5	현대와이즈자산운용	2004-02-03
6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2004-03-29
7	피닉스자산운용	2004-03-30
8	칸서스자산운용	2004-09-10
9	피델리티자산운용	2004-12-10
10	기온SG자산운용	2004-12-27
11	한국인프라자산운용(주)	2005-05-13
12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처자산운용	2005-11-11
13	한국밸류자산운용	2006-04-14
14	다올부동산자산운용	2006-06-23

2. 2000 ~ 2006년 6월말 현재 자산운용업 사고 현황

- 해당사항 없음

8. 2000~2006년 6월말 현재 상장기업(코스닥포함)의 주가 등 주식불공정거래 조작 건수 등 연도별 현황

□ 2000년 ~ 2006년 6월말까지 금융감독원이 증권시장의 불공정
거래(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에 대해 조사하여 적발한
연도별 건수는 다음과 같음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월
혐의 유형 별	시세조종	61	152	131	102	103	106	39
	미공개정보이용	22	15	25	27	40	59	13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	53	87	27	-	1	-	2
	대량소유주식 변동보고	18	32	29	41	42	65	21
	단기매매차익취득	23	25	24	27	37	29	7
	기 타	45	58	18	1	3	-	3
	무혐의	52	42	36	16	21	18	13
계		274	411	290	214	247	277	98
조치 유형 별	검찰고발	13	19	46	56	60	73	45
	검찰통보	68	121	114	77	106	113	25
	수사의뢰	13	20	6	-	-		
	과징금	50	79	17	-	3	3	-
	단기매매차익반환	28	40	25	33	51	56	8
	문책 등	50	90	46	32	6	14	7
	무혐의	52	42	36	16	21	18	13

9. 자본잠식법인의 2006년중 CB, BW 발행현황

※ 자본잠식여부는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파악하였으며 2006.

4. 1. 이후 규정개정으로 CB, BW 발행실적이 별도로 신고되지 않고 있음

자본잠식법인의 CB, BW 발행현황

(2006. 1. 1. ~ 6. 30.)

연번	회사명	법인가분	종류	공모/사모	발행일	발행금액
1	넥서스투자	코스닥	CB	유로공모	2006. 1. 6.	\$7,000,000
2	태창	거래소	CB	유로공모	2006. 1. 17.	\$10,000,000
3	이노셀	코스닥	CB	유로공모	2006. 1. 17.	\$15,000,000
4	엘림에듀	코스닥	CB	유로공모	2006. 2. 1.	\$2,500,000
5	엔터원	코스닥	CB	유로공모	2006. 2. 14.	\$5,000,000
6	세신	거래소	CB	유로공모	2006. 2. 28.	\$20,000,000
7	쓰리소프트	코스닥	CB	유로공모	2006. 3. 7.	\$6,000,000
8	한텔	코스닥	CB	유로공모	2006. 3. 22.	\$7,000,000
9	아이메카	코스닥	CB	유로공모	2006. 3. 30.	\$4,000,000
10	휘튼*	코스닥	BW	유로공모	2006. 1. 6.	\$4,000,000
11	에이트픽스	코스닥	BW	유로공모	2006. 1. 18.	\$6,000,000
12	가드랜드	코스닥	BW	유로공모	2006. 1. 20.	¥400.000.000
13	케이디엔스마텍	코스닥	BW	유로공모	2006. 1. 23.	¥400.000.000
14	디지털큐브	코스닥	BW	유로공모	2006. 1. 25.	¥700.000.000
15	케이디씨정보통신	코스닥	BW	유로공모	2006. 2. 7.	\$4,000,000
16	코스프	코스닥	BW	유로공모	2006. 2. 17.	¥600.000.000
17	지세븐소프트**	코스닥	BW	유로공모	2006. 3. 16.	\$370.000.000
18	가드텍	코스닥	BW	유로공모	2006. 3. 21.	\$3,000,000
19	유젠텍	코스닥	CB	국내공모	2006. 3. 3.	3,400,000,000원

* 감사의견거절로 2006. 4. 25. 상장폐지

** 2006. 7. 24. 마틴미디어(주)로 상호변경

- | |
|---|
| 10. 중소기업과 개인의 금융대출상황과 관련
- '06년 7월말 현재 중소기업 및 개인(신용담보 포함)
대출 총액
11. '03년~'06년 6월말 현재 연도별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
현황 |
|---|

"붙임 참조"

(붙임1)

06년 7월말 현재 중소기업 및 개인(신용담보 포함) 대출 총액

(단위 : 억원)

구분	은행 ¹⁾	저축은행	보험	
			생보사	손보사
중소기업대출	2,812,743	288,889	67,865	15,693
가계대출 ²⁾	3,203,216	77,206	379,413	65,759

1)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기준

2) 저축은행 및 보험은 개인대출

(붙임2)

03 - '06년 6월말 현재 연도별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 현황

1. 은행

(단위 : 억원)

구분	2003년12월	2004년12월	2005년12월	2006년06월
중소기업대출	2,376,753	2,436,574	2,564,892	2,790,702
가계대출	2,476,594	2,719,883	3,004,661	3,178,817

1)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기준

2. 저축은행

(단위 : 억원)

구분	2003년06월	2004년06월	2005년06월	2006년06월
중소기업대출	126,302	167,737	213,829	284,825
개인대출	79,455	86,218	89,872	76,255

3. 보험

(단위 : 억원)

구분		2003년03월	2004년03월	2005년03월	2006년03월
생보사	중소기업대출	52,099	56,821	55,343	65,948
	개인대출	330,860	349,803	361,886	375,862
손보사	중소기업대출	9,768	10,109	11,903	14,862
	개인대출	38,214	49,345	57,979	63,178

* 2003~2005년 연도별 자료는 각 권역별 결산월(은행:12월, 저축은행:6월, 보험:3월) 기준임

12. 금융상 불법 탈법거래와 관련해 연도별 사건별 조사내용
및 건수/조치결과

“붙임 참조”

(붙임)

금융회사 검사결과 주요 지적현황(문책사항)

('02.1~'06.7, 검사착수일 기준, 조치완료분)

금융구분	지적사항 유형	검사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7	계
은행	수신	6	3	1	1		11
	여신	25	20	6	4		55
	환	11	3	6	2		22
	보험영업			11			11
	신탁등의 설정, 수탁 및 해지	2					2
	신탁재산의 투자·운용	3	1				4
	국제영업, 해외자금조달 및 투자운용 등	2					2
	재무	2	3	2	3	1	11
	경영관리	1	4	3	1		9
	내부통제	7	14	1	4	4	30
	전 산	1		1			2
	금융실명제	17	21	13	5		56
	기타 대행 및 부수업무 등	7	2	5	3		17
	계	84	71	49	23	5	232
비은행	수신	7	7	9	7		30
	여신	100	79	116	80	4	379
	유가증권 인수·주선	1					1
	신탁등의 설정, 수탁 및 해지	2	1		3	1	7
	국제영업, 해외자금조달 및 투자운용 등	1					1
	재무	49	13	7	10	4	83
	경영관리	30	15	22	24	3	94
	내부통제	23	6	12	7		48
	전 산			1			1
	신용정보	2		4	2		8
	금융실명제	13	16	9	9	1	48
	기타 대행 및 부수업무 등	5					5
	기타	5		1			6
	계	238	137	181	142	13	711
보험	여신	3	5	3	2		13
	보험영업	49	36	15	15	10	125
	보험계약관리 및 제지급	2	1	2			5
	재보험	1	1				2
	국제영업, 해외자금조달 및 투자운용 등		2				2
	재무	1	8	7	1		17
	경영관리	3	7		3		13
	내부통제	5	1	3	1	1	11
	신용정보	1	1	1	1		4
	기타 대행 및 부수업무 등		2				2
	계	65	64	31	23	11	194
증권	여신		1				1
	위탁매매	203	82	79	45	2	411
	유가증권 인수·주선	4	8	2		1	15
	신탁등의 설정, 수탁 및 해지	1		2	3		6
	신탁재산의 투자·운용	28	37	27	17		109
	증권투자회사의 설립·운용	3	2	2			7
	재무	13	3				16
	경영관리	9	6	9	6		30
	내부통제	17	3	9	14	1	44
	금융실명제	23	11	9	9		52
	기타 대행 및 부수업무 등	1	3				4
	기타		1				1
	계	302	157	139	94	4	696

13. 외국펀드 또는 금융사가 국내금융사를 인수할 때의 관련법규

☐ 세부 내역

“붙임 참조”

<붙임>

【은행법】

제1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전문개정 2002.4.27]① 동일인은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지방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② 동일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지방금융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된 때
2.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이 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된 때
3.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주식보유비율이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③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예의 기여 가능성, 당해 금융기관 주주의 보유지분분포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각호에서 정한 한도외에 별도의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한도)
2.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3.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3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 자산규모·재무상태의 적정성, 당

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규모,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증권투자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당해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증권투자회사법 제28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은행법시행령】

제4조 (자료제출요구 등) ① 금융기관은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관련 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8.21>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주주가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알고 있거나 얻을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한다.

③ 금융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할 때에는 관련주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일인의 당해 금융기관 주식보유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확정된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주주에 대하여 직접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의2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① 법 제15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동일인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당해 동일인이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그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용의 변동상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8.21]

제4조의3 (주식보유승인의 처리기간)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불승인 사유를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이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2.8.21]

제5조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규정한 요건에 적합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8.21]

제6조 삭제 <2002.8.21>

제7조 삭제 <2002.8.21>

제8조 (주식보유 승인의 방법 및 절차<개정 2002.8.21>)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자격요건, 금융기관의 소유지분분포 등에 비추어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식취득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2.8.21>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8.21>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인이 금융기관의 주식보유와 관련하여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거주자(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거주자를 말한다)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5.12, 2002.8.21>

④ 금융기관 주식의 보유에 대한 승인신청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2.8.21>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제5조관련)

구 분	요 건
1. 한도초과본유주 주가 금융감독기 구의설치등에관한 법률 제38조의 규 정에 의하여 금융 감독 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 (증권투자회사법 에 의한 증권투자 회사를 제외한다) 인 경우	<p>가. 당해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당해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p> <p>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가 아닐 것</p> <p>다. 승인신청하는 내용이 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p> <p>라. 승인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p> <p>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최근 5년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 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법, 이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는 사실이 없을 것</p>
2. 한도초과보유주 주가 증권투자회 사법에 의한 증권 투자회사인 경우	<p>가.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에 속하는 자산운용회사(증권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말한다)에 자산운용을 위탁하지 아니할 것</p> <p>나. 제1호나목 내지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3. 한도초과보유주가 제1호 및 제2호외의 내국법인인 경우</p>	<p>가.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본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집단(법 제2조제1항제9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비금융회사에 한한다)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주식취득 자금이 당해 법인이 최근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또는 보유자산의 처분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 등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본총액 이내의 자금일 것</p> <p>라. 제1호나목 내지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4. 한도초과보유주가 내국인으로서는 개인인 경우</p>	<p>가. 주식취득 자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아닐 것</p> <p>나. 제1호나목 내지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5. 한도초과보유주가 외국인인 경우</p>	<p>가. 외국에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외국금융회사"라 한다)이거나 당해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일 것</p> <p>나.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는 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한다.</p> <p>다. 당해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이 있을 것</p> <p>라.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는 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한다.</p> <p>마. 제1호나목 내지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6.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p>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1호 내지 제4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것</p> <p>나. 외국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경우(외국인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등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p>
---	--

비 고

1.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2. 자본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가분(자본총액을 증가시키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3. 기업집단에 속하는 비금융회사 전체의 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기업집단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결합재무제표에 의하여 산정한 부채비율을 말한다.

□ 외국 금융사 등이 증권회사를 인수할 경우

【증권거래법】

제32조 (허가의 요건) ①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1]

제32조의3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 증권회사의 주식취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3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명령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7조의2 (허가의 세부요건) ① ~ ③ (생략)

④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서 "당해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⑤ ~ ⑥ (생략)

제18조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법 제3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최대주주(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17조의2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주식의 취득결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3. 주요주주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는 지배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 제3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요건을 말한다.

④법 제3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지배주주 승인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증권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현황

3.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증권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계획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서류를 말한다)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4.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증권회사의 등기부등본
5.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반기재무제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6.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7.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8.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 ⑥ 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의 보완에 드는 기간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⑦ 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승인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⑧ 그 밖에 법 제3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지배주주의 요건(제18조 제3항 관련)

구 분	요 건
1. 지배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p>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그 금융기관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최근 5년간 법, 금융관련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p> <p>(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4)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p>
2. 지배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p>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그 법인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 2이하일 것</p> <p>라. 제1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3. 지배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p>가.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p> <p>나. 제1호 다목 및 제2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4. 지배주주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	<p>가. 승인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p> <p>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자격 이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p> <p>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 또는 국내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라. 제1호 다목(3)의 요건을 충족할 것</p>

- 비고 : 1. 지배주주의 요건을 주요주주에게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주요주주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제1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를 말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 및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50이상인 유한책임사원을 말하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에게는 제1호 다목 또는 제4호 다목의 지배주주의 요건만 적용한다.
3.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외국기업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승인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외국 금융사 등이 선물회사를 인수할 경우

【선물거래법】

제38조 (허가의 요건) ①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물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1]

제38조의2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 선물회사의 주식취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3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명령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9]

【선물거래법시행령】

제10조 (선물업허가의 세부요건) ① ~ ② (생략)

③법 제3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27, 2006.1.27>

1. 당해 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다만,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나.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3.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등 당해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④ ~ ⑤ (생략)

[전문개정 2000.7.10]

제10조의3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최대주주(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주식의 취득결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3. 주요주주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는 지배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요건을 말한다.

④법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배주주 승인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선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현황

3.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선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계획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서류를 말한다)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4.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선물회사의 등기부등본

5.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반기재무제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6.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7.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8.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⑥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의 보완에 드는 기간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승인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법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7]

지배주주의 요건(제10조의3 제3항 관련)

구 분	요 건
1. 지배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p>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최근 5년간 법, 금융관련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p> <p>(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p> <p>(4)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p>
2. 지배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p>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그 법인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 2이하일 것</p> <p>라. 제1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3. 지배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p>가. 법 제39조의3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p> <p>나. 제1호 다목 및 제2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4. 지배주주가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	<p>가. 승인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선물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p> <p>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p> <p>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비고 : 1. 지배주주의 요건을 주요주주에게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주요주주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제10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를 말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 및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50이상인 유한책임사원을 말하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에게는 제1호 다목 또는 제4호 다목의 지배주주의 요건만 적용한다.

3.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외국기업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승인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보험회사의 주식취득으로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업법 제6조 제4항에서 보험업 허가시의 주요출자자
요건과 동일한 요건 적용

○ 붙임 : 참고 법령

참 고 법 령

<보험업법>

제6조(허가의 요건 등)

①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외국보험회사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출자능력 및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④보험회사의 주식취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자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회사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 제76조제3항 및 제130조제2호에서 같다)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이 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영업의 인가허가 등이 취소된 회사 또는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회사 또는 법인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등 행정처분(이하 “적기시정조치등”이라 한다)을 받은 금융기관(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135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재임 또는 재직중이었더라면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보험업법시행령>

제10조(허가의 세부요건 등)

③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2. 삭제 <2005.3.31>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가.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으로 합의한 자(이하 “공동보유자”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본인

나. 임원의 임면 등 그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4.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또는 공동보유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출자자는 별표 2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라 함은 제10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제10조제3항제4호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이 당해 보험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1 이상인 자에 한한다. 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05.3.31>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법 제6조제1항제4호 및 별표 2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별표 2]

주요출자자의 요건(제10조 제4항관련)

4. 주요출자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	<p>가. 허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직접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p> <p>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당해 기업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만, 당해 기업이</p>
----------------------------------	--

	<p>그 성격상 신용평가 또는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동 기준을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p> <p>라. 당해 기업(당해 기업이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이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마. 제1호 라목·마목(3)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바.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제외한다)</p>
--	--

비 고

1. 자기자본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허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가분(자기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기업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허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제4호 가목 내지 마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14. 자산운용사 최근 3년간 수익성 분석 현황
- 15. 최근 5년간 자산운용사 인·허가 현황
- 16. 최근 5년간 자산운용사 폐업 현황
- 17. 자산운용사 허가기준, 폐업기준 및 그 법적 근거

1. 최근 3년간 수익성 분석*

회계연도	세전이익	당기순이익	ROA**
2003	1,322	901	5.78%
2004	677	246	1.53%
2005	3,342	2,453	14.34%

* 감사보고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함

** ROA = 당기순이익/자산평균

□ 2004 회계연도는 CJ자산운용의 영업권 일시상각(215억원)의 발생으로 이익이 감소하였고,

- 2005 회계연도에는 적립식펀드의 인기에 따라 운용보수율이 높은 주식형펀드가 급격히 증가(10.5조원→34.8조원)함에 따라 이익이 큰폭으로 상승하였음

2. 최근 5년간 자산운용사 인·허가 현황

	회사명	투자신탁운용업 허가일	비고
1	홍국투자신탁운용(주)	2000-02-11	
2	동양투자신탁운용	2000-06-26	
3	대한투자신탁운용	2000-06-27	
4	한국투자신탁운용	2000-06-28	
5	맥쿼리아이엠엠자산운용	2000-06-29	
6	아이투자신탁운용	2000-07-24	
7	미래에셋투자신탁운용	2000-07-24	
8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	2001-01-19	
9	슈로더투자신탁운용	2001-07-19	
10	PCA투자신탁운용	2001-08-10	굿모닝투신 지분인수
11	도이치투자신탁운용	2002-06-14	
12	농협CA투자신탁운용	2003-03-28	
13	KTB자산운용	2004-01-04	
14	플러스자산운용	2004-01-04	
15	알파에셋자산운용	2004-01-05	
16	현대와이즈자산운용	2004-02-03	
17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2004-03-29	
18	피닉스자산운용	2004-03-30	
19	칸서스자산운용	2004-09-10	
20	피델리티자산운용	2004-12-10	
21	기온SG자산운용	2004-12-24	
22	한국인프라자산운용(주)	2005-05-13	
23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처자산운용	2005-11-11	
24	한국밸류자산운용	2006-04-14	
25	다올부동산자산운용	2006-06-23	
26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	2006-07-21	

* 회사가 제출한 영업보고서상의 날짜임

3. 최근 5년간 자산운용사 폐업현황

- 2001년 : 리젠트 폐업(1건)

4. 자산운용사 허가기준, 폐업기준, 법적 근거

< 허가기준 >

(1) 회사 자격 요건(법§5①제1호, 시행령§11)

-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시행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고, 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함

(2) 전문인력 요건(법§5①제2호, 시행령§17)

- 운용전문인력은 법§8 ①항의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
 -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거나 소정의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
- 시행령§17①에 해당하는 투자자문전문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할 것
- 자산운용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물적 요건(법§5①제2호, 감독규정별지제7호)

- 업무를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설비를 구축하고 판매회사 등 다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산설비와 독립하여 운영, 사무실 등 업무공간 확보

(4)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법§5①제3호)

(5) 주요출자자 요건(법§5①제5호, 시행령§132④, 감독규정별지§8)

- 주요출자자가 법시행령 별표1 제1호마목과 감독규정 별지 제 8호에서 규정하는 주요출자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주요출자자의 세부 요건(감독규정 별지 8호)

1. 자산운용업 허가시 주요출자자 요건(제5조제2항 관련)

가. 주요출자자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시행령 별표1 제1호 관련)

-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당해법인의 수정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허가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의하여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
- (2)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 (가)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 (나)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당해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1호 나목(2)의 기준을 충족할 것
- (3) 당해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계열회사이거나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선정한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의 소속기업인 경우에는 당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허가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의하여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 (4) 주요출자자의 출자자금은 허가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자산매각 또는 내부유보 등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차입(회사채·기업어음 발행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을 포함)으로 조성한 자금이 아닐 것
- (5) 주요출자자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가) 최근 5년간 법, 금융관련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최근 5년간 「금산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금감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건전한 신용질서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 (나)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해당금융기관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에 대하여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최근 5년간 파산절차,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주요출자자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시행령 별표1 제2호 관련)

- (1) 제1호 가목(1)·(4) 및 (5)의 요건을 충족할 것
- (2)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이하일 것
- (3) 당해 법인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채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이하일 것
- (4) 건전한 신용질서 및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 (나) 제1호가목(6) (나) 및 (다)에서 정하는 사실

다. 주요출자자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시행령 별표1 제3호 관련)

- (1) 법 제8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2)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의하여 출자자금이 차입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일 것
 - (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적법한 납세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 (나)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 (다) 기타 (가) 및 (나)에 준하는 소득재원
- (3) 제1호 가목(5)의 요건을 충족할 것
- (4) 건전한 신용질서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 (나)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문란 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개정 2005. 10. 7>
- (다) 최근 5년이내에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직무정지의 요구(임원의 경우에 한함) 또는 정직의 요구(직원의 경우에 한함)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다만, 주요주주의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해임권고(임원의 경우에 한함) 또는 면직의 요구(직원의 경우에 한함)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 (라) 제1호가목(6) (나) 및 (다)에서 정하는 사실

(마)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절차,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이 된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요출자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 다만, 당해 외국기업이 지주회사로 다음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허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다음의 요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시행령 별표1 제4호 관련)

- (1) 허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을 것(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제1호 가목(1)의 요건을 충족할 것
- (3)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 (4)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감독업무를 집행하는 정부 또는 비정부조직의 자율규제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기관경고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기능·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등이 포함되며 행정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민사제재금 징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5) 제1호가목(5)(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마. 제1호 가목(5)·(6) 및 나목(4)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가목(5)·(6) 및 나목(4)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1) 주요출자자가 합병회사로서 합병전 피합병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 가목(5)·(6) 및 나목(4)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피합병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합병회사의 경영권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2) 주요출자자가 경영권을 인수한 회사로서 인수전 피인수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 가목(5)·(6) 및 나목(4)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할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피인수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인수이후 피인수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3) 기타 (1) 및 (2)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분변동 등으로 실질적으로 주요출자자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요출자자가 지분변동등 이전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 가목(5)·(6) 및 나목(4)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바. 주요출자자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시행령 제13조제3항제1호 나목 관련)

- (1) 최대주주인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 그 대표자
 - (가) 제1호가목(5)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나) 제1호가목(6)(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다) 제1호가목(4)(마)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2) 최대주주인 법인이 금융기관 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 (가) 제1호가목(5)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나) 제1호가목(6)(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다) 제1호가목(4)(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라) 제1호가목(4)(마)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3) 최대주주인 법인이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
 - (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재임(직)중 최근 3년간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해임권고(임원의 경우
우에 한함) 또는 면직의 요구(직원의 경우에 한함)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나) 제1호가목(5)(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금산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동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로 전환되어 자산운용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회사에 대하여 제1호가목(1) 내지 (6)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2. 16>

2.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운용업 겸영 허가시 주요출자자 요건(시행령 제13조제4항단서 관련)

-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회사 및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자산운용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이하 “자산운용업 겸영허가”라 한다)에는 주주구성, 경영지배구조 및 금융산업의 업무영역의 합리적 개편방향 등을 감안하여 제1호 가목(5)(나)와 관련된 요건(이하 “주요출자자의 경제적 책임요건”이라 한다)만을 적용할 수 있다.
-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업 겸영허가가 정부의 권고·요구·명령에 의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출자자의 경제적 책임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3.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영업양수도 및 전환인가시 주요출자자 요건(제7조, 제8조 관련)

- 가.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영업양수도, 전환인가시 주요출자자 요건에 관하여는 주요출자자의 경제적 책임요건을 준용한다.
-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운용회사 합병 등의 인가가 정부의 권고·요구·명령에 의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출자자의 경제적 책임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 허가취소 및 폐업 기준 >

☐ 허가취소 기준[간투법 제167조]

1. 해산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신탁·증권 그 밖의 자산운용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경우
4.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허가조건에 위반한 경우
6. 허가후 6월이 경과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7.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8. 자산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9.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간접투자자산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하여 공익을 해치거나 간접투자자의 보호에 위배되었다고 인정한 경우

☐ 폐업기준[간투법 제18조]

- 회사는 폐업의 경우 금감위 인가를 득해야 하며,
- 금감위는 이 경우 폐지가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지 여부, 간접투자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없는지 여부, 간투법 등 관련 법령에 하자가 없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함

유 선 호 의 원

1. 생명보험회사 상장추진관련

- 1) 06.7월 상장방안 공청회시 상장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에 대비한 감독당국의 대책 추진현황 및 관련자료 일체
- 2) 생보사 상장관련 규정 및 지침

1) 06.7월 상장방안 공청회시 상장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에 대비한 감독당국의 대책 추진현황 및 관련자료 일체

- ☐ 지난 2월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각계 중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상장자문위원회는 현행법 체제, 국제기준, 외국사례 및 국제적 모형분석에 의거 생보사 성격 및 계약자배당의 적정성 등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기본입장을 마련

※ 상장자문위원회는 계약자배당의 적정성과 관련, 국제적 모형분석 결과에 대하여 세계적인 계리법인에 검증을 의뢰한 상태

-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학계, 시민단체, 업계 등 각계에서 제시한 다양한 주장의 타당성을 정밀 검토중

- ☐ 상장자문위원회는 공청회(안)을 토대로 외국계리법인의 검증결과 및 각계의견 등을 감안, 생보사 상장(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 증권선물거래소가 이를 토대로 거래소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승인을 요청하면, 정부는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2) 생보사 상장관련 규정 및 지침

※ (첨부3)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 (첨부4) 90년 자산재평가처리지침(재무부 고시)

생명보험회사 상장

2006. 7. 13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 목 차 >

I. 생보사 상장 개요

II. 국내 생보사의 성격

1. 논의 배경
2. 법적 형태
3. 실질적 운영 방식
4. 종합의견

III. 계약자배당과 관련된 쟁점사항

1. 내부유보액의 처리
2. 계약자배당의 적정성
3. 자산의 재평가 및 배분 여부

I. 생보사 상장 개요

1. 논의경과

- 생보사들이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80년대 중반부터 생보사 상장에 관해 수차례의 논의가 있었으나, 생보사 성격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인해 상장 유보
 - 교보('89)와 삼성('90)은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으나, '90년말 증시침체 등 여건악화로 상장 추진 보류
 - 삼성자동차 처리('99) 및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기한 도래('03)에 따라 생보사의 상장문제가 재논의되었으나,
 - 생보사 성격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하여 상장방안 결정 유보
- '06.1월, 정부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거래소 산하에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현행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을 근거로 생보사 상장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35조):**

거래소는 법인의 주권상장이 공익과 투자자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2) 이익배분 등에 관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

- '06.2월에 구성된 상장자문위원회*는 현행 법체계, 과거의 논의 내용,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론적·실증적 분석 및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상장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제시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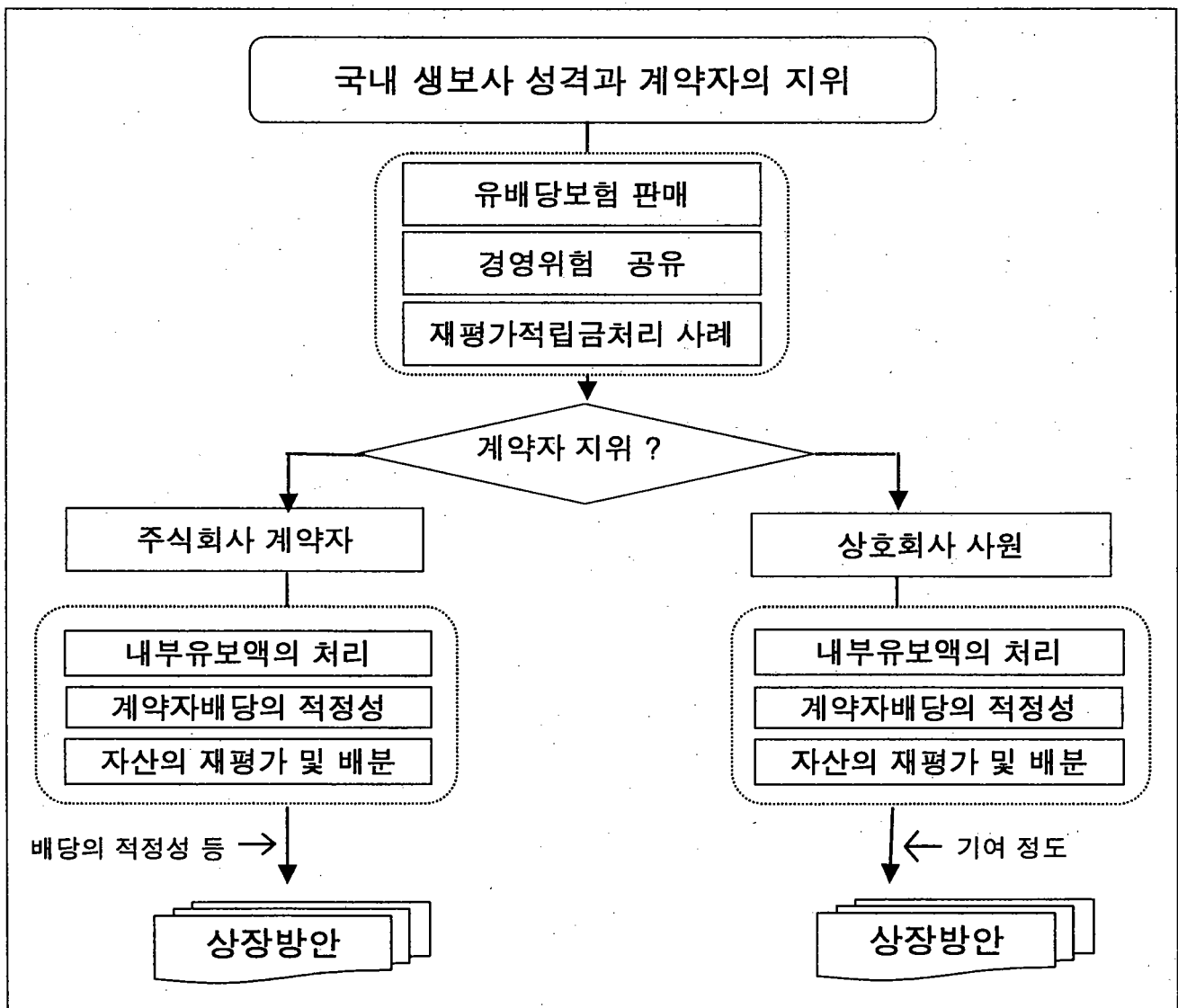
※ 법률, 보험, 재무, 회계·계리, 유가증권상장 분야 전문가로 구성

2.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검토 방향

□ 상장자문위원회는 과거 상장추진 과정에서 제시된 논의들을 토대로 국내 생보사의 성격과 그에 따른 계약자 지위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검토

- 내부유보액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자산의 재평가 및 배분에 관한 사항

< 그림 1 > 생보사 상장관련 검토 방향



II. 국내 생보사의 성격

1. 논의 배경

- 국내 생보사는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지만 상호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므로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어, 국내 생보사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과거의 보험관련 법규 및 감독정책, 국내 생보사의 운영방식, 외국의 사례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검토

2. 법적 형태

- 국내 생보사는 법인의 설립 형태면에서 살펴보면, 상법 및 보험업법에 의하여 주주의 납입자본금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 국내 생보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주금을 납입한 주주로 구성된 주주총회이며, 업무집행기관 또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와 대표이사
 - 반면, 보험업법상 상호회사는 보험계약자로 구성된 사원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업무집행기관 또한 사원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와 대표이사
- 계약자의 권리·의무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내 생보사의 계약자는 상호회사의 사원과 같은 의결권이 없고, 주주로서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등 상호회사의 사원과는 차이가 존재
 - 또한, 국내 생보사의 계약자는 청산시 여타 채권에 비해 보험금 등의 선취권이 인정되고, 주주는 법률에 의한 주식의 무상소각·파산으로 인한 투자원금 손실 위험을 지게 됨

- 반면, 보험업법상 상호회사 사원은 의결권을 가지며 일반채권자보다 후순위의 잔여재산 청구권을 가짐

□ 따라서, 국내 생보사는 법인의 설립 및 출자관계, 의사결정기구,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고려할 때, 상법 및 보험업법상 주식회사가 아님을 인정하기 어려움

< 표 1 > 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간 차이점 비교

구 분		주 식 회 사	상 호 회 사
법인의 성격		상법에 의거 설립된 영리법인	보험업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
설립시의 출자관계		회사구성원인 주주가 출자한 자본(자기자본)	기금각출자에 의해 각출된 기금(추후 동일한 금액의 적립을 조건으로 기금상각 가능)
구성원		주주	사원(= 보험계약자)
최고 의사결정기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업무집행기관		이사회	이사회
회계감사기관		감사	감사
계약자 권리	의결권	없음	사원당 1표(정관으로 별도 규정 가능)
	청산시 잔여재산 청구권 순위	일반채무보다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 순위가 선행순위	일반채무보다 사원의 보험금 청구권 순위가 후순위
계약자 의무	채권자에 대한 의무	없음	납입한 보험료를 한도로 책임
	회사 지급불능시	여타 채권에 비해 보험금 등의 선취권은 보유하나, 회사재산이 보험금지급 등에 부족시 일부 삭감 발생 가능	원칙적으로 보험금 등의 삭감 가능

3. 실질적 운영 방식

가. 유배당보험 위주의 판매

- ☐ '92.8월 이전까지 유배당보험의 판매만이 허용
 - '92.8월부터 보장성보험 및 양로보험에 한하여 무배당보험이 허용되었으며, '00.4월 이후 모든 상품으로 확대
- ☐ 과거에 주식회사인 생보사가 유배당보험 위주로 판매한 것은 당시의 환경과 제도에 기인
 - 국내 생명보험산업은 초기에 보험료를 산출에 필요한 통계가 부족하고 금리변동성이 높은 등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유배당보험 판매만을 허용
- ☐ 유배당보험은 이익을 계약자에게 환원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배당검증비용(Verification Cost)*이 발생

※ 이익의 원천과 규모 등을 검증하는 비용

- 이에 따라 계약자와 주주간 이익배분문제가 발생하는 주식회사 보다는 상호회사에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
- 그러나 경쟁심화, 위험의 불확실성 증가 등 보험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험사의 설립형태와 관계없이 생보사의 경영정책에 의하여 유·무배당보험을 자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 국내의 보험시장 환경 및 외국의 생보사 설립형태별 판매 상품을 감안할 때, 유배당보험의 판매는 생보사의 설립형태와는 무관

< 표 2 > 외국생보사(주식/상호회사)의 판매상품 현황

(단위 : %)

구 분		회 사	설립연도	판매상품 비중	
				유배당	무배당
미국	주식회사	Nationalwide Life Ins. Co.	1929	44	56
		State Farm Life Ins. Co.	1929	100	0
		Canada Life Ins. Co.(N.Y)	1971	93	7
		Hartford Life Ins. Co.	1902	73	27
		Lincoln Life Ins. Co.	1905	1	99
	상호회사	Metlife	1868	89	11
일본	주식회사	협영생명	1945	100	0
영국	주식회사	Prudential Ass.	1848	85	15
대만	주식회사	國泰人壽	1962	100	0

주) 판매상품 비중은 '96~'97 신계약 기준

나. 계약자가 주주지위로서의 경영위험 부담 여부

(1) 자본금 및 자기자본

□ '90년이전 기존 생보사의 자본금*은 자산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

※ 자본금의 상당부분은 자산재평가를 통해 충당

○ 또한 대부분의 보험사가 특정기간에 자기자본이 잠식된 상태

< 표 3 > 기존 생보사 자기자본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A사	1.8	1.5	1.0	△3.9	△11.2	△12.4	△13.6	△14.6	△15.3	△15.8
B사	0.4	0.1	0.3	0.3	0.2	0.2	5.0	5.0	10.0	63.2
C사	1.5	2.0	5.0	5.0	5.0	5.0	5.0	5.0	△27.9	△28.3
D사	5.0	5.0	5.2	5.0	5.0	5.0	5.0	3.8	4.4	7.1
구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A사	△16	△40	△332	△667	△1,184	△1,170	△566	△225	△116	△17
B사	84	0.1	91	146	191	225	245	631	935	2,906
C사	△27	△20	△71	△128	△142	△142	△33	15	17	11
D사	49	△7	77	53	66	110	321	1,052	3,460	2,687

□ 그러나 계약자는 생보사의 파산과 관련하여 사전적으로 채권자로서의 위험만을 부담하고, 사후적으로도 경영위험을 부담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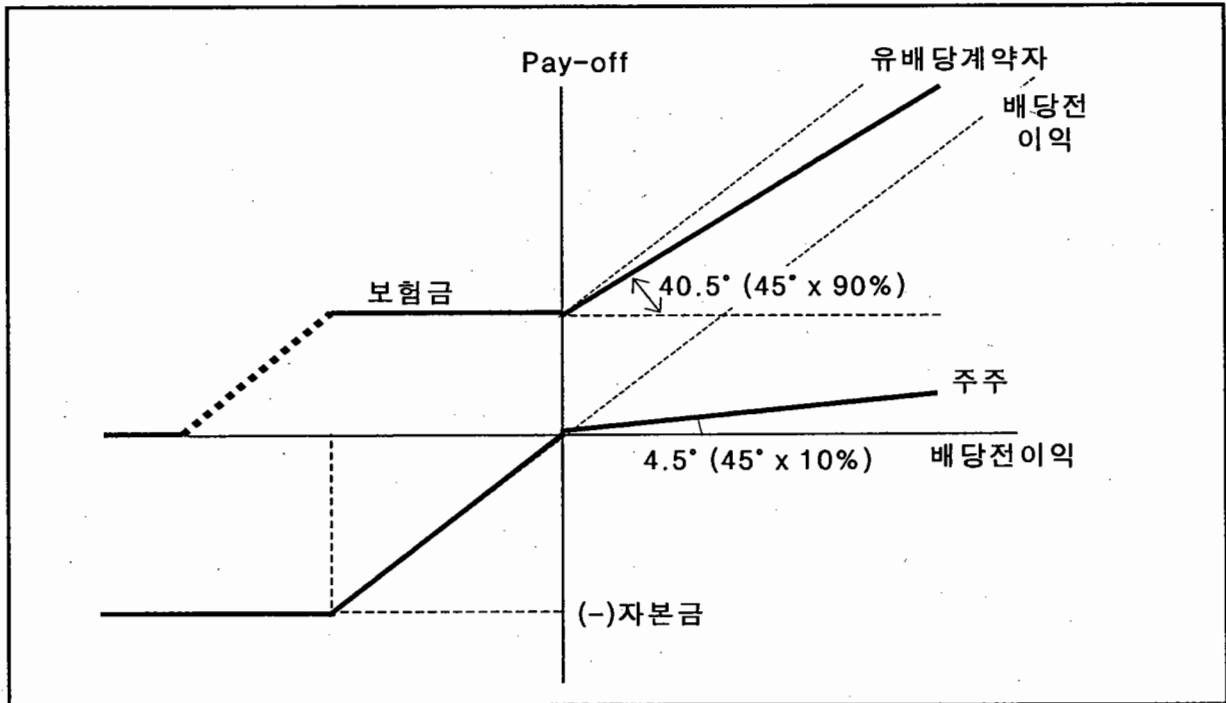
① 사전적으로 계약자는 채권자로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보험금을 보장받을 권리를 보유

○ 생보사의 파산시 계약자가 보험금액의 삭감 등 위험을 부담할 경우에도, 이는 채권자로서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주주로서의 위험부담*과는 상이

※ 주주는 자기자본의 범위내에서 위험을 부담

- 아울러, 계약자보호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로서의 위험 부담도 상당부분 경감

< 그림 2 > 주주와 계약자의 이론적 Pay-off Structure



- ② 사후적 관점에서 외환위기 당시 생보사 파산사태를 보더라도 계약자는 보험금 삭감이나 보험료 증액 등의 채권자로서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음^{*}

※ 태평양 등 5개 생보사 계약자의 경우 계약이전방식으로 보호됨

- 반면 주주는 경영권을 상실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었으며, 파산시 주식을 무상소각 당하는 등 자기자본 범위내에서 위험을 부담^{*}

※ 제일생명 : 조양상선그룹이 인수('73, 2억→5억으로 증자)

흥국생명 : 태광그룹이 인수('73, 2억→5억으로 증자)

(舊)고려생명 : 자산과 부채를 동해생명으로 포괄이전후 청산('73)

□ 한편, '90년 이전에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생보사를 운영할 경우, 자발적 증자의 유인이 약함

○ 재무부장관은 사업규모 및 자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생보사에게 증자 명령을 할 수 있었음에도 증자명령을 하지 않음

□ 타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자본잠식이 상당기간 지속*되었음에도 주식회사의 속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는 없음

※ A손해보험사는 '82~'95년, B은행 '83~'84년, C리스사 '89~'03년 자본잠식 상태

□ 상기 사항을 감안할 때, 생보사의 자기자본 잠식 사례를 이유로 계약자가 주주로서의 경영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님

○ 다만, 일부 보험사는 장기간 자본잠식이 지속됨으로써 투자수익이 감소하여 계약자배당이 부족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2) 배당재원을 이용한 결손보전

- ☐ 계약자배당은 보험상품의 장기성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계약자배당은 장래손익 전망 등을 기초로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특정기간에 이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미래에 손실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자배당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유배당보험에서 누적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향후에 발생하는 유배당보험 이익으로 보전하는 것이 일반적
- ☐ 외국의 경우에도 유배당보험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배당보험 이익을 미할당잉여금 형태로 유보하는 것이 일반적
 - 유배당보험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미할당잉여금을 사용

< 참조 1 > : 감독회계상 주식회사의 유배당보험 손익처리(캐나다, 미국)

- 대차대조표의 자본계정을 '계약자지분 계정(policyholder's equity 또는 participating surplus fund)'과 '주주지분 계정(stockholder's equity 또는 stockholder's fund)'으로 양분하고,
- '계약자지분 계정'내에 누적손실(이익)을 계상하여 추후에 발생하는 이익으로(손실을) 보전
- '주주지분 계정'에는 유배당보험 이익 중 주주지분(예:10%)이 계상되며, 계약자지분 계정에 누적결손이 있더라도 이익이 발생한 년도에는 주주지분을 확보

- ☐ 따라서 유배당보험의 이익으로 결손을 보전한 점을 경영위험 공유로 보기 어려움
 - 다만, 국내 생보사가 과거 손익과 비교하여 계약자배당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3) 계약자보호제도의 불비

- ☐ 이론적으로 볼 때, 계약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 파산시 금융소비자(채권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장치*

※ 계약자보호제도가 있을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권자의 위험부담 감소

- 생보사에 있어서도 계약자보호제도의 존재 여부에 따라 계약자의 지위가 변경(계약자 → 주주)되는 것은 아님

- ☐ 외환위기 당시 생보사의 파산시에도 계약자는 보험금 삭감 또는 보험료 증액 등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음

- 반면, 부실 생보사 주주는 주식을 무상 소각당하는 경영위험을 부담

- ☐ 우리나라 보험산업에서는 타금융권에 앞서 계약자보호제도*가 도입

※ '62년 공탁금제도('77년 폐지, 다만 재경부장관의 예탁명령권 및 예탁재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유지), '88년 계약자보호예탁금제도, '89년에는 보험보증기금제도 및 보호예탁금제도가 도입

※ 은행권은 '96년부터, 상호신용금고 등 단기금융회사는 '83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 ☐ 계약자보호제도는 소비자보호제도로서 계약자의 경영위험 부담 논란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다. 재평가적립금 처리

- 교보('89)와 삼성('90)은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
- 당시 재무부는 재평가적립금에 대한 계약자와 주주간 합리적인 이익배분을 위해 「생보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90.8월)」(이하 '재평가처리지침'이라 함)을 제정
 - 보험업법(§97 ③)에서는 재평가적립금에 대하여 계약자 배당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 재평가적립금에 대한 주주와 계약자간 구체적 배분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

< 표 4 > 재평가적립금의 배분기준(재평가처리지침, '90.8)

K율	주 주	계약자	내부유보
100%	0~30%	40% 이상	잔여분
50~100% 미만	0~20%	50% 이상	"
50% 미만	0~10%	60% 이상	"

- 당시 재무부는 '주식회사 형태인 생보사의 주인은 주주이며, 계약자는 회사에 대하여 시설이용, 보험금청구 등 채권자의 위치에 있다'※는 입장

※ 생보사 기업공개에 관한 시각(90.3월, 재무부) : “재평가적립금 및 당기 이익의 계약자·주주간 배분기준” 마련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견해들을 수렴하여 발표된 자료

□ '90년 당시 부동산 재평가적립금중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분한 것은 부동산 재평가지 장부가액(book value)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 계약자에게 재평가적립금을 배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이 처분될 경우, 계약자 몫이 줄어들기 때문
- 즉, 재평가적립금의 주주·계약자 배분도 통상의 경상이익 배분과 동일하게 이루어 짐

< 표 5 > 재평가적립금 배분여부에 따른 계약자 몫 비교(예시)

	매입가	재평가 후			처분시			계약자 몫의 합 (A+B)
		장부가	평가액	계약자몫 (A)	처분가	처분익	계약자몫 (B)	
배분시	100	150	50	35	200	50	35	70
미배분시	100	150	50	0	200	50	35	35

주) 계약자 몫의 투자손익 비율을 70%로 가정

< 참조 2 > 재평가적립금 배분이유(생보사 기업공개에 관한 시각, 재무부, '90.3)

- 재평가차익도 경상이익과 같이 자본금의 투자수익, 계약자의 기여 및 주주·경영자의 경영노력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 그 배분도 주주와 계약자 그리고 회사의 경영안정성을 위한 사내 유보방법으로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함

□ 따라서 “재평가처리지침”에서 재평가적립금중 계약자 몫을 인정한 것은 일종의 경상이익에 대한 계약자 배분으로서, 생보사의 주식 회사적 성격을 부인한 사례로 보기 어려움

4. 종합의견

□ 국내 생보사 성격에 대하여 형식적·실질적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부인하기 어려움

- 주식회사 계약자와 상호회사 사원은 권리와 의무에 차이가 있음
- 유배당보험의 판매는 생보사의 설립형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 유배당보험 이익으로 유배당보험 결손을 보전하는 것은 유배당보험 운영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
- 생보사의 자본잠식 및 계약자보호제도의 불비가 계약자와 주주의 지위를 변경시키는 것은 아님
- 재평가처리지침 제정 과정에서 계약자 몫을 인정한 것은 계약자 배당제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평가적립금도 경상이익 배분기준에 준하여 배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다만, 과거 생보사의 자본잠식, 배당재원을 이용한 결손보전 등으로 인하여 배당이 부족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 과거 계약자배당이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자배당과 관련된 여타 요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Ⅲ. 계약자배당과 관련된 쟁점사항

1. 내부유보액의 처리

가. 논의 배경

- ☐ 생보사 상장과 관련, '90년 재평가처리지침에 따라 적립된 내부유보액의 성격 및 처리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음
- ☐ 따라서,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평가처리지침의 구체적 내용 및 당시의 정부 입장 등을 검토하여 그 성격과 역할에 부합하는 처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나. 내부유보액 현황

- ☐ 교보와 삼성이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처리지침”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중 일부(삼성 878억, 교보 662억)를 내부에 유보
- ☐ 재평가처리지침에서는 내부유보액의 처리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참조 3 > 내부유보액의 처리방법(재평가처리지침, '90.8)

- ① 내부유보액은 자본계정에 계리(지침§14①)
- ② 내부유보액은 유가증권 분석 등의 경우에 회사의 자기자본에서 제외(지침§14①)
- ③ 대차대조표 주식사항으로 장래의 계약자배당에 사용될 재원임을 명시(지침§14①)
- ④ 사전에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계약자배당 실시 가능(지침§14②)
- ⑤ 결손보전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결손보전에 사용된 금액은 향후 발생하는 주주지분이익으로 우선 보충해야 함(지침§14③)

< 표 6 > 교보와 삼성의 재평가적립금 처리 내역

구분	교보('89)		삼성('90)	
	금액(억원)	비율(%)	금액(억원)	비율(%)
재평가차액	2,265	-	3,017	-
재평가세 등	(68)	-	(91)	-
재평가적립금	2,197	100.0	2,927	100.0
주주지분 배분	656	29.9	876	29.9
계약자지분 배분	879	40.0	1,173	40.0
공익사업출연	300	40×34.2	391	40×33.3
재평가특별배당	289	40×32.9	391	40×33.3
배당안정화준비금	289	40×32.9	391	40×33.3
내부유보	662	30.1	878	30.0

다. 내부유보액의 성격

- 재평가처리지침상 내부유보액은 재평가적립금중 계약자·주주 배당후 잔여분으로서 “회사의 준비금”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 궁극적으로 계약자배당에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회사에 유보된 “계약자 몫”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 내부유보액은 궁극적으로 계약자배당에 사용될 재원으로 결손 보전에 사용되더라도 추후 주주가 다시 보충토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부채적 성격을 부인하기 곤란
 - 특히, 결손보전후 주주가 다시 보충토록 한 것은 주주에게 한시적으로 credit-line 기능만을 제한적으로 부여한 것에 불과

□ 전술한 바와 같이 '유배당보험에서 발생한 손실은 유배당보험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유배당보험의 특성임을 감안할 때,

○ 계약자 몫인 내부유보액이 결손보전에 사용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본적 성격을 인정하기는 곤란

□ 아울러 내부유보액이 자본잉여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으나, 재평가 처리지침상 통상적인 자본과 달리 대차대조표의 주석으로 자기자본에서 배제하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 내부유보액은 계약자 몫의 "자본"이라기 보다는 미국·캐나다 감독회계에서 나타나는 계약자 몫의 "미할당잉여금[※]"과 유사

※ 미국·캐나다의 경우, 계약자 몫의 미할당잉여금(계약자에 대한 미래 배당재원으로 사용 : 부채)을 감독회계에서 자본계정으로 처리

< 참조 4 > 내부유보 이유 (생보사 기업공개에 관한 시각, 재무부, '90.3)

- 90년 부동산재평가차익은 미실현이익이므로 계약자 배당형태로 전액 사외유출할 경우, 회사의 계속성, 재무건전성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계약자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보험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회사전체의 재무적 안전성(일정금액의 내부유보)을 우선 고려한 후 주주 또는 계약자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 ☐ 한편, 내부유보액은 지급여력금액 산정시 자기자본에 합산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지급여력금액에는 자기자본 이외에 “확정되지 않은 부채^{*}”도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

※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상 계약자에 대한 부채인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계약자지분조정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등은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지급여력금액에 가산(보험업감독규정 §7-1)

※ 미국의 경우, 특정계약자에 할당되지 않는 미할당잉여금은 청산시 잔여재산 청구 우선순위에서 주주의 청구권과 동일한 순위에 해당되며 지급여력 금액에 가산(뉴욕주 보험법 §7435(a))

- ☐ 상기사항을 감안할 때 내부유보액은 계약자에 대한 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며,

- 관련기관의 해석을 구하여 현행 자본계정에서 부채계정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2. 계약자배당의 적정성

가. 논의 배경

-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증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배당재원으로 결손을 보전하는 등 과소배당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존재
 -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은 보험상품의 장기성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쳐 검토할 필요
- ☐ 따라서, 과거 생보사의 손익발생 추이 및 계약자배당 내역, 외국의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당의 적정성을 판단하고자 함

나. 계약자배당 현황

- ☐ 계약자배당이 자유화되는 '90년대초 이전까지 회사의 이익규모와 관계없이 정부의 배당지침에 따라 배당을 실시
 - 계약자배당 자유화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이익이 부족한 생보사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타생보사와 동일수준의 배당 실시
- ☐ 이에 따라 배당지침 수준을 초과하는 이익을 시현한 생보사도 초과 이익금에 대하여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지 않음
 - ※ 배당전이익이 발생하였으나, B사는 '77년~'78년 및 '80년~'81년, C사는 '78년~'81년 동안 확정배당 이외의 계약자배당을 실시하지 않음(□)
 - 반면, 일부 생보사는 배당전손실이 발생하거나, 결손이 누적된 경우에도 계약자배당을 실시
 - ※ B사는 '82년~'83년에, C사는 '82년에, A사 및 D사는 '85년까지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익규모를 초과하여 확정배당 등 계약자배당을 실시(▣)

< 표 7 > '77 ~ '83년 손익 및 계약자배당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77	'78	'79	'80	'81	'82	'83
A사	확정배당전손익	△1	△6	5	35	47	△76	△244
	계약자배당	0	1	6	35	47	16	20(7)
	확정배당후손익	△1	△7	△1	△0	0	△92	△264
B사	확정배당전손익	2	1	6	103	156	△78	△17
	계약자배당	0	0	6	50	135	6	27
	확정배당후손익	2	1	0	53	21	△84	△44
C사	확정배당전손익	0	7	40	142	223	△7	143
	계약자배당	0	6	34	135	203	46	39(16)
	확정배당후손익	0	1	6	7	20	△53	104
D사	확정배당전손익	△1	0	1	6	14	2	△37
	계약자배당	0	0	1	6	14	27	10
	확정배당후손익	△1	△0	△0	△0	0	△25	△47

주) 계약자배당은 확정배당과 사차배당의 합이고, 괄호 내는 사차배당

□ '90년 주주·계약자간 이익배분기준이 마련되면서 누적결손이 발생할 경우 주주지분으로 결손을 우선 보전한 후, 잔여결손에 대하여 계약자지분으로 보전

- 기존 생보사의 경우에는 부실규모가 큰 일부회사를 제외하고는 계약자지분을 결손보전에 사용하지 않음
- '80년대말 신설된 생보사의 경우에는 설립 후 상당기간 동안 적자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배당전이익을 결손보전에 사용

< 표 8 > 계약자지분을 이용한 결손보전 등의 현황(이익배분기준 마련후)

(단위: 억원)

구 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총계
기 존 생 보 사	A사	결손보전																0
	A사	추가배당		49					603	344								996
	B사	결손보전	32	110	73									2,100	872			3,187
	B사	추가배당			44	24	32	30	93	137		131	658					1,149
	C사	결손보전																0
	C사	추가배당		54	63	51	37	6	25	44		32			2	3		317
신 설 생 보 사	D사	결손보전												292	118	55	66	531
	D사	추가배당	1	7	7	11	11	17	14	27	34	12	30					189
	E사	결손보전										414						414
	E사	추가배당			2	12	2	31	34	26	49	78	62	41	10	18	25	390
	F사	결손보전													111	130	97	338
	F사	추가배당		3	6	9	5	6	9	7	22	48	27	63				205

주) 결손보전 : 계약자지분의 결손보전액, 추가배당 : 결손시 배당액 + 이익배분기준 초과배당액

□ 외국에서는 유배당보험의 결손을 미할당잉여금에 계상토록 한 후
향후 발생하는 유배당보험의 이익으로 결손을 보전*

※ 우리나라는 '90년 이후 누적결손을 주주가 우선 보전하도록 되어 있어 누적
결손을 전액 계약자가 보전하는 외국에 비해 계약자에게 유리

< 참조 5 >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익배분방식 비교

① 미국 뉴욕주(감독회계기준)

- 유배당보험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90%는 계약자 몫 10%는 주주 몫
- 유배당보험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전액 계약자가 부담

< 예시 >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배당전손익	1,000	△1,000	△1,000	1,000	1,000
계약자 몫	900	△1,000	△1,000	900	900
주주 몫	100	-	-	100	100
계약자잉여금 ^(주)	900	△100	△1,100	△200	700
주주잉여금	100	100	100	200	300
비 고	9:1 배분	당기손실 계약자부담	당기손실 계약자부담	9:1 배분	9:1 배분

주) 손실을 차기로 이월하며, 장래손익전망 등을 고려하여 계약자배당률을 자율적으로 결정

② 우리나라('90년 이후)

- 유배당보험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 누적결손이 없는 경우 : 계약자 몫을 계약자배당재원으로 활용
 - 누적결손이 있는 경우 : 주주 몫으로 누적결손을 우선 보전하고도 잔여 결
손이 있는 경우 계약자 몫으로 잔여누적결손을 보전

< 예시 >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배당전손익	1,000	△1,000	△1,000	1,000	1,000
계약자 몫	900	-	-	900	900
주주 몫	100	△1,000	△1,000	100	100
계약자잉여금 ^(주)	900	900	900	900	1,000
주주잉여금	100	△900	△1,900	△900	-
비 고	9:1 배분	당기손실 주주부담	당기손실 주주 부담	주주부담(100)후 계약자부담(900)	주주부담(100)후 계약자부담(800)

주) 계약자잉여금은 누적결손 보전에 사용할 수 없고, 5년 이내 계약자배당으로 사용

□ '90년 이전에는 초기 보험시장 형성과정과 외형성장 위주의 영업 정책으로 인하여 초과사업비가 발생

- 특히, '80년대에는 '82년 금리인하조치에 따른 보험료 인상요인을 흡수하기 위해 정부가 예정사업비율을 인하함으로써 사업비차 손실이 확대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생보사의 사업비율은 일본에 비해 '80년 이전 까지 높았으나, 예정사업비 인하 이후에는 낮은 수준으로 하락

< 표 9 > 한국과 일본의 사업비율 추이 비교

(단위 : %)

구 분	'70	'75	'80	'85	'90	'95	'00
한 국	32.0	31.2	24.0	13.8	11.7	18.2	14.9
일 본	25.9	27.8	23.8	17.9	15.4	13.8	14.1

주) 사업비율 = 실제사업비 ÷ 수입보험료

자료) 한국은 보험통계연감, 일본은 생명보험사업개황으로부터 작성

□ 보험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사업비율이 정상화되면서, '90년 이후에는 사업비차이익이 발생

- 다만, 신설사는 설립 후 10년 이내에서 대부분 초과사업비가 발생

□ 한편, 투자수익률*과 관련하여서는 계열사 지원 등으로 인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생보사도 있는 반면, 계열사의 주가 상승으로 계약자의 이익을 증진시킨 경우도 존재

※ 생보사의 대출수익률은 전반적으로 은행의 대출수익률 보다 1~2%p 높은 수준

□ 따라서, 상기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 유배당보험 손익과 계약자배당액을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의 계약자배당율을 산출할 경우, 대부분의 생보사가 90% 수준을 상회하는 배당을 실시
- 그러나 이와 같은 단순한 분석은 과거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적인 정합성을 갖고 있는 재무·계리적 분석방법을 이용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

< 표 10 > 계약자배당률의 추정(회사설립~'05.12)

(단위 : %)

구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배당율	89%	100% ↑	88%	114%	100% ↑	100% ↑	100% ↑

주1) 계약자배당률 = 계약자배당액 현재가치 ÷ 유배당보험 손익의 현재가치

2) 100% ↑는 유배당보험 손익의 현재가치가 (-)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배당을 실시한 것을 의미

다. 배당의 적정성 검토

◇ 과거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금흐름분석을 이용한 자산할당 (Asset Share)방법과 옵션모형을 이용한 유·무배당보험상품 비교를 통하여 배당의 적정성을 검토

(1) 자산할당(Asset Share)방법을 이용한 배당의 적정성 검토

□ 분석대상

- 기존 생보사와 신설 생보사로 구분하여 7개 회사를 선별

□ 자산할당(Asset Share, 이하 'AS'라 함) 방법

- AS란, 과거의 순현금흐름과 투자이익을 합산하여 누적한 금액
- AS는 분석대상회사의 회사 설립당시부터 '05.12까지 이원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
 - 투자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흐름은 유배당보험 현금흐름, 무배당보험 현금흐름 및 자본 현금흐름으로 직접 귀속이 가능하므로 각각에 직접 귀속
 - 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하므로, 투자이익은 유배당/무배당/자본 계정별 AS에 회사 전체 투자이익률을 곱하여 산출
 - 자본이 완전잠식된 경우에는 자본계정의 투자이익이 (-)로 계산되고, 그 해당액만큼 유배당보험 계정의 투자이익이 증가

< 참조 6 > 자산할당(Asset Share)

- 자산할당(Asset Share)방법은 일정한 전제하에 각 보험계약으로 할당한 자산액을 이용하여 생보사의 자산형성에 기여한 공헌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 자산할당(AS)이란, 전체 보험계약을 보험수리상 동질적인 보험계약집단으로 구분하고, 운용이율, 사망률, 사업비, 효력상실해약률 등의 실적을 바탕으로 각 집단의 누적현금흐름을 산출한 것
- 즉, 각 보험계약(유배당보험, 무배당보험)의 AS는 과거의 순현금흐름과 이에 대한 총자산이익률 기준의 투자이익을 합산하여 누적한 금액으로 산출

예) 유배당보험 AS = $\sum(\text{수입보험료} + \text{투자이익} - \text{지급보험금} - \text{해약환급금} - \text{사업비} - \text{계약자배당금} - \text{주주귀속잉여})$
- Net Asset Share(혹은 Surplus)를 「Asset Share - 책임준비금」으로 정의하여, 각 계정의 공헌도를 측정가능

□ 계약자배당의 적정성 판단기준

- 보험사의 경영이 보험료 설정당시의 가정대로 이루어진다면 AS와 책임준비금 수준은 유사
 - 그러나 실현손익에 대해 배당수준이 과도하거나 과소할 경우 AS와 책임준비금간에는 차이가 발생
- ※ 사업비나 투자수익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보험사가 조정할 있는 요소는 계약자배당이라고 가정
- 즉, 「AS - 책임준비금」으로 정의된 Net AS가 음(-)이면 배당금이 경영실적과 비교하여 과다(혹은 적정) 지급된 것이며, Net AS가 양(+)이면 배당금이 과소 지급된 것으로 해석

< 참조 7 > 계약자배당 적정성 판단기준

과다(또는 적정) 배당	과소 배당
Asset Share < 책임준비금	Asset Share > 책임준비금

□ 분석결과 1 : 원가AS*와 현행 책임준비금

※ 원가 AS는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이 포함되지 않은 AS

< 시나리오 1 > : 주주가 결손을 매년 보전하지 않는 경우

- 계약자의 자산형성 기여도인 AS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주주가 결손을 보전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합리적
- 분석결과, 분석대상 모든 생보사에서 Net AS가 음(-)으로 나타나므로 평가손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과거 배당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표 11 > 주주의 결손보전이 없다는 가정하의 Net AS

구 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Net Asset Share	(-)	(-)	(-)	(-)	(-)	(-)	(-)

< 시나리오 2 : 시나리오 1 + 초과사업비를 주주가 부담 >

- 초과사업비 사용으로 인한 배당재원의 감소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초과사업비를 주주가 부담한다고 가정
- 분석결과, D사를 제외한 분석대상 모든 생보사에서 Net AS가 음(-)으로 나타나므로 평가손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업비 과다집행으로 인하여 계약자배당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표 12 > 초과사업비 주주 부담 가정하의 Net AS

구 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Net Asset Share	(-)	(-)	(-)	(+)	(-)	(-)	(-)

< 시나리오 3 : 시나리오 1 + 계약자의 이익배분비율을 90%로 소급하여 적용 >

- 과거의 계약자 이익배분비율(70% 또는 85%)이 현재에 비해 낮았던 점을 고려하여, 회사설립 당시부터 현행수준(90%)의 이익배분이 이루어졌다고 가정
- 분석결과, 분석대상 모든 생보사에서 Net AS가 음(-)으로 나타나므로 평가손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현행수준의 이익배분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과거 배당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표 13 > 현행 이익배분기준 가정하의 Net AS

구 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Net Asset Share	(-)	(-)	(-)	(-)	(-)	(-)	(-)

< 참조 8 > 주주가 유배당결손을 부담하는 경우의 AS 분석

- Net AS가 음(-)인 A사·C사·F사의 경우 과거 배당이 적정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 Net AS가 양(+)인 B사·D사·E사·G사의 경우 논리적으로 과거 배당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주주의 결손보전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한 후 배당의 적정성을 평가할 필요

< 주주에 의한 결손보전시 Net Asset Share >

구 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Net Asset Share	(-)	(+)	(-)	(+)	(+)	(-)	(+)

- 즉, B사·D사·E사·G사의 경우,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 1과 비교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임
 - 주주가 결손을 보전하게 되면 결손보전액만큼 유배당 AS가 커지게 되므로, 주주의 결손보전이 큰 경우 계약자배당을 적정하게 하였더라도 AS가 커져서 Net AS가 양(+)이 되는 현상이 발생

□ 분석결과 2 : 시가AS와 GPV※

※ GPV(Gross Premium Valuation, 영업보험료식 책임준비금) : 향후 금리, 위험률 및 사업비 등 현재시점의 최선의 기초율에 의거하여 평가시점에서 재산출한 책임준비금을 의미하며, 시가준비금으로 해석될 수 있음.

- AS를 계산할 때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을 포함(시가 AS)할 경우, 부채도 시가로 평가(GPV)하여 비교하는 것이 일관성의 원칙에 부합
- '시가AS - GPV'를 Net AS로 정의하며, Net AS로 미래를 포함한 전체 분석기간 동안의 배당의 적정성을 평가
 - Net AS가 음(-)이면 향후 배당재원이 충분치 않다는 의미
- 분석결과, 분석대상 모든 생보사에서 Net AS가 음(-)으로 나타남
 - 이는 기존 유배당보험에서 향후 결손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미래 배당의 적정성 측면에서 보면 미래배당재원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의미

< 표 14 > 유배당보험의 배당재원 충분성 검토(할인률 5% 가정)

구 분	A	B	C	D	E	F	G
Net Asset Share	(-)	(-)	(-)	(-)	(-)	(-)	(-)

(2) 옵션모형을 이용한 적정성 검토

□ 분석대상

- 예정이율만 차이가 있고 급부가 동일한 유배당보험과 무배당 보험을 비교 분석

□ 분석방법

- '유·무배당보험간 예정이자율 차이'와 계약자배당 청구권의 콜옵션가치를 비교하여 이자율차배당의 적정성을 분석

※ 유배당보험(7.5%)과 무배당보험(8.5%)의 보장이율 차이(1%p)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계약자배당 청구권 구입을 위해 계약자가 추가로 지불한 보험료에 해당

- 과거의 이자율차배당 실적을 바탕으로 사후적 옵션가치를 산출하여 사전적 옵션가치와 비교함으로써 이자율차배당의 적정성을 분석

□ 적정성 판단기준

- 유배당 상품의 추가적인 보험료라고 볼 수 있는 γ 는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간 예정이율의 차이로 일종의 콜옵션(call option)의 성격을 갖는 배당가치에 따라 결정됨*

※ 유배당보험 보험료 = 무배당보험 보험료 + 계약자배당 예상치(=콜옵션가치)

< 표 15 >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의 현금흐름

	유배당	무배당	차이
보험료	X_D	X_N	γ
보험금	C_t	C_t	0
약정 투자수익	$\sum r_D$	$\sum r_N$	$\sum (r_D - r_N)$
배당금	$r < r_D$ 일 때, $p \cdot \text{Max}[\sum_{t=1}^T (y_t - r_D), 0]$ $r > r_D$ 일 때, $p \cdot \text{Max}[\sum_{t=1}^T (y_t - r), 0]$	0	→ 유배당의 배당금과 동일

주) r : 정기예금 금리, r_D : 배당보험 예정이율, r_N : 무배당보험 예정이율,
 p : 계약자 이익배분율, y_t : 실제 수익률

- 따라서, 계약자가 지불한 추가보험료(γ)와 유배당보험에 내재된 콜옵션의 가치를 비교함으로써 이자율차배당의 적정성을 판단 가능

< 표 16 > 이자율차배당의 적정성 판단 기준

추가보험료 > 사전적 콜옵션가치	추가보험료 = 사전적 콜옵션가치	추가보험료 < 사전적 콜옵션가치
유배당계약자가 추가로 지불한 보험료보다 사전적 콜옵션의 가 치가 크기 때문에 당시 상황 에서 계약자가 비싼 보험료를 지불	적정한 가격	유배당계약자가 추가로 지불한 보험료가 내재된 콜옵션의 가치 보다 작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서 계약자는 저렴한 보험료를 지불
추가보험료 > 사후적 콜옵션가치	추가보험료 = 사후적 콜옵션가치	추가보험료 < 사후적 콜옵션가치
유배당계약자가 추가로 지불한 보험료가 사후적 콜옵션의 가치 보다 크기 때문에 계약자는 추 가적인 이익배분 요구의 정당성 확보(이자배당 부족)	적정한 이차배당	유배당계약자가 추가로 지불한 보험료가 사후적 콜옵션의 가치 보다 작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 익배분요구가 합리화되지 못함 (이자배당 충분)

□ 분석결과

- ① 사전적으로 유배당보험에 내재되어 있는 옵션가치가 예정이자율
차이의 가치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유배당보험의 사전적 옵션가치는 예정이자율 차이에 비해 75%
정도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② 사후적으로 볼 때, 계약자가 납입한 추가보험료에 비해 더 많은
배당이 지급되었던 것으로 나타남
 - 유배당보험의 사후적 옵션가치는 예정이자율 차이의 가치에
비해 175%를 상회하는 높은 가치를 보임
 - 한편, 이러한 결과는 사전적 옵션가치가 보수적으로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③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무배당보험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쌌다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으나, 생보사간 무배당보험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무배당보험의 보험료가 과대평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표 17> 현재 판매되는 무배당보험의 가격비교

(단위 : %, 원)

구 분	A사	B사	C사	D사	E사
유배당보험비중	48.3	44.9	23.3	42.4	2.1
무배당보험 가격	219	224	219	208	218

주1) 유배당보험 비중 : 2006년 3월 현재 유배당보험의 책임준비금 비율

2) 현재 판매중인 무배당종신보험 (남자 40세, 20년납, 가입금액 10만원)

(3) 검토의견

- ☐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과거 계약자에게 과소 배당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확인할 수 없음

3. 자산의 재평가 및 배분

가. 논의배경

- 상장 전에 부동산 등 장기투자자산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한 후,
 - 과거 '90년 생보사 상장 논의과정에서와 같이 자산형성에 기여한 계약자 및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해 검토

나. 상장 전 기존자산의 재평가

- '98년 시가회계제도의 도입으로 대부분의 자산은 시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부동산 등 일부의 경우만 장부가로 평가
 - 시가 평가로 인해 발생한 미실현손익은 손익계산서* 또는 대차대조표*를 통해 계약자 몫과 주주 몫으로 구분하고 있음

※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파생상품평가이익 등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등

< 표 18 > 매도가능증권 등 평가손익('06.3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삼성	대한	교보	한국	금호	신한	미래
계약지지분조정	30,630	1,733	101	100	225	56	-
자본조정	29,783	1,523	110	108	262	147	△29
매도가능증권 등 평가손익	60,413	3,256	211	208	487	203	△29

- 장부가로 계상하고 있는 부동산을 주식가치 산정을 위해 시가로 평가하더라도, 그 금액을 재무제표에 계상하는 것은 불가*

※ 자산재평가법상 자산재평가제도가 폐지('00년)되어 동 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할 수 없음

□ 만약, 회계기준 또는 법령을 변경하여 생보사 상장시 시가로 평가된 금액을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 타산업과의 형평성 및 비교가능성이 저해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회계처리로 인해 국제적 정합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음

다. 부동산 등의 평가차익의 계약자 배분 가능성

□ 부동산 장부가액을 재평가금액으로 증액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없으므로 주식가치 산정을 위한 시가 평가로 인해 발생한 평가차익을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

□ 만약, 계약자 몫의 부동산평가차익 상당액을 주주 몫의 이익잉여금에서 배분할 경우,

- 향후 동 자산의 처분시 계약자에게 다시 배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 부동산의 미실현이익을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없어 지급여력금액에 가산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면 재무건전성 악화가 야기될 수 있음

□ 과거 '90년 생보사 상장 논의 과정에서 재평가처리지침을 제정하여 계약자에게 평가차익 중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분한 것은

- 자산 처분시 계약자배당 자원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에 배분한 것임

※ 자산 시가평가로 인한 장부가액 ↑ → 자산처분시 처분익 ↓ → 계약자배당 자원 ↓

< 표 19 > 자산 시가평가 여부에 따른 계약자 몫 비교(예시)

	매입가	시가 평가 후			처분시				계약자몫 의 합 (A+B)
		장부가	평가익	계약자몫 (A)	처분가	장부가	처분익	계약자몫 (B)	
원가평가	100	100	0	0	200	100	100	70	70
시가평가	100	150	50	35	200	150	50	35	70

주) 계약자 몫의 투자손익 비율을 70%로 가정

□ 결국, 부동산 등 미실현이익의 계약자 몫이 해당 자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이익에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지가 관건

- 부동산 등의 처분은 상당기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데다 최근 무배당보험 신규판매가 대부분인 상황이므로
- 현행 당기 준비금비율의 투자이익 배분기준에 의할 경우, 부동산 등의 투자이익 중 계약자 몫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 현재 구분계리 T/F에서 논의중에 있으며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향후 개선방안이 제시될 계획

보험 22330-347

1990. 8. 28

생보사 자금차입 승인

6개 생보사(대한, 제일, 삼성, 흥국, 교보, 동아)가 증권금융(주)로부터의 자금차입을 당부에 승인·요청하였기 보험사 재산운용준칙 제36조에 의거 별첨 공문 사본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알려 드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공문사본

귀사에서 신청한 증권금융(주)로부터의 자금차입을 보험사 재산운용준칙 제3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 다 음 —

1. 차입 한도액

구 분	대한	제일	삼성	흥국	교보	동아	계
한도액	311	166	848	164	646	115	2,250

2. 차입기간: 1990. 9. 1~1990. 12. 31.

3. 차입이율: 연 10%

생보 22330-353

1990. 8. 31

생명보험회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 시달(통보)

생명보험회사의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이 「생명보험회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을 제정·시달(통보)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생보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생명보험회사의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의 배분·활용(이하 "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생명보험회사의 회계규정 및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 및 배당에 관한 지침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K율"이라 함은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에서 추가로 더 적립한 금액"을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의 차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제2장 잉여금의 처리

제4조(계약자배당전 잉여금) 계약자배당전잉여금(전기손익수정 사항을 포함한다)이라 함은 매사업년도 말에 회사가 직전 사업년도말 K율 수준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확정배당등의 소요액을 우선 적립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

제5조(처리방법)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계약자배당전 잉여금중 주주지분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잔여부분을 계약자지분으로 처리한다.

1. K율이 100%이상인 회사, 30%이하
2. K율이 50%이상 100%미만인 회사, 20%이하
3. K율이 50%미만인 회사, 10%이하

제6조(주주지분의 처리) 주주지분은 법인세등의 납부재원, 결손보전 및 주주배당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주배당은 K율이 10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계약자지분의 처리) 계약자지분은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적립하거나, K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주주지분의 조정) 정기예금금리인하로 확정배당

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주주지분을 축소할 수 있다.

제9조(계약자배당전잉여금의 표시등) 회사는 매사업년도 결산기마다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내역을 결산승인신청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재평가 적립금의 처리

제10조(재평가적립금) 재평가적립금은 회사가 자산재평가법(조세감면규제법 제 56조의 2를 포함한다)에 자산재평가를 한 경우에 재평가차익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과 재평가세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말한다.

제11조(처리방법) 회사는 재평가적립금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처리후의 잔액은 유보한다.

1. K율이 100%이상인 회사는 주주지분을 30%이하로 하고 계약자지분을 40%이상 70%이하로 한다.
2. K율이 50%이상 100%미만인 회사는 주주지분을 20%이하로 하고 계약자 지분을 40%이상 80%이하로 한다.
3. K율이 50%미만인 회사는 주주지분을 10%이하로 하고 계약자지분을 40%이상 90%이하로 한다.

제12조(주주지분의 처리) 주주지분은 자본전입·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자지분의 처리) 계약자지분은 부채계정으로 처리하고 보험업법 제 97조 제3항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1. 계약자지분중 1/3이상을 공익사업출연기금으로 처리하고 매년 동금액에 최근 3개 사업년도의 평균 자산운용수익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익사업 재원으로 출연한다.
2. 계약자지분중 제1호의 금액을 제외한 잔여액의 1/2을 재평가일 1일전 현재 2년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당시의 보험료적립금에 비례하

여 계산한 금액을 계약의 만기 또는 환급금지급시에 당해 계약자에게 특별배당금으로 지급한다.

3. 계약자지분중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처리된 금액이 잔여분은 계약자배당 안정화준비금으로 처리하고 매사업년도의 계약자배당시 적전사업년도 수준의 계약자배당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자 배당재원으로 사용한다.

제14조(처리유보액의 처리등)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처리후의 잔액은 자본계정에 계리하여 결손보전 또는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유가증권분석등의 경우에 회사의 자기자본에서 제외하며 대차대조표의 주석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재평가적립금중 ×××원은 장래의 계약자배당에 사용될 재원으로서 회사의 자기자본에서 제외됨"

② 제1항의 금액을 계약자 배당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금액을 결손보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결손보전사용액은 주주지분이익으로 우선적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제15조(재평가적립금의 처리계획등) ① 회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 인가신청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처리방법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지분의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대상선정·출연재원의 관리등을 위하여 재무부장관이 따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3조 제1호에 의한 공익사업에의 출연과 동조 제2호에 의한 특별 배당금의 지급은 회사가 자본 전입을 시작한 사업년도부터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처리는 1989년 1월 1일 이후 자산재평가 실시분부터 적용한다.

보험 22330 - 369 1990. 9. 12

수해지역 보험가입자에 대한 지원

1. 보험업법 제15조 규정에 근거하여 금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다음 사항을 지시하니 수해지역 보험계약자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2. 각사에서는 동 지원책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 대상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피해일 현재 유효한 계약)로서 '90. 10. 10 까지 해당보험회사에

신청하여 승낙을 받은 자

나. 조치 내용

1) 보험금의 신속 지급

- 보험금 지급 청구에 필요한 사망·사고 관련 증명서류를 행정기관의 확인 또는 인우증명등으로 간소화 하고
- 추정 보험금의 50% 이상을 우선 지급(보험금 가지급) 하되, 직접 피해자를 방문하여 지급토록 함.

2) 보험대출 원리금의 상환유예

- 호우 피해일로 부터 '90. 12. 31 까지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연체이자 면제)
- 납입유예된 대출원리금 '91. 1. 1 부터 '91. 6. 30 까지 분할하여 납부토록 함.

3) 보험료 납입 유예

- '90. 9월부터 '90. 12월분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연체이자 면제)

4) 약관대출

- 약관대출 신청시는 24시간 이내에 지급토록 조치.

2. 가계대출 현황 및 대책관련

(1) 최근 3년간 은행권 가계대출 현황

(단위 : 조원)

	'04.06말	'04.12말	'05.06말	'05.12말	'06.06말	'06.07말
가계대출	264.4	275.4	289.8	304.8	322.5	325.0

(2) 가계대출 제도 및 관행개선 대책 추진현황

□ 감독당국은 지난 8.2일부터 은행권, 연구기관,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가계대출 제도 및 관행 개선 협의회'를 운영

○ 협의회 구성원(12명)

- 7개 은행 가계여신 담당 부행장(7명), 은행연합회 여신담당 상무,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 주요 검토 과제

- ① 변동금리대출 편중 원인 및 고정금리대출 취급시 위험 해지방안
- ② 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 및 금리변동주기 등 금리구조 개선방안
- ③ 차주에 대한 금리조건 설명·고지 의무 확대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방안
- ④ LTV한도 등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규제 합리화 방안 등

□ 협의회 추진 경과

○ 제1차 회의('06.8.2) 개최

- 협의회에서 검토할 주요 과제를 선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회의 운용을 위하여 각 참가기관별로 1~2개의 담당과제를 분담

○ 제2차 회의('06.9.6) 개최

- 선정과제 중 첫 번째 검토과제인 '변동금리대출의 과도한 편중현상 완화방안'에 대한 제1차 논의 실시

□ 향후 계획

- 앞으로 협의회는 금년 말까지 월 1~2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미 논의한 과제를 포함한 제반 검토과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
- 논의 결과, 최종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각 은행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각 은행이 즉시 시행하고,
- 법규 제·개정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

3. 금융분쟁조정 현황 (최근 3년간)

□ 금융분쟁조정 처리결과 현황

(단위 : 건, %)

구 분	'03		'04		'05		'06. 6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은행/비은행	3,376	100.0	5,177	100.0	4,120	100.0	1,203	100.0
요청수용	1,608	47.6	2,653	51.2	1,989	48.3	588	48.9
오해등 해명	1,653	49.0	2,230	43.1	1,760	42.7	528	43.9
기타	115	3.4	294	5.7	371	9.0	87	7.2
증권	882	100.0	646	100.0	462	100.0	200	100.0
요청수용	208	23.6	154	23.8	173	37.4	69	34.5
오해등 해명	518	58.7	384	59.4	223	48.3	105	52.5
기타	156	17.7	108	16.7	66	14.3	26	13.0
생명보험	5,002	100.0	5,771	100.0	7,399	100.0	4,010	100.0
요청수용	2,242	44.8	2,793	48.4	3,595	48.6	1,923	48.0
오해등 해명	2,515	50.3	2,748	47.6	3,565	48.2	1,882	46.9
기타	245	4.9	230	4.0	239	3.2	205	5.1
손해보험	5,097	100.0	5,998	100.0	6,648	100.0	3,323	100.0
요청수용	2,235	43.8	2,979	49.7	3,487	52.5	1,733	52.2
오해등 해명	2,445	48.0	2,673	44.6	2,748	41.3	1,432	43.1
기타	417	8.2	346	5.8	413	6.2	158	4.8
합계	14,357	100.0	17,592	100.0	18,629	100.0	8,736	100.0
요청수용	6,293	43.8	8,579	48.8	9,244	49.6	4,313	49.4
오해등 해명	7,131	49.7	8,035	45.7	8,296	44.6	3,947	45.2
기타	933	6.5	978	5.6	1,089	5.8	476	5.4

주) 기타는 신청인 임의철회, 해당금융기관앞 이첩, 익명·가명 등 관련 분쟁임.

4. 단위 실험의 최근 현황

(단위 : 개, 명, %)

구 분		'04년말	'05년말	'06년6월말
실험수	지 역	678	675	672
	직 장	206	200	194
	단 체	182	176	171
	계	1,066	1,051	1,037
구조 조정	파 산	10	6	4
	해 산	9	6	9
	합 병	1	3	1
	계	20	15	14
조 합 원 수		4,766,513	4,609,272	4,670,791
임직원수	임 원	10,435	10,259	10,183
	직 원	8,278	8,189	8,213
	계	18,713	18,448	18,396
총 자 산		221,863	239,610	247,658
(대 출 금)		122,717	135,463	140,414
(유가증권)		27,805	30,258	32,298
수 신		188,824	204,882	212,752
출 자 금		20,511	21,368	21,875
당기순이익		1,306	1,527	806
예 대 율		65.0	66.1	66.0
순자본비율		2.6	2.9	2.8
고정이하여신비율		6.0	5.4	5.4

5. 신탁중앙회 현황

□ 결손현황

- 신탁중앙회는 '05년말 현재 5,623억원의 누적결손금을 보유
- 중앙회의 누적결손금은 舊 연합회의 이월손실, 유가증권 운용손실 및 기타 부실대출, 사고 등에 주로 기인
 - '97년 이전 구 연합회 이월손실 : △1,076억원
 - 유가증권 등 자산운용 손실(결손금 기회비용 포함) : △1,599억원
 - IMF위기 이후 단위신탁 대출 부실화, 미수금 등 무수익성 자산 기회비용 등 : △2,948억원

6. 신탁중앙회 경영정상화 관련 경과

- 금감위는 그동안 두 차례('01.9.1 및 '04.3.26)에 걸친 경영개선명령 조치로 추가 손실발생을 최대한 억제
 - 상환준비금에 대한 금리인하 (6.5% → 2.5%)
 - 신용예탁금 지급이자율을 여타 유사 상호금융기관 평균 수신 금리 이하로 인하 등
 - 아울러 손실재발방지를 위해 '04년중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 감사위원회 및 준법감시인제도 등 내부통제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 * 신탁중앙회는 금감위의 경영개선명령 이행 등으로 3년('03년~'05년) 연속 당기순이익 실현

신탁중앙회의 경영개선명령 이행실적

항 목	세부 항목	'01.8. 명령	'04.3. 수정명령
상환준비금 금리인하	금리인하	연 2.5%	연 2.5%
	기간	2004년까지	2007년까지
신용예탁금 금리인하	대상	1년만기 신용예탁금	신용예탁금 전체
	지급이자율	3년만기 회사채의 85%이하	유사상호금융기관 준용 금리 결정
출자금증액	자본금에 상응하는 출자금 증액	245억 원	미이행분 증자 완료
부동산처분	-	보유부동산 매각	미처분 부동산 처분 완료

7. 경영정상화 추진대책

□ 단위조합의 경영여건 등을 감안할 때 신협 측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중앙회 경영정상화 추진의 실효성 확보 곤란한 측면

○ 신협시스템의 기조 안정화 및 신협 측의 추가 자구노력 유도를 위해 일부 재정 용자 지원 방안 등 검토중

□ 현재 관계부처(예산처, 재경부)와 신협측의 자구노력으로 해소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 제한적으로 재정용자특별회계에서 용자지원* 하는 방안을 협의중

* 무이자 또는 저리 용자, 10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지원액은 3년에 걸쳐 최대 3,000억원으로 하되 신협측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구노력 성과를 보아 탄력적·단계적으로 지원

<신협측의 자구계획 주요 내용>

□ 상환준비금 지급금리 추가 인하

○ 상환준비금 이자율을 추가 인하*(2.5% → 2.0%)하여 신용예탁금 회계의 결손 해소를 지원

* '01.8.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상환준비금 지급금리를 6.5%→2.5% 인하

□ 신용예탁금에 대해 실적배당제 도입·시행

- 신용예탁금에 대해 자산운용 성과에 따른 배당을 실시하여 결손금 확대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중앙회는 수수료 수입 확보

* 중앙회는 실적배당제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외부용역중

- 단위조합의 중앙회 회비납부액 인상 및 중앙회 인력·조직 재조정 등 경영혁신 추진 등

8. 서민금융기관 수표발행 추진에 대비한 인가 및 감독대책

- 현재 서민금융기관의 수표발행 허용 여부에 대하여 법무부 등 관계기관간 논의중에 있으며
-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수표발행이 허용될 경우 감독당국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수표발행 허용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 서민금융기관의 특성을 감안한 평가지표(건전성, 인적·물적요건)를 선정하는 등 수표발행 허용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 수표발행과 관련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중앙회와 개별 금융기관간 전산망을 이용한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는 등 철저한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할 예정

9. 최근 3년간 사금융피해 현황 및 대책

□ 사금융의 특성상 전체 피해 현황은 파악할 수 없음

- 다만,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사금융피해 상담센터」를 설치('01.4월)하여 상담 및 피해예방 홍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불법 혐의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음(상담 및 통보현황 : 붙임1, 붙임2 참조)
- 앞으로도 대국민 피해예방을 위한 상담 및 홍보업무를 지속 수행할 예정임

(붙임 1)

사금융피해상담현황

(단위 : 건)

기간	고금리	불법적 채권추심	대부광고 ¹⁾	대부중개	기타부당 ²⁾	대부업 등록등 문의	단순상담 ³⁾	계
'01년	949	187	-	31	350	214	1,534	3,265
'02년	889	489	-	114	405	505	1,220	3,622
'03년	1,126	760	-	51	240	151	856	3,184
'04년	872	551	-	9	410	7	1,049	2,898
'05년	479	374	62	73	484	421	1,334	3,227
'06.8월	294	253	28	59	422	209	1,327	2,592
총계	4,609	2,614	90	337	2,311	1,507	7,320	18,788

- 1) 대부광고 :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05.8월부터 새로 분류
 2) 기타부당 : 대출사기, 부채증명서 발급거부, 부당수수료 부과 등
 3) 단순상담 : 압류·경매, 제도권금융기관 조회, 신용조회 등

(붙임 2)

금융질서교란사범 수사기관 통보현황

(단위 : 개)

기간	대부업법 위반				유사 수신	카드깡	기타 ²⁾	계
	이자율 위반	불법적 추심	무등록 대부업	중개 수수료 ¹⁾				
'01년	141	303	-	-	141	21	116	722
'02년	43	125	-	-	135	1,749	98	2,150
'03년	106	32	12	-	133	2,194	136	2,613
'04년	241	28	13	-	181	1,322	79	1,864
'05년	73	5	70	-	166	693	123	1,130
'06.8월	15	5	92	32	104	97	72	417
총계	619	498	187	32	860	6,076	624	8,896

주1) 중개수수료 수취 :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05.9월부터 금지

주2) 기타 : 대출사기, 금융기관 유사상호 사용, 알선수재, 사문서위조 등 기타 법령위반

* 두 개 이상의 위반이 있는 경우 1개의 대표행위 위반으로 취급

10. 국내금융업의 동남아 진출관련 현황 및 감독당국의 대책

☐ 국내금융회사의 동남아 진출현황(2006.8월말 현재)

(단위 : 개)

구 분	은행	증권	생보	손보	계
베트남	8	-	1	4	13
싱가포르	5	1	-	1	7
인도네시아	3	-	-	3	6
태국	-	-	1	-	1
필리핀	1	1	-	-	2
계	17	2	2	8	29

- ☐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되 특정지역으로의 과잉진출에 따른 과당경쟁 방지 및 현지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기반 확대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임

11. 금감원의 업무추진 관련 검사·제재관련 규정·지침

☐ 붙임 참조

(붙임 2)

금융기관검사및제제에관한규정

제 정 2000.12.2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0-131호
개 정 2001. 2.28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10호
개 정 2001.11.13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91호
개 정 2002. 5.15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2- 28호
개 정 2003. 3. 6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3- 15호
개 정 2003. 9.13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3- 42호
개 정 2004. 3. 5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4- 10호
개 정 2004. 5. 7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4- 22호
개 정 2004.12.30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4- 60호
개 정 2005. 7.14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5- 31호
개 정 2005. 8.31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5- 44호
개 정 2005. 11.3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5- 51호
개 정 2005. 12.15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5- 59호
개 정 2005. 12.15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5- 59호
개 정 2006. 8.31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6- 5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감독기구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감독기구설치법 제37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검사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에 적용한다.

②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검사 및 그 검사 결과 등에 따른 제재조치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검사를 위탁한 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업관련법”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을 말한다.

가. 은행법

나. 한국산업은행법

다. 중소기업은행법

라. 한국수출입은행법

마. 신탁업법

바. 증권거래법

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 2004.3.5>

아. 선물거래법
 자. 사 제 <2004.3.5>
 차. 보험업법
 카.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타. 여신전문금융업법
 파. 상호저축은행법
 하. 신용협동조합법
 거. 농업협동조합법
 너. 수산업협동조합법
 더. 산림조합법
 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버.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어.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저. 담보부사채신탁법
 처. 산업발전법
 커. 외국환거래법
 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퍼. 금융지주회사법
 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신설 2004.5.7>
 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신설 2004.5.7>
 노. 선박투자회사법 <신설 2004.5.7>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설립·해산, 영업의 인·허가, 승인 또는 업무감독·검사 등과 관련하여 감독기구설치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관계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03.3.6>
3. "종합검사"라 함은 금융기관의 업무전반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4. "부문검사"라 함은 금융사고예방, 금융질서확립, 기타 금융감독정책상의 필요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부문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5. "현장검사"라 함은 검사원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05.11.3>
6. "서면검사"라 함은 검사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05.11.3>
7. "검사원"이라 함은 감독원장의 명령과 지시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조치요구사항"이라 함은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유의사항, 지적사항, 현지조치사항 등 감독원장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9. "경영유의사항"이라 함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 경영상 취약성이 있는 것으

- 로 나타나 경영진의 주의 또는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0. “지적사항”이라 함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내용 또는 업무처리방법의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을 말하며, 이는 문책·조치의뢰·주의·변상·개선사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4.3.5., 2005.8.31>
 11. “현지조치사항”이라 함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행위 또는 불합리한 사항중 그 정도가 경미하여 검사반장이 검사현장에서 시정, 개선 또는 주의조치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4.3.5>
 12. “정보사항”이라 함은 금융 및 감독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각종 정책참고자료, 금융기관 또는 기업의 동태 및 금융기관의 모범사례 등을 말한다.
 13. “건의사항”이라 함은 금융 및 감독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말한다.
 14. “경영실태평가”라 함은 금융기관의 재무상태, 자산의 건전성, 경영진의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방식에 의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5. “상시감시”라 함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임직원 면담, 조사출장, 영업실태 분석, 재무상태 관련 보고서 심사, 경영실태 계량평가, 기타 각종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 또는 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하여 현장 검사 실시와 연계하는 등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금융기관의 안전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감독수단을 말한다. <개정 2005.11.3>
 16. “금융관련법규”라 함은 감독기구설치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라 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 등에관한법률, 제1호에서 정하는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과 해당 법령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 등을 말한다. <개정 2005.11.3>
 17. “금융거래자”라 함은 예금자, 대출을 받은 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수익자 등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자를 말한다.
 18. “제재”라 함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등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 또는 감독원장이 이 규정에 의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19. “징계”라 함은 감독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취하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신분상의 제재조치를 말한다.

제4조(검사업무의 운영원칙) 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는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며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와 금융거래자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 규모와 리스크 관리수준 등에 대한 상시감시결과를 바탕으로 검사자원을 차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3>

③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경영실태에 대한 분석과 평가, 임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금융기관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

- ④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자체감사기능의 향상과 감사의 중복을 방지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검사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수검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

제5조(제재대상 위법·부당행위)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재의 대상으로 한다.

1.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2.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3.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 또는 영업을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영악화를 초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의 이익을 해한 경우
4. 금융사고 등으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한 경우
6. 감독자로서 감독을 태만히 한 경우
7. 기타 금융시장의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당·불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제 2 장 검 사 운 영

제6조(검사원의 권한 및 의무) ① 검사원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증명서, 확인서, 의견서, 문답서 및 기타 관계자료와 물건 등의 제출요구
2. 금고, 장부, 물건 및 기타 보관장소 등의 봉인
3. 당해 금융기관 관계자에 대한 출석·진술 요구
4. 기타 검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② 검사원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부당한 대출을 강요하거나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2.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는 행위
3.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행위

제7조(금융기관에 대한 상시감시)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상시감시를 통하여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 또는 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감시 결과에 따라 감독 및 검사업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의 종류는 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검사실시) ① 감독원장은 감독기구설치법 제37조의 규정 및 금융업관련법과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 또는 특정부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②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감위가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금융기

관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독원장이 검사를 실시한다.

③ 검사의 종류는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로 구분하고, 검사의 실시는 현장검사 또는 서면검사의 방법으로 행한다.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감독원장은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기구설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자 등에 대하여 진술서의 제출, 증언 또는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1.13>

② 제1항에 의한 자료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1.11.13>

제10조 삭제 <2004.3.5>

제11조(검사관련 통계관리)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실시 상황 및 경영실태 평가결과, 정보 및 건의사항 등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 감독원장은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유관부서간에 상호 정보교환체제를 구축하고, 검사기법의 연구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검사결과와 보고, 통보, 조치 및 사후관리

제13조(검사결과와 보고)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독기구설치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종류, 영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특정부문에 대하여 실시한 부문검사로서 현지조치사항만 있거나 조치요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감독원장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타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한 검사에 대하여도 그 검사결과를 보고받아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감위앞 보고와 관련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검사결과와 통보 및 조치)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를 검사서에 의해 당해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 작성 및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영유의사항
2. 지적사항

가. 문책사항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당해기관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과태료·과징금 부과, 기관 및 임원에 대한 주의적경고 이상의 제재, 직원에 대한 면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감봉·견책에 해당하는 제재의 경우 <개정 2004.3.5>

나. 조치의뢰사항

금융기관 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이를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적의조치토록 의뢰하는 경우 <신설 2004.3.5>

다. 주의사항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개정 2005.8.31>

라. 변상사항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융관련법규 등을 위반하는 등으로 당해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손실을 끼쳐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개정 2005.8.31>

마. 개선사항

규정, 제도 또는 업무운영 내용 등이 불합리하여 그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05.8.31>

3. 현지조치사항

③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행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치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금융기관의 자체감사 조직의 장이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며, 신용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은 당해 설립법에 의한 중앙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제4장에서 정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금융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제4장에서 정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집행간부 포함)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당해 금융기관의 장,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 또는 당해임원의 임면권자(임면제청권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정리기한 및 보고) ① 금융기관은 제14조제1항의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기한내에 이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기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경영유의사항 : 6월 이내

2. 지적사항 :

가. 문책사항 : 관련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내용은 2월 이내, 문책사항에 주의사항 또는 개선사항 등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목에서 정한 기한이내 <개정 2004.3.5., 2005.8.31.>

나. 조치의뢰·주의·변상·개선사항 : 3월 이내 <개정 2004.3.5., 2005.8.31.>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금융기관의 정리부진 및 정리 부적정 사유가 관련 임직원의 직무태만 또는 사후관리의 불철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제4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제16조(자체징계 제한) ① 금융기관은 감독원의 검사시 발견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감독원장의 제재요구가 있기 전에 임의로 임직원에 대한 신분상의 제재나 기타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금융기관은 자체감사결과 등으로 발견한 정직이상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위법·부당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졌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해제하되 징계확정 전에 의원면직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사직서 제출경위를 조사하고 민법 제660조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고용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징계조치 및 사고금 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6조의2 삭 제 <2005.11.3>

제 4 장 검사결과 조치

제1절 조치의 종류 및 기준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감독기구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2.28, 2004.3.5>

1.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개정 2006. 8.31.>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또는 인가·허가의 내용이나 조건에 위반한 경우 <개정 2006. 8.31.>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심히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개정 2006.8.31.>

- 다. 영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조치를 받고도 당해 영업·업무를 계속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 라.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6.8.31.>
2. 영업·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 <개정 2006.8.31.>
- 가. 삭 제 <2006.8.31.>
-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개정 2006.8.31.>
- 다. 제3호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정지조치 또는 제4호의 위법·부당행위의 중지조치를 받고도 당해 영업점营业을 계속하거나 당해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 라. 제7호의 기관경고를 받고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3.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금융기관의 위법·부당행위가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나 그 행위가 일부 영업점에 국한된 경우로서 위법·부당행위의 경중에 따라 당해 영업점의 폐쇄 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 위법·부당행위 중지
- 금융기관의 위법·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신속히 중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5. 계약이전의 결정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이 동법 제1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한 경우
6. 위법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요구
- 금융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위법·부당내용을 일간신문, 정기간행물 기타 언론에 공표하거나 영업점에 게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기관경고
- 가.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해당되나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 나. 위법·부당행위로서 그 동기·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1) 위법·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이나 경영자세에 기인한 경우
 - (2) 관련점포가 다수이거나 부서 또는 점포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3)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의 주된 관련자이거나 다수의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에 관련된 경우
 - (4) 동일유형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제기되거나 금융거래자의 피해규모가 큰 경우
 - (5) 금융실명법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6) 위법·부당행위가 수사당국에 고발 또는 통보된 사항으로서 금융기관의 중대한 내부통제 또는 감독 소홀 등에 기인한 경우
- 다. 최근 1년 동안 내부통제업무 소홀 등의 사유로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 (1) 당해 금융기관의 최저근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이하같다)의 100분의 2 (자기자본의 100분의 2가 10

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또는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가) 자기자본이 1조5천억원 미만인 경우 : 100억원

(나) 자기자본이 1조5천억원 이상 2조5천억원 미만인 경우 : 300억원

(다) 자기자본이 2조5천억원 이상인 경우 : 500억원

(2) 손실(예상)금액이 (1)에 미달하더라도 내부통제가 매우 취약하여 중대한 금융사고가 빈발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크게 야기한 경우

라. 제 <2004.12.30>

마. 삭 제 <2004.3.5>

8. 삭 제 <2004.3.5>

9. 기관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신설 2005.8.31.>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감위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금융업 관련법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이하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에서 같다.) <개정 2004.3.5., 2005.8.31.>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기구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2.28, 2004.3.5>

1. 해임권고

가. 고의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자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위의 행위로 인하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0조에서 정한 적기시정 조치를 회피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바. 기타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한 해임권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문책 경고

-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 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 다.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 마.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바. 금감위, 감독원장, 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 지시 또는 징계요구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 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 신설 2005.8.31. >

-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감위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5.8.31. >
- ③ 금감위가 금융기관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정지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감독기구설치법, 금융업관련법 등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개정 2005.8.31. >

- ② 감독원장은 직원의 위법·부당사실을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적의조치하도록 의뢰하거나 금감위에 이를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04.3.5. >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감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1.2.28>

- ②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감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1.2.28>
- ③ 삭 제 <2001.2.28>
- ④ 삭 제 <2001.2.28>

⑤ 삭 제 <2001.2.28>

제20조의2(확약서·양해각서)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상시감시 또는 검사결과 나타난 경영상의 취약점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의 개선을 위한 확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상시감시 또는 검사결과 나타난 경영상의 심각한 취약점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과 이의 개선대책의 수립·이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3.5]

제21조(기타 조치)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로 당해 금융기관에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여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변상조치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업무처리가 법규를 위반하거나 기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업무방법의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개정 2005.8.31. >

제22조(제재효과) ① 삭 제 <2003.9.13>

②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의 임원은 금융업관련법령 및 이에 근거하여 각 감독관련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일정기간 임원선임 제한을 받는다.

③ 임직원이 2회 이상의 주의조치를 받고도 3년 이내에 다시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 신설 2005.8.31. >

제2절 제재의 가중 및 감면

제23조(기관 및 임원제재의 감면) 부실여신 발생 등의 책임과 관련하여 기관 및 임원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그 제재의 사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4.3.5>

1. 전반적인 금융경제여건의 악화에서 비롯된 경우
2. 정부의 국가산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지원된 경우
3. 여신취급시 충분한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변경에 의한 경우
5. 우수한 경영 등으로 경영실태의 종합평가등급이 전기대비 1등급이상 향상된 경우
6. 기타 대내외의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기관 및 임원제재의 가중) ① 금융기관이 최근 3년 이내에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

으로써 기관경고를 3회이상 받게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제재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04.3.5>

② 임원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2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위법·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제재보다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장 중한 제재가 업무집행정지 이상인 경우
2. 경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경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실질적으로 1개의 위법·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③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주의적경고조치를 받고도 다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여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문책경고로 가중할 수 있다.

④ 임원이 문책경고 또는 2회이상의 주의적경고 조치를 받고도 3년내에 다시 주의적 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04.3.5>

⑤ 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에 대한 제재의 가중 및 감면에는 제23조와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고 이 경우 해임권고·업무집행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는 각각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본다. <신설 2004.3.5>

제25조(직원제재의 가중 및 감면) ① 직원에 대하여 제재하는 경우에 위법·부당행위가 반복되거나, 다수의 위법·부당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② 직원에 대하여 제재하는 경우에는 공적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6조(여신업무 관련 제재 운영) ① 금융기관의 여신업무와 관련하여 제재대상이 되는 위법·부당행위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4.12.30>

② 제①항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엄정하게 규명하여 임원(본부장, 집행간부 등 비등기임원과 동 임원이 참여하는 여신협의체의 위원이 되는 본점 부서장 포함) 위주로 제재한다. <신설 2004.12.30>

③ 금융기관의 여신이 부실화되거나 유가증권 운용관련 투자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련 임직원이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게 취급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을 때에는 이를 면책한다.

제27조 및 제28조 삭제 <2001.2.28>

제3절 제재의 병과조치 등

제29조(금융기관임직원 제재시의 병과 등)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위

법·부당행위가 금융업관련법상 벌칙 또는 과징금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와 동시에 수사당국에 그 내용을 고발하거나 통보(이하 “고발 등”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금감위에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조치,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해임권고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면직의 경우에는 동일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28>

② 감독원장은 기관경고를 받는 금융기관의 관련임원에 대하여 당해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관련정도에 따라 해임권고 또는 업무집행정지조치를 취할 것을 금감위에 건의하거나 경고조치를 함께 할 수 있다.

제30조(고발 등 조치시의 병과 등)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수사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당해 위법행위와 관련된 다른 제재 조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임원에 대한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시의 병과 등) ① 금융업관련법의 규정에 의거 동일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가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1. 위법·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집행 행위로 발생한 경우
2. 위법·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

②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제재 또는 임직원 제재는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2.28>

제32조(변상시의 병과)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변상요구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신분상의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제4절 제재절차

제33조(심의회의 설치) ① 감독원장은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2.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심의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개정 2006.8.31.>

제34조(제재절차) 검사결과 적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조정 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금감위에 제재를 건의하거나 감독원장이 조치한다.

제35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등) ① 감독원장이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에 의하여 제재를 하거나 금감위에 제재조치를 건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재의 내용 등을 제재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감독원장은 상당한 기간(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을 정하여 제재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업관련법 등에서 의견청취 방법을 청문 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4.3.5]

제35조의2(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사무위임) 금감위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장이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금감위에 건의하는 경우에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는 감독원장이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3.5]

제36조(불복절차)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에 감독원장은 그 제재에 관하여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제기,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제재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6.8.31.>

제37조(이의신청) ① 이 규정에 따라서 금감위 또는 감독원장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은 당해 제재처분 또는 조치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감위 또는 감독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과태료 등 금융관련법규에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6.8.31.>

② 제19조제2항의 조치의뢰와 관련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조치에 예정된 직원은 당해 조치의뢰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을 통하여 금감위 또는 감독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6.8.31.>

③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처리한다. <신설 2006.8.31.>

1. 금감위의 제재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이의신청의 기각을 금감위에 건의한다. 다만,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이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2. 감독원장의 제재처분 또는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06.8.31.>
- ⑤ 감독원장은 증거서류의 오류·누락, 법원의 무죄판결 등으로 그 제재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하여 제3항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6.8.31.>

제38조(제재내용의 이사회 등 보고) 금융기관의 장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의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와 보고 또는 주주총회 부의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장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 보고

제39조(내부통제) 금융기관은 금융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체도를 자체실정에 맞게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다음 각호의 1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업점 주변에서의 피탈사고와 도난사고 방지를 위한 자체경비 강화대책
2. 어음·수표, 예금증서 등의 중요증서와 현금, 중요인장, 채권서류 등에 대한 보관관리

제40조(자체감사 등) ① 금융기관은 부당영업행위 및 금융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연간 또는 분기 감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감사중 긴급을 요하거나 중대한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과 처리의견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금융사고) ①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금융사고에 관련이 있는 소속 임직원에게 대하여 지체없이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소정절차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금융사고 보고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숨긴 자에 대하여도 금융사고에 관련이 있는 임직원에게 준하여 처리한다.

③ 금융기관은 금융사고금중 미보전액을 가지급금(또는 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1. 금융사고자, 관련자 및 신원보증인 등의 변상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진변상이 불가능한 경우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상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리가 불가능한 금액은 관련규정에 의해 손실처리
- ④ 금융기관은 고의성 금융사고자에 대하여 금융사고금 정리를 위한 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여 기타 관계자 명의로 대출취급할 경우에는 대출약정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그 기한을 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제1항의 금융사고 보고의 대상 및 보고시기와 관련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주요 정보사항 보고)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패소확정 되거나, 소송물 가액이 최직근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자기자본의 100분의 1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또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소송에 피소된 경우 <개정 2004.5.7>
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사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금융기관이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또는 사건

제 6 장 보 칙

제43조 삭 제 <2004.3.5>

제44조(증권·선물기관에 대한 특례) 감독원장은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감독원장의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의 임원이 그 소속 직원이 행한 다음 각호의 위법·부당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임기중 주의적경고 이상의 제재를 3회 이상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의 해임권고를 금감위에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4.3.5>

1. 증권거래법 제42조 및 동조 준용규정, 제52조의3, 제107조, 제188조의2 또는 제188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2. 선물거래법 제22조, 제31조, 제48조제1항 또는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4. 삭 제 <2004.3.5>

제45조 삭 제 <2004.3.5>

제46조(외국금융기관에 대한 특례) 감독원장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이 규정 제17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 및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본국 당해 금융기관의 장, 감사 및 해당국 감독당국에 위법·부당사실 및 제재내용을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국내 대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한 제재의 특례) 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신용협동조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협동조합 및 동 중앙회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및 동 연합회와 신용협동조합 및 동 중앙회의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개선 또는 직무정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대출 등을 취급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의2(위임 및 위탁검사의 특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다른기관에 검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이 수행하는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4.5.7]

제47조의3(전환대상자에 대한 검사의 특례) 은행법 제48조의2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51조의2의 전환대상자에 대한 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은행법 제16조의3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3에 의한 전환계획 및 동 계획 승인 조건 등의 이행상황 확인

2. 전환대상자의 재무변동상황 및 금융거래 내역 등 <신설 2003.3.6>

[전문개정 2004.5.7]

제47조의4(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의 특례) 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2호에서 금감위가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억원을 말한다.

②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금감위가 정하는 금액, 검사수수료 부과 및 징수시기는 <별표4>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③ 감독원장은 검사수수료 부과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03.3.6>

[전문개정 2004.5.7]

제47조의5(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① 감독원장은 보험대리점등(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보험설계사·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포함>·보험계리업자·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임직원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별표 5>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조치

를 취할 것을 금감위에 건의할 수 있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 검사운영, 검사결과의 보고, 통보, 조치 및 사후관리, 제재의 가중·감면·병과조치·절차에 관하여는 제2장, 제3장, 제20조, 제4장 제2절(제23조 및 제26조를 제외한다)·제3절·제4절(제38조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1.3]

제48조(세부사항) 감독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검사규정 및 금융기관제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① 제20조의 규정은 1999. 6. 30.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으로 새로운 내용의 제재가 부과되거나 제재가 가중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종전의 금융기관검사규정 및 금융기관제재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금융기관검사규정 및 금융기관제재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01.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04.5.7>

부 칙(2002. 5. 15)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6)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 13)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 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증권업감독규정 <별표3>, 선물업감독규정 <별표1>, 보험업감독규정 <별표4>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1조의2제1항제4호의 "문책기관경고"는 "기관경고"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규정 시행 전에 부과된 "주의적기관경고"는 "기관경고"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24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관제재를 가중함에 있어 이 규정 시행 전에 부과된 "주의적기관경고"는 "기관경고"로 보지 아니한다.

부 칙(2004. 5. 7)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30)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 1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정 시행전의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발생 당시의 규정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과 이 규정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에 의하여 각각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부 칙(2005. 8.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개정 규정 시행 전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주의조치는 종전규정에 따른다.

제3조 (적용례) 개정규정 제22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규정 시행이전에 조치한 실적도 포함하되, 최종 제재대상 위법·부당행위는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에 신규 취급하거나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부 칙(2005. 11. 3.)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 1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정 시행전의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발생 당시의 규정 별표3 과태료부과기준과 이 규정 별표3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하여 각각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부 칙(2006. 8. 31.)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금융기관 여신관련 제재대상 위법·부당행위

1. 금융관련법규 등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음에도 취급한 여신
(출자자 대출, 동일인여신한도초과 대출, 용도의 유용 대출 등)
2. 정관·내규 등에서 정한 여신부적격자(휴폐업 업체, 연체자 등)에 대한 여신
(타인명의 이용 등 우회대출 등 포함)
3. 신용조사를 부당하게 생략하거나 신용조사 또는 여신심사의 의견이 “여신 부적정”임에도 무리하게 취급한 여신
4. 적정 여신한도 초과 부당취급
(한도 미산정, 추정매출액 부풀리기, 담보물 과다평가 등 포함)
5. 신용평가등급을 자의적으로 상향조정하거나 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취급한 여신
6.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에 있어 위법·부당행위를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별표2><신설 2003.9.13, 개정 2004.3.5, 개정 2005.7.14>

과징금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과징금)·제65조(과징금의 부과) 및 동법시행령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은행법」 제65조의3(과징금)·제65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과징금의 부과통지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과징금처분)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과징금) 제6항·제206조의12(과징금의 부과)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한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마.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3.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제1호 내지 제14호, 「은행법」 제65조의3 제1호 내지 제15호,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6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위반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제1호 내지 제14호, 「은행

법」 제65조의3 제1호 내지 제15호,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6항에서 정한 부과비율(이하 “법정최고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4.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금융지주회사(자회사등 포함), 은행(은행법상의 금융기관), 보험회사(특별이익제공관련 위반행위 제외),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법정부과한도액		기본부과율
기준금액	법정최고부과비율	
10억원 이하 (1단계)	× 법정최고부과비율	× 7/10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2단계)		× 7/20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3단계)		× 7/40
1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4단계)		× 7/80
1조원 초과 (5단계)		× 7/160

<산정례>

기준금액	기본과징금
10억원 이하	기준금액×법정최고부과비율×1단계 기본부과율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1단계 기본부과율 +(기준금액-1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2단계 기본부과율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1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1단계 기본부과율 +9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2단계 기본부과율 +(기준금액-10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3단계 기본부과율
1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1단계 기본부과율 +9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2단계 기본부과율 +90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3단계 기본부과율 +(기준금액-1,00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4단계 기본부과율
1조원 초과	1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1단계 기본부과율 +9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2단계 기본부과율 +90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3단계 기본부과율 +9,00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4단계 기본부과율 +(기준금액-1조원)×법정최고부과비율×5단계 기본부과율

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다.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 표의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법정부과한도액		기본부과율
기준금액	법정최고부과비율	
1천만원 이하 (1단계)	× 법정최고부과비율	× 7/10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단계)		× 7/20
5천만원 초과 25억원 이하 (3단계)		× 7/40
2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단계)		× 7/80
10억원 초과 (5단계)		× 7/160

5.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일반원칙

(1) 기본과징금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3) 조정후 과징금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은행법」 제65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보험업법」 제196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6항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 기타 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아래의 다. (3), (4), (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가중 사유 및 비율

(1) 위반행위의 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가중하되, 그 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cdot \text{가중금액} = \text{일평균 위반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 \times (\text{위반일수}-1) \times 0.1\%^{*} \text{ 또는 } 0.2\%^{**}$$

* 180일이내의 위반일수에 적용

**180일을 초과하는 위반의 경우로서 180일 초과일수에 적용

- (2) 최근 3년 이내에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하되, 그 가중액의 합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또는 다른 이득을 취하는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금융시장의 신용질서가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 (5)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한 경우, 특별이익 제공금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특별이익 제공을 약속한 경우, 특별이익 제공 약속금액의 50%가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각각 가중할 수 있다.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 (1) 형식적으로는 법규위반에 해당되나 금융산업 및 금융기관의 신용 훼손 또는 손실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발생원인 등을 고려할 때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2)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4)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5)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범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 (1)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 (2) 위반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위반자의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위반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기 타

- (1)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거래자 등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
-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기준금액이 경미하고 위반기간이 5영업일이내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증권회사의 부과과징금 결정에 대한 특례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위의 다. (1), (2)를 제외하고 6. 부과과징금의 결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위반행위가 아래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부과한도액(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의 100분의 50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1)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6항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3) 위반행위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이 있는 경우

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과과징금 결정에 대한 특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위의 6. 가., 나. 및 다.의 감면사유를 고려하여 산정한 부과과징금이 기본과징금의 50%이하인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기본과징금의 50%로 한다.

7. 기 타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별표3><개정 2001.2.28, 2005.12.15>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은행법」 등 금융업관련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을 산정한다.

다.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고의	과실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 1. 위반행위가 단순착오에 기인하거나 극히 경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단순법규 위반 등을 의미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금융업관련법상의 법정최고금액을 넘지 못한다.

가. 가중 사유

- (1)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도 다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 (2) 최근 5년 이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도 다시 동일 또는 유사한 법규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 사유

- (1) 규정 제25조 제2항에 의거 직원에 대한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2) 당해 금융기관이 자체감사 등을 통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위규사실을 계속적으로 적발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2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스스로 시정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4) 위반행위에 단순가담하거나 지시에 추종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과태료 부과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 실효성이 없는 경우
-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별지 서식>

<p style="text-align: center;">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 정리보고서</p>	
검사서 번호 (문서번호) :	기관부점명 :
정리(재정리)요구 접수일 : . . .	작성 일자 :
검 사 기 준 일 : . . .	작성 부점장 : 인
조치요구 구분 :	자체감사 담당부서장 : 인 (자체감사담당부서가 없는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장)
조치요구내용(요약) : 	
정리 및 조치결과 : (완결, 정상화, 미정리)	
정리 및 조치내용 : 	

- 주 : 1) 검사서의 정리대상 조치요구사항 건별로 작성하여 보고하며, 입증자료를 첨부함
 2) 조치요구사항의 내용대로 정리된 경우 '완결', 요구내용에 일치되지 않더라도 그 취지에 맞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상화', 정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정리' 로 구분함
 3) 미정리사항에 대하여는 정리할 책임이 있는 임직원의 개별사유서를 첨부함
 4) 미정리된 사항이나 정리내용이 부적정 또는 미흡하여 기한을 정하여 재정리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도 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함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수수료 부과기준

1. 목 적

- 이 기준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등록수수료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10조(등록수수료 등)에 따라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수수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검사수수료 부과기준

가. 검사수수료 부과금액 산정원칙

- 대부업자에 대한 매회 검사수수료는 연평균 대부금액 잔액의 0.1% 범위내에서 다음에서 정한 검사원 1인의 1일 검사수수료에 검사원 수 및 검사일수를 곱한 금액과 교통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다만, 검사기관과 다른 시에 위치한 대부업자로서 검사원이 해당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에는 검사착수 전일 및 검사종료일 익일을 검사일수에 포함)
 - 검사기관과 동일 시에 위치한 대부업자 : 35,000원
 - 검사기관과 다른 시에 위치한 대부업자* : 90,000원(최종일은 50,000원)
 - * 다만, 인근 시에 위치한 경우로서 검사원이 숙박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 시에 위치한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부과
- 검사원 1인당 교통비는 다음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검사기관과 다른 시에 위치한 대부업자에만 적용)
 - 철도임 : 1등정액 기준
 - 항공임 : 일반석 기준(서울↔제주 구간만 인정)
 - 철도·항공편 이용이 곤란한 경우는 실비기준

나. 검사수수료 부과 및 납부시기

- 검사수수료는 매분기 검사실시분을 일괄하여 납부대상 대부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분기익월 20일까지 부과고지 한다.

- 납입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납입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납입기한으로 한다.
- 검사수수료는 대부업자의 본점에 일괄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점만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당해지점에 직접 부과한다.

보험대리점등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기준

1. 등록취소의 금감위 건의

- 제재사유

보험대리점등이 보험업법에서 정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제재대상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의 금감위 건의

- 제재사유

보험대리점등이 보험업법에서 정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위법·부당 행위의 경중 또는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정지기간은 30일, 60일, 90일 또는 180일로 구분한다.)

- 제재대상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3. 기타제재

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 대하여 그 밖의 제재가 필요한 경우 제17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제7호·제9호, 제17조제2항,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가 필요한 경우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보험계리사<선임계리사 포함>·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해임을 금감위에 건의할 수 있다.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 정	2000.12.20
개 정	2001. 2.12
개 정	2001. 8.17
개 정	2001.11.13
개 정	2002. 5.10
개 정	2003. 2.28
개 정	2004. 2.27
개 정	2004. 4.30
개 정	2004. 7.23
개 정	2005. 8.26
개 정	2005.10.28
개 정	2006. 8.3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점검사사항 기본항목”이라 함은 주요 금융감독정책 및 검사방향 등에 따라 연중 계속적으로 중점검사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
2. “중점검사사항 수시항목”이라 함은 검사실시시기 또는 검사대상점포의 특성에 따라 중점검사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
3. “지점”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지점, 출장소, 지부, 지회, 대리점 등 본점 이외의 영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
4. “점포”라 함은 본점 또는 1개의 부서, 지점, 대리점 등 검사실시 단위를 말한다.
5.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라 함은 금융기관의 업무에 관여하는 자로서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와 금융기관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당해법인 또는 그 임원 등을 말한다.
6. “검사사후관리”라 함은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금융기관의 이행상황 확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를 말한다.
7. “연결검사”라 함은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연결기준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 경영의 건전성 평가와 그 업무 및 재산에 대한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신설

2004.4.30>

8. "주검사부서"라 함은 금융지주회사의 주력자회사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검사국을 말한다. <신설 2004.4.30>
9. "검사실시부서장"이라 함은 검사국장 또는 지원장을 말한다. 다만, 소비자보호업무담당부서장 및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실시부서장으로 본다. <신설 2004.4.30>

제3조(검사원) ① 규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은 감독원 직원으로 하되,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감독원 직원이 아닌 자를 검사원으로 지정하여 특정부문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원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무 및 검사와 관련된 제규정과 검사원 복무수칙<별표 1>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검사원의 제척) 금융감독원을 퇴직한 금융기관의 검사와 동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원(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착수일 또는 상시감시업무 배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한한다)은 당해 금융기관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에서 제척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및 검사원의 일시대량 투입으로 검사인력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등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10.28]

제 2 장 검 사 운 영

제1절 검 사 계 획

제4조(검사계획) ①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다음 연도의 검사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1.11.13>

② 검사국장은 각 검사국별 연간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검사총괄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계획의 일부를 변경 또는 조정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개정 2001.11.13>

③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연결검사를 위한 연간검사계획은 주검사부서가 자회사 및 손자회사 담당검사국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각 검사국은 이를 연간검사계획에 포함하여 검사총괄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계획의 일부를 변경 또는 조정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신설 2004.4.30>

④ 제2항의 연간검사계획에는 검사의 종류, 검사대상점포 및 점포수, 검사실시시기, 검사동원인원, 주요 검사실시범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부문검사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4.30>

⑤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국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계

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1.13, 2004.4.30>

제5조(중점검사사항 운영) ① 중점검사사항은 기본항목과 수시항목으로 구분 운영한다.

② 검사국장은 금융환경, 업계동향 및 금융기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점검사사항 기본항목을 선별 운영할 수 있으며, 상시감시결과 나타난 금융기관의 경영상 취약부문 등을 중점검사사항 수시항목으로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검사위탁기관이 검사위탁과 관련하여 감독원장에게 중점검사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위탁검사대상기관에 대한 중점검사사항 기본항목으로 운영한다.

제2절 상시감시 및 검사사전준비

제6조(상시감시업무) ①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상시감시업무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료(이하 "상시감시자료"라 한다)를 검토·분석하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개정 2001.11.13>

1. 업무 또는 영업보고서

2.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에 활용되고 있는 계량지표 또는 보조지표 자료

3. 임직원 면담 및 조사출장 결과 자료 <신설 2005.10.28>

4. 금융기관이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 <신설 2005.10.28>

5. 감사원 등이 수집한 정보·건의사항 <개정 2005.10.28>

6. 기타 검사총괄담당부서장 및 검사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개정 2005.10.28>

② 감독원장은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감사원을 일정기간 상주시키면서 상시감시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1.11.13>

제6조의2(임직원 면담) 감사원은 상시감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견한 특이사항 또는 경영상 취약부문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 임직원과의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0.28]

제6조의3(조사출장) ① 감사원은 임직원 면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출장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조사출장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0.28]

제6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① 감사원은 상시감시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의 중복 제출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검사원은 금융회사의 규모와 특성, 현안사항의 성격 등을 감안한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자료요구범위를 차등화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0.28]

제7조(상시감시결과조치)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1.13>

1. 경영개선권고,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앞 경영개선요구 건의·경영개선명령 건의
2. 경영실태평가 등급 조정
3. 감사계획수립 및 중점감사항목에 반영
4. 감사실시
5. 시정계획 제출요구 또는 보고서 주기 단축 등 사후관리 강화 <개정 2005.10.28>
6. 확약서·양해각서 체결 <개정 2004.4.30>

제8조(상시감시자료 관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감시자료는 감독 및 감사목적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상시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상시감시자료의 보안 및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사전준비 및 감사자료) ① 검사국장은 감사사전준비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자료
2. 상시감시자료
3. 유관부서의 확인요청 사항
4. 과거 사고·민원발생 내용
5. 정보 및 건의사항
6. 기타 조사 및 분석자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자료의 종류는 유관부서 등에 제출되는 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검사국장이 감사총괄담당부서장의 합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규정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사 등 위임 또는 위탁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의 자료요구는 감사총괄담당부서장의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3.2.28, 개정 2004.4.30>

③ 감사총괄담당부서장은 제2항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자료의 종류를 추가·삭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1.11.13>

제10조(감사사전준비협의회) ① 검사국장은 감사사전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실시전에 유관부서 등과 감사사전준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감사사전준비협의회는 감사총괄담당부서, 제재심의담당부서, 관련 검사국 및 기타

유관부서의 팀장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11.13, 개정 2005.10.28>

③ 검사사전준비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검사계획의 개요 및 중점검사사항
2. 금융기관 경영상의 주요 문제점
3. 금융거래자 보호 및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와 관련한 주요 문제점
4. 자체감사부서의 활동상황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사전검사) ① 검사국장은 검사사전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검사원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임점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사는 제2장 제3절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사전교육) 검사실시부서장은 검사실시전에 소속 검사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검사대상 금융기관의 규모, 검사종류 등을 고려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4.4.30>

1. 검사실시 목적과 검사대상 금융기관의 주요 업무현황
2. 상시감시 또는 검사사전준비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검사착안사항
3. 검사원복무수칙 등 준수사항
4. 기타 검사기법, 감독원장 지시사항 및 유의사항 등

제13조(정보의 수집 및 관리) ①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유관부서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결정 및 조치내용과 업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사항 및 건의사항을 관련부서(지원 포함)와 검사총괄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3>

② 감독원 직원은 금융감독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보사항 및 건의사항(미확인사항 포함)을 검사총괄담당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③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통보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제3절 검 사 실 시

제14조(검사실시의 품의) ① 검사실시부서장은 규정 제8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실시품의서를 작성하여 검사총괄담당부서장과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보호업무담당부서장은 검사총괄담당부서장과의 합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지원장이 관할지역 소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 소관 검사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3, 2004.4.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실시품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검사의 종류

2. 검사대상 금융기관
 3. 검사기준일(부문검사로서 검사기준일을 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가능) 및 검사대상기간
 4. 검사의 범위
 5. 검사반 편성 및 검사원
 6. 검사실시 기간
 7. 중점검사사항 기본항목 및 수시항목 등 주요 검사사항
 8. 예상 소요경비
 9. 제4조의 검사계획에 반영된 검사 해당여부
 10. 과거 검사실시상황
 11. 기타 참고사항
- ③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의한 합의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검토한다.
〈개정 2001.11.13, 2004.4.30〉
1. 연간검사계획과의 관련성
 2. 검사실시 시기의 적정성
 3. 검사사항의 적정성
 4. 검사실시기간 및 검사인력운용의 적정성 등
 5. 검사실시내용의 검사관리시스템 입력여부 <신설 2004.4.30>
- ④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제3항에 의한 합의시 검사중복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실시부서장에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검사대상기간) 제1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간은 검사종류, 전번 검사기준일, 검사인력, 검사일수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 제16조(검사반 편성)** ① 제1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반은 검사업무의 분장내용에 따라 편성하고 검사반장을 둔다.
- ② 검사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검사원 및 검사업무의 통할과 보고
 2. 검사원의 업무분장
 3. 검사원의 정보수집 독려

- 제17조(검사 착수)** ① 검사실시부서장은 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검사 실시계획을 사전에 검사대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보할 경우 장표 및 서류의 조작·인멸 등으로 검사목적 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2.28〉
- ② 검사원은 검사대상 금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검사원은 가급적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8〉
- ④ 검사반장은 현장검사 착수상황을 검사착수일 다음날까지 검사실시부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감사의 착수 또는 계속 진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감사실시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⑤ 감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실시통보서) ① 감사반장은 현장검사 또는 서면검사 착수시 감사대상 금융기관의 장 또는 점포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감사실시통보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4.4.30>

② 제1항의 감사실시통보서는 점포단위로 발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개 금융기관 또는 수개 점포 단위로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04.4.30>

제19조(감사진행상황 협의) ① 감사원은 매일의 감사진행상황을 감사반장과 협의함과 아울러 주요한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감사반장은 감사원의 감사진행상황을 종합하여 수시로 감사실시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실시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내용을 종합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담당 임원앞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봉인) ① 감사반장은 규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책임자급 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하는 경우 그 목적물의 범위와 기간은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및 기간에 한정하여야 한다.

제21조(금융거래정보의 요구) ① 감사실시부서장은 검사업무 등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에 요구할 때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거래자의 인적사항과 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를 당해 금융기관 특정점포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를 발급한 때에는 금융거래정보 요구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동 발급대장은 정보제공요구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3>

③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01.11.13>

제22조(타점포 검사) ① 감사반장은 검사업무 수행과정에서 당해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실시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점포의 개별사항에 대한 검사 또는 확인을 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고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감사대상 금융기관 또는 점포의 위법·부당행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실시품의 등 검사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검사대상 금융기관 또는 점포의 담당검사실시부서가 다를 경우 해당 검사실시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부실확인 검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또는 인정과 관련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원은 금융기관 임직원, 주요주주 및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이 당해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검사결과 입증자료) ① 검사반장은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규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입증자료를 제출 받는다. <개정 2005.10.28>

1. 확인서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사실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자 등이 의견진술을 희망하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문서 및 장표의 사본 등에 의하여 위법·부당행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10.28>

2. 문답서 또는 질문서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크거나 취급경위가 복잡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위의 동기·배경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검사현장에서 관련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문답서를 작성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관련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3. 문서 및 장표의 사본

검사결과 입증에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받으며, 원본과 상위없음을 관계인이 증명하도록 한다. 다만, 원본의 수량이 과다한 경우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일정한 서식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고 작성자가 날인하도록 한다. <개정 2005.10.28>

② 제1항 제2호의 질문서는 검사반장 또는 검사실시부서장 명의로 발부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증자료는 금융기관의 임원으로부터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포의 장(본점의 경우에는 부서장)으로부터 받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련 직원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

제25조(경영실태평가) ① 검사국장은 규정 제4조제2항 및 감독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검사업무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검사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 평가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현황, 리스크 관리시스템 및 관련 규정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또는 부문별평가등급이 불량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확약서 또는 양해각서 체결 및 감독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금감위에 경영개선요구명령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경영면담 등) ① 종합검사와 관련한 경영면담을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며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면담참석자 등 면담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1.13〉

1. 경영진 면담 : 검사반장, 검사실장, 검사국장(필요시 임원) 등은 검사 종료전에 주요 경영진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가. 경영진의 경영정책 및 방침

나. 감독 및 검사 정책

다. 경영실태 평가결과 경영상 취약점, 개선방안 및 경영진의 시정계획

라. 조치요구(예정)사항

마. 애로 및 건의사항

바. 금융환경 및 금융기관의 경영전망 등

2. 이사회 면담 : 검사반장, 검사실장, 검사국장(필요시 임원) 등은 검사 종료후 경영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며 다음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가. 감독 및 검사정책

나. 경영상 취약점, 경영진 면담시 협의된 개선방안 및 경영진의 시정계획

다. 경영상 문제점 개선을 위한 이사회의 관심필요사항

라. 금융기관의 경영정책과 전망 등

② 부문검사의 경우 검사반장은 검사를 종료하면서 금융기관의 관련 임직원에게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한다. 다만, 검사반장이 언급할 중요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의견청취) ① 검사반장은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행위의 관련자 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은 제24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견서, 제2호에 의한 문답서 또는 질문서에 의하며, 관련자 또는 당해 금융기관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8조 삭제 〈2002.5.15〉

제 3 장 검사결과 보고, 통보, 조치 및 사후관리

제1절 검사결과 보고 및 검사서 작성 등

제29조(귀임 보고) 검사반장은 검사 종료후 검사결과를 요약정리한 귀임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실시부서장에게 보고하되, 중요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검사서 작성) 검사반장은 검사 종료후 빠른 시일내에 검사결과를 종합정리한 검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특정부문에 대하여 실시하는 부문검사로써 조치요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의 요약정리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현지조치) 검사반장은 규정 제1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현지에서 조치한 사항은 금융기관 또는 점포의 장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고 이를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에 기재한다.

제32조(고발 등)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가 금융관련 법규상의 벌칙적용대상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사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열거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당국에 그 내용을 고발하거나 통보(이하 “고발 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05.10.28>

1. 위법·부당행위로 인한 금융사고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위법·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금융기관 부실화의 주요 요인이 된 경우
3. 고의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함으로써 법질서에 배치되는 경우
4. 동일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여 금융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진행중에 제1항에서 정하는 위법·부당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검사실시부서장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수사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1. 증거인멸 또는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으로서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감독원장은 금감위가 금융산업구조개선훈에 의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의 주요주주 또는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가 부실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여 관계법령에 의해 벌칙적용 대상이 되는 때에는 이들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④ 감독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등의 대상이 되는 위법·부당행위가 금융관련법규상 벌칙 및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대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외에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임직원이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지시 등을 거부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만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집행

행위로 발생된 경우

2. 위법·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된 경우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사회·경제적 물의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위법성의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고, 위법성·고의성 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증거자료·관련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수사당국에 고발한다.

2. 사회·경제적 물의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위법성 및 고의성의 혐의는 충분하나 검사권의 한계 등으로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당국에 통보한다.

⑥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 삭제 (2004.2.27)

제34조(검사결과와 심사의뢰) 검사실시부서장(규정 제47조의2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검사 소관 검사국장을 포함한다)은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에게 검사서, 협약서 및 양해각서에 대한 심사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 조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04.4.30, 개정 2005.10.28>

제35조(지적불문사항의 처리) 검사실시부서장은 검사원이 검사실시기간중 지적사항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확인서 등 입증자료를 징구한 사항중 심사과정 등에서 지적사항으로 처리하지 않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당해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금융거래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이 없거나 지적하지 않기로 결정한 시점이 검사서 통보시점과 근접하는 등 통보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6조(검사결과와 금감위 보고) 규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종합정리하여 금감위에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본점에 대한 종합검사를 말하며, 이 경우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은 본점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13>

제2절 사후관리 등

제37조(조치요구사항 정리보고서 처리) 검사실시부서장은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금융기관이 제출한 조치요구사항정리보고서를 심사하여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한다.

- 가. 조치요구사항의 요구내용대로 정리되었거나 또는 요구내용에 일치되지 않더라도 그 취지에 맞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동일한 효과가 있거나 정상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이행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소송에 계류중이거나 가압류 등 재판상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다. 관련자의 사망, 이민,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로서 분쟁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리내용이 부적정 또는 미흡하거나 미정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 및 정리에정일자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정리에 필요한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재정리 요구한다.

제38조(장기 미정리사항의 종결처리) 검사실시부서장은 검사서 송부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정리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리부진 사유를 재검토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한다.

- 1. 정리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나 조치요구사항의 취지에 일치되는 조치를 취한 경우로서 완결되기까지는 장기간을 요하고 계속적인 사후관리의 실익이 없는 경우
- 2. 정리가능한 사항이었으나 추후 불가능한 상태로 된 경우
- 3. 정리의 선행조건으로서 법령의 개정 등 정책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 4. 기타 제반여건에 비추어 정리가 불가능하거나 정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9조(검사자료의 정리) 검사원은 검사종료후 검사자료를 금융기관별 또는 검사업무별로 정리하여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 보관한다.

- 1. 검사자료 표지
- 2. 검사실시상황
- 3. 금융기관 제출자료
- 4. 검사결과 입증자료
- 5. 기타 검사원 참고자료

제39조의2(검사서 배부 및 관리기준)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검사서 배부대상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하는 검사서 배부 및 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3.2.28, 개정 2004.4.30>

제40조(준용) 감독원의 감독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제3장 제1절 및 제2절의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절 검 사 통 합

제41조(검사진도 분석) ① 검사실시부서장은 분기별 검사진도를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검사총괄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3>

②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검사실시부서별 검사진도를 종합·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4/4분기 검사진도분석은 제42조제3항의 검사업무종합보고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1.13>

제41조의2(주검사부서의 연결검사관련 수행 업무 등) ① 주검사부서는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연결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결검사계획 수립 및 검사실시 주관

2. 자회사 및 손자회사 담당검사국 등 유관부서와의 검사정보 공유

②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주검사부서와 자회사 및 손자회사 담당검사국간 연결검사 실시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4.30]

제42조(검사관련 통계관리) ① 검사실시부서장은 검사실시 및 조치내역, 검사사후관리 사항 등을 검사관리시스템에 적기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②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별 검사실시 상황, 경영실태 평가결과, 검사지적사항, 정보 및 건의사항 등 검사관련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3>

③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매년도의 주요업무추진실적, 검사실시상황 및 검사결과 주요 조치 요구사항 등이 포함된 검사업무종합보고서를 다음해 3월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3>

제43조(검사유관부서협의회) ① 검사총괄담당부서장 또는 검사국장은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원내 유관부서간 상호 정보교환 및 업무협의를 위한 검사유관부서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1.11.13>

② 검사유관부서협의회는 개최목적 등에 따라 협의회 명칭을 적의 사용할 수 있으며, 검사국 및 유관부서의 팀장 등으로 구성한다.

③ 검사유관부서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검사결과 주요 조치요구사항, 검사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건의사항의 협의

2. 자산건전성분류결과의 협의·조정

3. 상시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관한 사항

4. 검사계획의 수립·조정

5. 유관부서의 검사국에 대한 검사확인 및 협조요망사항

6. 감독·검사정책에 관한 사항

7. 기타 검사업무 관련사항

제44조(검사기법 연구검사원제도의 실시) ①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검사기법의 개발, 보급 등 검사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검사

기법 연구 감사원의 선정을 감사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1.11.13>

② 감사총괄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감사원의 연구실적을 종합평가하고 우수감사기법은 감사원 연수자료로 활용한다. <개정 2001.11.13>

제 4 장 검사결과 조치

제1절 직원 제재 등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2.27>

1. 면직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나.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다. 변칙적·비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하여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감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3. 감봉

가.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또는 손실을 전액 보전한 경우

다.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라.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 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신설 2005.8.26. >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신용카드사 및 기타 감독원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적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조치대상자 및 수준을 적의결정하여 조치하도록 의뢰(이하 '조치의뢰사항'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4.2.27., 2005.8.26., 2006.8.31.>

③ 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의 종류를 지정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2.27>

1.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위법·부당사항(직원이 주행위자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8.31.>
2. 상호저축은행의 출자자대출·동일인대출한도초과행위,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임의매매·불공정거래행위, 보험회사의 특별이익제공·무자격모집위탁 등 고질적인 모집절서 위반행위 <개정 2006.8.31.>
3. 금융사고, 금융실명제 위반, 회계분식, 보고서 허위제출, 검사자료 제출거부 등 금융질서를 문란시키거나 감독·검사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위법·부당사항 <개정 2006.8.31.>
4. 소규모 금융기관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 취약 등으로 자율적인 제제가 곤란하거나 기타 당해 검사실시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46조(직원 등 제재기준) ① 위법·부당행위 관련 직원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및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변상 여부
5. 사고발생 후 사고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외적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47조(제재효과) ① 직원에 대한 제재의 효과는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에 금융기관은 인사상의 징계 이외에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급여상의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의 관련내규가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제재효과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내규를 조정·변경하여야 한다.

③ 직원이 2회 이상의 주의조치를 받고도 3년 이내에 다시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05.8.26.>

제48조(징계기간의 산정) ① 제47조제1항의 제재효과에 의한 징계조치의 기간은 징계

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승급은 징계일 이후의 첫 예정일로부터 기산하고 승격은 동 제재 조치 기간중 이를 불허하며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최저 승격소요기간의 계산은 당해 금융기관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급·직위별 최저 근속기간에 징계종류별 승격불허기간을 가산한다.

② 제재효과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새로운 제재효과의 발생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면직의 경우 : 즉시 효과 발생

2. 정직의 경우

가. 정직기간 : 즉시 효과 발생. 다만, 정직기간중인 경우에는 당해 정직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효과 발생

나. 신분상 및 급여상 제재 : 진행중인 제재효과와 병합

3. 감봉 및 견책의 경우 : 진행중인 제재효과와 병합

제49조(직원제재의 가중) ① 직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제재를 받은 후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제재종류별 승격·승급제한기간(이하 “제재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시 주된 행위자로서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제재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가중할 수 있다.

1. 정직조치를 받은 자가 제재기간내에 다시 정직처분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직

2. 감봉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가 제재기간내에 다시 감봉처분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직

3. 견책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가 제재기간내에 다시 견책처분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봉

② 직원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2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위법·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제재보다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장 중한 제재가 정직 이상인 경우

2. 경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경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실질적으로 1개의 위법·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제50조(직원제재의 감면) ①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원에 대한 제재를 양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4.4.30>

1. 위법·부당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

2. 위법·부당행위를 부서 또는 영업점에서 발견하여 이를 보고한 감독자

3. 감독기관의 인지 전에 위규사실을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자

4. 가벼운 과실로 당해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하였으나 손실액을 전액 변상한 자

5. 금융분쟁조정신청사건과 관련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감독원장의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그 위법·부당행위에 관련된 자 <개정 2004.4.30>

6. 규정 제23조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재대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5>에 정하는

“제재양정감정기준”에 따라 제재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제재양정의 감경은 1회에 한하며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금융 관련 범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규정에 의하여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금감위위원장, 감독원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의 표창을 받은 공적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양정을 감경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공적은 제외한다.
〈신설 2001.8.17〉

1. 제재대상 직원이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제재 이전의 공적
2. 제재대상 직원이 소속 금융기관 입사전에 받은 공적

제50조의2(확약서·양해각서 운용) ① 감독·상시감시 또는 검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의 경중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확약서로, 중대한 사항은 양해각서로 조치한다.

② 확약서는 금융기관의 담당 임원 또는 대표자로부터 제출 받고 양해각서는 금융기관 이사회 구성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체결한다. 〈개정 2005.10.28〉

③ 감독원장은 확약서·양해각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그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재체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2.27]

제50조의3(사후관리) 확약서 및 양해각서의 효력발생일자, 이행시한 및 이행상황 점검 주기는 각 확약서 및 양해각서에서 정한다. 이행상황 점검주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매분기 익월말까지 분기별 이행상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2.27]

제51조(기타 조치) 감독원장은 규정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업무방법개선의 요구
금융기관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하여 그 처리기준, 절차·운영 등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삭 제 <2005.8.26.>
3. 삭 제 <2005.8.26.>
4. 관련기관앞 통보
금융관련법규 이외의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검사결과 관련자가 진술일 현재 퇴직한 경우로서 관련기관 등의 업무 및 감독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사실 등을 통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절 제재조치의 운영

제52조(관련자의 구분)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4.2.27>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 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제53조(고발 등 조치시의 병과) 감독원장은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수사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당해 위법행위와 관련된 다른 제재조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에 대한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2. 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절 제재절차 및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제54조(검사결과 심사·조정) ①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검사서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건의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당해 검사국장, 지원장 또는 감독국장(이하 “제재실시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재실시부서장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검사내용 등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0.28>

1. 지적사항 내용, 적용법규, 조치요구 구분의 적정성 등 실질적 사항
2. 입증자료의 확보 여부
3. 검사서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건의서의 기술방식 등 형식적 사항

②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조정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제재실시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내용의 보충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0.28>

③ 제재실시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의 보충 또는 수정요구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의대상 지적사항은 심의회에서 결정하고 기타사항은 소관업무담당 부원장의 재정절차를 거쳐 심사조정결과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5.10.28>

④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조정한 내용을 기록·유지한다. <개정 2005.10.28>

제55조(심의회의 구성) ① 규정 제33조제1항에 의한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재심의담당 부원장 <개정 2005.10.28>
 2.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개정 2005.10.28>
 3. 제재심의담당 부원장이 지명하는 부원장보 1인 <개정 2005.10.28>
 4. 금융관련법령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교수, 금융전문가 등에서 감독원장이 위촉하는 자 4인 <개정 2001.2.12, 2001.8.17, 2004.2.27>
- ② 제재심의담당 부원장은 심의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유고시에는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10.28>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1.2.12>

제5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규정 제33조제2항 본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규정 제17조제9호의 기관주의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5.8.26.>

② 규정 제33조제2항제1호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8.26.>

1. 규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요구사항
2. 규정 제21조제2항의 조치사항중 검사실시부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7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매월 첫째 및 셋째 목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시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2.12>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하며 필요시 서면에 의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③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재실시부서장은 심의회 부의안을 작성하여 이를 심의회에 부의한다. 이 경우 제재실시부서장은 제재심의담당 부서에 동 심의회 부의안을 송부하며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회부의안의 내용의 보충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0.28>

④ 당해 금융기관의 장, 관련 임직원, 감사원, 기타 참고인(이하“참고인”이라 한다)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심의회 위원장은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8.31.>

⑤ 심의회에 참석한 자는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4.2.27>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 호주, 가족의 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자기가 속한 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⑦ 위원은 제6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⑧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의안관리, 의사록 작성, 기타 필요한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5.10.28>
- ⑨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8조(심의결과 보고 등) ①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8>

- ②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제1항에 의한 감독원장앞 보고후 소관 제재실시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8>
- ③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가 제2항에 의한 심의결과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제재실시부서장은 이를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8>

제59조(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① 검사실시부서장은 규정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에 의하여 제재조치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회 개최전에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재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3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규정 제17조제9호의 기관주의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05.8.26.>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제재대상자는 지정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검사실시부서장은 제재대상자가 구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2.27]

제60조(청문)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35조제3항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일 10일전까지 제재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주재자,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제재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제재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청문을 주재한 제재실시부서장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이의신청) ① 규정 제37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제재통보서 또는 검사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금감위 또는 감독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1.>

③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제재실시부서장은 이를 관련 검사자료 등과 함께 검사총괄담당 부서장에게 이첩하고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의 이의신청 처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4.2.27, 개정 2006.8.31.>

④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이의신청사항에 대한 처리안을 작성하여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에게 심사-조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검사총괄담당부서장 및 제재실시부서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이의신청 처리과정에서 제재관련자가 새로이 추가되는 등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실시부서장에게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재실시부서장은 재검사결과 조치안을 검사총괄담당부서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04.2.27, 2005.10.28, 2006.8.31.> <단서신설 2004.4.30>

⑤ 제4항에 의한 심사-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심의회부의안을 작성하여 제재심의담당 부서를 통해 심의회에 부의하고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7, 2005.10.28>

⑥ 제재실시부서장은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7, 2006. 8. 31.>

1. 삭 제 <2006.8.31.>

2. 삭 제 <2006.8.31.>

⑦ 삭 제 <2006.8.31.>

⑧ 규정 제37조제5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심하는 경우에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해당 제재실시부서장으로부터 검사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제4항과 제5항의 절차를 취하며, 제59조의 절차에 따라 제재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줄 수 있다. <개정 2005.10.28, 2006. 8.31.>

제4절 제재조치의 이행

제62조(제재내용의 이사회 등 보고) ① 금융기관의 장은 규정 제38조에 의거 다음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규정 제1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임원의 해임권고를 받은 금융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상임이사 및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 제재통보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보고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주주총회가 없는 금융기관은 주주총회에 상당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한다. 이하 같다)에 부의할 때에는 위법·부당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은 이사회에 제재통보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보고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제재일자, 위법·부당행위의 내용, 관련임원별 위법·부당행위 및 제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해당국 본점에 서면보고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가.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중 영업 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의 영업 또는 업무정지, 위법·부당행위의 중지, 계약이전의 결정, 기관경고

나. 임원에 대한 제재중 업무집행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개정 2001.8.17>

- ②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원이 제재조치전에 사임한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63조(징계절차) ①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징계는 당해 금융기관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② 금융기관은 외부감독기관의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소송계류중인 사안에 대하여 징계절차의 진행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4조(제재내용의 기록·유지) ① 금융기관은 임직원이 위법·부당행위와 관련하여 제재 또는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위법·부당행위의 내용 및 제재·징계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고 이를 인사에 엄정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이미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위법·부당사실 등을 감독원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퇴직한 직원의 징계대상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위법·부당사실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65조(징계기록의 말소) ① 금융기관은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은 후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음이 없이 5년이 경과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기록을 말소한다. 다만, 감봉 이하의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른 징계처분을 받음이 없이 다음 각호의 1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상별규정 등 관련내규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징계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감봉 : 3년

2. 견책 : 2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기록을 말소한 후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 5 장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 보고

제66조(자체감사계획 제출 등) ① 규정 제40조에 의한 감독원장의 자체감사계획 요구는 금융기관의 자체감사와의 검사중복 회피 또는 내부통제실패 파악 등 금융기관의 업무부담 완화 또는 중요한 감독목적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의해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 감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7조(금융사고 보고) ① 규정 제41조에 의하여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부터 기망, 권유, 청탁 등을 받아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 검사에서 적출된 금융사고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며, 여신심사 소홀 등으로 인하여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1. 금융기관의 사고금액(피해예상금액 기준)이 3억원(규정 제3조제1호가목 내지 라목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및 거목 내지 더목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중앙회 이외의 금융기관은 1억원)이상인 경우
2.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3.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4.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②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는 주된 거래관계에 있는 보험모집·중개조직의 매월중 금융사고 발생내용을 종합하여 다음달 2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신용협동조합법·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의한 각 중앙회장은 관할 조합의 매월중 금융사고 발생내용을 종합하여 다음달 2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금융사고보고 구분 및 시기) 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사고의 보고는 즉시보고, 중간보고 및 종결보고로 구분한다.

1. 즉시보고

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한 즉시 서면, 팩시밀리 또는 전화로 보고하되, 전화로 보고한 경우에는 즉시 서면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한다.

2. 중간보고

제1호의 즉시보고후 제3호의 조치완료시까지 2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발견일로부터 2월 이내 및 종결시까지 매 6월마다 보고한다.

3. 종결보고

사고자에 대한 인사조치 및 피해금액에 대한 보전조치가 완료된 때에 보고한다.
다만, 피해금액에 대한 보전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법적절차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인사조치 완료후 종결보고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69조(조합 등에 대한 특례)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검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신용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담
당 검사국장은 당해 설립법에 의한 중앙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검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중앙회장은 자체감사결과 조합 임원에 대하여 직무정지 이상, 직원에 대하여 정직
이상의 징계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매분기말 다음달 20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이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 삭 제 <2005.10.28>

제71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특례)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이 대출
등을 취급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7>에서 정
한 기준에 의한다.

제72조(신용협동조합에 대한 특례) 신용협동조합법상의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이 대출
등을 취급함에 있어 신용협동조합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8>에서 정
한 기준에 의한다.

제72조의2(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수수료 부과 특례) ① 검사실시부서장은 대부업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에 의해 시·도지사가 요청한 검사를 실
시하였을 경우 검사수수료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매분기 익월 7일까지 검사총괄담당
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규정 제47조의4제2항에 의한 검사수수료 부과고지서를 작
성하여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당해 대부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고지서에는 당해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실시기간, 검사수수료 부과
금액, 납부기일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검사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 회계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3.2.28]

제73조(서식의 제정) 검사총괄담당부서장 및 제재심의담당부서장은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0.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세칙의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검사규정시행세칙 및 금융기관제재규정시행세칙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1999. 3. 12 이전에 보험, 증권·선물기관이 받은 기관경고는 문책기관경고를, 기관주의는 주의적기관경고를 받은 것으로 보며, 증권·선물기관의 임원이 받은 중경고는 문책경고를, 경고는 주의적경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이 세칙의 시행으로 새로운 내용의 제재가 부과되거나 제재가 가중되는 경우에는 이 세칙 시행일 이후 발생된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세칙 시행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종전의 금융기관검사규정시행세칙 및 금융기관제재규정시행세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세칙중 그에 해당하는 세칙이 있을 때에는 이 세칙 또는 이 세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폐지규정)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금융기관검사규정시행세칙 및 금융기관제재규정시행세칙은 폐지한다.

부 칙(2001. 2.1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1. 3. 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1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1. 8. 17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칙의 시행으로 새로운 내용의 제재가 부과되거나 제재가 가중되는 경우에는 이 세칙 시행일 이후 발생된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2001. 11. 13)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2001년 11월 9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검사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15)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2002년 5월 10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원의 검사실시 및 검사결과 조치와 관련된 개정 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검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2. 28)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2003년 2월 28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2. 27)

이 세칙은 2004.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4. 30)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2004년 4월 30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7. 2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4. 7.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8. 2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2005년 8월 26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 의결)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주의조치는 종전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개정세칙 제47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세칙 시행이전에 조치한 실적도 포함하되, 최종 제재대상 위법·부당행위는 개정세칙 시행일 이후에 신규 취급하거나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부 칙(2005. 10. 28)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2005년 10월 28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8. 31)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2006년 8월 25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검사원 복무수칙

I. 검사원의 사명

1. 검사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 공정한 검사자세를 확립함으로써 건전한 금융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검사원은 금융산업발전의 역군임을 명심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3. 검사원은 창의, 책임, 봉사의 자세로 부정과 부조리 척결에 앞장서야 한다.
4. 검사원은 인격도야 및 전문지식 습득과 검사기법의 연구개발 등 검사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II. 검사자세

1. 검사원은 금융 및 감독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숙지하고 검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사자세를 확립한다.
2. 검사원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하고 일체의 선입관이나 정실을 배제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은 법령, 규정, 기타 복무에 관한 제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4. 검사원은 검사성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등 검사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검사원은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검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6. 검사원은 검사실시기간중 금융기관의 일상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검사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7. 검사원은 검사결과를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원인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8. 검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 상급자 등의 부당한 업무지시나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부당행위의 은폐 및 축소 등을 위한 제반압력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III. 검사예절

1. 검사원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를 삼가하고, 피검사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항상 경어를 사용하는 등 친절, 겸손한 자세로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검사원은 용모, 복장 등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검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일상직무 및 사생활에 있어서도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생활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IV. 금지사항

1. 검사원은 검사를 빌미삼아 인사청탁, 여신강요, 사적인 민원해결요청 등 직권을 남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검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접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3. 검사원은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검사원은 검사실시기간중 직무와 관련하여 검사원 이외의 자와 불필요한 접촉을 하거나 검사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불건전한 오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검사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거래 조건 등에 비추어 공정성이 의문시되는 일체의 유가증권 취득 및 주식취득을 위한 일체의 사설펀드 가입 등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검사원은 변제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차입이나 무분별한 채무보증 행위로 인해 감독원의 명예를 훼손시켜서는 아니된다.

<별표 2>

제재양정기준

위법·부당의 정도 유 형	비위의 도가 극심 하고 고의 또는 중 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심 하거나 중과실이 있 는 경우	비위의 도가 경 하거나 경과실이 있는 경우
법령, 관계규정 또는 감독기관 의 명령, 처분, 지시등의 위반	면 직	면직 ~ 감봉	견 책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 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	면직 ~ 정직	감봉 ~ 견책
당해 금융기관에 금전적손해 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	면직 ~ 감봉	견 책
당해금융기관의 정관 또는 내 규를 위반하거나 충실의무의 위반	"	"	"
직무태만	"	정직 ~ 감봉	"
기타 위법	"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양정 기준

1. 관련자의 구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① 행위자 :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를 지시 또는 공모한 자 및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한 자
- ② 감독자 : 위반행위인 그 업무의 처리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 ③ 추종자 : 위반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지시를 추종한 자

2. 관련자에 대한 조치기준

① 법 제3조 위반행위(금융실명거래 위반)

거래금액(위반행위 당시의 거래금액. 다만 증권거래계좌의 경우에는 입금액을 말한다)의 다과,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책임정도		행위자	추종자	감독자
고의	3억원 이하	감봉3월 이상	감봉 이하	감봉 이하
	3억원 초과	정직 이상		
과실	3억원 이하	견책 이하	견책 이하	견책 이하
	3억원 초과	감봉이하		

② 법 제4조 위반행위(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책임정도	행위자	추종자	감독자
고의	감봉3월 이상	견책 이하	견책 이하
과실	견책 이하	주의	주의

③ 법 제4조의2(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의무) 및 법 제4조의3(금융거래정보 제공 내용 기록·관리의무) 위반행위

책임정도	행위자	추종자	감독자
고의	견책 ~ 감봉1월	견책 이하	주의
과실	주의	주의	주의

3. 감사통할책임자 등 기타 감독자에 대한 조치

- 가. 영업점 감사통할책임자에 대하여는 금융질서문란, 사회적물의를 정도에 따라 견책 이상으로 제재할 수 있다.
- 나. 부점장에 대하여는 감독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금융질서문란, 사회적 물의의 정도에 따라 견책 이상으로 제재할 수 있다.
- 다. 임원과 감사에 대하여는 재임기간중 관할 부점장이 행위자로서 위반한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독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4. 기관에 대한 조치

위반의 정도가 심하여 당해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심히 문란시킨 경우에는 당해기관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제재양정의 가중·감경

- 가. 법 제3조 위반행위 관련 계좌수가 5계좌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제재보다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 나. 제재를 받은 자가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보다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 위반시점 이전에 다음의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재양정을 한 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세칙 제5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

(2) 감독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공적

라. 단위부·점내에서 위반사실을 스스로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재양정을 한 단계 감경할 수 있다.

마. 경미한 위반으로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보다 1단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4>

제재의 효과

구분 \ 종류	면 직	정 직	감 봉	견 책
신분상조치	파 면	정직기간+18월간 승격·승급불허	감봉기간+12월간 승격·승급불허	6월간 승격·승급불허
근속기간	—	포 함	포 함	포 함

* 승격·승급불허기간은 근로·고용계약 종료후 계약연장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계약직으로서 사실상 임원신분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포함)에도 적용

<별표 5>

제재양정 감경기준

제재양정기준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재양정		포상자에 대한 감경된 제재양정	
면 정 감 견	직 직 봉 책	정 감 견 주	직 봉 책 의

<별표 6> 삭 제 <2005.10.28>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의 출자자여신 등 취급시 제재양정기준

1.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취급 행위

가. 대상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의 출자자(소액주주 제외), 임원 및 직원(소액대출 제외)에 대한 대출등과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대출 등의 취급

나. 제재양정의 운용

제재의 종류	취급합계액 비율 (자기자본대비)
해임권고/면직	10%초과
직무정지/정직	5%초과 10%까지
문책경고/감봉	5% 이하

주) 직전사업연도말 자기자본임(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

2.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 행위

가. 대상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동일인한도 초과취급

나. 제재양정의 운용

제재의 종류	차주별 한도초과취급액 비율 (자기자본대비)	한도초과취급 합계액 비율 (자기자본대비)
해임권고/면직	50%초과	100%초과
직무정지/정직	30%초과 50%까지	50%초과 100%까지
문책경고/감봉	20%초과 30%까지	30%초과 50%까지
주의적경고/견책	10%초과 20%까지	20%초과 30%까지

주 1) 동일인한도 초과취급 합계액비율 20%까지, 차주별 동일인한도 초과취급 액비율 10%까지는 시정 또는 주의조치한다.

2)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임. 다만, 결산결과 결손금 발생 등으로 자기자 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하기 전의 금액(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본문 조항)

3. 제재양정의 가중 또는 감경

취급 당시의 동기나 상황 및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사유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재양정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 가. 동일인한도 초과취급으로 부실여신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기준양정보다 가중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나. 출자자에 대한 대출 등 및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행위가 전번 검사와 이번 검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일반지적사항 포함)되는 경우 가중제재한다.
- 다. 저축은행인수 및 출자자금 지원을 위한 출자자대출행위가 검사에서 지적되는 경우 취급금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해임권고(면직)조치할 수 있다.
- 라. 전결권한의 위임여부에 불구하고 대표이사는 주된 행위자로 본다.
- 마.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에 대하여 해당 제재양정기준보다 2단계 이하의 제재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정리된 경우에는 1단계 낮추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검사착수 이후에 정리한 경우에도 초과분을 전부 해소한 경우에는 1단계 감경할 수 있다.
- 바.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 및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 기 타

2000.12.8. 이전에 취급된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취급 행위 및 동일인한도 초과취급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금융기관제재규정시행세칙의 규정에 의한다.

신용협동조합등 임직원의 동일인대출한도초과 대출취급시 제재양정기준

1. 대상 행위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95조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에서 정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

2.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에 따른 제재양정기준

제재의 종류	자기자본대비 기준		총자산대비 기준	
	차주별한도초과 취급액비율	한도초과취급 합계액비율	차주별 한도초과 취급액비율	한도초과취급 합계액비율
개선(改選)/면 직	50% 초과	100% 초과	2.5% 초과 또는 2억원(5억원) 초과	5% 초과 또는 6억원(18억원) 초과
직무정지/정직	30% ~ 50%	50% ~ 100%	1.5% ~ 2.5% 또는 1억원~2억원(3억원~5억원)	2.5% ~ 5% 또는 3억원~6억원(9억원~18억원)
문책경고/감봉	20% ~ 30%	30% ~ 50%	1% ~ 1.5% 또는 0.7억원~1억원(2억원~3억원)	1.5% ~ 2.5% 또는 2억원~3억원(6억원~9억원)
주의적경고/견 책	10% ~ 20%	20% ~ 30%	0.5% ~ 1% 또는 0.3억원~0.7억원(1억원~2억원)	1% ~ 1.5% 또는 1억원~2억원(3억원~6억원)

- 주 1) 동일인대출한도가 자기자본기준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자기자본대비 초과비율로, 총자산기준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총자산대비 초과비율(금액)로 양정
- 2)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임.
- 3) 각 정해진 범위는 '초과'부터 '까지'임.
- 4) 총자산대비 기준으로 양정시 한도초과금액에 대한 제재종류가 총자산비율대비기준과 금액대비기준에 따라 서로 다를 경우 더 무거운 제재로 함.
- 5) 대출한도 초과취급 규모가 최저 제재양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시정 또는 주의 조치
- 6) 괄호부분은 금액대비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신용사업을 실시하는 품목조합 포함),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양정기준임.

3. 제재양정의 가중 또는 감경

취급 당시의 동기나 상황 및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사유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

재양정을 가중 또는 감경하여 운용할 수 있다.

- 가.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으로 부실여신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기준양정보다 가중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나.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행위가 전번 검사와 이번 검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일반지적사항 포함)되는 경우 가중 제재한다.
- 다. 검사착수 이전에 해당 제재양정기준보다 2단계 이하의 제재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정리된 경우에는 기준양정보다 1단계 낮추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검사착수 이후에 정리한 경우에는 초과분을 전부 해소한 경우에만 1단계 감경할 수 있다.
- 라.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4.4.30>

검 사 실 시 통 보 서

제 - - 호

1. 대상기관(점포) :
2. 검 사 종 류 :
3. 검사 실시 일자 : 20 . . . 부터 * 이번 검사는 약 일 동안 실시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4. 검 사 원 :
5. 검사 주관 부서 : (전화번호 :)

20 . . .

금 융 감 독 원 장

문서번호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검사 국장
제 목 사고보고(즉시보고, 중간보고, 종결보고)

1. 사고 발생 부점 :
2. 사고발생일(기간)
3. 사고발견(인지)일 :
4.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 고
사 고 자				
관련 임직원				

5. 사고내용

가. 사고구분: ① 금전사고(횡령, 유용, 배임, 사기, 도난, 피탈 등), ② 금융질서 문란행위(금융실명제 위반, 사금융알선, 금품수수, 기타)중 선택

나. 사고내용

다. 사고관련금액 : 백만원(사고와 관련된 총금액)
사 고 금 액 : 백만원(사고발견시점의 피해금액)
손실예상금액 : 백만원(사고금액 - 회수예상금액)

6. 사고발견경위 :

7. 사고조치 내용(또는 계획)

가.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에게 대한 조치(계획)

나. 사고금 보전조치(계획)

8. 사고발생원인, 내부통제제도(운영)의 문제점 및 재발방지대책

가. 사고자 측면 :

나. 금융회사 내부통제 측면 :

9. 사고발생 부점에 대한 최근 자체감사 내역(감사종류, 감사실시기간, 감사인 직·성명, 주요 지적사항 등)

10. 사고발생 부점의 자체감사 담당책임자 직·성명

11. 기타 참고사항(고자·고발여부, 기타 사고 사후관리상황 등)

○ ○ 기관장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장) ○ ○ ○ (인)

붙 임 : 1. 인사조치 내용

2. 사고자 인적사항

주 : 1) 본 양식은 즉시보고, 중간보고 및 종결보고 공통으로 사용함.

2) 즉시보고로 기보고한 사고의 중간보고 및 종결보고의 경우에는 즉시보고의 문서번호를 기록하고 중복되는 내용은 기재를 생략할 것.

이 계 경 의 원

1. 선진국 주택금융 감독·규제 체계 연구

□ 불임 참조

불임 : 주택금융 감독·규제 체계 연구 보고서

<출장 보고서>

선진국 주택금융 정책연수 결과

2006. 7

금융감독위원회

— < 목 차 > —

I. 주택 금융정책 연수단 구성 및 훈련기관

II. 영국 방문기관 면담 내용

1. FSA(Fianancil Supervisory Agency)
2. Morgan Stanley
3. CML(Counsil of Mortgage lenders)
4. HSBC

III. 독일 방문기관 면담 내용

1. Bafin(독일 금융감독청)
2. Euro Hypo(모기지 은행)

IV. 정책적 시사점

정책연수단 구성 및 훈련 기관

☐ 정책연수단구성

- 단장: 박대동(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 1국장)
- 단원: 박성동(기획예산처 경제재정행정과장)
최유삼(금융감독위원회 보험감독과 서기관)
변제호(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사무관)
최영전(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사무관)
박주영(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과 사무관)
박재훈(금융감독위원회 은행감독과 사무관)
한정희(건설교통부 주거복지지원팀 사무관)
김승래(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과 세무주사)
정재선(주택금융공사 유통화개발부장)
박영수(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조사역)

☐ 훈련기관

- 영국 Financial Services Authority(FSA, 금융감독청)
Morgan Stanley
Council of Mortgage Lenders(CML, 모기지은행 협회)
HSBC(모기지 취급은행)
- 독일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FFSA, 금융감독청)
Euro Hypo Bank(모기지 전문 은행)

I -1. 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면담결과

1. 면담 개요

면담일시	2006년 6월 2일 09:00 ~ 10:20
면담자	Mr. Nick Lock, Retail Firms Division Mr. Lloyd Barton, UK Economist Mr. Dean Minot Associate Wholesale Banks

2. 면담 요지

가. 주택금융취급 동향

☐ 영국의 모기지론 취급 현황

- 모기지론 잔액(988,713mn £) 의 전년(893,200mn £) 대비 **10.6% 증가('06.3.)**

* '03~'04년중 15%로 최고 수준의 증가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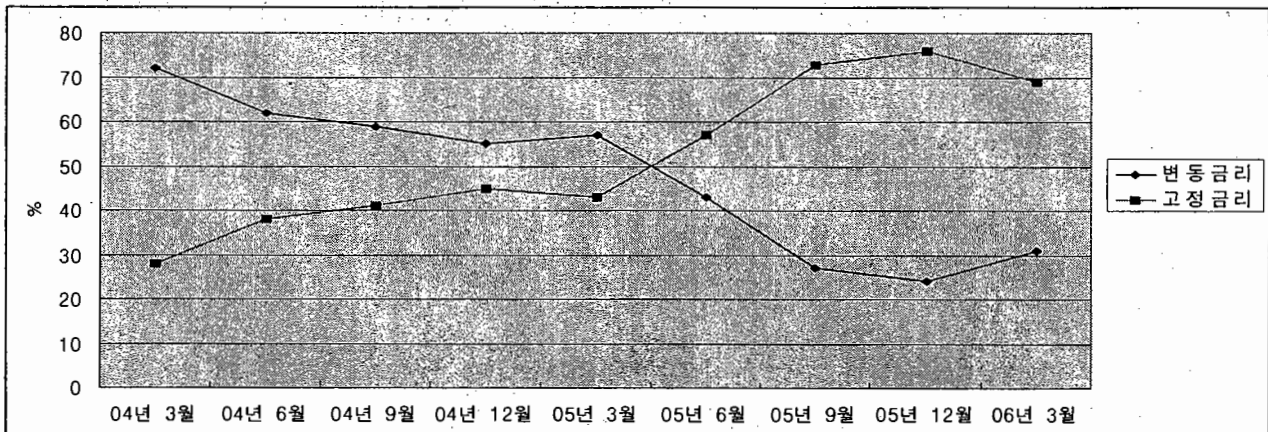
- 은행들의 경우 '06.3월을 기준으로 5.4%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대출잔액은 571,112(mn £)

- '04년중반 이후 변동금리대출 이자율이 고정금리대출(5년 고정금리인 경우)의 경우보다 높은 상태

* '06.2월현재 5년고정금리 이자율은 4.89%, 표준변동금리 이자율은 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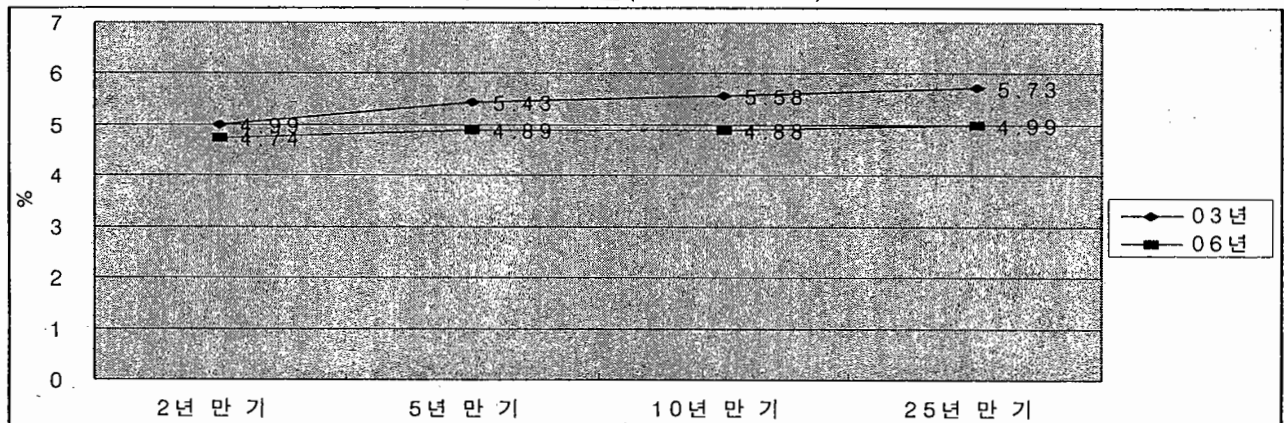
- '05년 하반기부터 고정금리대출 취급비중이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06.3월 고정금리대출 취급비중은 69% 수준에 이름

<변동금리 및 고정금리 비중변화>



- 이는 수익률곡선(Yield Curve)이 평평해지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됨에 따라 고정금리대출의 금리조건이 유리해졌기 때문

<수익률곡선(Yield Curve)>



- * 다만, 영국의 경우 고정금리대출은 대부분 대출취급후 최초 1~3년간만 이자율이 고정되는 조건으로 취급되므로 장기·고정금리 대출의 증가는 아님

□ 최근 고정금리 모기지론 취급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

- 채권시장금리가 하향안정세를 유지하여 왔으므로 소비자들이 현 금리 수준으로 일정기간 대출금리를 Lock-in 시키려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 다만,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기간이 단기인 점에서 미국의 전통적인 장기·고정금리 상품과 다름

□ 장기·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 촉진을 위한 조치사항

- 영국 소비자들은 다른 조건보다도 초회 납입 원리금이 가장 낮은 변동금리 모기지론 상품(Discouned Varialbe Loan)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짐
- 따라서, 소비자들이 변동금리 상품을 선택하는 데에 따른 위험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모기지론을 판매하는 모든 기관들이 소비자에게 FSA가 마련한 Key Facts를 소비자에게 제공·설명하도록 의무화

< Key Facts의 주요 내용 >

- 서비스 제공 범위
 - 특정 모기지론 추천 또는 모기지론에 대한 정보 제공 여부
- 고객 제공 정보
 - 모기지론 이용 목적, 이용 희망 모기지론 조건
- 모기지론 상품 상세 조건
 - 금리조건(고정/변동), 대출취급 금융회사, 적용 LTV 등
- 모기지론 이용에 따른 총비용(Annual Percentage Rate 등)
- 매월 원리금상환액
- 모기지론 이용에 따른 위험에 대한 이해 여부
 - 이자율 상승, 고객소득 감소에 따른 위험
- FSA website에서 관련 추가 정보사항 제공 사실을 명시
-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초기 수수료
- 보험가입 및 보험료
- 조기상환수수료
- 주택이주 시 유의사항
- 정상상환을 초과한 추가상환금액의 처리 조건 등
- 모기지론에 대한 추가 정보사항의 취득
 - FSA에서 상품선택을 돕기 위하여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website (www.fsa.gov.uk/consumer) 또는 전화를 통해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시
 - FSA website는 상품비교를 돕기 위해 "Comparative Tables"도 제공
- 채무불이행 시 주택이 경매 처분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시

- FSA는 모기지론을 이용하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website를 통해 시장금리 상승 시 상환부담 변화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Mortgage Calculator 등 다양한 정보 및 Tool을 제공

나. 주택금융관련 규제 · 감독

☐ 대출기관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주택시장에 버블에 대한 영국의 감독기관의 통제방식

- 영국에서는 자본금규제(BIS 자기자본 비율; 8%) 방식에 의하여 은행들의 모기지론 취급을 통제하는 간접규제방식을 도입
 - LTV 비율을 규제하여 개별 금융회사들이 취급하는 대출금액을 제한하지는 않고 있음
 - 금융회사 간 과당경쟁에 따른 위험발생 가능성은 중앙은행에서 금리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통제

☐ LTV 비율을 직접 제한하고 있는 감독규정의 존재 여부

- 지금까지 명시적인 규정이나 법규는 없는 상황
- 과거 BASEL I 의 경우 모기지론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일률적으로 50%였으나, 향후 BASEL II가 적용되게 될 경우 위험가중치를 LTV에 차등화할 예정
 - FSA에서 LTV가 80%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75%(80% 이하는 35%)로 규정할 계획
- * (예시) 1,000파운드의 모기지대출(80% 이하 LTV)에 대해 위험가중치 35%를 적용할 경우 위험가중자산은 350파운드가 되고 8% BIS 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자본은 28파운드임

-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LTV 수준은 영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 가능(EU 규정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게 되는데 각 국가에게 일정한 범위의 재량권을 부여)

□ 감독기관으로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LTV를 통한 감독정책의 필요성 여부

- FSA가 개별 금융회사가 공급하는 대출금액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제 근거가 없어 LTV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 차등적용 이외에 개별은행에 대해 직접적으로 LTV를 규제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모기지 대출한도를 직접 규제하지 않고 위험도가 높은 모기지 대출에 보다 많은 필요자본(capital requirement)을 보유하게 하여
- 위험도가 높은 모기지 대출취급시 채권금융기관의 비용 부담을 커지도록 하는 간접규제방식을 채택할 예정
- 자본금규제 방식에 의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FSA의 감독정책이며,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

□ 한국에서는 버블발생 우려 지역에 대하여 LTV 비율을 규제하고 있는데, 영국에서도 이와 같이 LTV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그리고 DTI 비율에 대한 규제는 있는지 여부

- FSA는 금융회사의 자본금규제에 대한 조정권한을 보유
- High LTV 조건의 모기지론 취급이 과도하게 많다고 판단될 경우 LTV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나, 큰 틀에서 볼 때 특정은행에 대해서만 차별화된 자본금 감독정책을 적용한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

< 영국의 High LTV에 대한 규제 사례 >

- 영국에서는 1989~1993년 중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이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일정비율(80%) 초과 LTV 조건으로 취급된 모기지론의 경우였음
 - 이때 Building Societies* 기관의 High LTV 또는 High Income Ratio(연소득 대비 대출금액이 높은 경우)에 대하여 High Capital Charge를 부과
- * 주택금융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주택조합

- DTI를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영국의 금융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연소득 대비 대출금액 비율(Income Ratio)을 관리

□ FSA의 모기지 대출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를 위한 규제 방식

- FSA는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2000에 의거하여 채권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우려된다고 인정된 경우
- 우선 자본금규제 방식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출취급을 금지시키거나, 예금수취 라이선스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며
- 마지막 수단으로, 당해 채권금융기관의 경영진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FSA는 개별 금융기관에 대해 위험구조(risk profiles)를 상시적으로 분석·평가
 - 인지된 위험요인에 대해 이행시점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금융기관에 요구하고
 - 중요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자본적정성(adequate capital requirements)을 다시 점검
 - 상시감시를 위하여 HSBC와 같은 대형은행에 대해서는 5~6명으로 구성된 전담 RM팀을 구성하고 소형금융기관에 대해서는 1~2명의 감시인력을 배치

I-2. Morgan Stanley 면담결과

1. 면담 개요

면담일시	2006년 6월 2일 10:30 ~ 11:50
면담자	Dr. David Miles, Managing Director, Morgan Stanley

2. 면담 요지

가. 주택금융 취급 동향

☐ 영국의 모기지론 시장 현황

- 변동금리대출 위주의 모기지론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소비자들의 상품 관련 위험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모기지론을 선택
- 영국에서는 최근 고정금리부 모기지론(통상 최초 2~5년간 고정금리 적용후 변동금리로 변경) 이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아래 2가지로 요약 가능

- 1) FSA의 감독규정에 따른 변동금리대출 이용에 따른 위험고지 (Disclosure) 의무화 조치
- 2) Yield Curve의 변화로 고정금리대출과 변동금리대출의 대출금리갭이 대폭 축소*

* '03.11월 기준 Discounted Variable과 5년 고정금리 상품 간 금리갭은 1.59%p였으나, '06.2월 0.21%p로 축소(자료: '06.2.10일 UK Economics Mortgage Pricing - an Offset to Monetary Policy, Morgan Stanley)

- 최근 5년 고정금리와 10년 또는 25년 고정금리 상품간의 대출 금리갭도 거의 없는 상황인데, 장기상품 선택비중은 높지 않은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아래 2가지로 요약 가능

- 1) 영국 소비자들은 중앙은행이 단기금리를 급격히 상향조정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음
- 2)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이사를 6~7년 주기로 하는데 막연하게 장기·고정금리대출을 이용하면 이사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한편 고정금리대출은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등 Flexibility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

□ 금리캡이 있는 변동금리 모기지론의 이용비중이 낮은 원인

- 현재 소비자들은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일반적으로 금리캡이 설정된 상품의 대출마진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용비중이 낮다고 생각

□ 영국 금융회사들의 모기지론 영업을 위한 자금조달방법

- 예금, MBS 발행 및 Covered Bond 발행으로 구분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금조달원은 예금이며, MBS 발행규모도 EU 국가 중 최대 규모
 - GMAC과 같이 예금을 전혀 수취하지 않고 모기지론 영업을 영위하는 기관도 등장

<모기지론 재원조달 방식>

('04. 3/4분기)

총액(bn GBP)	MBS	Covered Bond	예금
853.3	90.7	14.3	790

□ 영국에는 미국의 Fannie Mae와 같은 유동화 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금융회사들에게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론을 취급하기 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기금리 비중이 높은 것은 아닌지 여부

○ 영국의 금융회사들은 ① 고정금리부 채권 발행 또는 ② 최근 대형은행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Covered Bond 발행을 통해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③ 스왑시장에서 금리위험을 효율적으로 헷지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자금 조달 측면에서 장기고정금리 모기지론 취급에 문제가 없음

○ 이에 근거하여, 재무성에서 의뢰한 Miles Report 작성 당시 미국의 Fannie Mae와 같은 유동화전문기관의 설립을 제안하지 않았음

□ 미국과 영국의 모기지론 시장의 향후 발전방향

○ 차이점은 여전히 크지만 최근 점점 차이점이 줄어드는 추세

- 미국에서도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이를 증명하며, 전반적으로 미국시장이 영국시장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

- FSA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모기지론 이용고객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개선이 있었는지 여부
- 아직까지도 금융 소비자의 모기지론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
- 현재 금융회사는 FSA 감독기준별로 8~9쪽에 달하는 많은 양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향후 좀 더 표준화하여 핵심 사항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
-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상품 및 관련 위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할 것임

나. 주택금융 관련 규제 · 감독

□ 영국의 주택가격 동향 및 중앙은행의 부동산시장에서의 역할

- 2000년 이후 5년간 주택가격은 1.7배 수준으로 상승했고 특히 2002년의 경우 17%나 상승했는데, 이자율이 하락이 주원인으로 분석됨
- 중앙은행은 부동산가격 급등을 우려하여 단기금리를 상향조정 하지는 않았으며, 소비자들이 부동산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믿고 주택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
- 이에 따라, '05년에는 주택가격이 연5.6% 상승하는데 그치는 등 급격한 상승세가 꺾인 상태

<주택가격지수 및 증가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주택가격지수	87.7	95.1	111.2	128.7	143.9	151.8
증가율(%)	14.3	8.4	17.0	15.7	11.8	5.6

□ LTV 규제에 대한 영국 감독당국의 견해

- LTV에 관한 직접 규제방식을 택하지 않고 있으며, 금융기관들이 상업적인 판단에 따라 자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임

□ 주택금융에 있어서 중앙은행과 FSA의 역할

- 중앙은행은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중앙은행과 FSA는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

* FSA의 Board에 중앙은행의 Vice President가 참여하고, FSA의 Chairman은 중앙은행의 Board에 참여

I-3. Council of Mortgage Lenders 면담결과

1. 면담 개요

면담일시	2006년 6월 2일 15:00~16:30
면담자	Ms. Kate Davies, Senior Policy Adviser, CML(모기지은행 협회)

2. 면담 요지

가. 주택금융 취급동향

☐ 영국 모기지은행들의 영업 현황

- 최근 시장경쟁 격화로 순이자마진이 급격히 감소하여 은행 입장에서 모기지론 서비스만 제공해서는 안되고 보험상품 판매 등 타 업무 취급을 통해 수수료 수입을 올려야 하는 상황

○ 대출금리 유형별 모기지론 공급비중 및 평균금리

(단위: %)

	금리캡		고정금리		변동금리		전체	
	비중	평균금리	비중	평균금리	비중	평균금리	비중	평균금리
2000년	-	-	29	6.38	71	6.51	100	6.42
2001년	-	-	27	5.75	73	5.67	100	5.67
2002년	4	4.93	23	5.12	73	4.57	100	4.75
2003년	3	4.68	36	4.23	61	4.41	100	4.38
2004년	3	5.23	34	5.30	64	5.11	100	5.18
2005년(8월)	-	5.22	55	5.22	45	5.60	100	5.38

자료: Survey of Mortgage Lenders (CML Research, Feb. 2006)

○ 금융기관 유형별 모기지론 잔액

(단위: 파운드화, 백만)

	Building Societies (£m)	Banks (£m)	Specialty Mortgage Lenders (£m)	기타기관 (£m)	합계 (£m)	Housing Association에 대한 대출 (£m)	대출건수
2000년	106,990	386,334	41,202	1,937	536,463	11,351	11,173,000
2001년	113,413	418,645	57,234	2,058	591,350	14,106	11,247,000
2002년	123,638	467,601	81,834	2,099	675,172	15,982	11,364,000
2003년	142,312	511,049	118,737	2,494	774,591	17,854	11,452,000
2004년	160,116	543,063	171,805	2,515	877,499	18,713	11,512,000
2005년	173,205	575,797	215,662	2,493	967,157	23,345	11,596,000
2006년 3월	175,205	571,112	239,319	2,468	988,713	24,515	11,620,000

자료: Bank of England, CML Research

나. 주택금융관련 규제 · 감독

□ LTV 적용 관련 모기지은행들의 대출관행

- Building Societies의 경우 자체 내부 규정에 의하여 LTV가 1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
- 일반 상업은행이 경우는 100% 한도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체 판단에 의하여 최대 120%까지 취급 가능
- 최근 일반적으로 75~85% 수준의 LTV 조건으로 취급되는 모기지론이 주종

□ FSA의 모기지론 취급 관련 주요 규제 사항

- '04.10월말부터 FSA에서 모기지론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대하여 감독규정을 적용

- FSA가 마련한 Key Facts를 대출이용자에 대하여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
- Key Facts에 의한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FSA에서 모기지론 영업인가 취소 조치 가능
- 영국은 EU Directives에 의한 모기지론 규제의 적용을 가급적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
- 법제나 대출 관련 제도가 타 유럽 국가들과 상이한 데 기인

※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상품

- Right to Buy, Shared Ownership, Homebuy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운영

Right to Buy	지방정부 또는 Housing Association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할인가격으로 주택구입 기회 부여
Shared Ownership	주택의 구입과 임차의 중간 형태로서, 일반 모기지론을 이용하여 주택의 50% 지분을 매입하고 나머지 잔여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은 Housing Association으로부터 임차하는 방식 (향후 소득 증가로 큰 규모의 모기지론 이용 가능 시 나머지 지분 매입 가능)
Homebuy	주택수요자가 주택가격의 75% 해당 지분을 모기지론을 이용하여 구입하고, Housing Association에서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되 향후 주택이 매각될 때 보유지분에 대한 권리를 청구하는 구조로서, Shared Ownership과 달리 주택수요자가 임차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음

- 기존 Homebuy을 개선한 Open Market Homebuy 등장 예정
- 주택가격의 75%까지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일으키고, 나머지 25% 중 12.5% 해당 금액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구조로 향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차입자와 정부가 이익을 함께 향유

I-4. HSBC 면담결과

1. 면담 개요

면담일시	2006년 6월 5일 10:00~11:00
면담자	Dr. Markus Herrmann, Director, Fixed Income Strategy Mr. James Derek Kehoe, Director, Institutional Sales Mr. Andrew Bristow, Director, Credit Trading

2. 면담 요지

가. 주택금융 취급동향

☐ HSBC의 모기지 가격 및 수수료 설정

- 시장경쟁 심화와 모기지론 취급규모 성장을 둔화에 따른 순이자마진 감소에 대응하여 금융회사들이 대출취급수수료 등 초기 수수료를 올리고 있으나,
- HSBC는 다른 전문 모기지은행들과 달리 가격정책을 전반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 중이며, 이에 따라 마진과 초기수수료를 안정적으로 설정

☐ HSBC의 MBS를 발행 여부

- HSBC, Barclays, RBS와 같은 대형 상업은행들은 MBS를 발행하지 않고 있음

- 과거 **Building Societies**에서 소형 은행으로 변신한 금융회사 (예: Northern Rock plc)들이 MBS를 발행

- Kensington Mortgage, Paragon Mortgage와 같은 소형 전문 모기지은행*들이 주로 MBS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

* 예금수취 기능 없음

- 상위 10개 MBS 발행 대출기관(2003~2005년 상반기)

순위	금융회사	점유율 (%)	누적 발행금액 (미불화, 백만)
1	HBOS	32	59,605
2	Northern Rock plc	26	48,316
3	Abbey National plc	6	10,960
4	GMAC-RFC Ltd.	7	12,237
5	Kensington Mortgage Company Limited	5	8,827
6	Standard Life	5	8,576
7	Pragon Mortgages Trust Limited	4	7,483
8	Southern Pacific Mortgage Limited	4	6,615
9	Platform Funding Limited	3	5,729
10	Bradford & Bingley / Mortgage Express	3	5,294
	상위 10개사 합계	93	173,642
	총 합계	100	187,573

자료: Fitch Ratings

□ 영국의 금융회사들이 Covered Bond를 발행하지 않는 이유

- Covered Bond 시장은 주로 독일과 덴마크에서 발달하였으며, 영국이나 스페인의 경우는 MBS 시장이 발달

- 최근 영국의 대형은행들은 Covered Bond와 MBS의 특성을 결합한 Structured Covered Bond를 발행하기 시작

- Covered Bond의 특성 상 소형 금융회사들은 발행하기 곤란
- Covered Bond를 선호하는 투자자와 MBS에 주로 투자하는 기관은 차별화되어 있음

나. 주택금융관련 규제 · 감독

□ 부동산시장 과열 방지를 위하여 LTV 및 DTI 관련 감독규제를 도입 · 운영하는 정책의 장단점

- 양국의 감독정책 모두가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모기지시장에 대하여 안정성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일정 수준의 규제를 설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
- 영국은 한국과 같이 직접적인 규제가 없으므로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위험을 통제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어떤 감독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단언하기 곤란

□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기수요가 큰 상황에서, 감독기관의 바람직한 감독정책

- BASEL II 방식과 같이 간접규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 특히 과거 장기간에 걸친 실적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특정 수치를 적용하여 LTV를 규제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금융회사가 모기지론 영업과 관련하여 자본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II-1. BaFin(독일 금융감독청) 면담결과

1. 업무협의 개요

면담일시	2006년 6월 6일 10:00~12:00
면담자	Dr. Johannes Engels, Desk Officer, Int'l Policy/Affairs

2. 주요 업무 협의사항 요약

가. 주택금융 취급동향

□ 독일의 모기지론 시장 및 자금조달 현황

- '03~'04년중 유럽 내에서 모기지론 시장 성장률이 최저 수준
 - 실업률 증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및 구동독 관련 문제들로 인하여 주택구입 수요가 감소한데 기인
- GDP 대비 모기지론 비율은 '04년말 기준 52.4%로서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국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
- 독일의 경우 Covered Bond를 통한 조달비중이 매우 높는데 비하여, 유럽 내 다른 국가들은 주로 예금에 기초하여 주택금융 영업을 영위
 - Covered Bond(Pfandbriefe)는 주로 10년 만기 조건으로 발행
 - MBS 발행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

- 대출금리는 주로 고정금리 조건으로 취급되며, 금리조정은 통상 대출취급일로부터 5년~15년 경과시점에 이루어짐

○ 금융회사 유형별 시장점유율

금융회사 구분	2004년말	2005년말
Big Banks	14.00%	13.82%
Regional & Other Commercial Banks	8.45%	8.90%
Foreign Bank (Branches)	0.00%	0.01%
Landesbanken	5.76%	5.74%
Savings Banks	27.38%	27.74%
Regional Institutions of Credit Cooperatives	0.07%	0.06%
Credit Cooperatives	16.24%	16.69%
Mortgage Banks	13.37%	12.95%
Building & Loan Associations	9.72%	9.33%
Special Purpose Banks	5.00%	4.78%
합계	100.00%	100.00%

자료: BaFin

- 모기지론 취급과 관련하여 자금조달 상 Refinancing 구조는 금융회사 유형별로 상이

- 저축은행(Savings Banks)과 신용조합(Credit Cooperatives)은 예금, 대형 은행들은 주로 은행 간 차입거래, 그리고 모기지 은행은 Pfandbriefe 발행을 통해 Refinancing 실행

□ Pfandbriefe 발행 가능 금융회사

- 대형 Universal Banks와 모기지은행에서 발행 가능
 - Pfandbriefe 발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EU 통합 이후 Pfandbriefe 관련 요건들이 완화되어 가는 추세

- '05년부터 일반 은행들도 Pfandbriefe 발행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BaFin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Pfandbriefe를 발행하지 못하는 예금 수취 금융회사들의 고정금리 모기지론을 취급방법

- 예금 이자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예금자들의 예금인출이 잦지 않음

☐ 고정금리 모기지론이 많이 취급되는 원인

- 고정금리 모기지론의 경우 다른 채권에 비해서 낮은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
- 1969년까지는 중앙은행에서 법률로 고정금리 조건을 요구하였으나, 이후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과거 대출이용관행을 따라가는 경향도 존재

☐ 1999년 이후 독일 내 모기지론 공급규모가 감소한 이유

- 우선 전반적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정부의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혜택과 자가거주 주택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축소가능성에 주로 기인

☐ 주택소유율이 낮은 원인

- 정부의 주택소유 장려를 위한 각종 정책에 불구하고 독일의 주택소유율은 42% 수준으로, 영국(68%) 또는 이탈리아(75%)보다 매우 낮은 수준

- 정부는 1996년까지 자가거주 주택 관련 모기지론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해왔으며, 동 제도는 이후 주택 소유자에 대한 정부보조금(Subsidy)으로 대체됨
- 소비자들의 임차주택 선호경향 및 정부의 임차제도 지원정책, 까다로운 주택건축 규제 및 부동산개발 관련 법규로 인한 높은 주택가격 수준이 주택소유율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

나. 주택금융관련 감독·규제

☐ LTV 관련 규제여부

- Pfandbriefe 대상 모기지론은 법규에 의하여 60%로 제한
- Pfandbriefe 대상자산이 아닌 모기지론의 경우는 감독기관에 의한 LTV 규제는 없음

☐ 독일의 금융 감독기관 간 업무협조체제

- BaFin, Bundesbank, Landesbank가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최종적이고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BaFin에서 담당

☐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조치사항은 일반적으로 공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는?

- 비밀유지 조항을 관련 법규에서 규정
- 금융시장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공개 원칙

II-2. Euro Hypo 면담결과

1. 업무협의 개요

면담일시	2006년 6월 6일 15:00 ~ 17:00
면담자	Mr. Dirk Wilhelm Schuh, Deputy CEO & CRO Mr. Hendrik H. C. Gienow, Head of Strategy and Group Coordination Mr. Helge Barlen, Senior Project Manager Dr. Marcus Cieleback, Head of Research Mr. Marcel Kullmann, Head of Funding Mr. Karl-Heinz Raschtuttis, Head of Risk Methodology and Reporting Dept. Mr. Alexander Link

2. 주요 업무 협의사항 요약

☐ Eurohypo 소개

- Eurohypo 회사 개요, 부동산시장 현황, 모기지은행의 자금조달, 리스크관리 분야에 대하여 발표
- Eurohypo는 '05년도에 코메르츠은행에서 도이치은행과 알리안츠로부터 지분을 매입하여 동 행의 자회사가 됨
- 일본 내 Eurohypo 법인을 최근 개설하였으며, 아시아 진출을 확대할 계획

☐ 현재 Eurohypo의 모기지론 취급 영업망

- 코메르츠은행의 자회사가 되면서 지점망을 모두 없앴으며, 모기지론 상품 생산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모회사인 코메르츠은행의 영업망을 통해 모기지론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
- 부동산시장에 특화된 금융회사가 필요한 이유는 일반 은행의 다른 영업분야와 달리 부동산금융은 매우 특수한 분야이므로 이에 특화된 전문가와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임

☐ 모기지은행으로서 60% 이내의 LTV 조건을 충족하는 모기지론만 취급하는지 여부

- Pfandbriefe는 여러 자금조달원 중 한 가지 방법이므로 60%를 초과하는 LTV 조건의 모기지론도 취급

☐ Eurohypo의 위험관리 방법

- 기본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정금리 조건으로 Pfandbriefe를 발행하고, 다양한 파생상품거래를 보완수단으로 사용

☐ 차입자의 중도상환으로 인한 현금흐름 변동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

- 고정금리 모기지론의 경우 통상 10년 이전에 조기상환할 경우 차입자가 조기상환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금융회사는 마진 손실을 보충

IV. 정책적 시사점

1. 우리나라의 주택담보 대출 규제

가.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규제

- 투기지역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LTV는 은행·보험사의 경우 40% 저축은행 60% 등으로 제한

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고가아파트 신규구입시 담보대출 규모를 DTI* 40% 이내로 제한('06.3.30)

* Debt-to-Income(주택담보대출 연간원리금상환액 + 기타부채이자상환액/연소득)

2. 정책적 시사점

- Ⅱ 영국과 독일의 경우,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은 주로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 의존하고 있으며 감독당국에 의한 리스크관리를 위한 직접규제를 채택하지는 않고 있음
- Ⅱ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는 직접규제방식에서 시장 원리에 의한 간접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다만, 절대적인 1인당 이용가능 토지면적이 극히 부족하고, 투기 심리에 의한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 당분간은 부동산가격 급변동에 따른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수단으로써 감독당국 주도의 규제 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 향후 부동산시장이 어느정도 안정되는 등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간접규제 방식으로 점차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2. 생보사 상장관련

- 생보사 상장관련 논의과정에 대한 일지

- 생보사 상장관련 논의과정에 대한 일지

시 기	내 용
'89. 4월	교보생명,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 실시
'90. 2월	삼성생명,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 실시
'90. 8월	재무부, "생명보험회사의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 제정
'90.12월	재무부, 기업공개 보류 결정
'99. 8월	금융연구원 및 보험학회는 각각 생보사 상장관련 1차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99. 9월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 구성
'99.12월	금융연구원 및 보험학회, 각각 2차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00.12월	생명보험회사 상장논의 유보
'03.6월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 구성
'03.10월	생명보험회사 상장논의 유보
'06.2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산하,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 구성
'06.7월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공청회 개최(06.7.13일)

3. 최근 3년간 민원접수내역(금융기관별) 및 처리기준에 따른 처리내역

□ 최근 3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2004	2005	2006.1~6	2004	2005	2006.1~6
은행 · 비은행	45,139	35,879	14,948	44,890	36,627	14,763
증권 · 투신	2,451	2,048	1,544	2,433	2,051	1,523
보 험	16,886	21,583	12,452	16,537	21,243	12,115
합 계	64,476	59,510	28,944	63,860	59,921	28,401

4. 민원접수내역 중 민원 해당회사로 이첩하여 처리한 내역

□ 최근 3년간 이첩처리 민원 건수

(단위 : 건)

구 분	2004	2005	2006.1~6
은행·비은행	16,552	14,070	5,539
증권·투신	83	128	89
보 험	798	1,560	1,105
합 계	17,433	15,758	6,733

5. 민원을 민원해당회사로 이첩하여 처리하는 사유 및 그 관련 근거

□ 이첩처리 사유

- 우리 원에 접수되는 민원은 원칙적으로 직접처리하나 해당회사가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거나 우리 원이 개입하기 곤란한 아래의 민원의 경우에는 해당회사에 이첩
 - 금융회사 내부 경영에 관한 사항
(예 : 금융회사 직원이 승진·전보 등 인사문제를 선처해 달라고 하는 민원, 금융회사 직원 등의 급여에 관한 사항 등)
 - 금융거래와 관련 없는 민원
(예 : 인쇄업자, 자동차 수리업자, 병원 등이 금융회사에 대금을 지급토록 요청하는 민원, 카드가맹점 등록·취소에 관한 민원 등)
 - 금융회사의 선처를 요청하는 민원으로 우리 원이 개입하기 곤란한 민원 등
(예 : 카드대금의 납입기한 연장 또는 탕감 요청, 대출금 탕감요청 등)
 - 기타 경미한 사안으로 금융회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민원
(예 : 송금수수료 면제, 카드 수수료 면제 또는 할인 요청 등)

□ 이첩처리 근거

○ 민원처리사무세칙 제19조 (민원서류의 처리)

감독원에서 접수한 민원서류는 감독원이 직접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금융기관이 직접 조사·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민원은 이를 이첩처리할 수 있다.

※ 참고(다른 기관의 사례)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고충민원의 이첩 등) ①고충처리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 중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고충처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 민원만족도 조사내역 일체

□ 민원만족도 조사 결과('04~'06 상반기)

서류민원 부문별 민원만족도

(단위 : 점)

조사 부문	2004년 상반기	2004년 하반기	2005년 상반기	2005년 하반기	2006년 상반기
접근용이성	57.8	58.6	62.4	68.2	64.7
신청용이성	59.7	61.0	65.2	66.2	63.4
신속정확성	48.4	48.8	52.1	58.5	53.1
대응환류성	44.4	43.3	48.0	51.9	45.1
형 평 성	49.7	48.4	48.6	53.1	52.7
서류민원 만족도	51.4	48.8	51.8	56.8	55.4

인터넷민원 설문항목별 민원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설 문 내 용	2004년 상반기	2004년 하반기	2005년 상반기	2005년 하반기	2006년 상반기
민원 제기 단계	민원담당자 접근용이성	55.3	61.0	63.6	68.2	65.7
	홈페이지 민원 관련 정보 적정성	44.9	47.6	49.9	51.7	54.6
	민원신청의 용이성	60.8	64.4	64.6	69.7	69.0
민원 처리 단계	처리기간 통보 및 준수 여부	47.2	53.5	58.7	61.5	63.1
	전체민원처리기간의 적정성	46.3	50.3	55.2	57.7	58.0
	민원처리과정 정보제공	45.2	50.9	53.2	54.6	56.9
	불편사항에 대한 수용태도	42.9	48.0	49.6	52.9	51.6
	민원처리결과 만족도	41.1	41.9	48.1	48.0	49.1
	처리결과의 합리성·공평성	43.2	41.5	48.8	49.4	49.3
인터넷민원 만족도		48.3	50.0	54.6	57.1	56.7

종합만족도

(단위 : 점)

기간	2004년 상반기	2004년 하반기	2005년 상반기	2005년 하반기	2006년 상반기
종합만족도	49.1	50.5	53.9	57.0	56.4

7. 최근 3년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원장이 금융감독원 소속 부원장 중 지명
- 위원은 금융감독원 소속 부원장보 중 원장이 지명한 1인과 원장이 위촉한 자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

○ 운 영

- 위원회의 회의는 매 회의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이 소집
- 보험분야 회의와 비보험분야(은행, 증권, 비은행 등) 회의로 구분하여 개최
- 회의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개최 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6
개최횟수	20	18	20	10
처리건수	62	82	101	48

8.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분쟁접수 관련

- 1) 위원회 회부전 처리건수(직접처리, 이첩 등 세부로 분류)
- 2) 위원회 회부건수(인용,기각,각하 등 세부건수로 분류)
- 3) 조정결정건수(수락,불수락 건수로 분류)
- 4) 민원인과 피민원인간의 분쟁접수 후 소송제기 등의 이유로 분쟁조정을 그만 둔 건수

□ 위원회 회부전 처리건수

(단위 : 건)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06.1-6
은행/ 비은행	직접	3,883	4,675	6,016	3,375	5,174	4,114	1,198
	이첩	66	62	68	1	3	6	5
	계	3,949	4,837	6,084	3,376	5,177	4,120	1,203
증권	직접	1,326	895	752	881	646	461	200
	이첩	0	2	1	1	0	1	0
	계	1,326	897	753	882	646	462	200
생명 보험	직접	3,272	3,493	3,449	4,992	5,770	7,398	4,009
	이첩	0	2	16	14	1	1	1
	계	3,272	3,495	3,465	5,006	5,771	7,399	4,010
손해 보험	직접	4,594	5,052	4,777	5,041	5,931	6,556	3,310
	이첩	67	95	74	60	67	92	13
	계	4,661	5,147	4,851	5,101	5,998	6,648	3,323
계	직접	13,075	14,215	14,994	14,289	17,521	18,529	8,717
	이첩	133	161	159	76	71	100	19
	계	13,208	14,376	15,153	14,365	17,592	18,629	8,736

□ 위원회 회부건수

(단위 : 건)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06.1-6
인용	39	29	34	11	17	42	17
기각	13	20	13	21	19	19	15
각하	5	7	9	28	46	40	16
계	57	56	52	62	82	101	48

□ 조정결정 건수

(단위 : 건)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06.1-6
인 용	39	29	34	11	17	42	17
수락 (조정성립)	29	22	27	7	16	32	15
불수락 (조정불성립)	10	7	7	4	1	10	2

□ 분쟁조정 중지건수

(단위 : 건)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06.1-6
중지 건수	1,516	1,631	1,546	1,312	1,340	1,335	657

* 분쟁조정 접수 전·후 당사자의 소송제기 등으로 분쟁조정 중지건수임.

9. 은행임원의 자격요건 보완 및 집행간부의 책임성제고 등 임원관련 제도정비 내역

- ☐ '82.12 : 「은행법」에 임원의 결격사유 명시
- ☐ '93. 5 : 은행장추천위원회제도 도입(은행감독원장 규정)
 - 은행장후보자 선정시 사전보고 및 감독원장의 자격심사제도 도입
- ☐ '94.12 : 「은행법」에 은행장추천위원회제도 근거 마련
 - 감독원장은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임원선임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
 - * 실제로는 은행장에 대하여만 자격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운영
- ☐ '97.1 : 감독원장에 대하여 자격심사권한 부여
 - 감독원장은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과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
- ☐ '97.1 :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 제도 도입
 - 은행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경영감시기능의 제고를 위하여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를 도입

□ '98.1. : 비상임이사제도 구성비율 변경을 통한 효율적 운영 도모

- 비상임이사의 구성비율을 종전 대주주대표 추천 50%, 소액주주대표 추천 30%, 이사회추천 20%에서 주주대표 추천 70%, 이사회 추천 30%로 변경

□ '99. 2 : 금감위의 임원 자격심사제도 폐지

- 당해은행이 임원의 자격을 심사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
 - 다만, 은행장 및 감사의 경우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로 선정한 후 선임전 보고

□ '00.1 : 사외이사중심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준법감시인제도 도입

- 비상임이사의 명칭을 사외이사로 변경
- 감사기능의 강화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
-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위반사항 발견시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준법감시인제도 도입

□ '02.4 :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제도 폐지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제도 도입

10. 2003년 이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기준

□ 중소기업 의무대출 기준

-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제2조(여신 및 투자 운용지침)에서 금융기관 원화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일정 비율(시중 45%, 지방 60%, 외은지점 35%)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제2조(여신 및 투자 운용지침) 금융기관은 불건전한 여신 또는 투자를 초래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의 준수에 노력해야 한다.

1~7. (생략)

- 8.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확대, 특히 시중은행은 원화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45% 이상, 지방은행은 60% 이상, 당해은행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총대출금 또는 그 증가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주택 또는 가계자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한국주택은행, 평화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35% 이상(「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2조 제1호에 의한 총액한도대출을 받지 않기로 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 이상)을 각각 중소기업자에게 지원

11. 국민은행의 CD 위조사고 발단에서부터 조사경과, 결과 및 이후 내부통제 개선 추진 내역

1. CD 위조 사고 개요

□ 2004.12.27~2005.7.15 기간 중 국민은행 오목교지점 과장이 외부 전문사기조직과 공모하여 CD 발행위뢰인(한국토지신탁, 전기공사공제조합)에게는 위조CD를 교부하고 진본CD는 편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2,250억원(순횡령액 650억원)을 횡령(1,600억원은 위조CD 만기도래분 상환)

- 총 위조CD 발행액 : 26건 2,250억원
(한토신 21건 1,850억, 전기조합 5건 400억)
- 기발행 CD 상환액 : 19건 1,600억원
(한토신 17건 1,450억, 전기조합 2건 150억)
- 최종 횡령규모 : 7건 650억원
(한토신 4건 400억, 전기조합 3건 250억)

□ 사고 수법

- 사고자는 CD 발행위뢰인이 CD를 유통시키지 않고 만기까지 은행의 대여금고에 보관하거나 보호예수 의뢰하는 점을 이용하여 발행위뢰인에게는 위조CD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진본CD는 편취
- 사고자가 편취한 진본CD는 증권사를 통해 매각하여 자금화한 후 횡령

2. 조사 경과 및 조치 결과

□ 우리원은 2005.7.26 ~ 8.24 기간 중 국민은행 본점 및 오목교지점 외 6개 지점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

- 장기간 진행된 위조CD 발행 및 자금횡령에도 불구하고 점포 전반에 걸친 내부통제 소홀 및 감독의무 이행 태만으로 거액의 금융사고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 한 책임을 물어
 - 은행권 최초로 사고점포에 대해 영업정지 3월 조치('05.12.9 자체 폐쇄)
 - 은행장 및 상근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경영관리·감독의무 이행 소홀 및 감사업무 소홀 책임을 물어 각각 '주의적 경고' 조치
 - 사고자 등 관련직원(27명)에 대해서는 위규부당행위의 경중에 따라 면직~주의 등 차등 제재

3. 주요 내부통제 개선 실적

☐ TFT 구성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 신규 보호예수업무 중단
- 통장분실 등 사고신고 접수시 PIN-PAD를 이용한 본인확인
- 주요거래(사고신고, 중도해지 등) 발생시 고객앞 상시정보(SMS) 제공시스템 구축
- 고액입금·자동화 등록시 책임자 복수 전자승인 제도 도입
- 무자원 입금방지를 위한 텔러 현금시재한도(직원별 1억) 설정 등

☐ 온라인 상시감시 강화

- 고액거래 점검기능 강화, 고액거래 점검항목 추가 등

☐ 은행 자체 검사기능 강화

- 영업점 검사주기 단축(3년 → 2년) 및 검사인력 증원(10명)

☐ 내부통제 프로세스 개선 전담부서(준법감시운영부) 신설

- 내부통제 취약점 발굴 및 프로세스 상시개선 추진 등

☐ 자점검사제도 개선

- 자점검사업무 전담자(524명) 배치를 통해 사고예방기능 강화

12. HSBC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 경위, 점검경과, 결과

□ 금융감독원은 2006.2.1.~3.10. 기간중 외국은행중 유일하게 개인 금융 업무를 영위하는 HSBC은행 서울지점 등 4개 지점의 내부 통제 운영실태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동 검사결과 주요 위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적출하여 해당 은행에 대하여는 기관경고 조치하고 확약서를 징구함과 아울러 관련 직원을 문책*하는 등 엄중 조치하였습니다.

* 임원 문책(2명), 직원 문책(19명), 직원 주의(21명)

< 주요 위규사항 >

- 모집인 제도의 불법 운영

- 간접투자증권 판매를 임·직원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음에도 모집인에게 부당 위탁하여 간접투자증권을 판매
- 고객이 모집인을 직원으로 오인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모집인에 대한 내부통제 태만

- 수신업무 부당취급 등에 의한 금융사고 발생

- 2개 지점에서 직원 및 모집인이 고객예금 8억 84백만원을 횡령하는 금융사고가 발생
- 영업점 및 모집인의 판매행위에 대한 내부통제를 태만히 하고 수신업무를 부당 취급

- 주택담보대출 취급 불철저

-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하여 대출 취급

13. 보험회사 리스크기준 자기자본규제제도(RBC) 도입 추진 경위 및 경과, 31개 보험사 대상 평가결과

□ RBC제도 도입 추진 경위 및 경과

- 현행 지급여력제도는 보험종목별 리스크 차이, 금리변동 및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로 인한 리스크 특성을 충분하게 반영하고 못하고 있고,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자산종류별 위험도를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RBC제도는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자본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화된 감독제도임
- 현재 미국 및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RBC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유럽국가(EU)들도 리스크 중심의 재무건전성 감독제도인 Solvency II Project를 추진하고 있어 리스크 중심의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은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임
- 감독당국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보험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미국, EU 및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RBC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음

- RBC제도가 시행되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보험회사의 경영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리스크관리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보험경영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31개 보험사 대상 평가결과

- 현재까지 RBC제도 관련 산출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31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RBC비율을 산출한 바 없음

14.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 내역

☐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가입 의무

○ 가입대상: 특수건물* 소유자

*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공장, 공동주택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

○ 손해배상책임: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타인의 사망 및 부상에 대한 손해 보상(무과실 포함)

○ 가입기간: 건물 준공검사 합격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내 가입

○ 제외 대상

-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의 대사·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절이 소유하는 건물
- 대한민국에 파견된 국제연합의 기관 및 그 직원(외국인에 한한다.)이 소유하는 건물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가 소유하는 건물
- 군사용건물과 외국인소유건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

□ 관련법률: 불임

□ 최근 3년간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실적

(단위 :천원)

구분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화재보험	신체손해배상 책임담보	화재보험	신체손해배상 책임담보
FY02	100,308,695	3,528,222	57,143,800	292,669
FY03	85,255,171	2,778,754	134,932,607	319,496
FY04	95,335,979	2,580,662	76,183,709	303,429

* 출처 :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 각 연호.

<붙임>

관 련 법 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에 가입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 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8.12.31, 1997.1.13, 2003.5.29>

1. "손해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제4조제1항에 규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3. "특수건물"이라 함은 국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홍행장·숙박업소·공장·공동주택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지역) 이 법의 적용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건물소유자 손해배상 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건물소유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수건물의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보험가입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하 "특약부화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화재·수재 또는 도괴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손해보험회사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못한다.

④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항의 특약부화재보험계약을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 (외국인등의 소유건물에 대한 특례) 특수건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전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의 대사·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절이 소유하는 건물
2. 대한민국에 파견된 국제연합의 기관 및 그 직원(외국인에 한한다)이 소유하는 건물

3.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가 소유하는 건물
4. 군사용건물과 외국인소유건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

제7조 (보험가입의 촉진)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 의무자가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가입의무자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8.1.13>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금액)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화재보험은 특수건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2.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중 사망의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3.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중 부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전항제1호에 규정한 시가의 결정에 관한 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1.13, 1999.1.29>

제23조 (벌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특수건물) ①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물로 한다. <개정 1997.6.13, 1998.4.1, 1999.5.24, 2001.7.7, 2002.12.5, 2003.6.30, 2003.11.29>

1.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관저와 특수 용도에 공하는 건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을 제외한다.
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의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3.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6.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7. 방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9.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

치단체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0.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다만, 사단법인 학교재해복구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을 제외한다.

12. 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1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14. 층수가 11층이상인 건물. 다만, 아파트(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를 제외한다)·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②제1항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층수계산방법은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되,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한 계단실 또는 물탱크실인 경우에는 층수로 산입하지 아니하며, 지하층은 이를 층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74.12.31, 1991.9.3, 1997.6.13, 2002.12.5>

제3조 (적용지역)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의 적용지역은 전국으로 한다.<개정 1994.12.23, 1997.6.13>

[전문개정 1991.9.3]

제4조 (특례) 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용 건물은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이 관리하는 건물로서 다음 각호에 계기한 것 이외의 건물을 말한다.

1.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3층이상의 건물
2. 국군통합병원의 진료부와 병동건물
3. 군인공동주택

제5조 (보험금액) ①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3.8.18, 1991.9.3, 1997.6.13, 2000.12.30, 2002.12.5>

1.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 별표 1에서<생략:별표1%> 정하는 금액. 다만, 지급보험금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별표2에서<생략:별표2%> 정하는 금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손해액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1997.6.13, 1999.7.6>

③부상자가 치료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금을 함께 지급한다.

④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함께 지급한다.<신설 1991.9.3>

⑤제1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신설 1991.9.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실손해액) ①영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때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 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남자평균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7.7.10>

②영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신체상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상해를 치료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개정 1991.10.21, 1997.7.10>

제2조의2 (특수건물 시가결정방법)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특수건물의 시가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한다.<개정 1983.12.15, 1991.10.21, 1997.7.10>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감정평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서에 의한 가액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장부가액 또는 대차대조표에 의한 가액

3. 삭제<1997.7.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물의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액으로 한다.<개정 1997.7.10>

1. 건물의 신축가액 : 정부가 출자한 감정평가전문기관에서 제정한 최신 건물신축단가표에 의한 금액

2. 기계설비의 재조달가액 : 당해기계설비의 기종·용도·제조회사·형식 및 시방능력등과 같거나 유사한 설비의 거래가격

3. 건물 및 기계설비의 감가액 : 보험업법 제1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손해보험협회가 정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에 의한 감가율에 다음 각목의 가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가. 건물과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액

나. 기계설비의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물의 시가를 결정하는 경우에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합의된 때에는 당해특수건물의 시가로 산출된 가액을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개정 1997.7.10>

④삭제<1997.7.10>

15. 최근 3년간 각 금융기관별 등 주민등록자료 이용현황

☐ 세부 내역

“붙임 참조”

□ 은행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자료 이용 현황

(단위: 건수)

금융회사명	2004년	2005년	2006년 6월말
국민은행	1		

□ 각 여신전문금융회사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자료 이용 현황

(단위: 건수)

금융회사명	2004년	2005년	2006년 6월말
엘지카드	..	522,298	912,662
삼성카드	..	2,402,212	693,250
현대캐피탈	387,828
계	..	2,924,510	1,993,740

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을 위해 주민등록법 제18조 2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심사받은 건수 기준

보험회사별 주민등록전산망 이용신청

(단위 : 건)

회사명	2003	2004	2005
대한	1,599,777	314,924	136,042
알리안츠	120,028	125,405	44,399
삼성	371,312	345,090	349,888
흥국	9,204	10,552	17,415
교보	101,239	348,856	359,827
신한	221,742	129,336	30,911
녹십자	0	4,082	6,743
KB	0	0	5,411
럭키	49,560	3,117	7,011
금호	63,711	70,420	75,962
미래에셋	275,789	29,776	34,390
라이나	0	23,903	69,013
AIG	0	9,020	33,470
푸르덴셜	0	5,346	11,375
ING	11,034	13,729	37,904
하나	0	0	216
동부	4,057	29,677	12,108
메트라이프	1,707	1,689	10,468
동양	906	1,143	2,245
PCA	116	1,552	2,665
뉴욕	1,145	1,411	1,577
생보사계	2,831,327	1,469,028	1,249,040
메리츠	6,569	17,487	12,040
신동아	19,668	4,977	5,275
대 한	870	-	8,540
그 린	1,423	4,859	4,158
흥국쌍용	6,371	6,879	7,046
제 일	20,774	4,249	9,452
삼 성	18,505	11,892	31,821
현 대	64,957	29,240	14,847
L I G	264,897	40,093	20,140
동 부	42,384	39,961	23,156
손보사계	446,418	159,637	136,475
보험사계	3,277,745	1,628,665	1,385,515

주)보험회사가 휴면보험금 지급을 위해 주민등록법 제18조 2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청한 건수임

16. 펀드운용과 관련 최근일 기준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펀드의 신탁보수현황
 - 판매, 운용, 수탁, 사무로 구분해서 제시

☐ 별첨파일 참조

펀드보수율 현황('06년 8월말 기준)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한국투신운용	장기공사채 1	9.5	0	0.5	0
한국투신운용	단기공사채 1	12.5	0	0.5	0
한국투신운용	석류세금우대공사채 9	9.5	0	0.5	0
한국투신운용	석류세금우대공사채10	9.5	0	0.5	0
한국투신운용	신종MMF 1- M	1.6	6.41	0.3	0.19
한국투신운용	개인연금공사채 5	9.5	0	0.5	0
한국투신운용	가계장기공사채 1	6.5	0	0.5	0
한국투신운용	SE가계장기공사채 1	6.5	0	0.5	0
한국투신운용	가계장기공사채 2	6.5	0	0.5	0
한국투신운용	SE가계장기공사채 2	6.5	0	0.5	0
한국투신운용	개인연금공사채 6	9.5	0	0.5	0
한국투신운용	신장기우대공사채63	7.5	0	0.5	0
한국투신운용	근로자우대저축공사채	6.5	0	0.5	0
한국투신운용	신석류세금우대공사채 3	9.5	0	0.5	0
한국투신운용	한국단기공사채13	19.5	0	0.5	0
한국투신운용	신세금우대공사채1- 1	6.5	0	0.5	0
한국투신운용	신세금우대공사채3- 1	6.5	0	0.5	0
한국투신운용	한국단기공사채20	19.5	0	0.5	0
한국투신운용	신세금우대 1공사채D- 1	6.5	0	0.5	0
한국투신운용	신세금우대 2공사채D- 1	6.5	0	0.5	0
한국투신운용	신세금우대 3공사채D- 1	6.5	0	0.5	0
한국투신운용	나라사랑공사채M- 1	7.5	0	0.5	0
한국투신운용	가계장기공사채 3	6.5	0	0.5	0
한국투신운용	신노후생활연금공사채 3	6.5	0	0.5	0
한국투신운용	신세금우대 3공사채D- 2	6.5	0	0.5	0
한국투신운용	신세금우대 1공사채A- 1	6.5	0	0.5	0
한국투신운용	신세금우대 1공사채A- 3	6.5	0	0.5	0
한국투신운용	신세금우대 3공사채D- 3	6.5	0	0.5	0
한국투신운용	가계장기공사채 4	6.5	0	0.5	0
한국투신운용	신세금우대 3공사채D- 4	6.5	0	0.5	0
한국투신운용	세금우대공사채A- 1	14.5	0	0.5	0
한국투신운용	세금우대공사채A- 3	14.5	0	0.5	0
한국투신운용	가계장기공사채 5	6.5	0	0.5	0
한국투신운용	세금우대공사채A- 8	14.5	0	0.5	0
한국투신운용	세금우대공사채A-11	14.5	0	0.5	0
한국투신운용	세금우대공사채A-10	14.5	0	0.5	0
한국투신운용	세금우대공사채A-12	14.5	0	0.5	0
한국투신운용	세금우대공사채A-13	14.5	0	0.5	0
한국투신운용	세금우대공사채A-17	14.5	0	0.5	0
한국투신운용	세금우대공사채A-21	14.5	0	0.5	0
한국투신운용	노후생활연금공사채A- 9	14.5	0	0.5	0
한국투신운용	세금우대공사채A-22	14.5	0	0.5	0
한국투신운용	파워코리아세금우대 1공사채 1	12	0	0.5	0
한국투신운용	MVP장기공사채M- 2	10	0	0.3	0
한국투신운용	신종MMF 8- M	1.64	6.56	0.3	0
한국투신운용	신종MMF10- M	1	4.01	0.3	0.19
한국투신운용	파워코리아세금우대 1공사채 2	12	0	0.5	0
한국투신운용	근로자우대저축공사채 2	6.5	0	0.5	0
한국투신운용	개인연금공사채 7	9.5	0	0.5	0
한국투신운용	파워코리아찬스MMF 1	19.6	0	0.4	0
한국투신운용	신종MMF26- M	2.04	8.16	0.3	0
한국투신운용	신종MMF28- M	0.31	1.23	0.11	0.05
한국투신운용	파워코리아엠브렐라MMF 1	2.3	9.2	0.5	0
한국투신운용	파워코리아엠브렐라공사채 1	2.6	10.4	0.5	0
한국투신운용	신종MMF35- M	2.04	8.16	0.3	0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한국투신운용	파워코리아세금우대 1공사채 3	2.2	8.8	0.4	0
한국투신운용	파워코리아분리과세국공채 1	1.92	7.68	0.4	0
한국투신운용	클린MMF 3- M	0.73	2.94	0.22	0.11
한국투신운용	클린MMF 5- M	0.34	1.36	0.3	0
한국투신운용	파워코리아뉴IT사모채권 1	1.23	1.33	0.25	0.09
한국투신운용	적립식혼합주식	0.28	2.48	0.16	0.08
한국투신운용	세금우대주식	2.4	0	0.6	0
한국투신운용	근로자장기저축주식	2.4	0	0.6	0
한국투신운용	노후생활연금주식	12.5	0	0.5	0
한국투신운용	개인연금주식 1	14	0	0.5	0
한국투신운용	SE개인연금주식 1	14	0	0.5	0
한국투신운용	개인연금주식 2	14	0	0.5	0
한국투신운용	개인연금주식 3	14	0	0.5	0
한국투신운용	신한국주식80-12	18.5	0	0.5	0
한국투신운용	SE신세기하이턴주식 1	18.5	0	0.5	0
한국투신운용	신한국주식80-18	18.5	0	0.5	0
한국투신운용	기업안정주식14	9.5	0	0.5	0
한국투신운용	기업안정주식15	9.5	0	0.5	0
한국투신운용	개인연금주식 4	14	0	0.5	0
한국투신운용	개인연금주식 5	14	0	0.5	0
한국투신운용	기업안정주식16	9.5	0	0.5	0
한국투신운용	근로자우대저축주식	13.5	0	0.5	0
한국투신운용	대표세금우대채권혼합 1	20	0	0.5	0
한국투신운용	로얄칩주식 1	34.5	0	0.5	0
한국투신운용	한국대표안정주식 9	18.5	0	0.5	0
한국투신운용	파워코리아매직주식 5	34.5	0	0.5	0
한국투신운용	파워코리아스페셜매직주식 1	34.5	0	0.5	0
한국투신운용	파워코리아골든칩주식D 1	34.5	0	0.5	0
한국투신운용	파워코리아매직주식D 1	34.5	0	0.5	0
한국투신운용	파워코리아올림피아50주식 1	24.6	0	0.4	0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정통고편입A1주식A- 1	2.46	12.14	0.4	0.19
한국투신운용	파워코리아매직주식D 2	34.5	0	0.5	0
한국투신운용	파워코리아골든칩주식 6	34.5	0	0.5	0
한국투신운용	파워코리아매직주식D 3	34.5	0	0.5	0
한국투신운용	파워코리아올림피아80주식 3	24.6	0	0.4	0
한국투신운용	파워코리아올림피아80주식 4	24.6	0	0.4	0
한국투신운용	파워코리아2000단기주식 2	29.5	0	0.5	0
한국투신운용	파워코리아2000단기주식 3	29.5	0	0.5	0
한국투신운용	파워코리아2000주식 3	29.5	0	0.5	0
한국투신운용	파워코리아개인연금주식 6	14	0	0.5	0
한국투신운용	파워코리아2000주식 4	29.5	0	0.5	0
한국투신운용	파워코리아찬스6주식 1	29.6	0	0.4	0
한국투신운용	파워코리아크린성장주식	19.7	0	0.3	0
한국투신운용	D가계장기주식 1	6.5	0	0.5	0
한국투신운용	D가계장기주식 2	6.5	0	0.5	0
한국투신운용	D석류세금우대주식 9	9.5	0	0.5	0
한국투신운용	D개인연금주식 1	9.5	0	0.5	0
한국투신운용	D개인연금주식 2	9.5	0	0.5	0
한국투신운용	D개인연금주식 3	9.5	0	0.5	0
한국투신운용	D개인연금주식 4	9.5	0	0.5	0
한국투신운용	D개인연금주식 5	9.5	0	0.5	0
한국투신운용	D개인연금주식 6	9.5	0	0.5	0
한국투신운용	D근로자우대저축주식	6.5	0	0.5	0
한국투신운용	D대표단기주식39	6.5	0	0.5	0
한국투신운용	D초일류단기주식A- 1	14.5	0	0.5	0
한국투신운용	D대표중기주식A- 2	9.5	0	0.5	0
한국투신운용	D고수익중기주식A- 13	19.5	0	0.5	0
한국투신운용	D고수익중기주식A- 15	19.5	0	0.5	0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한국투자신포	D세금우대주식A- 3	14.5	0	0.5	0
한국투자신포	D세금우대주식A-11	14.5	0	0.5	0
한국투자신포	D세금우대주식A-21	14.5	0	0.5	0
한국투자신포	D세금우대주식A-22	14.5	0	0.5	0
한국투자신포	D금강산장기주식A- 1	14.5	0	0.5	0
한국투자신포	D대표장기주식A-31	15.5	0	0.5	0
한국투자신포	D P세금우대1주식 1	12	0	0.5	0
한국투자신포	D신세금우대주식2- 1	6.5	0	0.5	0
한국투자신포	D신세금우대 2주식D- 1	6.5	0	0.5	0
한국투자신포	D노후생활연금주식A- 6	14.5	0	0.5	0
한국투자신포	D노후생활연금주식A- 7	14.5	0	0.5	0
한국투자신포	D노후생활연금주식A- 9	14.5	0	0.5	0
한국투자신포	D신세금우대 3주식D- 1	6.5	0	0.5	0
한국투자신포	D가계장기주식 5	6.5	0	0.5	0
한국투자신포	D SE개인연금주식 1	9.5	0	0.5	0
한국투자신포	D특별주식모신포 6	0	0	0	0
한국투자신포	파워코리아2000코스닥주식M- 1	0	0	0	0
한국투자신포	W개인연금주식 1	9.5	0	0.5	0
한국투자신포	W개인연금주식 2	9.5	0	0.5	0
한국투자신포	W개인연금주식 3	9.5	0	0.5	0
한국투자신포	W개인연금주식 4	9.5	0	0.5	0
한국투자신포	W세금우대주식A- 21	14.5	0	0.5	0
한국투자신포	파워코리아하이테크주식 1	3.15	28.35	0.5	0
한국투자신포	파워코리아하이테크단기칩주식 4	3.15	28.35	0.5	0
한국투자신포	파워코리아포트폴리오80주식 5	3.45	31.05	0.5	0
한국투자신포	파워코리아뉴스타트단기주식 2	2.95	26.55	0.5	0
한국투자신포	파워코리아뉴스타트단기주식 3	2.95	26.55	0.5	0
한국투자신포	파워코리아엠프렐러안정주식 1	1.5	13.5	0.5	0
한국투자신포	파워코리아엠프렐러밸류주식 1	1.5	13.5	0.5	0
한국투자신포	파워코리아엠프렐러그로스주식 1	1.5	13.5	0.5	0
한국투자신포	파워코리아엠프렐러액티브주식 1	1.5	13.5	0.5	0
한국투자신포	파워코리아엠프렐러코스닥주식 1	1.5	13.5	0.5	0
한국투자신포	파워코리아코스닥엔젤3단위형주식	0	0	0	0
한국투자신포	파워코리아후순위채중기주식 6	1.95	17.55	0.5	0
한국투자신포	파워코리아뉴하이일드A적립식혼합 1	1.93	17.38	0.5	0.19
한국투자신포	가계장기채권혼합모신포	0	0	0	0
한국투자신포	개인연금채권혼합모신포	0	0	0	0
한국투자신포	근로자우대채권혼합모신포	0	0	0	0
한국투자신포	근로자우대주식혼합모신포	0	0	0	0
한국투자신포	개인연금주식혼합모신포	0	0	0	0
한국투자신포	근로자장기채권혼합모신포	0	0	0	0
한국투자신포	근로자장기주식혼합모신포	0	0	0	0
한국투자신포	노후연금채권모신포	0	0	0	0
한국투자신포	노후연금채권혼합모신포	0	0	0	0
한국투자신포	세금우대채권모신포	0	0	0	0
한국투자신포	세금우대채권혼합모신포	0	0	0	0
한국투자신포	일반적립식채권모신포	0	0	0	0
한국투자신포	일반적립식주식혼합모신포	0	0	0	0
한국투자신포	파워코리아뉴코스닥중기 1	2.95	26.55	0.5	0
한국투자신포	파워코리아포트폴리오80주식20	3.45	31.05	0.5	0
한국투자신포	파워코리아뉴하이일드A12혼합a 3	0.95	8.55	0.5	0
한국투자신포	파워코리아뉴하이일드A12혼합a 5	0.95	8.55	0.5	0
한국투자신포	파워코리아뉴하이일드A혼합 5	1.95	17.55	0.5	0
한국투자신포	Smile Again신분리과세국공채M- 2	2.3	9.2	0.5	0
한국투자신포	KM-Smile Again랩업브렐러채권M1	0.96	3.85	0.3	0.19
한국투자신포	KM-S Again랩업브렐러안정혼합M1	1.98	17.83	0.5	0.19
한국투자신포	KM-Smile Again랩업브렐러파생상품M1	2.98	26.83	0.5	0.19
한국투자신포	KM신종개인연금성장혼합A- 1	2.5	22.5	0.5	0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한국투신운용	Smile Again신종분리과세국공채 4	2.3	9.2	0.5	0
한국투신운용	골드플랜연금채권A 1	2.04	8.16	0.3	0
한국투신운용	골드플랜연금주식A- 1	2.02	18.18	0.3	0
한국투신운용	KM고수익공모주뉴하이장기D A-1	2.02	18.18	0.3	0
한국투신운용	KM베이직중기안정혼합A- 1	6	14	0.4	0
한국투신운용	한국e-코리아인덱스파생상품A- 1	1.5	7	0.3	0.14
한국투신운용	KM신종분리과세공모주뉴하이일D1	2	18	0.4	0
한국투신운용	A-CLUB코스피주식 1	2.5	22.5	0.4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코스닥스타인덱스파생상품M- 1	2.48	22.33	0.4	0.19
한국투신운용	TAMS비과세고수익고위험혼합A- 1	0.18	1.58	0.2	0.05
한국투신운용	TAMS분리과세뉴하이일드A혼합L-1	2	18	0.4	0
한국투신운용	Smile Again신종분리과세채권L- 2	2.3	9.2	0.5	0
한국투신운용	TAMS스왑장기채권L- 1	1.4	5.6	0.4	0
한국투신운용	TAMS주니어FRN채권L- 1	1.96	7.85	0.4	0.19
한국투신운용	TAMS주니어혼합L- 1	1.98	17.83	0.4	0.19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정통고편입B주식증권C- 1	2.5	22.51	0.4	0.19
한국투신운용	TAMS세븐플러스주식C- 1	3	27	0.4	0
한국투신운용	TAMS그랜드슬램안정혼합	1.2	0	0.4	0.2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인덱스파생상품	1.06	0	0.3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정통고편입A주식ClassA	1.8	0	0.4	0.2
한국투신운용	파워코리아뉴하이일드A혼합M- 9	1.95	17.55	0.5	0
한국투신운용	그랜드슬램파이팅코리아자산배분혼합	1.8	10.6	0.4	0.2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퓨전장기채권	2	8	0.4	0.2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채권C- 1	2	8	0.4	0.2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주식C- 1	3	27	0.4	0.2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테마채권K- 1	2	8	0.4	0.2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정통저편입혼합증권K- 2	1.5	13.51	0.4	0.19
한국투신운용	파워코리아뉴하이일드A채권A-11	1.46	13.14	0.4	0
한국투신운용	SA신종분리과세국공채A- 5	2.3	9.2	0.5	0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마스터중기채권A- 1	1.6	6.4	0.3	0.2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마스터장기채권증권A- 1	1.6	6.4	0.3	0.2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마스터단기채권증권A- 1	1.4	5.6	0.3	0.2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인덱스A1파생상품	1.8	5	0.4	0.2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장기주택마련채권A- 1	2	8	0.4	0.2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장기주택정통저편입채권혼합K-	2	18	0.4	0.2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라이프플랜채권A- 1	1.6	6.4	0.3	0.2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라이프플랜안정파생상품K- 1	2	18	0.4	0.2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라이프플랜성장파생상품K- 1	2.5	22.5	0.4	0.2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포커스안정혼합A- 1	1.2	10.81	0.4	0.19
한국투신운용	SmileAgain신종분리과세국공채A- 6	1.44	5.76	0.3	0
한국투신운용	한국법인MMF A- 3	0.5	2	0.11	0.05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마스터중기국공채A- 1ClassA	1.95	4.56	0.3	0.19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주식M- 1	2.94	26.47	0.4	0.19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인덱스B주식M-1	2.14	19.27	0.4	0.19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배당플러스B주식M- 1	2.14	19.27	0.4	0.19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엠프렐러MMF A- 1	1.03	4.12	0.3	0.15
한국투신운용	SmileAgain신종분리과세국공채A- 7	1.54	6.16	0.3	0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엠프렐러인덱스파생상품A- 1	1	9.01	0.4	0.19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엠프렐러리버스인덱스파생상품	1	9.01	0.4	0.19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배당인덱스주식M- 1	2	18.01	0.4	0.19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포커스안정혼합A- 2	0.94	8.47	0.4	0.19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뉴하이일드A중기혼합A- 1	1.07	9.64	0.4	0.19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뉴하이일드A장기혼합A- 1	1.07	9.64	0.4	0.19
한국투신운용	TAMS분리과세뉴하이일드A혼합A- 2	1.37	12.34	0.4	0.19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뉴하이일드A장기혼합A- 2	1.37	12.34	0.4	0.19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스테이블분리과세혼합K- 1	1.5	13.51	0.4	0.19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뉴하이일드A장기혼합A- 4	1.37	12.34	0.4	0.19
한국투신운용	TAMS분리과세뉴하이일드A혼합A- 3	1.37	12.34	0.4	0.19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뉴하이일드A중기혼합A- 3	1.37	12.34	0.4	0.19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뉴하이일드A장기혼합A- 5	1.37	12.34	0.4	0.19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거꾸로주식A- 1ClassA	2.5	12.5	0.4	0.19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뉴하이일드A장기혼합A- 6	1.37	12.34	0.4	0.19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뉴하이일드A중기혼합 4	0.94	8.47	0.4	0.19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뉴하이일드A중기혼합 6	1.37	12.34	0.4	0.19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뉴하이일드A중기혼합 7	1.37	12.34	0.4	0.19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뉴하이일드A장기혼합A- 7	1.37	12.34	0.4	0.19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뉴하이일드A장기혼합A- 9	1.37	12.34	0.4	0.19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타겟 7혼합K- 1	1.6	14.41	0.4	0.19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엠브렐라국채선물인덱스파생상	1	9.01	0.4	0.19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비과세장기Safe&High주식L- 3	1.5	13.51	0.4	0.19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레인보우셀렉션해외간접K- 1	3.57	8.34	0.5	0.19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스테이블세혼합K- 3	2.44	21.97	0.4	0.19
한국투신운용	신종MMF52-A	0.3	1.23	0.11	0.05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D-ART혼합증권W- 1	1.5	13.51	0.4	0.19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엠브렐라채권혼합증권A- 1	1.03	4.12	0.3	0.15
한국투신운용	KM-Smile Again랩엠브렐라혼합M- 1	1.96	7.85	0.4	0.19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회사채채권증권A- 1ClassA	1.1	4.41	0.3	0.19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D-ART혼합증권W- 2	1.5	13.51	0.4	0.19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비과세장기D-ART주식W- 1	2.44	21.97	0.4	0.19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절대수익추구전환(C-ART)혼합W- 1	1.6	14.41	0.4	0.19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D-ART혼합W- 3	1.5	13.51	0.4	0.19
한국투신운용	신종법인용MMF 1-W	0.4	0.7	0.25	0.15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연속분할매매주식혼합증권W- 1	1.92	17.28	0.4	0.19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거꾸로적립식안정혼합증권W- 1	1.5	13.51	0.4	0.19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거꾸로적립식주식W- 1ClassA	2.14	19.27	0.4	0.19
한국투신운용	TAMS골드-글로벌채권재간접I- 1	4.29	10.02	0.5	0.19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핵심주도주식증권W- 1	2.5	22.51	0.4	0.19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배당플러스B안정혼합증권W- 1	1.5	13.51	0.4	0.19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거꾸로안정혼합증권W- 1	1.44	12.97	0.4	0.19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조기상환트리오A3단파생W 1	0.01	0.13	0.25	0.01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늘푸른안정혼합증권W- 2	1.6	14.41	0.4	0.19
한국투신운용	해피앤드조기상환2스타3단위파생상품S 1	0.8	0.1	0.2	0.19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성장주식증권W- 1ClassA	2.5	22.51	0.4	0.19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장기주택마련인덱스35파생상품W 1	1.29	11.62	0.4	0.19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라이프플랜인덱스35파생상품W 1	1.29	11.62	0.4	0.19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라이프플랜인덱스70파생상품W 1	1.92	17.29	0.4	0.19
한국투신운용	월드와이드채권재간접I- 1	5.14	7.37	0.6	0.19
한국투신운용	월드와이드밸런스드재간접I- 1	5.98	10.73	0.6	0.19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독도사랑혼합W- 4	1.5	13.51	0.4	0.19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해지펀드인덱스5단위파생상품I- 1	1.44	12.97	0.4	0.19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조기상환2스타파생상품W- 1	0.01	0.01	0.3	0.14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조기상환듀엣A 3단위파생W- 3	0.1	0.1	0.3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징검다리주식혼합8월 3	4.75	14.25	0.3	0.1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징검다리채권혼합8월 3	4	12	0.3	0.1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배당플러스A채권혼합W- 1	3.4	10	0.3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거꾸로A주식혼합W- 1	4.7	14	0.3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거꾸로A안정혼합W- 1	4	12	0.3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정통저편입A혼합증권W- 1	3.4	10	0.3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징검다리채권혼합9월 3	4	12	0.3	0.1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연속분할매매고편입A주식혼W-	4.7	14	0.3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거꾸로주식증권K- 2	7.16	16.4	0.3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MVP주식형모재간접	0	0	0	0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징검다리고편입주식혼합10월3	6.3	18.7	0.3	0.1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징검다리채권혼합증권10월3	4	12	0.3	0.1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징검다리주식혼합증권10월3	4.75	14.25	0.3	0.1
한국투신운용	한국MVP주식형-자(A)	3.5	17.5	0.3	0.14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한국투신운용	한국삼성그룹주식형모	0	0	0	0
한국투신운용	한국삼성그룹주식형자(B)	6.9	16.66	0.3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정통고편입A주식I	1.8	0	0.4	0.2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거꾸로적립식주식I	2.14	0	0.4	0.19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징검다리고편입주식11월 3	6.3	18.7	0.3	0.1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징검다리채권혼합11월 3	4	12	0.3	0.1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징검다리주식혼합투자11월 3	4.75	14.25	0.3	0.1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조기상환2스타G3단위파생K- 1	0.01	0.01	0.3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조기상환2스타H3단위파생F- 1	0.01	0.01	0.3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성장A채권혼합증권K- 1	4	12	0.3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성장A주식혼합증권K- 1	4.7	14	0.3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성장A주식증권K- 1	6.56	11	0.3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퇴직연금채권증권-모	0	0	0	0
한국투신운용	한국퇴직연금정통주식-모	0	0	0	0
한국투신운용	한국퇴직연금정통채권혼합-자(1)	2.3	5.35	0.2	0.15
한국투신운용	한국퇴직연금채권혼합-모	0	0	0	0
한국투신운용	한국퇴직연금국공채증권자 1	1.7	3.95	0.2	0.15
한국투신운용	한국퇴직연금밸류채권혼합증권자 2	2.3	5.35	0.2	0.15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징검다리채권혼합12월 3	4	12	0.3	0.1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징검다리주식혼합12월 3	4.75	14.25	0.3	0.1
한국투신운용	한국퇴직연금국공채증권(모)	0	0	0	0
한국투신운용	한국퇴직연금밸류주식증권(모)	0	0	0	0
한국투신운용	한국퇴직연금인덱스채권혼합-자(1)	2	4.66	0.2	0.15
한국투신운용	한국퇴직연금인덱스주식증권-모	0	0	0	0
한국투신운용	한국퇴직연금밸류채권혼합-자(3)	2	4	0.2	0.15
한국투신운용	한국퇴직연금밸류채권혼합-자(4)	2	5	0.2	0.15
한국투신운용	한국퇴직연금밸류30채권혼합-자(1)	2.3	5.35	0.2	0.15
한국투신운용	한국거꾸로플러스A주식K- 1	6.5	11.5	0.3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거꾸로플러스A채권혼합증권K- 1	3.5	10.5	0.3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퇴직연금LCF20-30채권혼합-자 1	2.3	5.35	0.2	0.15
한국투신운용	한국퇴직연금LCF40-50채권혼합-자 1	2.3	5.35	0.2	0.15
한국투신운용	한국퇴직연금채권증권-자 1	1.7	3.95	0.2	0.15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징검다리채권혼합증권1월 3	4	12	0.3	0.1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징검다리주식혼합증권1월 3	4.75	14.25	0.3	0.1
한국투신운용	한국퇴직연금LCF20-10채권혼합-자 2	2.3	5.35	0.2	0.15
한국투신운용	한국퇴직연금LCF50-60채권혼합-자1	2.3	5.35	0.2	0.15
한국투신운용	한국퇴직연금밸류채권혼합-자 1	2.3	5.35	0.2	0.15
한국투신운용	한국퇴직연금배당채권혼합-자(1)	2.3	5.35	0.2	0.15
한국투신운용	한국거꾸로플러스A주식혼합증권K- 1	5	7	0.3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프리미어적립식주식증권K- 1	9.42	14.14	0.3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거꾸로해외주식A재간접I- 1	6.3	10	0.6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월드와이드글로벌주식A재간접I- 1	6.3	10	0.6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퇴직연금LCF2020채권혼합-자 1	2.3	5.35	0.2	0.15
한국투신운용	한국거꾸로플러스B채권혼합증권G- 1	4.5	10.5	0.3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삼성그룹B채권혼합증권K- 1	4.36	10.2	0.3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월드와이드차이나주식A재간접V- 1	4	10	0.6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월드와이드테크놀로지주식A재간접M- 1	4	10	0.6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희망A주식증권K- 1	6.5	12.5	0.3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징검다리주식혼합증권9월 3	4.75	14.25	0.3	0.1
한국투신운용	한국조기상환2스타3단위파생M- 1	7.8	18.2	0.3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주가지수연계1년채권W- 1	2.19	5.11	0.3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조기상환2스타J3단위파생K- 1	4	26.07	1	0.36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조기상환2스타K3단위파생K- 1	4	26.07	1	0.36
한국투신운용	한국퇴직연금성장주식증권-모	0	0	0	0
한국투신운용	한국퇴직연금밸류10채권혼합증권-자 1	2.3	5.35	0.2	0.15
한국투신운용	한국퇴직연금성장채권혼합증권-자(1)	2.3	5.35	0.2	0.15
한국투신운용	한국월드와이드저팬주식A재간접V- 1	4	10	0.6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월드와이드헬스케어주식A재간접M- 1	4	10	0.6	0.14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한국투신운용	한국월드와이드이머징마켓주A재간접V- 1	4	10	0.6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월드와이드파이낸셜주식A재간접M- 1	4	10	0.6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조기상환2스타L3단위파생K- 1	7.8	18.2	0.3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삼성그룹주식형-자(A)	6.9	9.06	0.3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조기상환2스타A2단위파생상품Q- 1	7.3	20	0.3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퇴직연금인덱스채권혼합-자(2)	2	4.66	0.2	0.15
한국투신운용	한국골드조기상환원유지수3단위파생상품K-	13.6	31.9	1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코리아베스트주식재간접-모(1)	0	0	0	0
한국투신운용	한국코리아베스트주식재간접-자(1)	3.5	14.5	0.3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국민의힘주식재간접K- 1	5.4	12.6	0.3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월드와이드원자재종류형재간접V- 1(A)	5	12	0.6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삼성그룹적립식주식 1Class I	6.9	0	0.5	0.2
한국투신운용	한국조기상환2스타B2단위파생M- 1	10.2	19.1	0.3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조기상환3스타A3단위파생M- 1	6.39	9.68	0.3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조기상환2스타B2단위파생상품M- 2	8.1	19.2	0.3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조기상환2스타C2단위파생M- 1	10.2	19.1	0.3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월드메릴린치III종류재간접P- 1(classA)	5	12	0.6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글로벌AI종류형재간접P- 1(I)	7.3	0	0.5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월드와이드베트남혼합 1	7	18	0.6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리딩아시아5스타파생상품G- 1	18.4	55.4	0.4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퇴직연금배당주식-모	0	0	0	0
한국투신운용	한국조기상환2스타C2단위파생상품M- 2	3.6	24	0.3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주가지수연계2단위파생상품K- 1	4	25	0.3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주가지수연계1년채권W- 2	1	5.6	0.3	0.14
대한투신운용	장기공사채10월	2.85	6.65	0.5	0
대한투신운용	포도세금우대공사채 1	2.85	6.65	0.5	0
대한투신운용	포도세금우대공사채 2	2.85	6.65	0.5	0
대한투신운용	노후생활연금공사채 5	2.85	6.65	0.5	0
대한투신운용	포도세금우대공사채 3	2.85	6.65	0.5	0
대한투신운용	포도세금우대공사채 4	2.85	6.65	0.5	0
대한투신운용	개인연금공사채 1	2.85	6.65	0.5	0
대한투신운용	개인연금공사채 2	2.85	6.65	0.5	0
대한투신운용	개인연금공사채 3	2.85	6.65	0.5	0
대한투신운용	개인연금공사채 4	2.85	6.65	0.5	0
대한투신운용	개인연금공사채 5	2.85	6.65	0.5	0
대한투신운용	개인연금공사채 6	2.85	6.65	0.5	0
대한투신운용	비과세가계공사채 1	1.95	4.55	0.5	0
대한투신운용	개인연금공사채 7	2.85	6.65	0.5	0
대한투신운용	포도세금우대공사채14	2.85	6.65	0.5	0
대한투신운용	장기우대공사채31	2.25	5.25	0.5	0
대한투신운용	포도세금우대공사채16	2.85	6.65	0.5	0
대한투신운용	포도세금우대공사채57	3	7	0.5	0
대한투신운용	포도세금우대공사채58	3	7	0.5	0
대한투신운용	비과세가계공사채 6	1.95	4.55	0.5	0
대한투신운용	포도세금우대공사채73	3	7	0.5	0
대한투신운용	포도세금우대공사채75	3	7	0.5	0
대한투신운용	포도세금우대공사채77	3	7	0.5	0
대한투신운용	포도단기공사채82	3	7	0.5	0
대한투신운용	포도세금우대공사채87	3	7	0.5	0
대한투신운용	비과세가계공사채 7	1.95	4.55	0.5	0
대한투신운용	근로자비과세공사채 2	1.95	4.55	0.5	0
대한투신운용	개인연금공사채 8	2.85	6.65	0.5	0
대한투신운용	더블타켓공사채 2	3	7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원더플신종MMF S- 2	3	7	0.5	0
대한투신운용	MOON MMF S- 2	3	7	0.5	0
대한투신운용	신종MMF90 S- 26	2.95	6.87	0.5	0.18
대한투신운용	신종MMF90 S- 27	2.35	5.47	0.5	0.18
대한투신운용	신종MMF90 S- 29	1.78	4.14	0.4	0.18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신종MMF S-36	1.36	3.16	0.3	0.18
대한투신운용	무궁화사모채권H- 1	1.38	1.33	0.2	0
대한투신운용	안정성장1월호주식	7.3	17.02	0.5	0.18
대한투신운용	개인연금주식 1	4.2	9.8	0.5	0
대한투신운용	개인연금주식 2	4.2	9.8	0.5	0
대한투신운용	더블타겟주식 4	5.55	12.95	0.5	0
대한투신운용	개인연금주식 3	4.2	9.8	0.5	0
대한투신운용	포커스주식 1	5.55	12.95	0.5	0
대한투신운용	개인연금주식 4	4.2	9.8	0.5	0
대한투신운용	비과세가계주식 1	4.05	9.45	0.5	0
대한투신운용	개인연금주식 5	4.2	9.8	0.5	0
대한투신운용	근로자비과세주식 1	4.05	9.4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주식 1	7.2	16.8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코리아홀인원주S- 1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코리아홀인원주S- 2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코리아홀인원주S- 3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코리아홀인원주S- 4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주식 2	7.2	16.8	0.5	0
대한투신운용	대한FirstClass아인슈타인주식	3.68	14.74	0.4	0.18
대한투신운용	엑셀런트주식 1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코리아홀인원주S-11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SUN주식S- 1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대한FirstClass에이스주식	4.76	19.06	0.5	0.18
대한투신운용	원원코리아홀인원주S-13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아인슈타인주식 3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코리아홀인원주S-19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코리아홀인원주S-21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코리아홀인원주S-23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엑셀런트주식 3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엑셀런트주식 4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코리아홀인원주S-32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엑셀런트주식 8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코리아홀인원주S-37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대한원원에이스주식E- 1	7.2	16.8	0.5	0
대한투신운용	코스닥주식E- 1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코리아홀인원주S-38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플러스성장주식E- 1	5.55	12.9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코리아홀인원주S-41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아인슈타인주식14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코리아홀인원주S-43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SUN주식S- 3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프리임주식E- 1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아인슈타인주식18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코리아홀인원주S-47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대한어드벤처지에퀴티투자신탁	9.46	3.86	0.5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원원에이스주식E- 6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대한원원에이스주식E-10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코리아홀인원주S-51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코리아홀인원주S-53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대한원원에이스주식E-11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코리아홀인원주S-55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대한원원에이스주식E-12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대한원원에이스주식E-13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아인슈타인주식24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SUN주식S- 4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대한원원에이스주식E-14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대한원원에이스주식E-15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아인슈타인주식V-28	10.35	24.15	0.5	0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대한투신운용	대한원원에이스주식E-16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대한원원에이스주식E-19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대한원원에이스주식E-20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아인슈타인주식V-29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대한원원에이스주식E-18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코리아홀인원주V-58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대한원원에이스주식E-22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더블타켓주식46	7.35	17.1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프라임주식E- 5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대한원원에이스주식E-21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홀인원주식	6.86	27.46	0.5	0.18
대한투신운용	SUN주식S- 5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코리아홀인원주V-62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대한원원에이스주식E-25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코리아홀인원주V-66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대한원원에이스주식E-23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대한원원에이스주식E-27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코리아홀인원주V-67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원더풀주식S- 1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원더풀주식S- 2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원더풀주식S- 3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대한원원에이스주식E-26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대한원원에이스주식E-28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대한원원에이스주식E-29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대한원원에이스주식E-24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코리아홀인원주V-70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코리아홀인원주V-71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원더풀주식S- 6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대한원원에이스주식E-31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프라임주식E- 6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아인슈타인주식V-36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프라임주식E- 7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코리아홀인원주V-75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원더풀주식S- 8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더블타켓주식53	7.35	17.1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코리아홀인원주V-76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아인슈타인주식V-35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원더풀주식S- 9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대한원원에이스주식E-34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100클럽주식V- 1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100클럽단기주식V- 1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아인슈타인주식V-39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100클럽주식V- 2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100클럽단기주식V- 2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100클럽주식V- 3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100클럽단기주식V- 3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100클럽단기주식V- 4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엑셀런트주식V-21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다이나믹성장주식S- 1	5.85	13.6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100클럽단기주식V- 8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대한원원베스트주식V-15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코리아지식경영V- 3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코리아지식경영V- 6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코리아지식경영V- 7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코리아지식경영V- 8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코리아지식경영V- 9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코리아지식경영V-10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코리아지식경영V-11	10.35	24.15	0.5	0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대한투신운용	원원코리아지식경영V-12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더블타켓주식63	7.35	17.15	0.5	0
대한투신운용	더블타켓주식66	7.35	17.1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원더풀주식S-27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100클럽단기주식V-10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100클럽단기주식V-12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100클럽단기주식V-13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대한원원베스트주식V-16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D파워12A주식S-51	4.95	11.55	0.5	0
대한투신운용	DB과세가계주식F-1	1.95	4.55	0.5	0
대한투신운용	D개인연금주식S-1	2.85	6.65	0.5	0
대한투신운용	D개인연금주식S-2	2.85	6.65	0.5	0
대한투신운용	D개인연금주식S-3	2.85	6.65	0.5	0
대한투신운용	D개인연금주식S-4	2.85	6.65	0.5	0
대한투신운용	D개인연금주식S-5	2.85	6.65	0.5	0
대한투신운용	D개인연금주식S-6	2.85	6.65	0.5	0
대한투신운용	D개인연금주식S-7	2.85	6.65	0.5	0
대한투신운용	엑셀런트주식V-29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코리아홀인원주V120	10.35	24.15	0.5	0
대한투신운용	W개인연금주식S-1	2.85	6.65	0.5	0
대한투신운용	W개인연금주식S-2	2.85	6.65	0.5	0
대한투신운용	W개인연금주식S-3	2.85	6.65	0.5	0
대한투신운용	W개인연금주식S-4	2.85	6.65	0.5	0
대한투신운용	W개인연금주식S-5	2.85	6.65	0.5	0
대한투신운용	W개인연금주식S-6	2.85	6.65	0.5	0
대한투신운용	W개인연금주식S-7	2.85	6.65	0.5	0
대한투신운용	새천년코스닥주식S-1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새천년월드주식단기S-1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새천년코스닥주식S-2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G개인연금주식4	2.85	6.65	0.5	0
대한투신운용	G개인연금주식5	2.85	6.6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CBO후순위채6추가형C-1	3	7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CBO후순위채6추가형C-2	3	7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CBO후순위채6추가형C-3	3	7	0.5	0
대한투신운용	새천년코스닥주식S-3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CBO후순위채6추가형C-4	3	7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프리코스닥12주식S-1	8.85	20.65	0.5	0
대한투신운용	원원CBO후순위채6추가형C-7	3	7	0.5	0
대한투신운용	New하이일드A12혼합I-1	4.5	10.5	0.5	0
대한투신운용	New뉴하이일드A2년혼합I-1	3	7	0.4	0
대한투신운용	New뉴하이일드D2년혼합I-1	1.5	3.5	0.4	0
대한투신운용	비과세가계채권혼합모신탁F-1	0	0	0	0
대한투신운용	세금우대채권모신탁S-1	0	0	0	0
대한투신운용	개인연금채권혼합모신탁S-1	0	0	0	0
대한투신운용	개인연금주식혼합모S-1	0	0	0	0
대한투신운용	근로자비과세주식혼합모S-1	0	0	0	0
대한투신운용	비과세가계주식혼합모F-1	0	0	0	0
대한투신운용	탐플러스신종세금우대채권S-1	2.8	6.52	0.5	0.18
대한투신운용	뉴개인연금채권S-1	3	7	0.5	0
대한투신운용	뉴개인연금주식혼합S-1	6	14	0.5	0
대한투신운용	뉴근로자비과세채권S-1	3	7	0.5	0
대한투신운용	뉴분리과세국채S-1	3	7	0.5	0
대한투신운용	뉴분리과세채권S-1	3	7	0.5	0
대한투신운용	신종MMF90S-43	3	7	0.5	0
대한투신운용	우먼파워추가형장기채권S-1	2.85	6.65	0.5	0
대한투신운용	우먼파워추가형중기채권S-1	2.85	6.65	0.5	0
대한투신운용	탐플러스장기채권H-2	2.95	6.87	0.5	0.18
대한투신운용	뉴분리과세채권S-2	3	7	0.5	0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대한투신운용	뉴분리과세국채S- 2	3	7	0.5	0
대한투신운용	인베스트연금채권S- 1	3	7	0.4	0
대한투신운용	인베스트연금주식S- 1	4	16	0.4	0
대한투신운용	인베스트연금국공채S- 1	3	7	0.4	0
대한투신운용	인베스트연금혼합S- 1	4.5	10.5	0.4	0
대한투신운용	인Best인덱스파생상품S- 1	2.96	11.86	0.5	0.18
대한투신운용	뉴근로자비과세혼합S- 1	6	14	0.5	0
대한투신운용	인베스트아트성장주식A- 1	4.6	18.4	0.4	0
대한투신운용	인베스트아트코스닥주식A- 1	4.6	18.4	0.4	0
대한투신운용	New하이일드A12혼합I- 2	3.6	8.4	0.5	0
대한투신운용	뉴분리과세채권S- 4	3	7	0.5	0
대한투신운용	인베스트밸류장기증권A- 1	4.96	19.84	0.4	0.2
대한투신운용	인베스트밸류장기증권A- 2	3.96	15.84	0.4	0.2
대한투신운용	New하이일드A12혼합I- 5	3	7	0.4	0
대한투신운용	인베스트밸류장기증권A- 4	4.96	19.84	0.4	0.2
대한투신운용	원원클린MMF E- 1	1.2	2.8	0.3	0
대한투신운용	New하이일드A12혼합I- 6	3	7	0.4	0
대한투신운용	New하이일드A12혼합I- 7	3	7	0.4	0
대한투신운용	인베스트밸류장기증권A- 5	4.96	19.84	0.4	0.2
대한투신운용	GallopKorea인덱스파생상품V- 1	1.96	7.86	0.4	0.18
대한투신운용	GallopKorea인덱스스왑주식V- 1	2	8	0.4	0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블루칩바스켓주식V- 1	4.45	10.37	0.4	0.18
대한투신운용	GallopKorea안정혼합A- 1	2.95	6.87	0.4	0.18
대한투신운용	GallopKorea CBO 6혼합A- 1	2.7	6.3	0.4	0
대한투신운용	GallopKorea CBO 6혼합A- 2	2.7	6.3	0.4	0
대한투신운용	신종MMF S- 51	2.95	6.87	0.5	0.18
대한투신운용	Gallop파이팅!코리아A- 1	3.78	8.82	0.4	0
대한투신운용	GallopKorea CBO 6채권A- 3	1.5	3.5	0.3	0
대한투신운용	스마트플랜엄브렐러블루칩S- 1	4.96	19.86	0.4	0.18
대한투신운용	스마트플랜엄브렐러안정혼합S- 1	5.95	13.87	0.4	0.18
대한투신운용	스마트중기채권I- 2	1.8	4.2	0.3	0
대한투신운용	스마트장기채권I- 2	2.35	5.47	0.4	0.18
대한투신운용	Gold&Wise분리과세채권K- 1	2.4	5.6	0.3	0
대한투신운용	스마트중기채권I- 3	1.75	4.07	0.3	0.18
대한투신운용	스마트플랜장기주택마련채권K- 1	3	7	0.4	0
대한투신운용	스마트플랜장기주택마련혼합K- 1	4.5	10.5	0.4	0
대한투신운용	스마트장기채권I- 3	2.4	5.6	0.4	0
대한투신운용	뉴분리과세채권S- 5	3	7	0.5	0
대한투신운용	GallopKorea New하이일드A 6혼합K- 1	2.7	6.3	0.4	0
대한투신운용	GallopKorea New하이일드A 6혼합A- 1	2.1	4.9	0.4	0
대한투신운용	신종MMF S- 52	0.34	0.78	0.2	0.18
대한투신운용	신종MMF S- 53	1.15	2.67	0.3	0.18
대한투신운용	Gold&Wise분리과세국공채K- 1	1.82	5	0.3	0.18
대한투신운용	GallopKorea New하이일드A 6혼합K- 2	1.83	4.27	0.3	0
대한투신운용	신종MMF E- 7	0.91	2.11	0.3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배당60주식 1	5.95	13.87	0.4	0.18
대한투신운용	스마트플러스NEW하이일드6채권K1	1.5	3.5	0.3	0
대한투신운용	스마트플러스NEW하이일드3채권K1	1.5	3.5	0.3	0
대한투신운용	스마트플러스NEW하이일드6채권K2	1.5	3.5	0.3	0
대한투신운용	스마트플러스NEW하이일드3채권K2	1.5	3.5	0.3	0
대한투신운용	인베스트비과세펀스주식S- 1	5	20	0.4	0
대한투신운용	대한e-태극인덱스파생 1	2.26	5.26	0.3	0.18
대한투신운용	GallopKorea블루칩바스켓주식V- 2	3.96	15.86	0.4	0.18
대한투신운용	GallopKorea New하이일드A 6혼합K- 3	1.83	4.27	0.3	0
대한투신운용	GallopKorea New하이일드A12혼합K- 1	2.7	6.3	0.4	0
대한투신운용	GallopKorea메가+파생상품K- 1	2.96	11.86	0.4	0.18
대한투신운용	GallopKorea NEW인덱스혼합S- 1	5.8	23.2	0.4	0
대한투신운용	GallopKorea New하이일드A12혼합K- 2	2.7	6.3	0.4	0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대한투신운용	GallopKorea메가+주식K- 2	3	12	0.4	0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장기채권S- 1	1.66	3.86	0.3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엠브렐러1MMF K- 1	3	7	0.4	0
대한투신운용	클래스1엠브렐러뉴인덱스파생상품K- 1	5.96	23.86	0.4	0.18
대한투신운용	인Best국공채신종MMF K- 1	1.45	3.37	0.3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1엠브렐러리버스인덱스파생상품K- 1	5.96	23.86	0.4	0.18
대한투신운용	스마트단기채권S- 9	1.75	4.07	0.3	0.18
대한투신운용	가족사랑쌍적립식주식K- 1	4.96	19.86	0.4	0.18
대한투신운용	가족사랑쌍적립식안정혼합K- 1	5.05	11.77	0.4	0.18
대한투신운용	가족사랑쌍적립식혼합K- 1	6.55	15.27	0.4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신종MMF K- 5	0.49	1.13	0.2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 1베스트셀렉션해외재간접 1	2.4	9.6	0.5	0.18
대한투신운용	GallopKorea New하이일드A 6혼합K- 4	1.83	4.27	0.3	0
대한투신운용	GallopKorea New하이일드A 6혼합K- 5	1.83	4.27	0.3	0
대한투신운용	Gold&Wise BRICs해외재간접K- 1	5	7	0.5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오토시스템주식혼합S- 1	4.45	10.37	0.4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스페셜30혼합 1	3.6	8.4	0.35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밀리언채권혼합 1	5.4	12.6	0.4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오토시스템혼합 2	5.95	13.87	0.4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아름다운실버배당혼합 1	3	7	0.4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밀리언채권혼합 2	5.4	12.6	0.4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오토시스템안정혼합 1	3.6	8.4	0.3	0.18
대한투신운용	광개토대왕채권혼합 1	5.4	12.6	0.4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오토시스템선취혼합 1	4.45	10.37	0.4	0.18
대한투신운용	Pinetree(파인트리)중기채권 1	1.5	3.5	0.3	0.18
대한투신운용	Pinetree(파인트리)장기채권 1	1.5	3.5	0.3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클래스1특별자산 1	3.79	7.5	0.4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 1월드셀렉션재간접 1	5.4	12.6	0.5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오토시스템단기혼합 1	6	14	0.4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클래스1하늘채특별자산 1	4.17	8	0.4	0.18
대한투신운용	배당플러스채권혼합 1	3	7	0.3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1오토시스템액티브주식혼합 1	7.5	17.5	0.4	0.18
대한투신운용	신종MMF 1	0.32	0.75	0.25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오토시스템선취혼합 2	4.45	10.37	0.4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오토시스템혼합 1	6	14	0.3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1오토시스템액티브주식혼합 2	7.5	17.5	0.4	0.18
대한투신운용	G&W글로벌베스트셀렉션해외재간접 1	6	9.97	0.5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타겟분할매수주식혼합 1	4.36	10.16	0.3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오토시스템선취혼합 3	4.45	10.37	0.4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코스닥주식혼합 1	7.33	17.09	0.4	0.18
대한투신운용	스타트랙혼합 1	6	14	0.3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오토시스템안정혼합 2	3.6	8.4	0.3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 1프라임셀렉션해외재간접 1	3.6	8.4	0.5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Two-StarVI파생상품 3	0.04	0.16	0.3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오토시스템단기혼합 2	6	14	0.4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오토시스템안정혼합 3	3.6	8.4	0.3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i-사랑적립식혼합 1	3.46	8.06	0.3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오토시스템주식혼합 1	6	14	0.3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오토시스템단기혼합3	6	14	0.4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Three-StarI파생상품 1	0.04	0.16	0.3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세계로선박특별자산 1	4.52	7	0.3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세계로선박특별자산 2	4.52	7	0.3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꿈에그린명가1특별자산 1	2.02	7	0.3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꿈에그린명가1특별자산 2	2.6	0.1	0.3	0.18
대한투신운용	C1오토시스템액티브(II)주식혼합 1	3.43	7.99	0.4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배당30혼합 1	3.46	8.06	0.3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파워2Star(IV)파생상품 1	0.06	0.14	0.3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오토시스템안정혼합 4	3.6	8.4	0.3	0.18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오토시스템(단기)혼합 4	6	14	0.4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TWOStar(X)파생상품 2	0.04	0.16	0.3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클래스1특별자산 2	1.2	4.82	0.3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오토시스템(선취)혼합 4	4.45	10.37	0.4	0.18
대한투신운용	파워엔진Brics해외재간접 1	5	7	0.5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파워2Star(XI)파생 1	0.06	0.14	0.3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이머징마켓해외재간접 1	5.4	12.6	0.5	0.18
대한투신운용	파워장기주택마련채권혼합 1	4.36	10.16	0.3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태극배당주식모	0	0	0	0
대한투신운용	대한태극곤주식자	7.33	17.09	0.4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태극블루칩주식모	0	0	0	0
대한투신운용	대한태극성장주식모	0	0	0	0
대한투신운용	대한태극유망중소형주식모	0	0	0	0
대한투신운용	대한태극이주식자	7.33	17.09	0.4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태극갑주식자	7.33	17.09	0.4	0.18
대한투신운용	파워글로벌그로스파생 1	3.43	7.99	0.4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오토시스템단기혼합 5	6	14	0.4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오토시스템단기혼합 6	6	14	0.4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클래스원부동산 3	3.07	7.85	0.6	0.18
대한투신운용	파워투웨이ELS채권 7	1.39	3.23	0.2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매칭단위형(12)채권 4	1.09	2.53	0.2	0.18
대한투신운용	파워J-REITELS채권 1	2.86	6.66	0.3	0.18
대한투신운용	파워투웨이ELS채권 8	1.39	3.23	0.2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오토시스템안정혼합 5	3.6	8.4	0.3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오토시스템주식혼합 2	6	14	0.3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파워인덱스파생상품 1	4.45	5.37	0.4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타겟분할매수주식혼합 2	5.26	12.26	0.3	0.18
대한투신운용	파워J-REITELS채권 2	2.86	6.66	0.3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오토시스템단기혼합 7	6	14	0.4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오토시스템단기혼합 8	6	14	0.4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매칭단위형12채권 5	0.79	1.83	0.2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클래스원오창우림부동산 1	2	5	0.5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클래스원오창우림부동산 2	2	5	0.5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세계로선박특별자산 4	4.42	7	0.4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irstClass중기채권1호	0.49	1.13	0.2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파워일본배당주식 1	9.6	9.6	0.5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오토시스템(단기)혼합 9	6	14	0.4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Two-Star(XV)파생상품 1	0.04	0.16	0.3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irstClass장기채권 1	0.49	1.13	0.2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파워2Star(VIII)파생 4	0.04	0.16	0.3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LP퇴직연금적극운용채권자	1	3	0.3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퇴직연금적극운용채권모	0	0	0	0
대한투신운용	대한퇴직연금단기안정채권모	0	0	0	0
대한투신운용	대한퇴직연금Balance주식모	0	0	0	0
대한투신운용	라이프플랜퇴직연금채권혼합자 1	2	5	0.3	0.18
대한투신운용	라이프플랜퇴직연금채권혼합자 2	2	5	0.3	0.18
대한투신운용	라이프플랜퇴직연금Balance주자	4.52	5	0.3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Two-Star(XIII)파생 1	0.04	0.16	0.3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irstClass장기채권 2	0.49	1.13	0.2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파워2Star(VIII)파생 5	0.04	0.16	0.3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파워2Star(VIII)파생 6	0.04	0.16	0.3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퇴직연금장기회사채권모	0	0	0	0
대한투신운용	대한LP퇴직연금장기채권자	1	2	0.3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LP퇴직연금장기국공채권자	1	3	0.3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퇴직연금장기국공채권모	0	0	0	0
대한투신운용	대한파워2Star(XV)파생 1	0.06	0.14	0.3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퇴직연금매칭10년채권모	0	0	0	0
대한투신운용	라이프플랜퇴직연금2015채권혼자	2	5	0.3	0.18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대한투신운용	대한파워지수연동ELS채권 4	1.99	4.63	0.2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오토시스템안정혼합 6	3.6	8.4	0.3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irstClass오토액티브혼합 1	6	14	0.4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irstClass중국지수ELS채권 1	1.99	4.63	0.2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세계로OK선박특별자산 1	4.22	6.2	0.4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오토시스템(단기)혼합10	6	14	0.4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파워2Star(XV)파생 2	0.04	0.16	0.3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C중국주식해외재간접 1	4	16	0.5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C일본주식해외재간접 1	4	16	0.5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irstClass2Star(I)파생 1	4.9	19.62	0.3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irstClass오토시스템주혼 1	5.83	13.59	0.4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irstClass킹주식혼합 1	5.83	13.59	0.4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irstClass2Star(II)파생 1	4.9	19.62	0.3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태극건주식	7.18	16.74	0.4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irstClass가디언주식 1	4.88	19.54	0.4	0.18
대한투신운용	G파워매트릭스미국성장재간접모	0	0	0	0
대한투신운용	G파워매트릭스일본주식재간접모	0	0	0	0
대한투신운용	G파워매트릭스브릭스주식재간모	0	0	0	0
대한투신운용	G파워매트릭스유럽가치주재간모	0	0	0	0
대한투신운용	G파워매트릭스해외주식자 I	5.4	12.6	0.5	0.18
대한투신운용	G파워매트릭스해외주식자 II	5.4	12.6	0.5	0.18
대한투신운용	G파워매트릭스해외주식자 III	5.4	12.6	0.5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irstClass커피설탕채권 1	2.29	5.33	0.2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irstClass오토시스템주혼 2	5.83	13.59	0.4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irstClass오토시스템주혼 3	5.83	13.59	0.4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글로벌에셋선택선해외재간 1ClassA	6.29	14.68	0.5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irstClass2Star(III)파생 1	4.9	19.62	0.3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글로벌에셋선택선해외재간 1ClassW	6.29	0	0.5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CLG전자삼성화재파생 1	4.9	19.62	0.3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irstClass오토시스템주혼 4	5.83	13.59	0.4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CKT&G대우조선해양파생 1	4.9	19.62	0.3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삼성전자대우조선해양파생 1	7.36	17.16	0.3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irstClass오토시스템주혼 5	5.83	13.59	0.4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C삼성전자하나금융지주파생 1	4.9	19.62	0.3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C하나금융지주현대모비스파생 1	4.9	19.62	0.3	0.18
대한투신운용	클래스원오토시스템주식혼합 3	6	14	0.3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irstClass오토시스템주혼 6	5.83	13.59	0.4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C한국전력현대모비스주가연계파생 1	5.9	23.62	0.3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irstClass국민은행현대모비스파생 1	6.5	26.02	0.3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irstClass현대모비스하이닉스파생 1	4.9	19.62	0.3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irstClassSK현대모비스파생 1	4.9	19.62	0.3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irstClass옥수수설탕파생상품 1	2.44	9.78	0.6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irstClass단기채권 1	0.37	0.85	0.1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irstClassMulti-Star파생 1	6.5	26.02	0.3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irstClassKT&G삼성증권파생 1	4.9	19.62	0.3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irstClass디펜스지수연계파생 1	3.3	13.22	0.3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irstClass현대차우리투자증권파생 1	4.9	19.62	0.3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irstClass오토시스템주혼 7	5.83	13.59	0.4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irstClass지수연계파생 1	1.3	5.22	0.3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irstClass삼성전자현대차KT&G파생 1	6.5	26.02	0.3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irstClass현대모비스기업은행파생 1	4.9	19.62	0.3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irstClass채권혼합 1	0.35	0.82	0.15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irstClass현대모비스KT&G파생 1	4.9	19.62	0.3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FirstClass현대차국민은행파생 1	4.9	19.62	0.3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중국포커스주식재간접모	0	0	0	0
대한투신운용	대한차이나포커스해외주식자	5.4	7.6	0.5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단기채권혼합 1	0.94	2.18	0.2	0.18
대한투신운용	대한커머디티(Commodity)해외재간접 1	6	14	0.5	0.18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푸르덴셜자산운	Pru개인연금공사채 1	0.95	8.55	0.5	0
푸르덴셜자산운	H개인연금공사채 1	0.95	8.5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개인연금공사채 2	0.95	8.5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개인연금공사채 3	0.95	8.55	0.5	0
푸르덴셜자산운	H개인연금공사채 2	0.95	8.55	0.5	0
푸르덴셜자산운	으뜸장기공사채21	0.95	8.5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개인연금공사채 4	0.95	8.5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개인연금공사채50	2.85	6.65	0.5	0
푸르덴셜자산운	근로자장기공사채11	1.95	4.5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개인MMF2- 1	1.15	11.25	0.5	0.1
푸르덴셜자산운	Pru개인연금공사채 5	0.95	8.5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엠프렐리MMF 1	10	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엠프렐리공사채 1	10	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분리과세국공채 1	1.35	12.15	0.5	0
푸르덴셜자산운	다목적혼합	0.25	2.25	0.4	0.1
푸르덴셜자산운	우량기업주식 2	0.95	8.5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개인연금혼합 1	1.4	12.6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개인연금골드혼합	1.4	12.6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개인연금혼합 2	1.4	12.6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정석운용주식 1	2.95	26.5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정석운용주식H- 1	19	10.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르네상스혼합1- 1	8.79	20.51	0.5	0.2
푸르덴셜자산운	Pru르네상스혼합2- 1	3.24	26.16	0.5	0.1
푸르덴셜자산운	Pru나폴레옹주식1- 1	10	19.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나폴레옹정통액티브주식 1	2.9	26.5	0.5	0.1
푸르덴셜자산운	Pru퇴직금혼합1- 1	10	19.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르네상스혼합2- 3	2.95	26.5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르네상스혼합1- 5	10	19.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나폴레옹주식1- 2	10	19.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나폴레옹주식2- 2	2.95	26.5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나폴레옹주식1- 4	10	19.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나폴레옹주식2- 3	2.95	26.5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나폴레옹주식1- 5	10	19.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코스닥혼합 1	4	25.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나폴레옹주식2- 6	2.95	26.5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나폴레옹주식1- 6	10	19.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나폴레옹주식1- 7	10	19.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나폴레옹주식2- 11	2.95	26.5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나폴레옹주식1- 8	5	24.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개인연금혼합 3	1.4	12.6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나폴레옹주식1- 9	5	24.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나폴레옹주식2- 13	2.95	26.5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정통액티브주식 2	8.79	20.51	0.5	0.2
푸르덴셜자산운	Pru밀레니엄칩주식 1	3.28	26.22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나폴레옹주식1- 11	5	24.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하모니혼합 4	1.51	13.49	0.4	0.1
푸르덴셜자산운	Pru나폴레옹ST혼합2- 10	2.95	26.5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나폴레옹주식ST1- 2	5	24.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밀레니엄칩주식 3	3.86	25.64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리커버리성장형주식	1.95	17.5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나폴레옹주식ST2- 13	2.95	26.5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나폴레옹ST주식1- 3	10	19.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나폴레옹주식1- 12	10	19.5	0.5	0
푸르덴셜자산운	D개인연금주식 1	0.95	8.55	0.5	0
푸르덴셜자산운	D개인연금주식 2	0.95	8.55	0.5	0
푸르덴셜자산운	D H개인연금주식 1	0.95	8.5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밀레니엄칩주식1- 1	10	19.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나폴레옹주식ST1- 8	10	19.5	0.5	0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푸르덴셜자산운	Pru밀레니엄칩주식ST1- 1	10	19.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성장액티브주식 1	2.85	26.55	0.5	0.1
푸르덴셜자산운	Pru IR우량기업주식2- 1	2.95	26.55	0.5	0
푸르덴셜자산운	W개인연금주식 2	0.95	8.55	0.5	0
푸르덴셜자산운	W H개인연금주식 1	0.95	8.5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코스닥6M혼합2- 1	2.95	26.5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밀레니엄칩주식ST1- 2	10	19.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밀레니엄칩주식ST1- 3	10	19.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코스닥6M혼합2- 2	2.85	26.55	0.5	0.1
푸르덴셜자산운	Pru Value포커스주식1- 1	10	19.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 IR우량기업주식2- 2	2.95	26.5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나폴레옹주식1- 14	10	19.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 Value포커스주식1- 2	10	19.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나폴레옹주식ST2- 22	2.95	26.5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밀레니엄칩주식2- 2	2.95	26.5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밀레니엄칩주식1- 6	10	19.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밀레니엄칩주식ST2- 4	2.95	26.5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밀레니엄칩주식1- 7	10	19.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밀레니엄칩ST주식1- 4	10	19.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밀레니엄칩ST주식1- 5	10	19.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E코스닥혼합2- 1	0	0	0	0
푸르덴셜자산운	PRE코스닥혼합1- 1	0	0	0	0
푸르덴셜자산운	Pru엠브렐러밀레니엄칩혼합 1	10	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엠브렐러나폴레옹혼합 1	10	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엠브렐러Value포커스혼합 1	10	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엠브렐러코스닥혼합 1	10	5	0.5	0
푸르덴셜자산운	후순위채추가형혼합6- 2	1.95	17.5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엠브렐러중소형혼합 1	10	5	0.5	0
푸르덴셜자산운	후순위채추가형혼합6- 3	1.95	17.55	0.5	0
푸르덴셜자산운	후순위채추가형혼합6- 4	1.95	17.55	0.5	0
푸르덴셜자산운	후순위채추가형혼합 6- 5	1.85	17.55	0.5	0.1
푸르덴셜자산운	후순위채추가형혼합 6- 6	1.95	17.55	0.5	0
푸르덴셜자산운	뉴하이일드D추가형혼합 1	1.95	17.55	0.5	0
푸르덴셜자산운	개인연금채권혼합모신탁	0	0	0	0
푸르덴셜자산운	근로자우대채권혼합모신탁	0	0	0	0
푸르덴셜자산운	추가적립채권모신탁	0	0	0	0
푸르덴셜자산운	개인연금주식혼합모신탁	0	0	0	0
푸르덴셜자산운	Pru엠브렐러인덱스주식 1	10	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신종개인연금채권SL- 1	1.25	11.25	0.5	0
푸르덴셜자산운	뉴패러다임II채권 6M- 3	0.9	9	0.5	0.1
푸르덴셜자산운	뉴하이일드A추가형혼합II-CH 1	4.39	13.65	0.5	0
푸르덴셜자산운	뉴하이일드A추가형혼합SY- 1	0.5	44	0.5	0
푸르덴셜자산운	후순위채추가형혼합SL 1	1.95	17.55	0.5	0
푸르덴셜자산운	정석퇴직국공채SL- 1	1.2	10.8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신종분리과세채권CH 1	1.45	13.0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신종분리과세국공채CH 1	1.35	12.15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연금국공채KM 1	1	9	0.4	0
푸르덴셜자산운	Pru연금채권KM 1	1	9	0.4	0
푸르덴셜자산운	Pru연금혼합KM1	1.9	17.1	0.4	0
푸르덴셜자산운	Pru연금주식KM1	1.9	17.1	0.4	0
푸르덴셜자산운	Pru신종분리과세채권KM 1	1.45	13.05	0.5	0
푸르덴셜자산운	퍼펙트U MMF 1	1	9	0.5	0
푸르덴셜자산운	퍼펙트U채권 1	1	10.8	0.5	0.2
푸르덴셜자산운	퍼펙트U인덱스파생 1	1.8	18	0.5	0.2
푸르덴셜자산운	퍼펙트U성장주식 1	2.75	26.55	0.5	0.2
푸르덴셜자산운	퍼펙트U코스닥주식 1	2.75	26.55	0.5	0.2
푸르덴셜자산운	퍼펙트U혼합 1	1.8	18	0.5	0.2
푸르덴셜자산운	Pru신종분리과세채권KM 2	1.45	13.05	0.5	0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푸르덴셜자산운	비과세고수익고위험채권NH1	1	9	0.4	0.2
푸르덴셜자산운	비과세고수익고위험혼합NH1	1.5	13.5	0.4	0.2
푸르덴셜자산운	비과세고수익고위험혼합H-NH2	4.5	10.5	0.4	0.2
푸르덴셜자산운	비과세고수익고위험혼합NH2	1.5	13.5	0.4	0.2
푸르덴셜자산운	Pru신중분리과세국공채KM 4	1.35	12.15	0.5	0
푸르덴셜자산운	배당포커스혼합KM 1	1.4	13.5	0.5	0.1
푸르덴셜자산운	뉴하이일드A추가형혼합II-KM 1	1	9	0.5	0
푸르덴셜자산운	뉴하이일드A추가형혼합II-KM 2	1.5	13.5	0.5	0
푸르덴셜자산운	뉴하이일드A추가형혼합II-NH 1	1	9	0.5	0
푸르덴셜자산운	Pru인덱스파생상품NH2	1.9	18	0.5	0.1
푸르덴셜자산운	세이프가드혼합KM- 1	2.4	22.5	0.4	0.1
푸르덴셜자산운	뉴하이일드A추가형혼합II-KM 4	1.95	17.55	0.5	0
푸르덴셜자산운	세이프분리과세혼합KM1	1.16	10.44	0.4	0
푸르덴셜자산운	Pru파이팅코리아나폴레옹혼합 1	1.93	10.72	0.35	0
푸르덴셜자산운	세이프가드안정혼합KM4	1.5	13.5	0.4	0.1
푸르덴셜자산운	바운더리30추혼SH 1	1.5	13.5	0.4	0.1
푸르덴셜자산운	바운더리60추혼SH 1	2.4	22.5	0.4	0.1
푸르덴셜자산운	바운더리90추혼SH 1	2.4	22.5	0.4	0.1
푸르덴셜자산운	Pru르네상스FREE혼합KM 1	2.5	17.5	0.4	0.2
푸르덴셜자산운	Pru하모니FREE혼합KM 1	2	13	0.4	0.2
푸르덴셜자산운	Pru신중분리과세채권KM 3	1.45	13.05	0.5	0
푸르덴셜자산운	후순위채권SL- 1	1	9	0.4	0
푸르덴셜자산운	후순위채권SL- 2	0.42	3.78	0.3	0
푸르덴셜자산운	뉴하이일드A추가형혼합II-SL 2	0.42	3.78	0.3	0
푸르덴셜자산운	Pru나폴레옹FREE주식 2	7.5	12.5	0.4	0.2
푸르덴셜자산운	후순위채권SL- 4	0.7	6.34	0.35	0
푸르덴셜자산운	후순위채권KM 1	0.57	5.13	0.3	0
푸르덴셜자산운	후순위채추가형혼합KM 1	0.76	7.74	0.4	0.1
푸르덴셜자산운	Pru엄브렐라안정혼합 1	10	5	0.5	0
푸르덴셜자산운	후순위채권KM 2	0.57	5.13	0.3	0
푸르덴셜자산운	후순위채추가형혼합KM 3	1.9	18	0.4	0.1
푸르덴셜자산운	드림장기주택혼합KM 1	1.5	13.5	0.4	0
푸르덴셜자산운	드림장기주택채권KM 1	1	9	0.4	0
푸르덴셜자산운	국공채법인MMF KM2	0.2	1	0.2	0.1
푸르덴셜자산운	후순위채권KM 3	0.3	1.8	0.2	0.1
푸르덴셜자산운	국공채개인MMF 2	0.39	3.71	0.3	0.1
푸르덴셜자산운	후순위채추가형혼합KM 4	1.9	18	0.4	0.1
푸르덴셜자산운	Pru법인MMF 2-20	0.2	0.9	0.2	0.2
푸르덴셜자산운	뉴하이일드A분리과세채권KM 1	1	9	0.4	0
푸르덴셜자산운	바운더리90추가혼합SH 2	2.5	22.5	0.4	0
푸르덴셜자산운	후순위채추가형혼합KM 5	1.4	13.5	0.4	0.1
푸르덴셜자산운	골드국공채법인MMF-KM3	0.32	1.38	0.2	0.1
푸르덴셜자산운	국공채법인MMF-KM 4	0.72	1.93	0.25	0.1
푸르덴셜자산운	골드공모주뉴하이일드A혼합KM 1	1.5	13.5	0.4	0
푸르덴셜자산운	골드공모주뉴하이일드A혼합KM 5	1.5	13.5	0.4	0
푸르덴셜자산운	후순위채추가형혼합KM 6	1.9	18	0.4	0.1
푸르덴셜자산운	골드공모주뉴하이일드A혼합NH 1	1.5	13.5	0.4	0
푸르덴셜자산운	골드단기뉴하이일드A채권NH 1	1	9	0.4	0
푸르덴셜자산운	세이프가드분리과세혼합KM 2	1.16	10.44	0.4	0
푸르덴셜자산운	골드공모주뉴하이일드A혼합KM 2	2.5	22.5	0.4	0
푸르덴셜자산운	골드공모주뉴하이일드A혼합KM 4	1.9	18	0.4	0.1
푸르덴셜자산운	골드중기뉴하이일드A채권NH 1	0.7	6.3	0.4	0
푸르덴셜자산운	골드공모주뉴하이일드A혼합KM 6	1	9	0.4	0
푸르덴셜자산운	골드공모주장기뉴하이일드A혼합NH 2	2.5	22.5	0.4	0
푸르덴셜자산운	골드단기뉴하이일드A채권NH 3	1.4	13.5	0.4	0.1
푸르덴셜자산운	골드단기뉴하이일드A채권NH 4	1.2	11.7	0.4	0.1
푸르덴셜자산운	골드중기뉴하이일드A채권NH 3	1.4	13.5	0.4	0.1
푸르덴셜자산운	골드중기뉴하이일드A채권NH 4	1.2	11.7	0.4	0.1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푸르덴셜자산운	안심분리파세국공채NH 1	0.5	4.5	0.3	0
푸르덴셜자산운	뉴하이일드A추가형혼합II-NH 4	0.96	8.64	0.4	0
푸르덴셜자산운	골드공모주장기뉴하이일드A혼합NH 3	1.5	13.5	0.4	0
푸르덴셜자산운	안심단기채권 1	0.4	4.5	0.3	0.1
푸르덴셜자산운	안심단기국공채 1	0.45	4.45	0.3	0.1
푸르덴셜자산운	Pru프리엄브렐러MMF 1	1.5	3.5	0.3	0.2
푸르덴셜자산운	Pru프리엄브렐러나폴레옹주식 1	2.9	16.1	0.4	0.2
푸르덴셜자산운	Pru프리엄브렐러BULL인덱스파생상품 1	2.94	16.06	0.4	0.2
푸르덴셜자산운	마켓뉴트럴절대수익추구주식 1	1.9	18	0.4	0.1
푸르덴셜자산운	유퍼스트랩주식 1	6	0	0.3	0.2
푸르덴셜자산운	Pru법인MMF 2-23	0.4	0.8	0.2	0.1
푸르덴셜자산운	Pru프리엄브렐러BEAR인덱스파생상품 1	2.92	16.08	0.4	0.2
푸르덴셜자산운	Pru프리엄브렐러혼합 1	1.52	3.48	0.3	0.1
푸르덴셜자산운	PrudentialFormulaFoFs	2.26	14.04	0.5	0.2
푸르덴셜자산운	Pru아시아퍼시픽ETFs재간접 1 A	1.74	7.64	0.4	0.22
푸르덴셜자산운	Pru아시아퍼시픽ETFs재간접 1 B	1.74	15.64	0.4	0.22
푸르덴셜자산운	Pru인컴플러스안정혼합 1	1.24	11.16	0.4	0.2
푸르덴셜자산운	Pru아시아채권모	0	0	0	0
푸르덴셜자산운	Pru아시아달러채권자신탁 1(A)	4.31	4.07	0.5	0.22
푸르덴셜자산운	Pru아시아달러채권자 1(B)	4.31	10.07	0.5	0.22
푸르덴셜자산운	Pru아시아달러채권자신탁 1(I)	4.31	3.07	0.5	0.22
푸르덴셜자산운	퍼펙트엄브렐러단기혼합 1	1	9	0.4	0.2
푸르덴셜자산운	Pru코리아채권모신탁	0	0	0	0
푸르덴셜자산운	Pru아시아채권자신탁 1(B)	4.31	10.07	0.5	0.22
푸르덴셜자산운	Pru아시아퍼시픽ETFs재간접 2(B)	5.21	12.17	0.4	0.22
푸르덴셜자산운	Pru인컴플러스채권혼합 1	1.5	13.5	0.4	0.2
푸르덴셜자산운	Pru나폴레옹정통액티브FREE주식 1A	2.5	17.5	0.4	0.2
푸르덴셜자산운	Pru플랜채권자신탁 1	0.94	8.48	0.4	0.18
푸르덴셜자산운	Pru플랜주식자신탁 1	2.44	21.98	0.4	0.18
푸르덴셜자산운	Pru플랜주식혼합자신탁 1	1.94	17.48	0.4	0.18
푸르덴셜자산운	Pru플랜채권혼합자신탁 1	1.44	12.98	0.4	0.18
푸르덴셜자산운	Pru플랜안정혼합자신탁 1	1.14	10.28	0.4	0.18
푸르덴셜자산운	Pru배당포커스주식 1(B)	2.5	22.5	0.4	0.2
푸르덴셜자산운	Pru플랜채권모신탁	0	0	0	0
푸르덴셜자산운	Pru플랜주식모신탁	0	0	0	0
푸르덴셜자산운	Pru퇴직연금2030혼합자 1	2.5	4	0.3	0.2
푸르덴셜자산운	Pru퇴직연금2040혼합자 1	2.5	4	0.3	0.2
푸르덴셜자산운	Pru퇴직연금채권혼합자 1	2.5	4	0.3	0.2
푸르덴셜자산운	Pru퇴직연금인덱스채권모	0	0	0	0
푸르덴셜자산운	Pru퇴직연금인덱스주식모	0	0	0	0
푸르덴셜자산운	Pru퇴직연금채권모	0	0	0	0
푸르덴셜자산운	Pru퇴직연금2020혼합자 1	2.5	4	0.3	0.2
푸르덴셜자산운	Pru정통액티브채권 1B	2.1	4.9	0.3	0.2
푸르덴셜자산운	Pru아시아혼합자신탁 1(B)	4.91	11.47	0.4	0.22
푸르덴셜자산운	Pru아시아퍼시픽ETFs재간접모	0	0	0	0
푸르덴셜자산운	안심국공채KM 1 B	1.4	3.4	0.3	0.2
푸르덴셜자산운	안심플러스채권KM 1 B	1.7	4.1	0.3	0.2
푸르덴셜자산운	PruAdvisor보수적배분형재간접 1	3.39	4.91	0.5	0.2
푸르덴셜자산운	PruAdvisor안정배분형재간접 1	4.89	8.41	0.5	0.2
푸르덴셜자산운	PruAdvisor균형배분형재간접 1	5.79	10.51	0.5	0.2
푸르덴셜자산운	PruAdvisor성장배분형재간접 1	7.29	14.01	0.5	0.2
푸르덴셜자산운	PruAdvisor적극배분형재간접 1	7.29	14.01	0.5	0.2
푸르덴셜자산운	안심국공채KM 1F	1.4	0.3	0.3	0.2
푸르덴셜자산운	안심플러스채권KM 1(F)	1.7	0.3	0.3	0.2
푸르덴셜자산운	Pru정통액티브채권 1 F	2.1	0	0.3	0.2
푸르덴셜자산운	Pru아시아달러채권자 1(F)	4.31	0.3	0.5	0.22
푸르덴셜자산운	Pru정통액티브채권 1-I	2.1	1.9	0.3	0.2
푸르덴셜자산운	Pru G7 ETFs 재간접 1(A)클래스	5.21	4.17	0.4	0.22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푸르덴셜자산운	Pru G7 ETF 재간접 1(B)클래스	5.21	12.17	0.4	0.22
푸르덴셜자산운	Pru아시아프리미엄ETF재간접 1	5.18	12	0.6	0.22
푸르덴셜자산운	Pru스트래티직인컴혼합 1A	5.44	5.06	0.5	0.22
푸르덴셜자산운	Pru스트래티직인컴혼합 1B	5.44	9.06	0.5	0.22
푸르덴셜자산운	Pru금은동연계파생상품 1	4.5	10.5	0.4	0.2
푸르덴셜자산운	Pru조기상환ELS파생상품 1	4.05	9.45	0.3	0.2
푸르덴셜자산운	Pru조기상환ELS파생상품J- 1	4.05	9.45	0.3	0.2
푸르덴셜자산운	Pru조기상환ELS파생상품 2	4.05	9.45	0.3	0.2
푸르덴셜자산운	Pru오일지수연계파생상품 1	4.05	9.45	0.3	0.2
푸르덴셜자산운	Pru조기상환ELS파생상품 3	4.05	9.45	0.3	0.2
푸르덴셜자산운	Pru글로벌헬스케어주식 1_A	8.39	6.99	0.4	0.22
푸르덴셜자산운	Pru글로벌헬스케어주식 1_B	8.39	16.99	0.4	0.22
푸르덴셜자산운	Pru인덱스FREE파생상품 1A	3.57	3.33	0.4	0.2
푸르덴셜자산운	Pru Value포커스주식 1B	8.79	20.51	0.5	0.2
푸르덴셜자산운	Pru성장액티브주식 2B	8.79	20.51	0.5	0.2
푸르덴셜자산운	Pru조기상환ELS파생상품J- 2	4.05	9.45	0.3	0.2
푸르덴셜자산운	Pru나폴레옹정통액티브FREE주식 1 F	2.5	0	0.4	0.2
푸르덴셜자산운	Pru조기상환ELS파생상품 4	4.05	9.45	0.3	0.2
푸르덴셜자산운	PruKoreaJapan연계 파생상품A- 1	3.15	0.35	0.3	0.2
CJ자산운용	제일세금우대공사채 2	0.95	8.55	0.5	0
CJ자산운용	개인연금공사채 1	0.95	8.55	0.5	0
CJ자산운용	가계장기공사채 1	0.65	5.85	0.5	0
CJ자산운용	가계장기공사채 2	0.65	5.85	0.5	0
CJ자산운용	근로장기우대공사채 1	0.65	5.85	0.5	0
CJ자산운용	뉴스타트우대공사채 1	1.25	11.25	0.5	0
CJ자산운용	뉴스타트공사채30-901	0	0	0	0
CJ자산운용	제일신단기공사채519	0	0	0	0
CJ자산운용	가계장기공사채 3	0.65	5.85	0.5	0
CJ자산운용	근로장기우대공사채 2	0.65	5.85	0.5	0
CJ자산운용	제일신종MMF 1(개인)	1.25	11.25	0.5	0
CJ자산운용	Only법인10- 26공사채	0	0	0	0
CJ자산운용	트리플공사채004	0.1	0.1	0.5	0
CJ자산운용	뉴그린제일장기공사채 6	0	0	0	0
CJ자산운용	제일신종MMF 8	0	0	0	0
CJ자산운용	CJ Vision채인지업MMF 1	1.25	11.25	0.5	0
CJ자산운용	CJ Vision Combi공사채 2	1.45	13.05	0.5	0
CJ자산운용	제일신종MMF 21	0	0	0	0
CJ자산운용	D뉴그린제일장기공사채 6	0.1	0.1	0.5	0
CJ자산운용	CJ Vision포트폴리오MMF 1(개인)	1.5	5	0.5	0
CJ자산운용	CJ Vision포트폴리오공사채	1.5	5	0.5	0
CJ자산운용	신세금우대공사채 1	0.81	7.29	0.4	0
CJ자산운용	개인연금주식 1	1.4	12.6	0.5	0
CJ자산운용	개인연금주식 2	1.4	12.6	0.5	0
CJ자산운용	CJ Vision성장주식06- 1	2.95	26.55	0.5	0
CJ자산운용	CJ Vision Combi혼합주식 6	2.95	26.55	0.5	0
CJ자산운용	CJ Vision아름드리세이프턴10- 1	1.95	17.55	0.5	0
CJ자산운용	CJ Vision채인지업주식 1	2.95	26.55	0.5	0
CJ자산운용	CJ Vision솔루션혼합 1	1.95	17.55	0.5	0
CJ자산운용	CJ Vision성장주식H03-11	3	26.5	0.5	0
CJ자산운용	CJ Vision하이테크주식 4	1.5	13	0.5	0
CJ자산운용	CJ Vision성장주식H03-12	3	26.5	0.5	0
CJ자산운용	CJ Vision솔루션혼합 2	1.95	17.55	0.5	0
CJ자산운용	W뉴스타트주식30-901	0	0	0	0
CJ자산운용	CJ Vision Combi혼합주식 9	3	26.5	0.5	0
CJ자산운용	CJ Vision성장주식H03-13	3	26.5	0.5	0
CJ자산운용	CJ Vision코스닥주식 1	3	26.5	0.5	0
CJ자산운용	CJ Vision 2000주식 1	3	26.5	0.5	0
CJ자산운용	CJ Vision포트폴리오안정주식	10	5	0.5	0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CJ자산운용	CJ Vision포트폴리오성장주식	10	5	0.5	0
CJ자산운용	CJ Vision포트폴리오2000주식	10	5	0.5	0
CJ자산운용	CJ Vision포트폴리오코스닥주식	10	5	0.5	0
CJ자산운용	CJ Vision포트폴리오공모주식	10	5	0.5	0
CJ자산운용	CJ Vision CBO개인주식10- 1	0.95	8.55	0.3	0
CJ자산운용	CJ Vision CBO개인주식10- 2	2	18	0.5	0
CJ자산운용	CJ Vision CBO법인주식10- 4	2	18	0.5	0
CJ자산운용	CJ Vision 20주식 1	3	26.5	0.5	0
CJ자산운용	CJ Vision CBO개인주식10- 3	2	18	0.5	0
CJ자산운용	CJ Vision CBO법인주식10- 3	1.2	10.8	0.5	0
CJ자산운용	CJ Vision CBO법인주식10- 7	2	18	0.5	0
CJ자산운용	CJ Vision뉴하이일드A추가 10- 1	2	18	0.5	0
CJ자산운용	CJ Vision뉴하이일드A추가 10- 2	0.2	1.8	0.3	0
CJ자산운용	CJ Vision뉴하이일드A주식 10- 1	1	9	0.5	0
CJ자산운용	CJ Vision뉴하이일드A추가 10- 3	0.77	6.93	0.3	0
CJ자산운용	CJ Vision안정성장주식03- 2	2.5	22.5	0.5	0
CJ자산운용	CJ Vision뉴하이일드A주식 10- 3	1	9	0.5	0
CJ자산운용	CJ 뉴하이일드D추가형혼합06- 1	0.27	1.53	0.2	0
CJ자산운용	CJ 뉴하이일드A추가형혼합10- 1	1.5	13.5	0.4	0
CJ자산운용	CJ 뉴하이일드A추가형혼합10- 3	2	18	0.5	0
CJ자산운용	CJ 뉴하이일드A추가형혼합10- 4	0.7	6.3	0.3	0
CJ자산운용	CJ Vision CBO 2혼합06- 1	2.2	19.8	0.5	0
CJ자산운용	CJ Vision CBO 2혼합10- 1	2	18	0.5	0
CJ자산운용	CJ VISION뉴슈퍼리어주식03- 3	3	27	0.5	0
CJ자산운용	CJ VISION뉴슈퍼리어주식03- 1	3	27	0.5	0
CJ자산운용	가계장기채권혼합모신탁	0	0	0	0
CJ자산운용	개인연금채권혼합모신탁	0	0	0	0
CJ자산운용	근로자우대채권혼합모신탁	0	0	0	0
CJ자산운용	세금우대채권모신탁	0	0	0	0
CJ자산운용	개인연금주식혼합모신탁	0	0	0	0
CJ자산운용	온가족비과세추가채권 1	0	0	0	0
CJ자산운용	온가족비과세추가채권 2	0	0	0	0
CJ자산운용	제일신종분리과세채권 2	0	0	0	0
CJ자산운용	신종개인연금채권 1	1.1	9	0.4	0
CJ자산운용	신종개인연금혼합 1	1.5	13.5	0.5	0
CJ자산운용	CJ Vision체인지업안정혼합	1.5	13	0.5	0
CJ자산운용	Big&Safe오토컨버전주식	2	18	0.5	0
CJ자산운용	Big&Safe연금혼합 1	1.5	13.5	0.4	0
CJ자산운용	Big&Safe연금국공채 1	1	9	0.4	0
CJ자산운용	Big&Safe연금채권 1	1	9	0.4	0
CJ자산운용	Big&Safe연금주식 1	1.5	13.5	0.4	0
CJ자산운용	제일신종MMF 49	0.92	8.28	0.3	0
CJ자산운용	Big&Safe인덱스주식03- 1	1.2	10.8	0.5	0
CJ자산운용	온가족비과세고수익고위험혼합 1	0	0	0	0
CJ자산운용	Big&Safe퇴직채권 1	1	8.1	0.4	0.2
CJ자산운용	온가족비과세고수익고위험혼합 2	1.58	13.32	0.4	0.2
CJ자산운용	Big&Safe분리과세혼합 1	1.5	13.5	0.5	0
CJ자산운용	CJ Vision포트폴리오인덱스파생상품주식1	2	5	0.5	0
CJ자산운용	Big&Safe오토컨버전혼합 5	0	0	0	0
CJ자산운용	Big&Safe알파스왑채권10 -1	0.7	6.3	0.4	0
CJ자산운용	Big&Safe알파스왑채권06 -1	1.75	5.25	0.4	0
CJ자산운용	Big&Safe배당혼합06- 1	9	11	0.5	0
CJ자산운용	Big&Safe오토컨버전혼합 9	1.6	13.5	0.4	0
CJ자산운용	온가족비과세고수익고위험혼합 3	1.58	13.32	0.4	0.2
CJ자산운용	제일신종분리과세채권 5	1	9	0.5	0
CJ자산운용	Big&Safe알파스왑채권06 -2	0.07	0.63	0.2	0
CJ자산운용	Big&Safe안정성장INDEX혼합03- 1	2	18	0.4	0
CJ자산운용	Big&Safe안정INDEX혼합03- 1	1.5	13.5	0.4	0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CJ자산운용	CJ포트폴리오안정인덱스혼합 1	10	5	0.5	0
CJ자산운용	CJ포트폴리오금융주식 1	10	5	0.5	0
CJ자산운용	Big&Safe분리과세혼합 3	1.5	13.5	0.5	0
CJ자산운용	CJ Jump2000주식03-1	2	18	0.4	0
CJ자산운용	CJ Jump2000채권혼합03-1	2	18	0.4	0
CJ자산운용	Big&Safe클린MMF17(법인)	0.18	1.62	0.2	0
CJ자산운용	Big&Safe신종MMF 9	1.06	9.54	0.4	0
CJ자산운용	CJ Vision체인지업인덱스주식 1	2	18	0.4	0
CJ자산운용	CJ Vision체인지업안정혼합 2	1.5	13	0.5	0
CJ자산운용	온가족비과세고수익고위험혼합 4	1.58	13.32	0.4	0.2
CJ자산운용	Big&Safe엠프렐러인덱스주식 1	2	18	0.4	0
CJ자산운용	Big&Safe적립식채권 1	1.75	5.25	0.3	0
CJ자산운용	Big&Safe수퍼채권03-13	0	0	0	0
CJ자산운용	Safe Carry Plus 1.0 채권 1	0.7	6.3	0.3	0
CJ자산운용	Big&Safe알파스왑채권10- 4	0.71	6.39	0.3	0
CJ자산운용	제일신종분리과세채권 6	1.01	9.09	0.4	0
CJ자산운용	온가족장기주택마련채권 1	1	9	0.4	0
CJ자산운용	온가족장기주택마련혼합 1	2	18	0.4	0
CJ자산운용	BIG&SAFE프리타겟주식 1	3	27	0.4	0
CJ자산운용	Big&Safe신종MMF 18(개인)	1.26	2.94	0.3	0
CJ자산운용	Big&Safe클린MMF27	0.57	5.13	0.3	0
CJ자산운용	BIG&SAFE국공채클린MMF 1	0.57	5.13	0.3	0
CJ자산운용	Big&Safe신종MMF 22(개인)	0.67	6.03	0.3	0
CJ자산운용	Big&Safe국공채신종MMF 2(법인)	0.28	2.52	0.2	0
CJ자산운용	BIG&SAFE국공채단기채권 2	0.57	5.13	0.3	0
CJ자산운용	BIG&SAFE국공채중기채권 2	0.67	6.03	0.3	0
CJ자산운용	제일국공채신종MMF 1(법인)	1.5	3.5	0.3	0
CJ자산운용	BIG&SAFE맞춤채권10- 2	0.6	5.4	0.3	0
CJ자산운용	CJ Vision CBO 2 혼합10- 4	0.95	8.55	0.3	0
CJ자산운용	BIG&SAFE비과세프리타겟주식 1	3	27	0.4	0
CJ자산운용	CJ Vision CBO 2 혼합10- 6	0.9	8.1	0.3	0
CJ자산운용	CJ Vision CBO 2 혼합06- 2	0.57	5.13	0.3	0
CJ자산운용	CJ Vision뉴하이일드A추가혼합10-7	0.95	8.55	0.3	0
CJ자산운용	CJ Vision뉴하이일드A추가혼합10-8	0.95	8.55	0.3	0
CJ자산운용	CJ Vision뉴하이일드A추가혼합10-9	0.95	8.55	0.3	0
CJ자산운용	CJ Vision CBO 2 혼합10- 8	0.95	8.55	0.3	0
CJ자산운용	CJ Vision뉴하이일드A1추가혼합10	0.9	8.1	0.3	0
CJ자산운용	CJ VISION CBO2혼합06- 3	0.8	7.2	0.3	0
CJ자산운용	BIG&SAFE국공채신종MMF 6(법인)	0.33	1.47	0.2	0
CJ자산운용	YouFirstWrap채권11	2	0	0.3	0
CJ자산운용	제일투키혼합 2	1.5	13.5	0.4	0
CJ자산운용	CJ Vision뉴하이일드A1추가형혼합10- 3	0.9	8.1	0.3	0
CJ자산운용	코스닥스타주식 1	3	27	0.4	0
CJ자산운용	CJ엠프렐러인덱스파생상품	3	7	0.3	0
CJ자산운용	CJ엠프렐러채권혼합	1.5	3.5	0.3	0
CJ자산운용	CJ엠프렐러리버스인덱스파생상품	3	7	0.3	0
CJ자산운용	CJ카멜레온배당혼합 1	1.2	10.8	0.3	0
CJ자산운용	CJ행복만들기주식 1	2.53	22.47	0.4	0
CJ자산운용	CJ카멜레온주식 1	2.73	22.27	0.4	0
CJ자산운용	CJOnlyOne채권혼합 1	1.5	13.5	0.3	0
CJ자산운용	CJ굿초이스채권 1	0.77	5.23	0.3	0
CJ자산운용	CJ엠프렐러30리버스인덱스파생상품	2.6	10.4	0.3	0
CJ자산운용	CJ엠프렐러30채권혼합	0.8	3.2	0.3	0
CJ자산운용	CJ엠프렐러30인덱스파생상품	2.6	10.4	0.3	0
CJ자산운용	CJ더블찬스파생상품 2	0.59	5.11	0.3	0
CJ자산운용	CJTwo-StarIV파생상품 8	0.05	0.05	0.2	0
CJ자산운용	CJ단기채권3- 1	0.57	5.13	0.3	0
CJ자산운용	CJGolbalBondStrategy재간접 1	2	12.4	0.6	0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CJ자산운용	CJ행복만들기40혼합 1	1.5	13.5	0.3	0
CJ자산운용	CJNewTwo-StarIV파생상품 2	0.05	0.05	0.2	0
CJ자산운용	CJNewTwo-StarIV파생상품 3	0.05	0.05	0.2	0
CJ자산운용	CJNewTwo-StarV파생상품 2	0.05	0.05	0.2	0
CJ자산운용	CJ굿초이스배당주식 1	2.5	22.5	0.4	0
CJ자산운용	CJ부동산 1	3	7	0.7	0.2
CJ자산운용	CJTwo-StarV파생상품 7	0.05	0.05	0.2	0
CJ자산운용	CJNewTwo-StarV파생상품 7	0.05	0.05	0.2	0
CJ자산운용	CJ베리타스FirstRecoup엔터테인특별 1	18.3	10	0.5	0.2
CJ자산운용	CJMovie&Joy특별자산 1	5.2	7.8	0.5	0
CJ자산운용	CJMovie&Joy특별자산 2	2.2	10.8	0.5	0
CJ자산운용	CJEmergingMarketBond재간접 1	1.67	15.03	0.5	0
CJ자산운용	CJTwo-Star14파생상품 5	0.03	0.03	0.1	0.05
CJ자산운용	CJTwo-Star15파생상품16	0.05	0.05	0.2	0.1
CJ자산운용	CJTwo-StarXIII파생상품 6	0.05	0.05	0.2	0.1
CJ자산운용	CJTwo-StarXIII파생상품 7	0.05	0.05	0.2	0.1
CJ자산운용	CJTwo-Star15파생상품17	0.05	0.05	0.2	0.1
CJ자산운용	CJNewTwo-Star14파생상품 1	0.05	0.05	0.2	0.1
CJ자산운용	CJTwo-Star15파생상품18	0.05	0.05	0.2	0.1
CJ자산운용	CJNewTwo-StarIII파생상품11	0.05	0.05	0.2	0.1
CJ자산운용	CJNewTwo-Star13파생상품 4	0.05	0.05	0.2	0.1
CJ자산운용	CJNewTwo-Star11선취파생상품 3	0.05	0.05	0.2	0.1
CJ자산운용	CJNewTwo-StarII파생상품 5	0.05	0.05	0.2	0.1
CJ자산운용	CJNewTwo-StarVII파생상품11	0.05	0.05	0.2	0.1
CJ자산운용	CJNewTwo-Star11선취파생상품 4	0.05	0.05	0.2	0.1
CJ자산운용	CJNewTwo-Star13파생상품 5	0.05	0.05	0.2	0.1
CJ자산운용	CJTwo-Star19파생상품 3	0.05	0.05	0.2	0.1
CJ자산운용	CJTwo-Star파생상품27	0.05	0.05	0.2	0.1
CJ자산운용	CJTwo-StarVI파생상품 6	0.05	0.05	0.2	0.1
CJ자산운용	CJNewTwo-Star11선취파생상품 5	0.05	0.05	0.2	0.1
CJ자산운용	CJNewTwo-Star11선취파생상품 6	0.05	0.05	0.2	0.1
CJ자산운용	CJ행복만들기주식K- 1	7.02	16.38	0.4	0.2
CJ자산운용	CJ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15	0.05	0.05	0.2	0.1
CJ자산운용	CJTwo-Star19파생상품 5	0.05	0.05	0.2	0.1
CJ자산운용	CJNEW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 1	0.1	0	0.2	0.2
CJ자산운용	CJ지수연계4C파생상품 1	2.82	25.33	0.4	0.25
CJ자산운용	CJNewTwo-Star13파생상품 6	3	26.7	0.4	0.25
CJ자산운용	CJTwo-Star파생상품28	2.7	24	0.4	0.25
CJ자산운용	CJ Korea-Japan 지수연계 파생상품 1	2.7	24	0.4	0.25
CJ자산운용	CJNewTwo-StarX파생상품 7	2.7	23.95	0.4	0.25
CJ자산운용	CJNewTwo-Star12파생상품 2	2.7	23.95	0.4	0.25
CJ자산운용	CJ 5Star파생상품 1	1.85	18	0.4	0.25
CJ자산운용	CJ New Two-Star15파생상품 1	4.7	20	0.4	0.25
CJ자산운용	CJ 뉴5Star 파생상품1- 1	5.95	13.9	0.4	0.25
CJ자산운용	CJTwo-Star19파생상품 7	2.7	23.95	0.4	0.25
CJ자산운용	CJTwo-StarVII파생상품 5	2.8	24.85	0.4	0.25
CJ자산운용	CJ 일본지수연계 파생상품 1	2.7	23.95	0.4	0.25
CJ자산운용	CJ New Two-Star16파생상품 1	2.7	23.95	0.4	0.25
CJ자산운용	CJ Hit Two-Star파생상품 1	5.75	22.85	0.4	0.25
CJ자산운용	CJTwo-Star19파생상품 6	8	18.65	0.4	0.25
CJ자산운용	CJ New Two-Star19파생상품 1	2.7	24.1	0.4	0.25
CJ자산운용	CJNewTwo-StarIX파생상품13	2.7	24.1	0.4	0.25
CJ자산운용	CJ크로커스채권혼합 1	3	12	0.4	0.2
CJ자산운용	CJ New Two-Star17파생상품 1	2.9	25.9	0.4	0.25
CJ자산운용	CJ New Two-Star18파생상품 1	2.8	24.95	0.4	0.25
CJ자산운용	CJ New Two-Star15파생상품 2	8.05	18.75	0.4	0.25
CJ자산운용	CJ 주가지수연계 II 파생상품 1	0.05	0.05	0.2	0.1
CJ자산운용	CJ New Two-Star19파생상품 2	2.7	24.1	0.4	0.25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CJ자산운용	CJ Step Two-Star파생상품 1	4.2	23.55	0.4	0.25
CJ자산운용	CJ Step Two-Star2파생상품 1	4.2	23.55	0.4	0.25
CJ자산운용	CJ New Two-Star20파생상품 1	2.74	24.66	0.4	0.25
CJ자산운용	CJTwo-Star19파생상품 8	2.7	24.1	0.4	0.25
CJ자산운용	CJ뉴월드리더재간접 1	3.8	10.2	0.6	0.28
CJ자산운용	CJ Two-Star19파생상품 9	8	18.65	0.4	0.25
CJ자산운용	CJ New Two-Star22파생상품 1	5.33	21.32	0.4	0.25
CJ자산운용	CJ New Two-Star21파생상품 1	2.7	24.1	0.4	0.25
CJ자산운용	CJNewTwo-Star23파생상품 1	5.65	20	0.4	0.25
CJ자산운용	CJ 5Star파생상품 2	2	17.85	0.4	0.25
CJ자산운용	CJ New Two-Star18파생상품 2	2.9	25.7	0.4	0.25
CJ자산운용	CJTwo-Star18파생상품 3	2.7	23.95	0.4	0.25
CJ자산운용	CJ New Two-Star15파생상품 3	2.8	24.85	0.4	0.25
CJ자산운용	CJ Step Two-Star3파생상품 1	2.8	24.95	0.4	0.25
CJ자산운용	CJ New Two-Star17파생상품 2	2.7	24.1	0.4	0.25
CJ자산운용	CJNewTwo-Star24파생상품 1	2.7	24.1	0.4	0.25
CJ자산운용	CJ주가지수연계파생상품17	2.7	24.1	0.4	0.25
CJ자산운용	CJ 5Star파생상품 3	2	17.85	0.4	0.25
CJ자산운용	CJNewTwo-StarVIII파생상품10	2.7	24.1	0.4	0.25
CJ자산운용	CJ Step Two-Star4파생상품 1	8.35	19.4	0.4	0.25
CJ자산운용	CJNewTwo-StarVI파생상품 8	2.7	24.1	0.4	0.25
CJ자산운용	CJ Step Two-Star파생상품K 1	8.35	19.4	0.4	0.25
CJ자산운용	CJNewTwo-Star26파생상품 1	6.8	20	0.4	0.25
CJ자산운용	CJ 5StarII 파생상품 1	2	17.85	0.4	0.25
CJ자산운용	CJ New Two-Star25 파생상품 1	2.7	24.1	0.4	0.25
CJ자산운용	CJ 5StarIII 파생상품 1	2.45	21.9	0.4	0.25
CJ자산운용	CJ New Two-StarVIII 파생상품11	2.7	24.1	0.4	0.25
CJ자산운용	CJ주가지수연계파생상품18	2.7	24.1	0.4	0.25
CJ자산운용	CJ Step Two-StarV 파생상품 1	2.8	24.95	0.4	0.25
CJ자산운용	CJ Step Two-StarVI 파생상품 1	3.6	23	0.4	0.25
CJ자산운용	CJ Power Asia주식형재간접 1	7.2	6.8	0.6	0.28
CJ자산운용	CJ 5StarII 파생상품 2	2	17.85	0.4	0.25
CJ자산운용	CJ Step Two-StarVIII파생상품 1	3.85	23.35	0.4	0.25
CJ자산운용	CJ Step Two-StarVII파생상품 1	2.85	25.35	0.4	0.25
CJ자산운용	CJ Duo 3 Star파생상품 1	2.67	23.98	0.4	0.25
CJ자산운용	CJ Step Two-StarIII 파생상품 2	8.3	19.3	0.4	0.25
CJ자산운용	CJNewTwo-StarX파생상품 8	2.7	23.95	0.4	0.25
CJ자산운용	CJNewTwo-Star27파생상품 1	2.7	23.95	0.4	0.25
CJ자산운용	CJ주가지수연계파생상품19	2.7	23.95	0.4	0.25
CJ자산운용	CJ SLI Global Property재간접1-A	2	10	0.6	0.28
CJ자산운용	CJ SLI Global Property재간접1-B	2	19	0.6	0.28
CJ자산운용	CJNewTwo-Star28파생상품 1	2.75	24.3	0.4	0.25
CJ자산운용	CJ Step Two-Star파생상품 2	8.3	19.3	0.4	0.25
CJ자산운용	CJNewTwo-Star11선취파생상품 8	2.75	24.5	0.4	0.25
CJ자산운용	CJ Step Two-StarIX 파생상품 1	5.55	22.05	0.4	0.25
CJ자산운용	CJ New Two-Star29파생상품 1	2.8	24.85	0.4	0.25
CJ자산운용	CJ Step Two-StarVII파생상품 2	2.85	25.65	0.4	0.25
CJ자산운용	CJ 3 Metal파생상품 1	4.25	17.1	0.4	0.25
삼성투신운용	삼성개인연금공사채 1	0.95	8.55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신단기공사채A 5	1.25	11.25	0.5	0
삼성투신운용	스카이삼성장기공사채 4	3.8	5.7	0.5	0
삼성투신운용	신바람삼성장기우대13	3	4.5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신단기공사채A 23	3.75	8.75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신단기공사채A802	3.75	8.75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신단기공사채A423	0.15	0.35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신단기공사채A436	3.75	8.75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리딩중기공사채 6	1.65	14.85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새마을중기공사채B112	3.75	8.75	0.5	0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삼성투신운용	삼성신단기공사채B301	3.75	8.75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라이프신종MMF B18	1.14	2.66	0.2	0
삼성투신운용	삼성라이프신종MMF B23	1.14	2.66	0.2	0
삼성투신운용	G1삼성신단기공사채A 23	3.75	8.75	0.5	0
삼성투신운용	G2삼성신단기공사채A 23	3.75	8.75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우량채권 1	1.8	4.2	0.3	0
삼성투신운용	삼성개인연금주식 1	1.4	12.6	0.5	0
삼성투신운용	드래곤여의주주식3- 9	2.45	22.05	0.5	0
삼성투신운용	드래곤승천주식3-24	8.85	20.65	0.5	0
삼성투신운용	드래곤승천주식3-28	2.95	26.55	0.5	0
삼성투신운용	새천년클린MMF 9	0.84	1.96	0.2	0
삼성투신운용	개인연금채권혼합모신탁	0	0	0	0
삼성투신운용	개인연금주식혼합모신탁	0	0	0	0
삼성투신운용	삼성연금채권 1	3	7	0.4	0
삼성투신운용	삼성파트너프라임혼합06C1	3.6	8.4	0.5	0
삼성투신운용	마켓아이03채권B4	3	7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파트너프라임혼합06 L- 1	3.5	1	0.4	0
삼성투신운용	삼성국공채신종MMF 1	1.5	3.5	0.3	0
삼성투신운용	삼성골드06혼합 1	6.45	15.05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골드06채권 1	3	7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ECO혼합주식C- 1	2.7	6.3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배당플러스30혼합B1	3.6	8.4	0.4	0
삼성투신운용	삼성멤버스클럽06채권 1	3	7	0.5	0
삼성투신운용	신종분리과세혼합J- 1	3.9	9.1	0.5	0
삼성투신운용	Join-the-Best06알파혼합J1	4.8	11.2	0.4	0
삼성투신운용	삼성인덱스60혼합 1	3.9	9.1	0.5	0
삼성투신운용	새천년클린MMF 11	0.84	1.96	0.2	0
삼성투신운용	삼성국공채클린MMF-II J 1	1.29	3.01	0.2	0
삼성투신운용	신종분리과세국공채H - 4	3.6	8.4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후레쉬데뷰주식 1	7	4	0.4	0
삼성투신운용	뉴트랜드안정혼합 C1	4.5	10.5	0.4	0
삼성투신운용	삼성국공채 1	3	7	0.4	0
삼성투신운용	삼성멤버스신종MMF 1	1.74	4.06	0.4	0
삼성투신운용	신종분리과세채권C- 2	3	7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멤버스95혼합 1	4.6	10.4	0.3	0
삼성투신운용	삼성배당플러스혼합II- 1	5.4	12.6	0.4	0
삼성투신운용	삼성배당플러스30혼합II- 1	4.5	10.5	0.4	0
삼성투신운용	신종분리과세채권C- 3	2	8	0.4	0
삼성투신운용	KODEX 200 ETF(삼성)	3.5	1	0.3	0.4
삼성투신운용	삼성골드OK신종분리과세혼합 1	3.9	9.1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웰스플랜20혼합 1	3.9	9.1	0.4	0
삼성투신운용	삼성웰스플랜35혼합 1	4.8	11.2	0.4	0
삼성투신운용	삼성웰스플랜50혼합 1	5.7	13.3	0.4	0
삼성투신운용	삼성웰스플랜65주식 1	6.6	15.4	0.4	0
삼성투신운용	삼성웰스플랜80주식 1	8.1	18.9	0.4	0
삼성투신운용	삼성국공채MMF법인100	1.14	2.66	0.2	0
삼성투신운용	삼성장기채권 1	1.8	4.2	0.3	0
삼성투신운용	삼성FINE신종MMF 1	0.1	0.1	0.3	0
삼성투신운용	삼성장기주택마련채권 1	3	7	0.4	0
삼성투신운용	삼성장기주택마련혼합 1	4.5	10.5	0.4	0
삼성투신운용	신종분리과세국공채H 5	3.6	8.4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SAFEUP신종분리과세혼합 1	5	8	0.4	0
삼성투신운용	삼성라이프신종MMF101	1.8	4.2	0.3	0
삼성투신운용	삼성중기국공채 2	1.5	3.5	0.3	0
삼성투신운용	신종MMF102	0.54	1.26	0.2	0
삼성투신운용	삼성비과세Value주식 2	7.5	17.5	0.4	0
삼성투신운용	삼성엠브로시아재간접 1	2.5	5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SAFE UP(우량주)신종분리과세혼합 2	5	8	0.4	0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삼성투신운용	삼성골드장기주식	7.5	17.5	0.4	0
삼성투신운용	삼성Value주식 1	7.5	17.5	0.4	0
삼성투신운용	삼성S&P STARS주식 1	8.5	7	0.7	0
삼성투신운용	삼성골드OK95신종분리과세혼합 2	3.9	9.1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국공채클린MMF 1	0.3	0.7	0.2	0
삼성투신운용	삼성신종MMF151	1.2	7	0.3	0
삼성투신운용	삼성클린MMF법인 1	0.9	2.1	0.3	0
삼성투신운용	삼성MMF법인 1	0.9	2.1	0.2	0
삼성투신운용	MS30혼합 1	4.5	0	0.3	0
삼성투신운용	삼성KRX100혼합 1	5.1	11.9	0.4	0
삼성투신운용	삼성BeSeTo30혼합 2	6	14	0.3	0
삼성투신운용	삼성Two Chairs국공채MMF 1	1.5	3.5	0.3	0
삼성투신운용	삼성코스닥스타지수인덱스주식 1	4.5	10.5	0.4	0
삼성투신운용	삼성웰스플랜채권 1	2.1	4.9	0.3	0
삼성투신운용	삼성SAFEUP혼합 3	5	9	0.4	0
삼성투신운용	삼성국공채MMF법인 1	0.9	2.1	0.3	0
삼성투신운용	삼성리버스인덱스파생상품 1	5	9	0.3	0
삼성투신운용	삼성인덱스플러스파생상품 1	5.4	12.6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JAPAN혼합형	5	9	0.3	0
삼성투신운용	삼성중기채권2- 1	1.5	3.5	0.3	0
삼성투신운용	삼성웰스플랜30혼합 1	4.8	11.2	0.4	0
삼성투신운용	삼성히말라야파생상품 1	1.4	3.4	0.2	0
삼성투신운용	삼성우량주장기-CLASS A	7.5	17.5	0.4	0
삼성투신운용	삼성IncomePlus파생상품 1	3	10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IncomePlus파생상품 2	3	10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Global Best재간접 1	3	7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배당플러스30혼합II 2	4.5	10.5	0.4	0
삼성투신운용	삼성MULTI-ASSET MOMENTUM파생상품H-	4.5	3.5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MULTI-ASSET파생상품 1	5	3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MULTI-ASSET MOMENTUM파생상품H-	4.5	3.5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2Star파생상품23	0.03	0.07	0.2	0
삼성투신운용	삼성배당우량주장기혼합 1	5.4	12.6	0.4	0
삼성투신운용	삼성2Star파생상품24	0.03	0.07	0.2	0
삼성투신운용	삼성MULTI-ASSET파생상품 2	5	3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헛지펀드지수연계파생상품 1	3.6	8.4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MULTI-ASSET파생상품II- 1	4.5	10.5	0.5	0
삼성투신운용	ABF Korea인덱스종류형채권CLASS A	1.4	0.5	0.45	0
삼성투신운용	삼성배당주장기주식 1	7.5	17.5	0.3	0
삼성투신운용	삼성우량주장기-CLASS W	7.5	0	0.4	0
삼성투신운용	삼성MULTI-ASSET파생상품II- 2	4.5	10.5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2Star파생상품SP- 1	0.03	0.07	0.2	0
삼성투신운용	삼성배당프리미엄 파생상품 1	2.85	6.65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Asian프리미엄 파생상품 1	13.35	31.15	1.5	0
삼성투신운용	삼성CD플러스파생상품 1	3.84	8.96	1	0
삼성투신운용	삼성CD플러스파생상품 2	3.84	8.96	1	0
삼성투신운용	KODEX KRX100상장지수	3.5	1	0.3	0.4
삼성투신운용	삼성 배당주장기채권혼합 1	4.5	10.5	0.4	0
삼성투신운용	삼성One-Star파생상품 1	2	4.7	0.2	0
삼성투신운용	삼성Top Price2008파생상품 1	4.5	10.5	0.3	0
삼성투신운용	삼성 2Star파생상품HL- 3	0.01	0.01	0.01	0
삼성투신운용	KODEX STAR상장지수	3.5	1	0.3	0.3
삼성투신운용	삼성2Star파생상품6- 3	0.01	0.01	0.01	0
삼성투신운용	삼성2Star Callable3M파생상품IV 2	0.01	0.01	0.01	0
삼성투신운용	삼성퇴직연금배당40혼합모	0	0	0	0
삼성투신운용	삼성퇴직연금배당40혼합자 1	2.3	5.5	0.2	0
삼성투신운용	삼성퇴직연금Top Price 2009혼합모	0	0	0	0
삼성투신운용	삼성퇴직연금액티브배당주식자 1	3.7	8.7	0.2	0
삼성투신운용	삼성퇴직연금액티브배당혼합자 1(DC)	4.1	9.6	0.2	0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삼성투신운용	삼성 퇴직연금액티브배당혼합자 1(DB)	4.1	8.5	0.2	0
삼성투신운용	삼성퇴직연금패시브배당주식자 1(DB)	1.4	3.3	0.2	0
삼성투신운용	삼성퇴직연금패시브배당안정혼합자 1	1.1	2.8	0.2	0
삼성투신운용	삼성퇴직연금인덱스12채권자 1	1.2	2.8	0.2	0
삼성투신운용	삼성퇴직연금인덱스24채권자 1	1.1	2.5	0.2	0
삼성투신운용	삼성퇴직연금액티브주식자 1(DB)	3.6	8.5	0.2	0
삼성투신운용	삼성퇴직연금액티브혼합자 1(DC)	4.1	9.5	0.2	0
삼성투신운용	삼성퇴직연금Top Price 2010혼합모	0	0	0	0
삼성투신운용	삼성퇴직연금액티브배당주식모	0	0	0	0
삼성투신운용	삼성퇴직연금패시브배당주식모	0	0	0	0
삼성투신운용	삼성퇴직연금인덱스24채권모	0	0	0	0
삼성투신운용	퇴직연금TopPrice2009혼합자 1	2.7	6.3	0.2	0
삼성투신운용	삼성퇴직연금Top Price 2010혼합자 1	2.7	6.3	0.2	0
삼성투신운용	삼성퇴직연금토탈리턴채권 1	1.9	4.3	0.2	0
삼성투신운용	삼성퇴직연금액티브주식모	0	0	0	0
삼성투신운용	삼성퇴직연금인덱스주식자 1(DB)	1.7	4	0.2	0
삼성투신운용	삼성퇴직연금인덱스12채권모	0	0	0	0
삼성투신운용	삼성2Star Callable3M파생상품 2	0.01	0.01	0.01	0
삼성투신운용	삼성퇴직연금인덱스주식모	0	0	0	0
삼성투신운용	삼성퇴직연금인덱스혼합자 1(DC)	1.8	4.2	0.2	0
삼성투신운용	삼성Asian프리미엄파생상품 2	13.35	31.15	1.5	0
삼성투신운용	삼성퇴직연금패시브배당안정혼합모	0	0	0	0
삼성투신운용	삼성인덱스연금주식 1	3.9	9.1	0.4	0
삼성투신운용	삼성 2Star파생상품HL- 4	0.01	0.01	0.01	0
삼성투신운용	삼성우량주장기투자-CLASSB	7.5	9	0.4	0
삼성투신운용	삼성글로벌주식 ETF 재간접 1	4.5	10.5	0.8	0
삼성투신운용	삼성우량주장기30혼합-CLASS B	5	6	0.3	0
삼성투신운용	삼성파워오일인덱스파생상품 3	13.2	14.8	1	0
삼성투신운용	삼성Global Best주식종류형재간접class A	5.4	2.6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Global Best주식종류형재간접class B	5.4	12.6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2STAR파생상품 5-4	7	18.5	1	0
삼성투신운용	삼성2STAR ELS파생상품II- 6	7.65	17.85	1	0
삼성투신운용	삼성Global Best Japan종류형재간접_Class A	5.4	2.6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우량Active채권 1	2.4	5.6	0.2	0
삼성투신운용	삼성파워오일인덱스파생상품 4	13.5	11.5	1	0
삼성투신운용	삼성Global Best Japan종류형재간접_Class B	5.4	12.6	5	0
삼성투신운용	삼성2STAR파생상품7- 1	7	18.5	1	0
삼성투신운용	삼성우량주장기30혼합종류형-CLASS A	5	14	0.3	0
삼성투신운용	삼성Global Best이머징재간접모	0	0	0	0
삼성투신운용	삼성Global Best이머징종류형재간접 1ClassA	5.4	4.6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Global Best이머징종류형재간접 1ClassB	5.4	12.6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GlobalBest 좋은세상재간접모	0	0	0	0
삼성투신운용	삼성GlobalBest좋은세상주식종류형재간접자	5.4	4.6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GlobalBest좋은세상주식종류형재간접자	5.4	12.6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E-스마트인덱스파생상품 1	2.7	6.3	0.3	0
삼성투신운용	삼성Global Choice주식종류형재간접_Class B	5.4	12.6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2STAR파생상품8- 1	7	18.5	1	0
삼성투신운용	삼성2Star파생상품HL- 5	5.5	20	1	0
삼성투신운용	삼성퇴직연금Life Cycle5혼합자 1(DC)	2.3	5.5	0.2	0
삼성투신운용	삼성Japan Property재간접	6	8.2	0.8	0
삼성투신운용	삼성Global Japan주식재간접모	0	0	0	0
삼성투신운용	삼성Best Top채권모	0	0	0	0
삼성투신운용	삼성Global Best이머징혼합종류형재간접 1C	4.5	6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Global Best이머징혼합종류형재간접 1C	4.5	10.5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Global Best좋은세상종류형재간접자 1C	4.5	6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Global Best좋은세상종류형재간접자 1C	4.5	10.5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One-Star파생상품 2	6.1	24.4	0.6	0
삼성투신운용	삼성2Star파생상품8- 2	6.75	15.75	1	0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삼성투신운용	삼성2Star2Y파생상품1- 1	7.4	24.1	1	0
삼성투신운용	삼성Global Best Japan혼합종류형재간접자	4.5	6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Global Best Japan혼합종류형재간접자	4.5	10.5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2Star2Y파생상품2- 1	10	30	1	0
삼성투신운용	삼성파워한중인덱스플러스파생상품 1	6	6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2Star2Y파생상품3- 1	7.5	19	0.8	0
삼성투신운용	삼성2Star3M파생상품4- 1	15.2	48.8	0.2	0
삼성투신운용	삼성2Star2Y 파생상품4- 1	7.95	18.55	0.8	0
삼성투신운용	삼성2Star2Y파생상품5- 1	6.5	20	0.8	0
삼성투신운용	삼성투자미인자산배분혼합 1	7.5	17.5	0.4	0
삼성투신운용	삼성2Star 2Y파생상품6- 1	8.5	26.5	0.8	0
삼성투신운용	삼성파워한중인덱스플러스파생상품2- 1	14.1	8.9	1	0
삼성투신운용	삼성2Star2Y파생상품2- 2	7.5	19	0.8	0
삼성투신운용	KODEX자동차상장지수	3.5	1	0.2	0.3
삼성투신운용	KODEX반도체상장지수	3.5	1	0.2	0.3
삼성투신운용	KODEX은행상장지수	3.5	1	0.2	0.3
삼성투신운용	삼성실물자산연계파생상품 1	4	13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우량주장기-CLASS	7.5	17.5	0.4	0
삼성투신운용	삼성파워리치메탈인덱스파생상품 1	15.95	12.05	1	0
삼성투신운용	삼성2Star2Y파생상품3- 2	7.5	19	0.8	0
삼성투신운용	삼성2Star2Y파생상품3- 3	7.5	19	0.8	0
삼성투신운용	삼성GlobalBest유럽주식종류재간접자 1-A	5.4	4.6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GlobalBest유럽주식종류재간접자 1-B	5.4	12.6	0.5	0
삼성투신운용	ABF Korea인덱스종류형채권투자신탁-CLAS	1.4	1.4	0.45	0
삼성투신운용	삼성GlobalBest유럽주식모	0	0	0	0
삼성투신운용	삼성GlobalBest이머징하이일드채권종류형재	3.6	3.4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GlobalBest이머징하이일드채권종류형재	3.6	8.4	0.5	0
삼성투신운용	삼성GlobalBest이머징하이일드채권재간접모	0	0	0	0
삼성투신운용	삼성 2Star파생상품II 9- 1	6.5	0	1	0
삼성투신운용	삼성인덱스종류형알파파생상품 1_A	4.4	2.3	0.3	0
삼성투신운용	삼성J-REITs종류형재간접 1	6	8.2	0.8	0
삼성투신운용	삼성2Star2Y파생상품8- 1	7.95	18.55	0.8	0
삼성투신운용	삼성인덱스종류형알파파생상품 1_B	4.4	10.3	0.3	0
삼성투신운용	삼성J-REITs종류형재간접 1_A	6	4	0.8	0
삼성투신운용	삼성2Star파생상품II9- 2	6.5	0	1	0
동양투신운용	개인연금공사채 1	2.85	6.65	0.5	0
동양투신운용	가계장기공사채 1	1.95	4.55	0.5	0
동양투신운용	근로자비과세공사채 1	1.95	4.55	0.5	0
동양투신운용	세금우대공사채 9	2.85	6.65	0.5	0
동양투신운용	중앙개인연금주식혼합 1	4.2	9.8	0.5	0
동양투신운용	가계장기주식 1	4.05	9.45	0.5	0
동양투신운용	근로자비과세주식 1	4.05	9.45	0.5	0
동양투신운용	비너스단기주식 8	8.55	19.95	0.5	0
동양투신운용	비너스알찬채권혼합06- 7	5.85	13.65	0.5	0
동양투신운용	D장기주식1의G01	2.85	6.65	0.5	0
동양투신운용	D장기주식1의G03	2.85	6.65	0.5	0
동양투신운용	비너스2000뉴하이리턴D추가혼합06- 1	1.64	4.06	0.3	0
동양투신운용	개인연금채권혼합모신탁 1	0	0	0	0
동양투신운용	가계장기채권혼합모신탁 1	0	0	0	0
동양투신운용	근로자비과세채권혼합모신탁 1	0	0	0	0
동양투신운용	세금우대채권혼합모신탁 1	0	0	0	0
동양투신운용	근로자비과세주식혼합모신탁	0	0	0	0
동양투신운용	가계장기주식혼합모신탁 1	0	0	0	0
동양투신운용	개인연금주식혼합모신탁	0	0	0	0
동양투신운용	신종개인연금채권 1	3	7	0.5	0
동양투신운용	오리엔트파워연금채권 1	3	7	0.4	0
동양투신운용	오리엔트파워연금혼합 1	4.5	10.5	0.4	0
동양투신운용	근로자비과세공사채 2	1.95	4.55	0.5	0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동양투신운용	온국민뜻모아주식 1	5.88	14	0.5	0.12
동양투신운용	온국민뜻모아주식 3	5.88	14	0.5	0.12
동양투신운용	비너스2000뉴하이리턴A추가혼합10- 5	1.6	3.98	0.3	0.12
동양투신운용	온국민뜻모아주식 4	7.98	18.9	0.5	0.12
동양투신운용	비너스2000하이리턴추가채권혼합06- 5	1.6	3.98	0.3	0.12
동양투신운용	큰만족분리과세채권10- 1	1.65	3.85	0.35	0.12
동양투신운용	베스트원하이리턴추가채권10- 1	1.6	3.98	0.3	0.12
동양투신운용	베스트원하이리턴추가채권 1	1.6	3.98	0.3	0.12
동양투신운용	비너스2000하이리턴추가채권혼합06- 6	1.6	3.98	0.3	0.12
동양투신운용	베스트원하이리턴채권추가채권06- 3	1.6	3.98	0.3	0.12
동양투신운용	세이프신종MMF 1	0.1	0.6	0.18	0.12
동양투신운용	세이프신종MMF1- 2	0.69	1.89	0.3	0.12
동양투신운용	비너스2000하이리턴추가혼합06-7	1.6	3.98	0.3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뉴리더플러스혼합06-A01	2.28	5.32	0.3	0.12
동양투신운용	베스트원뉴하이리턴A추가혼합06-D01	1.6	3.98	0.3	0.12
동양투신운용	큰만족신종MMF 1	0.5	1.18	0.2	0.12
동양투신운용	큰만족신종MMF 3	0.1	0.1	0.2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모아드림주식 1클래스A	7.5	17.5	0.4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모아드림30혼합 1	3.6	8.4	0.3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Bank Plus10혼합 2	2.1	4.9	0.4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중소형고배당주식 1	4.4	10.28	0.4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 해운대콘도미니엄부동산 1	4.08	6.2	0.6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High Plus채권 1classA	1.6	3.98	0.3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토투엔부동산 1	7	9	0.7	0.2
동양투신운용	동양레저&엔터테인먼트주식 1	4.4	10.28	0.4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강남대기숙사특별자산 1	1.68	1	0.2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클래스A채권 2	1	6	0.38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주가지수연동채권 1	1	2.8	0.3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Two Star 11파생상품 1	0.01	0.01	0.2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New Two Star 6파생상품 2	0.01	0.01	0.2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 2Star파생상품7- 2	0.01	0.01	0.2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모아드림주식 1클래스I	7.5	0	0.4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2Star파생상품4- 3	0.01	0.01	0.2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2Star파생상품7- 3	0.01	0.01	0.2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Two Stocks III 파생상품 2	0.01	0.2	0.2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2Star파생상품A- 4	0.01	0.01	0.2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2Star파생상품7- 4	0.01	0.01	0.2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주가지수연동채권2- 1	1.37	3.21	0.3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2Star파생상품13- 1	3.25	29.25	0.5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2Star파생상품10- 1	8.5	24	0.5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2Star파생상품14- 1	2.8	25.2	0.4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2Star파생상품12- 1	8.5	24	0.5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2Star파생상품17- 1	8.5	24	0.5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모아드림채권 1	1.58	0.1	0.2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2Star파생상품11- 1	8.5	24	0.5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퇴직연금채권자 1	1.37	3.21	0.3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퇴직연금2030혼합자 1	2.27	5.31	0.3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퇴직연금3040혼합자 1	2.27	5.31	0.3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퇴직연금4050혼합자 1	2.27	5.31	0.3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퇴직연금채권모	0	0	0	0
동양투신운용	동양퇴직연금국공채모	0	0	0	0
동양투신운용	동양퇴직연금가치주식모	0	0	0	0
동양투신운용	동양퇴직연금성장주식모	0	0	0	0
동양투신운용	동양퇴직연금인덱스주식모	0	0	0	0
동양투신운용	동양2Star파생상품18- 1	3.25	29.25	0.5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2Star파생상품19- 1	8.5	24	0.5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2Star파생상품20- 1	8.5	24	0.5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2Star파생상품21- 1	8.5	24	0.5	0.12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동양투신운용	동양주가지수연계파생상품2- 1	0.01	0.01	0.2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2Star파생상품22- 1	12.7	33.8	0.5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2Star파생상품23- 1	8.5	24	0.5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국공채신종MMF 1	0.33	0.55	0.15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 2Star파생상품25- 1	7.75	24.75	0.5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E-모아드림인덱스파생상품 1	2	4.9	0.3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2Star파생상품28- 1	7.75	24.75	0.5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퇴직연금성장혼합자 1	2.27	5.31	0.3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2Star파생상품29- 1	8.7	20.3	0.5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퇴직연금가치혼합자 1	2.27	5.31	0.3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퇴직연금인덱스혼합자 1	2.27	5.31	0.3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2Star파생상품30- 1	7.75	24.75	0.5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2Star파생상품31- 1	12.3	8.7	0.4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2Star파생상품32- 1	7.75	24.75	0.5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2Star파생상품33- 1	12.3	8.7	0.4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주가지수연동채권2- 2	1.37	3.21	0.3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2Star파생상품34- 1	8.95	27.55	0.5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2Star파생상품35- 1	6.1	20.9	0.5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2Star파생상품36- 1	3	23	0.7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2Star파생상품36- 2	3	23	0.7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2Star파생상품37- 1	3	23	0.7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2Star파생상품38- 1	5	28	0.8	0.24
동양투신운용	동양2Star파생상품39- 1	5	28	0.8	0.24
동양투신운용	동양2Star파생상품40- 1	9.6	12	0.8	0.24
동양투신운용	동양2Star파생상품41- 1	5	28	0.8	0.24
동양투신운용	동양2Star파생상품42- 1	5	28	0.8	0.24
동양투신운용	동양2Star파생상품43- 1	9.6	12	0.8	0.24
동양투신운용	동양2Star파생상품45- 1	8	20	0.7	0.24
동양투신운용	동양2Star파생상품46- 1	5	28	0.8	0.24
동양투신운용	동양2Star파생상품47- 1	5	28	0.8	0.24
동양투신운용	동양2Star파생상품48- 1	9.6	12	0.8	0.24
동양투신운용	동양남부터미널특별자산 1	10	13	0.7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2Star파생상품44- 1	2.8	25.2	0.7	0.24
동양투신운용	동양모아드림주식 1클래스B	7.5	6.5	0.4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2Star파생상품49- 1	5	28	0.8	0.24
동양투신운용	동양High Plus채권 1클래스B	1.6	2	0.3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2Star파생상품45- 2	2.8	25.2	0.7	0.24
동양투신운용	동양주가지수연동채권2- 3	1.37	3.21	0.3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2Star파생상품42- 2	5	28	0.8	0.24
동양투신운용	동양e-모아드림삼성그룹주식 1클래스A	4.7	7	0.3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e-모아드림삼성그룹주식 1클래스C	4.7	11.2	0.3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2Star파생상품47- 2	5	28	0.8	0.24
동양투신운용	동양퇴직연금국공채자 1	1.37	3.21	0.3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퇴직연금5060혼합자 1	1.67	3.91	0.3	0.12
동양투신운용	동양2Star파생상품17- 2	5	28	0.8	0.24
대신투신운용	대신BULL클린MMF굿모닝 1	2.3	5.4	0.3	0
대신투신운용	대신BULL신종MMF G1	2.3	5.3	0.4	0
대신투신운용	대신BULL안정주식혼합 4	3.9	15.6	0.5	0
대신투신운용	대신BULL성장주식혼합 4	3.9	15.6	0.5	0
대신투신운용	대신BULL새마을채권혼합 1	3.9	15.6	0.5	0
대신투신운용	대신BULL성장주식혼합 8	3.9	15.6	0.5	0
대신투신운용	대신BULL테크넷주식혼합 1	6	14	0.5	0
대신투신운용	대신BULL글로벌로자우대채권혼합모	0	0	0	0
대신투신운용	해바라기글로벌로자우대공채 1	1.3	5.2	0.5	0
대신투신운용	BULL사이버주식 1	6	14	0.5	0
대신투신운용	대신BULL신종MMF G2	3	7	0.5	0
대신투신운용	BULL뉴에이스국공채 1	2	4.6	0.4	0
대신투신운용	황소글로벌로자우대주식혼합모신탁 1	0	0	0	0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대신투신운용	황소근로자우대주식혼합 1	2.7	10.8	0.5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BULL연금혼합 1	4.5	10.5	0.4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BULL연금국공채 1	3	7	0.4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인덱스파생상품 1	5	11.5	0.5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다이나믹프리혼합 1	4	5	0.5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파이팅!코리아 1	3.75	8.75	0.5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하모니혼합 1	4.2	9.8	0.5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BULL신종MMF제26	2.3	5.3	0.4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BULL클린MMF33	2	4.7	0.3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다이나믹혼합1000	4	10	0.4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하모니혼합 2	4.2	9.8	0.5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스마일배당혼합2002	4	10	0.5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PRIME3M채권 2	1	2	0.3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마이홈장기주택마련채권 1	1.5	3.5	0.4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마이홈장기주택마련혼합 1	4.2	9.8	0.5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BULL신종MMF(C) 32(법인)	0.8	1.2	0.2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BULL신종MMF 33	1.4	3.3	0.3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클린MMF(C) 6(법인)	0.7	1.1	0.2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CLEAN-UP 3M국공채 1ClassA	1	2	0.3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클린MMF 7	1.4	3.3	0.3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스마일배당주식2003	6	7	0.5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국공채신종MMF 1	1.2	1.5	0.3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국공채신종MMF(C) B 2(법인)	1.1	3.1	0.3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신종MMF 1(하나)	1.2	1.5	0.3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신종MMF(C) 6(법인)	0.2	0.5	0.1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신종MMF(C) 7	0.5	1.2	0.2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국공채신종MMF(C) 2(법인)	1	1.2	0.2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TARGET엄브렐라인덱스파생상품 1	3	6.7	0.3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TARGET엄브렐라리버스파생상품 1	3	6.7	0.3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사이보스주식 1	6	14	0.5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타겟엄브렐라뉴트럴혼합 1	1.1	1	0.2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백년해로적립국공채 1	1	0	0.2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파이팅345적립혼합 1	4	0	0.4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꿈나무적립주식 1	6	0	0.5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리더스30혼합 1	4	0	0.4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리더스70혼합 1	6	0	0.5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행복가득적립형배당혼합 1	4.2	9.8	0.5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소망가득적립형배당주식 1	6	14	0.5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안정가득적립형배당혼합 1	4.2	9.8	0.5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엔터프라이즈적립형주식B 1	5.7	13.3	0.5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엔터프라이즈적립형채권B 1	1.2	2.8	0.2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엔터프라이즈적립형혼합B 1	3	7	0.4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이글아이(EAGLE-EYE)혼합B 1	4.5	10.5	0.3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레이디퍼스트적립식혼합M 1	4.2	9.8	0.4	0
대신투신운용	부자만들기주식 1ClassA	6	14	0.4	0
대신투신운용	부자만들기30혼합 1	4.2	9.8	0.4	0.15
대신투신운용	대신티사이보스주식H- 5	3	2	0.3	0.15
대신투신운용	대신티사이보스혼합H- 6	3	2	0.3	0.15
대신투신운용	부자만들기다이나믹혼합 1	6	14	0.4	0.15
대신투신운용	대신티CLEAN-UP 3M국공채 1ClassB	1	0	0.3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청기스칸혼합E- 1	4.2	9.8	0.35	0.15
대신투신운용	대신티실버연금대표주식(모)	0	0	0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실버연금국공채(모)	0	0	0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DC대표주혼합(자)B- 1	2.8	6.5	0.3	0.15
대신투신운용	대신티실버연금회사채(모)	0	0	0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DC국공+회사채권B- 1(자)	1.5	3.5	0.2	0.1
대신투신운용	대신티실버연금배당주식(모)	0	0	0	0
대신투신운용	대신티DC배당주혼합(자)B- 1	2.8	6.5	0.3	0.15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대신투신운용	氣up company 혼합B- 1	4.35	10.15	0.35	0.15
대신투신운용	대신패이팅코리아파생상품B 1	7.7	18.1	0.2	0.15
대신투신운용	하이코리아혼합 1	4.95	11.55	0.35	0.15
대신투신운용	부자만들기주식 1ClassB	6	0	0.4	0
대신투신운용	대신타이코리아주식K 1	2.43	2.1	0.2	0.17
한국투신운용	G1하이드림장기공사채 70	1.7	6.8	0.5	0
한국투신운용	G1하이드림장기공사채 72	1.7	6.8	0.5	0
한국투신운용	에펠탑플러스공사채LG- 1	3.9	9.1	0.5	0
한국투신운용	뉴넥스트80혼합주식SH- 1	3.7	14.8	0.5	0
한국투신운용	에펠탑주식KB- 1	5.85	13.65	0.5	0
한국투신운용	동원대형가치혼합주식 1	7.35	17.15	0.5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퇴직채권 1	1.37	3.19	0.3	0.14
한국투신운용	한국신종MMF 5	1	1.5	0.3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연금국공채 1	3	7	0.4	0
한국투신운용	동원클린MMF 7(D-1)	1.35	3.15	0.5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Choice-Up주식 1	5.85	13.65	0.5	0
한국투신운용	신종MMF 8	2.1	4.9	0.4	0
한국투신운용	신종MMF10	2.1	4.9	0.4	0
한국투신운용	한국신종MMF15	0.4	1	0.2	0.1
한국투신운용	Choice-Up 안정혼합 6	5.4	12.6	0.5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12M채권 5	2	3	0.4	0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인덱스채이서파생상품 1	5	0	0.5	0
한국투신운용	한국신종MMF12	1.38	3.22	0.4	0
한국투신운용	네오신종MMF 1	1.05	2.45	0.3	0
한국투신운용	한국법인네오신종MMF 2	0.32	1.28	0.11	0.05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6M우량채채권 1	1.5	3.5	0.4	0
한국투신운용	Gold&Wise세이프스프레드분리혼합 1	3	10	0.4	0
한국투신운용	네오클린MMF A	0.6	1.4	0.3	0
한국투신운용	네오클린MMF C	0.9	2.1	0.3	0
한국투신운용	네오신종MMF 3	1	3.5	0.3	0
한국투신운용	Choice-Up 세이프M분리과세혼합 1	3.5	10.5	0.4	0
한국투신운용	동원골드국공채클린MMF 1	1	3	0.3	0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정통고편입적립식주식 1ClassA	1.5	13.5	0.3	0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리처치파워90주식	1.5	13.5	0.3	0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S-Neutral적립식혼합	1.2	4.8	0.3	0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삼성그룹주식 1	5.29	12.6	0.4	0.11
한국투신운용	한국골드적립식삼성그룹주식 1	7.01	16.38	0.5	0.11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현대차그룹안정혼합 1	4.39	10.5	0.4	0.11
한국투신운용	부자아빠충성! 신고합니다 주식 1	1.5	25	0.3	0.11
한국투신운용	한국삼성그룹적립식주식 1Class A	6.9	16.4	0.5	0.2
한국투신운용	한국부자아빠리처치파워법인전용혼합 1	3	7	0.3	0.11
한국투신운용	한국KB오토채인지국공채 1	2.09	5	0.3	0.11
한국투신운용	한국KB오토채인지주식 1	7.29	17.3	0.3	0.11
산은자산운용	서울단기공사채 6	2.5	10	0.5	0
산은자산운용	프로중기공사채 3	2.5	10	0.5	0
산은자산운용	프로단기우대공사채 1	2.5	10	0.5	0
산은자산운용	프로단기우대공사채 2	2.5	10	0.5	0
산은자산운용	프로단기공사채14	2.5	10	0.5	0
산은자산운용	프로단기우대공사채 4	2.5	10	0.5	0
산은자산운용	스페셜중기공사채 2	2	8	0.5	0
산은자산운용	스페셜중기공사채 3	2	8	0.5	0
산은자산운용	스페셜단기공사채 7	2	8	0.5	0
산은자산운용	스페셜단기공사채 8	2	8	0.5	0
산은자산운용	스페셜단기공사채 9	2	8	0.4	0
산은자산운용	스페셜단기공사채 14	2	8	0.5	0
산은자산운용	스페셜중기공사채 15	2	8	0.5	0
산은자산운용	스페셜단기공사채 17	2	8	0.5	0
산은자산운용	스페셜중기공사채 16	2	8	0.5	0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산은자산운용	국채장기공사채 1	2	8	0.5	0
산은자산운용	스페셜중기공사채29	2	8	0.5	0
산은자산운용	스페셜단기공사채39	2	8	0.5	0
산은자산운용	스페셜중기공사채41	2	8	0.5	0
산은자산운용	스페셜중기공사채46	2	8	0.5	0
산은자산운용	스페셜단기공사채43	2	8	0.5	0
산은자산운용	서울신종MMF 1	3	7	0.5	0
산은자산운용	서울신종MMF 2	3	7	0.5	0
산은자산운용	서울신종MMF301	3	7	0.5	0
산은자산운용	서울신종MMF 3	3	7	0.5	0
산은자산운용	서울신종MMF101	3	7	0.5	0
산은자산운용	서울신종MMF 4	3	7	0.5	0
산은자산운용	서울신종MMF 5	3	7	0.5	0
산은자산운용	서울신종MMF102	3	7	0.5	0
산은자산운용	G 서울단기공사채 6	2.5	10	0.5	0
산은자산운용	G2스페셜단기공사채 2	2	8	0.5	0
산은자산운용	G1스페셜단기공사채 7	2	8	0.5	0
산은자산운용	G2스페셜단기공사채 7	2	8	0.5	0
산은자산운용	G1프로단기공사채 4	2.5	10	0.5	0
산은자산운용	G2프로단기공사채 4	2.5	10	0.5	0
산은자산운용	G 스페셜중기공사채 1	2	8	0.5	0
산은자산운용	G1스페셜중기공사채 2	2	8	0.5	0
산은자산운용	G2스페셜중기공사채 2	2	8	0.5	0
산은자산운용	G3스페셜중기공사채 2	2	8	0.5	0
산은자산운용	G 스페셜중기공사채 3	2	8	0.5	0
산은자산운용	G1스페셜중기공사채 4	2	8	0.5	0
산은자산운용	G3스페셜중기공사채 4	2	8	0.5	0
산은자산운용	G4스페셜중기공사채 4	2	8	0.5	0
산은자산운용	G1스페셜중기공사채 5	2	8	0.5	0
산은자산운용	G1스페셜중기공사채 6	2	8	0.5	0
산은자산운용	G2스페셜중기공사채 6	2	8	0.5	0
산은자산운용	G3스페셜중기공사채 6	2	8	0.5	0
산은자산운용	G4스페셜중기공사채 6	2	8	0.5	0
산은자산운용	G2스페셜중기공사채18	2	8	0.5	0
산은자산운용	G3스페셜중기공사채18	2	8	0.5	0
산은자산운용	G 스페셜중기공사채20	2	8	0.5	0
산은자산운용	G1스페셜중기공사채21	2	8	0.5	0
산은자산운용	G2스페셜중기공사채21	2	8	0.5	0
산은자산운용	G 스페셜중기공사채22	2	8	0.5	0
산은자산운용	G1스페셜단기공사채39	2	8	0.5	0
산은자산운용	G3스페셜단기공사채39	2	8	0.5	0
산은자산운용	G2프로단기공사채 9	2.5	10	0.5	0
산은자산운용	G 프로단기공사채11	2.5	10	0.5	0
산은자산운용	G 프로단기공사채12	2.5	10	0.5	0
산은자산운용	G1프로단기공사채13	2.5	10	0.5	0
산은자산운용	G3프로단기공사채13	2.5	10	0.5	0
산은자산운용	G4프로단기공사채13	2.5	10	0.5	0
산은자산운용	G 프로단기우대공사채 2	2.5	10	0.5	0
산은자산운용	G1프로단기우대공사채 6	2.5	10	0.5	0
산은자산운용	G2프로단기우대공사채 6	2.5	10	0.5	0
산은자산운용	G 스페셜중기공사채15	2	8	0.5	0
산은자산운용	G1스페셜중기공사채16	2	8	0.5	0
산은자산운용	G2스페셜중기공사채16	2	8	0.5	0
산은자산운용	G3스페셜중기공사채16	2	8	0.5	0
산은자산운용	G 스페셜중기공사채17	2	8	0.5	0
산은자산운용	G1스페셜중기공사채29	2	8	0.5	0
산은자산운용	G1스페셜중기공사채30	2	8	0.5	0
산은자산운용	G 스페셜중기공사채32	2	8	0.5	0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산은자산운용	G1스페셜중기공사채38	2	8	0.5	0
산은자산운용	G2스페셜중기공사채38	2	8	0.5	0
산은자산운용	G스페셜중기공사채39	2	8	0.5	0
산은자산운용	G1스페셜중기공사채41	2	8	0.5	0
산은자산운용	G2스페셜중기공사채41	2	8	0.5	0
산은자산운용	G3스페셜중기공사채41	2	8	0.5	0
산은자산운용	G스페셜중기공사채43	2	8	0.5	0
산은자산운용	G스페셜중기공사채44	2	8	0.5	0
산은자산운용	G1스페셜중기공사채46	2	8	0.5	0
산은자산운용	G2스페셜중기공사채46	2	8	0.5	0
산은자산운용	G1프로중기공사채 1	2.5	10	0.5	0
산은자산운용	G2프로중기공사채 1	2.5	10	0.5	0
산은자산운용	G1프로중기공사채 2	2.5	10	0.5	0
산은자산운용	G2프로중기공사채 2	2.5	10	0.5	0
산은자산운용	G4프로중기공사채 2	2.5	10	0.5	0
산은자산운용	G5프로중기공사채 2	2.5	10	0.5	0
산은자산운용	G6프로중기공사채 2	2.5	10	0.5	0
산은자산운용	G2프로중기공사채 3	2.5	10	0.5	0
산은자산운용	G3프로중기공사채 3	2.5	10	0.5	0
산은자산운용	G4프로중기공사채 3	2.5	10	0.5	0
산은자산운용	G1프로장기공사채 1	2.1	8.4	0.5	0
산은자산운용	G2프로장기공사채 1	2.1	8.4	0.5	0
산은자산운용	G3프로장기공사채 1	2.1	8.4	0.5	0
산은자산운용	G1프로장기공사채22	2.1	8.4	0.5	0
산은자산운용	G2프로장기공사채22	2.1	8.4	0.5	0
산은자산운용	G2프로장기공사채26	2.1	8.4	0.5	0
산은자산운용	G프로장기공사채52	2.1	8.4	0.5	0
산은자산운용	G프로장기공사채53	2.1	8.4	0.5	0
산은자산운용	G2프로장기공사채54	2.1	8.4	0.5	0
산은자산운용	G3프로장기공사채54	2.1	8.4	0.5	0
산은자산운용	G1프로장기공사채55	2.1	8.4	0.5	0
산은자산운용	G2프로장기공사채55	2.1	8.4	0.5	0
산은자산운용	G3프로장기공사채55	2.1	8.4	0.5	0
산은자산운용	G4프로장기공사채55	2.1	8.4	0.5	0
산은자산운용	G1프로장기공사채58	2.1	8.4	0.5	0
산은자산운용	G3프로장기공사채58	2.1	8.4	0.5	0
산은자산운용	G서울장기공사채 7	1.9	7.6	0.5	0
산은자산운용	G서울장기공사채 8	1.9	7.6	0.5	0
산은자산운용	G2서울장기공사채 9	1.9	7.6	0.5	0
산은자산운용	G1서울장기공사채11	1.9	7.6	0.5	0
산은자산운용	G2서울장기공사채11	1.9	7.6	0.5	0
산은자산운용	G프로장기공사채 3	2.1	8.4	0.5	0
산은자산운용	R2서울장기공사채 7	1.9	7.6	0.5	0
산은자산운용	신프로주식17	4.9	19.6	0.5	0
산은자산운용	D프로단기우대주식 4	2.5	10	0.5	0
산은자산운용	D스페셜중기주식 1	2	8	0.5	0
산은자산운용	D스페셜중기주식20	2	8	0.5	0
산은자산운용	D스페셜중기주식39	2	8	0.5	0
산은자산운용	D스페셜중기주식46	2	8	0.5	0
산은자산운용	D프로중기주식 2	2.5	10	0.5	0
산은자산운용	D프로중기주식 3	2.5	10	0.5	0
산은자산운용	D서울장기우대주식C 3	1.5	6	0.5	0
산은자산운용	D서울장기우대주식C 4	1.5	6	0.5	0
산은자산운용	뉴포커스CBO 24- 2	2.5	0	0.5	0
산은자산운용	서울신종MMF104	2.4	4.3	0.3	0
산은자산운용	크리스탈알파클린MMF 1	2.2	2.38	0.3	0.13
산은자산운용	크리스탈신종MMF E형1	2	2.03	0.35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국공채MMF H- 3	1	2.3	0.2	0.1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산은자산운용	산은신종MMF N-101	0.5	1	0.2	0.1
산은자산운용	대표기업지수시스템형	4.18	0	0.2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국공채MMF 1	0.8	2.7	0.2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장기주택마련혼합 1	4.5	10.5	0.3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플러스특별자산1- 8	2.28	5.3	0.3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CHINDIA혼합 1	4.28	10	0.6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하이디배당주식 1	7.3	17.08	0.5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건대사랑특별자산1- 1	8	1.5	0.3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건대사랑특별자산1- 2	7	7	0.3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건대사랑특별자산 2	8	1	0.3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안정혼합 1	4.6	10.78	0.3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플러스특별자산2- 2	2	5	0.3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플러스특별자산2- 3	2	5	0.3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China재간접 1ClassW	3.78	0	1.1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India주식 1ClassW	3.98	0	0.9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플러스특별자산3- 4	2.13	4	0.25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플러스특별자산3- 5	1.93	3.7	0.25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블루CD금리파생상품 1	1	2	0.2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스타리츠연동채권 2	2.4	4.2	0.3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India주식1ClassA	3.98	9.9	0.9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ValuePlus채권1ClassA	1.3	3.2	0.3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China재간접1ClassA	3.78	9.9	1.1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월성푸르지오특별자산 2	1.93	3.7	0.25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월성푸르지오특별자산 3	1.93	3.7	0.25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월성푸르지오특별자산 4	1.43	2.7	0.25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월성푸르지오특별자산 5	1.23	2.4	0.25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J-Index재간접1ClassA	3.8	10	0.9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J-Index재간접1ClassW	3.8	0	0.9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벽산블루밍특별자산 2	1.43	3.2	0.25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벽산블루밍특별자산 3	1.43	3.2	0.25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투스타파생HS- 1	5	20	0.3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Ubiquitous주식 1ClassA	7.4	17.1	0.3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스타리츠연동채권 3	1.2	2.8	0.3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투스타파생상품WL- 1	5.5	20.5	0.3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뉴투스타파생HL- 1	3.5	17	0.3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남악비발디특별자산 1	1.23	2.6	0.25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남악비발디특별자산 2	1.33	3.1	0.25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남악비발디특별자산 3	1.33	3.1	0.25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남악비발디특별자산 4	1.43	3.1	0.25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뉴투스타파생HW 1	6.5	20	0.3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뉴투스타파생PS 1	3.5	20	0.4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뉴투스타파생PS 2	6.5	2	0.4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각산푸르지오특별자산 1	2	6.63	0.25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각산푸르지오특별자산 2	2	6.63	0.25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각산푸르지오특별자산 3	2	6.63	0.25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각산푸르지오특별자산 4	2	4.63	0.25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각산푸르지오특별자산 5	2	3.63	0.25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뉴투스타파생SS 1	5.5	20	0.4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J-IndexPlus재간접ClassA	5	13.5	0.7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뉴투스타파생IS 1	4	20	0.4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하이디배당혼합 1	4	10	0.38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뉴투스타파생IS 2	3	20	0.4	0.13
산은자산운용	산은뉴투스타파생PI 1	6	19	0.4	0.13
우리크레디트스	MMF 2	3.75	8.75	0.5	0
우리크레디트스	특별장기12C공사채신한 5	0.1	0.1	0.3	0
우리크레디트스	특별장기12C공사채신흥 1	0.1	0.1	0.3	0
우리크레디트스	신종MMF 1	1.75	5.75	0.3	0
우리크레디트스	신종MMF 2	1.75	5.75	0.3	0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우리크레디츠	신중MMF 3	2	6.5	0.3	0
우리크레디츠	프런티어국공채MMF 3(개인)	2	6.5	0.3	0
우리크레디츠	신중MMF 5	1.75	5.75	0.3	0
우리크레디츠	신중MMF 6	1.75	5.75	0.3	0
우리크레디츠	트윈스클린MMF 4	0.64	2.16	0.2	0
우리크레디츠	MP2000MMF 1	4	5	0.5	0
우리크레디츠	M.P프런티어L- 1	7.5	8	0.5	0
우리크레디츠	트윈스신도약주식A 5	2.7	10.8	0.5	0
우리크레디츠	M.P프론티어주식A 1	2.7	10.8	0.5	0
우리크레디츠	M.P세이프티주식A 1	2.7	10.8	0.5	0
우리크레디츠	M.P프론티어주식B 9	2.7	10.8	0.5	0
우리크레디츠	M.P프론티어주식알파B 1	3.9	15.6	0.5	0
우리크레디츠	M.P세이프티주식B 5	3.83	9.68	0.5	0
우리크레디츠	M.P프론티어주식알파B 9	5.2	14.3	0.5	0
우리크레디츠	M.P프론티어주식알파A11	3.9	15.6	0.5	0
우리크레디츠	M.P프론티어주식알파A12	3.9	15.6	0.5	0
우리크레디츠	M.P프론티어주식알파A13	4.88	14.63	0.5	0
우리크레디츠	M.P프론티어주식알파A15	3.9	15.6	0.5	0
우리크레디츠	M.P프론티어주식알파C17	3.9	15.6	0.5	0
우리크레디츠	M.P세이프티주식A 8	3.38	10.13	0.5	0
우리크레디츠	M.P프론티어주식알파C19	3.9	15.6	0.5	0
우리크레디츠	M.P프론티어주식알파C 21	3.9	15.6	0.5	0
우리크레디츠	AIS 인덱스B 1	10	10	0.5	0
우리크레디츠	M.P프론티어주식알파B 25	3.9	15.6	0.5	0
우리크레디츠	프런티어인덱스플러스알파파생상품S- 1	5.85	13.65	0.5	0
우리크레디츠	M.P SEDI 혼합 1	6	14	0.5	0
우리크레디츠	M.P안정혼합A 1	3	7	0.5	0
우리크레디츠	M.P스파크혼합 1	5.85	13.65	0.5	0
우리크레디츠	M.P코스닥주식A 1	6	14	0.5	0
우리크레디츠	트윈스챌린지2000주식 1	6	14	0.5	0
우리크레디츠	MP2000하이테크주식 1	7	5	0.5	0
우리크레디츠	MP2000스파크주식 1	7	5	0.5	0
우리크레디츠	MP2000코스닥주식 1	7	5	0.5	0
우리크레디츠	트윈스후순위채주식 1	3	11.5	0.5	0
우리크레디츠	엠패이어혼합 1	11	11	0.5	0
우리크레디츠	Recovery주식 1	2.5	5	0.5	0
우리크레디츠	시그마혼합 1	6	14	0.5	0
우리크레디츠	비과세고수익추가형혼합 1	4.5	10.5	0.5	0
우리크레디츠	우체국보험기금36채권 1	0.6	1.4	0.1	0
우리크레디츠	뉴하이일드혼합DB- 2	0.1	0.1	0.1	0
우리크레디츠	시그마주식 1	6.6	15.4	0.5	0
우리크레디츠	연금국공채C1	3	7	0.4	0
우리크레디츠	비과세고수익고위험알파혼합 1	4.5	10.5	0.4	0.2
우리크레디츠	뉴시그마국공채 1	2.6	4	0.4	0
우리크레디츠	인덱스세이프분리과세혼합II	4.5	10.5	0.5	0
우리크레디츠	Good&Safe분리과세혼합 3	4.5	10.5	0.5	0
우리크레디츠	뉴시그마03채권 2	1.8	3.9	0.3	0
우리크레디츠	Good&Safe분리과세혼합 4	4.5	10.5	0.5	0
우리크레디츠	New Wise06채권 1	0.1	0.1	0.1	0
우리크레디츠	New Market Hedge혼합 1	4.5	10.5	0.5	0
우리크레디츠	SafeSevenPlus분리과세혼합 1	6	9	0.5	0
우리크레디츠	드림주식 1	7.5	18	0.5	0
우리크레디츠	뉴시그마단기채권 1	1.8	3.9	0.3	0
우리크레디츠	프런티어옵션플러스파생상품 1	4.2	9.8	0.3	0
우리크레디츠	Index Guard신중분리과세혼합 1	6	9	0.5	0
우리크레디츠	프라임06채권 1	1.9	4.2	0.3	0
우리크레디츠	트윈스클린MMF 9	1.1	1.7	0.2	0
우리크레디츠	KOSPI200 ETF	2.2	1	0.15	0.25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우리크레디트스	신종MMF 7	0.65	2.15	0.2	0
우리크레디트스	Good&Safe분리과세혼합 5	4.5	10.5	0.5	0
우리크레디트스	KOSEF업종대표주식혼합 1	4.5	10.5	0.4	0
우리크레디트스	Good&Safe분리과세혼합 6	4.5	10.5	0.5	0
우리크레디트스	World Top20신종분리과세혼합 1	5.4	12.6	0.7	0.2
우리크레디트스	프런티어장기주택마련채권1	3	7	0.4	0
우리크레디트스	프런티어장기주택마련혼합 1	4.5	10.5	0.4	0
우리크레디트스	마스터플랜혼합 1	1.5	3.5	0.3	0
우리크레디트스	신종MMF6- 1	0.7	2.3	0.2	0
우리크레디트스	프런티어국공채MMF 1(법인)	0.93	3.07	0.2	0
우리크레디트스	프런티어국공채단기채권 2	1.8	4.5	0.2	0
우리크레디트스	신종MMF6- 2	0.7	2.3	0.2	0
우리크레디트스	프런티어장기배당주식 1	4.5	10.5	0.4	0
우리크레디트스	Market Hedge신종분리전환혼합 5	4.5	10.5	0.4	0
우리크레디트스	신종분리국공채 1	1.5	3.5	0.2	0
우리크레디트스	뉴시그마단기채권 2	1.8	3.9	0.3	0
우리크레디트스	세이프웨이신종분리과세혼합 1	6	12	0.4	0
우리크레디트스	프런티어배당인덱스플러스주식F- 1	5	0	0.4	0
우리크레디트스	트윈스콜린MMF 9(출자전환)	0	0	0	0
우리크레디트스	Good밸런스드신종분리혼합 1	5.4	12.6	0.4	0
우리크레디트스	Good밸런스드신종분리혼합 2	5.4	12.6	0.4	0
우리크레디트스	New Market Hedge분리전환혼합 2	4.5	10.5	0.4	0
우리크레디트스	챌린지넘버원주식 1	5	5	0.4	0
우리크레디트스	New Market Hedge혼합 3	4.5	10.5	0.5	0
우리크레디트스	G&W Market Hedge혼합 1	5	7	0.3	0
우리크레디트스	세이프웨이 II 파생상품 1	6	12	0.4	0
우리크레디트스	세이프웨이 II 단위형파생상품 1	6	12	0.4	0
우리크레디트스	뉴시그마단기채권 3	1.8	3.9	0.3	0
우리크레디트스	GlobalStar적립재간접 1	3.5	10.5	0.7	0
우리크레디트스	세이프웨이글로벌파생 1	6	12	0.4	0
우리크레디트스	월드챔프파생상품 1	4	8	0.4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2Star파생상품15	0.05	0.05	0.4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2Star파생상품13	0.05	0.05	0.4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2Star파생상품16	0.05	0.05	0.4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KRX100인덱스주식 1A	2	11	0.3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2Star파생상품II-2	0.05	0.05	0.4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주니어네이버적립주식1	10.6	11.7	0.3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frontier채권1-A	1.5	4	0.2	0.1
우리크레디트스	프런티어국공채MMF2(개인)W	0.7	0	0.2	0
우리크레디트스	프런티어국공채단기채권1W	0.9	0	0.2	0
우리크레디트스	프런티어국공채MMF2(개인)A	0.7	2.3	0.2	0
우리크레디트스	프런티어국공채단기채권1A	0.9	2.1	0.2	0
우리크레디트스	프런티어국공채MMF2(법인)A	0.75	2.55	0.2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KRX100인덱스주식 1W	2	0	0.3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2Star파생상품 II - 4	0.01	0.01	0.1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일본리츠연계채권 1	1.7	4	0.4	0
우리크레디트스	프라임일본대표지수연동 3	2.1	5	0.3	0
우리크레디트스	프라임일본대표지수연동채권 4	1.7	4	0.3	0
우리크레디트스	프라임일본대표지수연동채권 5	2.6	6	0.3	0
우리크레디트스	프런티어국공채MMF2(법인)W	0.75	0	0.2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일본리츠연계채권 2	2.6	6	0.3	0
우리크레디트스	프런티어배당한아름주식1A	7.5	17.5	0.5	0
우리크레디트스	프런티어배당한아름주식1W	7.5	0	0.5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frontier채권1-W	1.5	0	0.2	0.1
우리크레디트스	프라임일본대표지수연동채권 6	2.6	6	0.3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플러스주가연계채권 6	1.7	4	0.3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일본리츠연계채권 3	2.1	0	0.3	0
우리크레디트스	프런티어뉴인덱스플러스αClassA	5	0	0.5	0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우리크레디츠	프런티어배당주혼합1 Class A	4.5	10.5	0.4	0
우리크레디츠	프런티어뉴인덱스플러스αClassW	5	0	0.5	0
우리크레디츠	프런티어배당주혼합1ClassW	4.5	0	0.4	0
우리크레디츠	우리PowerIncome파생상품 1	2	5	0.3	0
우리크레디츠	프라임일본대표지수연동채권 7	2.6	6	0.3	0
우리크레디츠	우리코리아블루오션주식 1ClassA	7.5	17.3	0.3	0
우리크레디츠	우리코리아블루오션주식 1ClassW	7.5	0	0.3	0
우리크레디츠	프라임일본대표지수연동채권 8	2.6	6	0.3	0
우리크레디츠	우리CD연동파생상품 1	4.2	10	1	0
우리크레디츠	우리CD연동파생상품 2	4.2	10	1	0
우리크레디츠	프라임일본대표지수연동채권10	2.6	6	0.3	0
우리크레디츠	우리2Top파생상품HW- 1	0.01	0.01	0.1	0
우리크레디츠	우리2Top파생상품HW- 2	0.01	0.01	0.1	0
우리크레디츠	우리2Top파생상품PW- 2	0.01	0.01	0.1	0
우리크레디츠	우리2Top파생상품PW- 3	0.01	0.01	0.1	0
우리크레디츠	우리2Star파생상품19	0.01	0.01	0.1	0
우리크레디츠	우리PowerIncome파생상품 2	3.3	7.5	0.5	0
우리크레디츠	우리퇴직연금채권자B- 1	1.5	2	0.2	0
우리크레디츠	우리퇴직연금채권혼합10자B- 1	2.1	3	0.2	0
우리크레디츠	우리퇴직연금채권혼합40자B- 1	3	4	0.2	0
우리크레디츠	우리퇴직연금채권혼합20자B- 1	2.7	3.5	0.2	0
우리크레디츠	우리퇴직연금채권모	0	0	0	0
우리크레디츠	우리퇴직연금주식모	0	0	0	0
우리크레디츠	우리2Top파생상품HW- 4	0.01	0.01	0.1	0
우리크레디츠	우리2Top파생상품SH- 1	0.01	0	0.1	0
우리크레디츠	우리2Top파생상품SH- 2	0.01	0.01	0.1	0
우리크레디츠	우리퇴직연금채권자A- 1	1.2	2	0.2	0
우리크레디츠	우리퇴직연금국공채혼합20자A- 1	2.7	3.5	0.2	0
우리크레디츠	우리퇴직연금국공채혼합40자A- 1	3	4	0.2	0
우리크레디츠	우리퇴직연금국공채자A- 1	0.9	2	0.2	0
우리크레디츠	우리퇴직연금국공채모	0	0	0	0
우리크레디츠	프런티어배당주안정혼합 1ClassA	3.9	9.1	0.4	0
우리크레디츠	프론티어글로벌주식형재간접1classA	11.43	12.67	0.7	0.2
우리크레디츠	우리2Top파생상품SH- 3	0.01	0.01	0.01	0
우리크레디츠	우리프런티어플러스혼합 1	4.1	9.6	0.3	0
우리크레디츠	우리아시아대표지수파생상품 2	0.01	0.01	0.1	0
우리크레디츠	우리아시아대표지수파생상품 3	0.01	0.01	0.1	0
우리크레디츠	우리파워일본대표지수연계채권 3	2.6	6	0.3	0
우리크레디츠	우리파워일본대표지수연계채권 5	2.6	6	0.3	0
우리크레디츠	마이신종MMF1(개인)Class A	1.2	1.8	0.2	0
우리크레디츠	마이볼마켓파생1Class A	2.6	3.8	0.2	0
우리크레디츠	마이베어마켓파생1Class A	2.6	3.8	0.2	0
우리크레디츠	프런티어배당안정혼합 1Class W	3.9	0	0.4	0
우리크레디츠	우리파워일본대표지수연계채권 6	2.2	5	0.3	0
우리크레디츠	우리파워일본대표지수연계채권 7	2.2	5	0.3	0
우리크레디츠	우리2Star파생상품KS- 1	8.6	20	1.2	0
우리크레디츠	우리퇴직연금주식DB자B- 1	3.5	5	0.2	0
우리크레디츠	우리마일스톤부동산 1	1.5	7.5	0.6	0.3
우리크레디츠	우리토종기업혼합 1-A	5	14	0.25	0.15
우리크레디츠	우리토종기업혼합 1-W	5	0	0.25	0.15
우리크레디츠	우리플러스주가연계채권 7	2.2	5	0.3	0
우리크레디츠	우리파워일본대표지수연계채권 8	2.6	6	0.3	0
우리크레디츠	우리2Star파생상품KS- 2	8.6	20	1.2	0
우리크레디츠	우리WABI 60 INDEX채권1-W	1.2	0	0.2	0.1
우리크레디츠	마이신종MMF1(개인)Class e	1.2	1.3	0.2	0
우리크레디츠	우리파워일본대표지수연계채권 9	2.6	6	0.3	0
우리크레디츠	마이볼마켓파생1Class e	2.6	3.2	0.2	0
우리크레디츠	마이베어마켓파생1Class e	2.6	3.2	0.2	0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우리크레디트스	우리Commodity인덱스플러스 1-A	5.4	12.6	0.4	0.2
우리크레디트스	우리2Star파생상품KV- 1	8	32	1.2	0.2
우리크레디트스	우리2Star파생상품KH- 1	8.2	19	1.2	0.2
우리크레디트스	우리플러스주가연계채권 8	2.2	5	0.3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2Star파생상품KS- 4	8.2	19	1.2	0
우리크레디트스	마이신종MMF1(개인)Class W	1.2	0	0.2	0
우리크레디트스	마이볼마켓파생1Class W	2.6	0	0.2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파워주가연계채권S- 1	2.2	5	0.3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Commodity인덱스1-W	5.4	0	0.4	0.2
우리크레디트스	우리파워주가연계채권S- 2	2.2	5	0.3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2Star파생상품KS- 3	5.7	23	1.2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2Star파생상품KW- 1	8.2	19	1.2	0.2
우리크레디트스	우리2Star파생상품KL- 1	9.6	19	1.2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2Star파생상품ML- 1	9.6	19	1.2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파워주가연계채권S- 3	2.2	5	0.3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2Star파생상품KP- 1	7.7	0	1.2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파워일본대표지수연계채권10	2.2	5	0.3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2Star파생상품TM- 1	8.2	19	1.2	0
우리크레디트스	블루랜드글로벌부동산재간접A	6.2	10	1	0
우리크레디트스	블루랜드글로벌부동산재간접W	6.2	0	1	0
우리크레디트스	프론티어글로벌주식형재간접 1classW	11.43	0	0.7	0.2
우리크레디트스	우리파워주가연계채권S- 4	2.2	0	0.3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2Star파생상품KP- 2	9.5	0	1.2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파워일본대표지수연계채권 11	2.2	5	0.3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2Star파생상품SS- 1	8.2	19	1.2	0
우리크레디트스	프론티어Commodity인덱스파생F- 1	5.6	7.6	0.4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파워주가연계채권S- 5	2.2	0	0.3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2Star파생상품SS- 2	10.2	0	1.2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2Star파생상품HW- 1	8.2	19	1.2	0.2
우리크레디트스	우리2Star파생상품SI- 1	10.2	0	1.2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2Star파생상품SI- 2	7.2	27	1.2	0
우리크레디트스	마이신종MMF1(개인)Class e1	1.2	1.3	0.2	0
우리크레디트스	마이신종MMF1(개인)Class e2	1.2	1.3	0.2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2Star파생상품KSS- 1	9.5	0	1.2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2Star파생상품PS- 1	8.2	19	1.2	0
우리크레디트스	일석삼조적립식따라하기파생 1	2	5.5	0.3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아시아넴버원지수파생 1	11	26	1.2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2Star파생상품KSS- 2	9.5	0	1.2	0
우리크레디트스	마이볼마켓파생1Class e1	2.6	3.2	0.2	0
우리크레디트스	KOSEF BANKS ETF	2.4	2	0.3	0.3
우리크레디트스	KOSEF IT ETF	2.4	2	0.3	0.3
우리크레디트스	마이베어마켓파생1Class e1	2.6	3.2	0.2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2Star파생상품SB- 1	9.6	19	1.2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2Star파생상품PC- 1	8.2	19	1.2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2Star파생상품PI- 1	19.7	0	1.2	0
우리크레디트스	마이베어마켓파생1Class e2	2.6	3.2	0.2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2Star파생상품PXM- 1	6.6	26.5	1.2	0
우리크레디트스	프론티어2Star파생상품PX- 1	8.2	19	1.2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2Star파생상품PC- 2	9.5	0	1.2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파워주가지수연계채권 1	1.2	3	0.3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2Star파생상품KP- 4	8.6	20	1.2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2Star파생상품SK- 1	8.6	20	1.2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2Star파생상품KM- 1	8.6	20	1.2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2Star파생상품KP- 5	7.6	0	1.2	0
우리크레디트스	프론티어국공채단기채권1B	0.9	2.1	0.2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넴버원지수연계파생 1	7.1	16.5	1.2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frontier채권1-D	1.5	4	0.2	0.1
우리크레디트스	우리2Star파생상품KM- 2	8.6	20	1.2	0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우리크레디트스	우리2Star파생상품PC- 3	7.6	0	1.2	0
우리크레디트스	마이베어마켓파생1Class W	2.6	0	0.2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2Star파생상품PC- 4	8.6	20	1.2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2Star파생상품KXM- 1	7.4	29.5	1.2	0
우리크레디트스	프런티어우량주식적립식주식A	6.6	15.7	0.3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2Star파생상품PB- 1	7.6	0	1.2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아시아대표지수파생상품 5	8.6	20	1.2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프런티어Liquidity1ClassC2	0.4	0.65	0.15	0
우리크레디트스	우리2Star파생상품PB- 2	7	0	1.2	0
교보투신운용	교보단기공사채 1	2.5	10	0.5	0
교보투신운용	교보MMF 1	2.5	10	0.5	0
교보투신운용	교보MMF 2	2.5	10	0.5	0
교보투신운용	교보MMF 3	2.5	10	0.5	0
교보투신운용	교보전원일기공사채 4	1.5	6	0.5	0
교보투신운용	교보단기공사채C- 1	2.5	10	0.5	0
교보투신운용	교보MMF A- 2	2.5	10	0.5	0
교보투신운용	교보신MMF A- 1	2.5	10	0.5	0
교보투신운용	교보고수익공사채A- 1	3.9	15.6	0.5	0
교보투신운용	교보생활설계공사채A- 1	1.3	5.2	0.5	0
교보투신운용	교보신MMF C- 1	2.5	10	0.5	0
교보투신운용	교보MVP공사채C- 1	2.5	10	0.5	0
교보투신운용	교보생활설계공사채A- 2	1.3	5.2	0.5	0
교보투신운용	교보신장기공사채C- 2	1.3	5.2	0.5	0
교보투신운용	걸리버장기공사채E- 51	1.9	7.6	0.5	0
교보투신운용	걸리버중기공사채E- 51	0.01	0.01	0.3	0
교보투신운용	걸리버장기공사채E- 52	0.01	0.01	0.3	0
교보투신운용	걸리버단기공사채E-201	0.01	0.01	0.3	0
교보투신운용	걸리버장기공사채E- 54	0.01	0.01	0.3	0
교보투신운용	걸리버장기공사채E- 58	0.01	0.01	0.3	0
교보투신운용	초일류중기공사채E-203	0.01	0.01	0.3	0
교보투신운용	초일류중기공사채E-205	0.01	0.01	0.3	0
교보투신운용	초일류단기공사채E- 56	0.01	0.01	0.3	0
교보투신운용	초일류단기공사채C-601	0.01	0.01	0.3	0
교보투신운용	걸리버단기공사채B- 9	2.9	11.6	0.5	0
교보투신운용	초일류단기공사채B- 5	0.01	0.01	0.4	0
교보투신운용	초일류중기공사채B- 5	1.3	5.2	0.5	0
교보투신운용	초일류장기공사채E-202	0.01	0.01	0.3	0
교보투신운용	초일류중기공사채B-603	0.01	0.01	0.4	0
교보투신운용	초일류장기공사채E-203	0.01	0.01	0.3	0
교보투신운용	초일류단기공사채B- 8	0.01	0.01	0.4	0
교보투신운용	초일류중기공사채B-605	0.01	0.01	0.4	0
교보투신운용	초일류단기공사채B-903	0.01	0.01	0.4	0
교보투신운용	초일류단기공사채B-910	0.01	0.01	0.4	0
교보투신운용	초일류장기공사채E-206	0.01	0.01	0.3	0
교보투신운용	초일류중기공사채B-910	1.3	5.2	0.5	0
교보투신운용	초일류중기공사채C- 4	0.01	0.01	0.3	0
교보투신운용	초일류중기공사채E-209	0.01	0.01	0.3	0
교보투신운용	초일류중기공사채E-213	0	0	0.2	0
교보투신운용	초일류단기공사채B-606	1.3	5.2	0.5	0
교보투신운용	걸리버단기공사채E- 54	0.01	0.01	0.3	0
교보투신운용	초일류장기공사채C-601	1.3	5.2	0.5	0
교보투신운용	초일류단기공사채C-611	1.3	5.2	0.5	0
교보투신운용	초일류장기공사채C-155	0.01	0.01	0.3	0
교보투신운용	초일류중기공사채C-151	1.3	5.2	0.5	0
교보투신운용	초일류중기공사채C-154	0.01	0.01	0.3	0
교보투신운용	초일류중기공사채C-613	1.3	5.2	0.5	0
교보투신운용	G1초일류중기공사채B-905	1.3	5.2	0.5	0
교보투신운용	G3걸리버장기공사채E- 54	1.9	7.6	0.5	0

운용회사	펀드명	보수율(1/1000)			
		운용	판매	수탁	사무
교보투신운용	G7걸리버장기공사채E- 54	1.9	7.6	0.5	0
교보투신운용	G 4초일류중기공사채E-203	0.1	0.1	0.5	0
교보투신운용	교보천리안주식B-901	4	9.5	0.5	0
교보투신운용	교보허브코리아채권혼합C- 1	1	14	0.5	0
교보투신운용	VISION21C안정성장주식 1	4	16	0.5	0
교보투신운용	교보허브코리아주식C- 1	1	24	0.5	0
교보투신운용	새마을안정주식C 1	3	12	0.5	0
교보투신운용	교보TOP30주식 1	7.5	17.5	0.5	0
교보투신운용	W초일류장기주식C- 5	1.3	5.2	0.5	0
교보투신운용	교보하이일드C- 2	7	2.5	0.5	0
교보투신운용	VISION21C어드벤처 B- 1	4.5	10	0.5	0
교보투신운용	대형성장플러스주식 1	7.35	17.15	0.5	0
교보투신운용	교보하이일드C11	0.01	0.01	0.3	0
교보투신운용	교보후순위채단위형주식 1	0.01	0.01	0.3	0
교보투신운용	교보후순위채단위형주식 2	0.01	0.01	0.3	0
교보투신운용	교보하이일드C- 3	10	3	0.5	0
교보투신운용	교보헤럴드주식 6	15	4.5	0.5	0
교보투신운용	교보뉴헤럴드주식H- 1	6.5	13	0.5	0
교보투신운용	뉴하이일드D1추가형B- 1	3	7	0.5	0
교보투신운용	뉴하이일드A1단위형B- 1	4.5	10.5	0.5	0
교보투신운용	뉴하이일드D2추가형B- 1	3.5	6	0.5	0
교보투신운용	걸리버장기공사채E54- 1	1.9	7.6	0.5	0
교보투신운용	VISION21C신종MMF E- 2	1.95	4.55	0.5	0
교보투신운용	VISION21C파워중기채권G- 3	0.1	0.1	0.2	0
교보투신운용	VISION21C퓨처스혼합C- 1	7	13	0.5	0
교보투신운용	V21C파워장기채권G- 1	2.1	4.9	0.5	0
교보투신운용	V21C파워장기채권G- 2	2.1	4.9	0.5	0
교보투신운용	VISION21C멀티미디어주식B 1	5.85	13.65	0.5	0
교보투신운용	V21C파워플러스채권2H 1	1	4	0.3	0
교보투신운용	V21C파워중기채권B- 1	0.1	7.5	0.4	0
교보투신운용	V21C파워중기채권G- 6	1.8	4.2	0.3	0
교보투신운용	VISION21C신종MMF J- 7	1.2	4.5	0.3	0
교보투신운용	VISION21C신종MMF J- 8(개인)	1.2	3	0.3	0
교보투신운용	V21C파워국공채권G- 1	0.86	4.84	0.3	0
교보투신운용	V21C파워장기국공채G- 1	0.86	4.84	0.3	0
교보투신운용	교보국공채전용클린MMF N- 1(개인)	1	3.5	0.2	0
교보투신운용	교보PRF채권혼합J- 1	3	12	0.3	0
교보투신운용	V21C신종MMFJ-12(법인)	0.01	1.1	0.2	0
교보투신운용	교보PRF채권혼합C- 1	3	12	0.3	0
교보투신운용	교보Hi-Korea적립식멀티주식K- 1A	2.6	12	0.3	0.1
교보투신운용	교보징검다리주식혼합8월 2	4.75	14.25	0.3	0.1
교보투신운용	교보징검다리채권혼합8월 2	4	12	0.3	0.1
교보투신운용	교보Hi-Korea적립식멀티주식K- 1D	2.6	0.3	0.3	0.1
교보투신운용	교보주가지수연동파생상품K- 1	0.6	5.6	0.2	0.1
교보투신운용	교보징검다리채권혼합9월 2	4	12	0.3	0.1
교보투신운용	교보징검다리주식혼합10월 2	4.75	14.25	0.3	0.1
교보투신운용	교보징검다리채권혼합10월 2	4	12	0.3	0.1
교보투신운용	교보징검다리고편입주식11월 2	6.3	18.7	0.3	0.1
교보투신운용	교보징검다리주식혼합11월 2	4.75	14.25	0.3	0.1
교보투신운용	교보징검다리채권혼합11월 2	4	12	0.3	0.1
교보투신운용	교보법인용MMF J- 1	0.8	1	0.2	0.1
교보투신운용	교보징검다리주식혼합12월 2	4.75	14.25	0.3	0.1
교보투신운용	교보징검다리채권혼합12월 2	4	12	0.3	0.1
교보투신운용	교보징검다리주식혼합 1월 2	4.75	14.25	0.3	0.1
교보투신운용	교보징검다리채권혼합 1월 2	4	12	0.3	0.1
교보투신운용	교보Tomorrow안정플러스채권혼합D- 1	3	7	0.3	0.1
교보투신운용	교보파워인덱스파생상품 1-A	1.5	6	0.05	0.05
교보투신운용	교보징검다리주식혼합9월 2	4.75	14.25	0.3	0.1